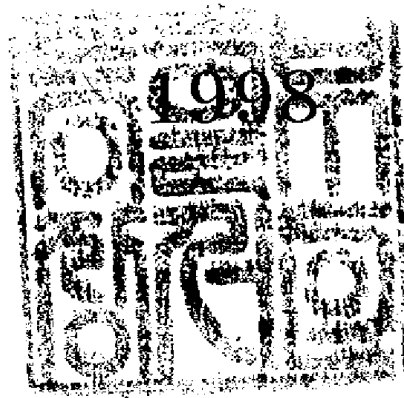


92-12-32(2)

'98 新進研究者
北韓與統一關聯 論文集

北韓實態(Ⅲ)



統一部

본 논문집은 '98년도 북한 및 신진 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收錄論文 目次〉

1. 北韓體制的 變化를 計量的으로 分析할 수 있는 指標 1
金 哉 翰 (한 립 대)
2. 統一에 대비한 北韓 保險産業의 民營化 方案 研究 59
申 東 昊 (보험개발원)
3. 러시아 極東地域의 北韓 勞動力에 관한 研究 125
李 埰 文 (경 북 대)
4. 北韓의 消費生活樣式 및 消費文化와 統一후 適應問題 研究 187
金 聖 淑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원)
5. 北韓社會의 情報化 現況과 情報化 指標開發에 관한 研究 263
崔 洙 滿 (연 세 대)

〈附 錄〉

1. 圈別 收錄論文 一覽表 327
2. 最近 年度別 研究 課題 目錄('96~'98년) 329

北韓體制的 變化를 計量的으로 分析할 수 있는 指標



金 哉 翰(한림대)

목 차

| | |
|-----------------------------|----|
| <요약문> | 3 |
| 1. 북한체제변화 지표의 필요성과 방향 | 5 |
| 2. 지표구축의 방법 | 9 |
| 3. 지표의 내용 | 22 |
| 4. 종합위기지표 | 53 |

【요약문】

이 글에서는 북한체제 변화를 전망하는 계량적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다. 북한체제 위 기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외채/GNP, 외채, 석탄생산량, 원유도 입량, 발전량, 남북한 통관반입 건수, 1인당GNP, 수입, 수출, 곡물생산량, 식량부족량, 남북한 통관반입 품목수, 남북한 통관반입 금액, 탈북 남한이주민 수, 실질GNP성장률, 교역규모, 남북한 통관반출 품목수 등이다. 이 변수들은 사례수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기지표에 따르면, 개혁·개방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북한체제는 2002년에 변혁의 길목에 서게 된다고 전망된다. 만일 북한체제가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체제의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은 시점은 2006년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체제는 착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의 착륙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계량적 지표들은 자국의 개혁과 외국의 원조가 전무하다면 북한체제가 도발이든, 자체소멸이든, 추락이든, 착륙이든 간에 계속 하강하는 추세이지 회복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붕괴는 시기가 문제이지 붕괴여부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시기는 북한체제의 현재 고도, 즉 북한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지만 연료계기관은 바닥을 가리켜도 공중급유와 같은 외국 원조가 있으면 북한 체제는 지속될 수도 있다. 즉 북한체제의 붕괴여부와 시기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에 의해 좌우되기가 쉽다. 비록 추락지점(도발여부)은 북한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연료공급(외부원조)은 외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아무도 북한에게 식량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체제는 현재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주변국들이 전쟁 또는 자연적 소멸로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으로서는 내부적 개혁과 외부적 원조 없이 2006년 이후에도 체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북한에게는 대내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 금강산 관광의 개발 등이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1. 북한체제 변화 지표의 필요성과 방향

1.1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널뛰기 예측

북한체제와 남북한관계를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저녁 노을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처럼,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전망도 필요하다.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예측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붕괴할 것인가와 그리고 붕괴한다면 언제 붕괴할 것인가이다. 조기붕괴론, 붕괴지연론(遲延論), 붕괴불가론(不可論)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기존의 전망들은 유행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북한 붕괴필연론은 당시의 사건에 따라 등장과 소멸을 거듭했다. 1990년 동독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북한 붕괴필연론은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1994년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으로 북한 붕괴필연론이 다시 등장하였다가 수그러진 바 있다. 1996년과 1997년의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 붕괴필연론은 다시 강한 위세를 발휘하다가, 외국의 원조로 식량난이 해결되고 조용해짐에 따라 붕괴필연론은 다시 약해졌다.

1990년대 전반의 북한 붕괴론과 1990년대 후반의 붕괴론은 그 판단 기준과 붕괴 이후 전망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가졌다. 전자가 외부 추세에 유추하여 전망된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 자체의 사정에 유추하여 전망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 1990년대 전반의 북한 붕괴론은 남한에게 변화와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낙관적 전망이었다면, 1990년대 후반의 북한 붕괴론은 남한과 주변국에게 변화와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가져다주는 비관적 전망이었다.

현재 북한 붕괴필연론자들은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나, 북한은 동유럽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다른 특성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 붕괴불가론자들은 북한이 여러 위기를 겪고도 생존해 왔다는 점에 크게 의존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목숨을 잃지 않고 있는 산악인이 계속되는 목숨 건 등반에서 무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듯이, 북한이 계속되는 위기에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북한 붕괴에 대한 전망을 하라고 할 때, 예측인 자신만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른다. 만일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 예측에 대한 정확성은 인정될 것이고, 만일 북한이 붕괴한다면 잘못 예측했다고 누가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측 오묘에 대한 질책도 적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예측하는 것은 위기에 대한 준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항상 위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관적인 예측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북한체제 변화에 대해 합의된 점은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전망이 가시권(可視圈) 밖이라는 점뿐이다.

1.2 북한체제 변화의 불확실성과 계량적 지표의 필요성

‘가시권 밖’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일 수 있으며, 앞에 놓인 지형으로 행로가 직선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보는 사람의 시력이 나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너무 먼 거리’로 인한 북한체제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어려움은 다른 전망과 비슷하게 어렵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중단기적 전망도 어렵다는 점이다.

개방 정책이라는 ‘커브 길’은 북한에게 경험하지 못한, 단지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유추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불확실성을 높인다. 기존 노선의 유지라는 ‘직선 운항’도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안개 낀 자동차 운전’도 그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은 그 현상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가시범위를 늘이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의 안목’을 좋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도 운전자의 눈이 아닌 다른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가시범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흔히 북한 체제의 변화는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 비행기가 급하게 추락할 것인가, 부드럽게 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운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아주 순탄한 운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 붕괴 여부를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는 경우에도 그 비행기의 추락 여부와 추락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그 비행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 점에서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탈북자들의 예측이 그렇게

정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아주 숙련된 조종사라면 일반 승무원과 승객 그리고 외부 관찰자보다는 예상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사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그리 쉽지 않다.

시계(視界)가 막혀있는 경우, 외부의 관찰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조종사마저도 자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추락 여부와 추락 시점을 예측할 때에는 비행기 내부의 계기 수치와 같은 정량적 관찰을 이용할 것이다. 시계(視界)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기(計器)비행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종사와 아무런 연결이 없는 외부의 관찰자로서는 겉으로 보이는 비행기의 고도 및 비행 항로,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비행기 계기 수치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성적 접근에만 의존한 북한에 대한 예측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량적 접근만으로 북한체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보조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북한체제 변화에 대해 개인적 직관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정량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북한 붕괴여부에 대한 전망이 널뛰기를 할 때에도 정량적 예측치는 그렇게 널뛰기를 하지 않는다. 즉 붕괴한다 아니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결정론적 예측보다 확률적인 예측을 함으로써 정책대비에 있어서도 모든 상황을 대비하게 하되 다만 확률적인 중요성을 다르게 부여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량적 관찰을 이용할 수 있는가? 추락의 원인에 따라 이용하는 관찰 대상은 다르다. 예컨대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 연료(경제)때문이라면 연료계기 수치가 가장 중요한 선행(先行)지표가 될 것이고, 그 원인이 외부에서 발사된 대공미사일(대외압박)이라면 레이다 계기가 가장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것이며, 추락의 원인이 승무원간의 갈등(국내권력투쟁)이라면 승무원 사상자 수와 낙하산이용 탈출자 수 등이 중요한 선행지표가 된다.

그렇지만 체제 변화 추이에 대한 장기적 예측이 아닌 정책 선택에 대한 초단기적 예측을 정량적인 추이분석으로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현재 북한의 정책은 남한 내 전문가 다수의 전망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정책 선택에 대한 예측은 정책결정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을 통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합목적성(rationality)을 전제한 모델이다.¹⁾ 이는 각 행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예측을 하는 것이다. 상대의 예측과 반대로 선택하고 싶어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한 대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스포츠나 바둑에서 고수들간의 대결에서의 전략 선택이 하수들간의 선택보다 더 쉽게 예측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1.3 북한체제 변화의 원인적 요인과 선행적 지표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지표는 유행과 대세에 너무 민감해서는 아니 된다. 또 체제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관찰하지 못하고 종속변수만을 관찰하는 편중된 경험적 관찰에 의한 예측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경기선행지수는 수출신용장 내도액, 기계 수주액, 건축허가면적 등 향후 6~7개월 후의 경기를 가늠케 하는 각종 지표를 합성해 만든 지수이다.

그렇지만 장기적 예측이 아닌 중단기적 예측을 너무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선행지표와 조기경보지표(early-warning indicator)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선행지표는 인과관계론적 요인에 대한 분석보다 상관관계론적 징후에 대한 관찰에 의지한다.

북한체제의 안정성/불안정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것에 미치는 원인으로서는 독립변수와 그리고 단지 상관관계만 있는 선행지표를 구분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안정성/불안정성에 미치는 원인과 징조는 별개의 것이다. 예컨대, 낙하산을 이용하여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사람(탈북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비행기의 추락의 가능성은 높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탈출로 인해 그 비행기의 불안이 더 심화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탈출은 추락의 가능성을 줄이는 인과관계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외부 원조의 양도 북한붕괴의 선행지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의 원조는 북한 붕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체제 변화에 관한 선행적 지표가 실제 체제 변화에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망이나 예측의 내용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붕괴론적 전망은 북한의

1)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관계」 (한울, 1995).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 전망은 기업 부도에 대한 전망이 실제의 부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자기실현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붕괴론적 전망은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서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붕괴불가론적 전망도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붕괴를 막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를 방심하게 만들어 실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 선택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고 반대로 실현되기도 한다. 북한은 종종 남한의 예상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예상과 다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전망 때문에 고의로 예상 밖의 변화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물론 각자의 이익계산에 기초한 외부의 전망 내용을 입수하고 그 전망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전망과 동일한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진정한 예측은 그러한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지표 구축의 방법

2.1 기존 지표

2.1.1 모든 정권을 포함한 비교국가적 국가위험 지수

한 국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위험(country-risk) 지수이다. 그 지수는 점수 또는 순위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상중하(上中下)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가들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정성적 평가들을 다시 주관적으로 종합한 평가에서부터, 어느 정도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정성적 평가, 점검표(checklist)에 의한 체계적 평가,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을 응용한 정량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성적 평가이든 정량적 평가이든 한 국가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지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²⁾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 전망은 기업 부도에 대한 전망이 실제의 부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자기실현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붕괴론적 전망은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서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붕괴불가론적 전망도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붕괴를 막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를 방심하게 만들어 실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 선택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고 반대로 실현되기도 한다. 북한은 종종 남한의 예상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예상과 다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전망 때문에 고의로 예상 밖의 변화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물론 각자의 이익계산에 기초한 외부의 전망 내용을 입수하고 그 전망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전망과 동일한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진정한 예측은 그러한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지표 구축의 방법

2.1 기존 지표

2.1.1 모든 정권을 포함한 비교국가적 국가위험 지수

한 국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위험(country-risk) 지수이다. 그 지수는 점수 또는 순위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상중하(上中下)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가들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정성적 평가들을 다시 주관적으로 종합한 평가에서부터, 어느 정도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정성적 평가, 점검표(checklist)에 의한 체계적 평가,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을 응용한 정량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성적 평가이든 정량적 평가이든 한 국가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지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²⁾

첫째, 국내경제 분야이다. 이는 다시 경제 규모 지표, 경제 성장 지표, 물가상승 지표로 구성된다. 경제 규모 지표로는 인구, 인구성장, 국내총생산(GDP), 1인당GDP, 국민총생산(GNP), 1인당GNP 등이 있고, 경제 성장 지표로는 GDP성장률, 1인당GNP성장률, 실업률이 있으며, 물가상승 지표에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통화공급상승, GDP대비 재정적자 등이 있다. 그 외 국민소득대비 투자 비율과 소득성장대비 고정자산형성 비율 등이 있다.

둘째 분야는 대외경제에 관한 것으로, 세계경제로부터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다시 국제수지, 해외자산, 외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수지 지표로는 수출액, 수출성장, 수입액, 수입성장,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본계정, GDP대비 무역액, 외환보유액대비 수입 비율 등이다. 해외자산 지표로는 외환보유액, 해외자산, 금 보유 비율, 외채대비 해외자산 등이 있다. 외채 지표로는 정부 외채액, 개인 외채액, IMF차관액, 미국회사의 수급 실적, 단기차입 비율, 외채상환 비율, GDP대비 외채, 수출액대비 외채 등이 있다.

셋째 분야는 정치사회 변수인데, 정치적 안정, 국제은행평가, 실업추이 등으로 구성된다.

영국의 국제금융 월간지 《유러머니》는 세계 각국의 금융상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1982년 이전에는 유럽금융시장에서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기준으로 대차(貸借)의 차이가 큰 국가가 신용이 낮은 것으로 판별하여 매년 국가위험집단목록(Country Risk League Table)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1982년 가을부터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 정도와 국제협조율자로 평가하였다. 1990년대 와서는 국가위험도를 매년 3월말과 9월말 기준의 경제성장, 정치적 위험도(political risk), 대외부채,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 정도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평가하다가, 다시 그 기준을 조금씩 수정보완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성 정도에 대해 《유러머니》는 1994년 전반기는 157위, 1995년 전반기는 187개국 가운데 최하위, 1995년 후반기는 181개국 가운데 179위, 1996년 전반기는 178

2) S. Goodman, "How the Big U.S. Banks Really Evaluate Sovereign Risk," *Euromoney*, (1978); S. Hefferman, *Sovereign Risk Analysis* (London: Unwin Hyman, 1986); A. M. Ciarrapico, *Country Risk: A Theoretical Framework of Analysis* (Aldershot: Dartmouth, 1992).

개국 가운데 175위, 1996년 후반기는 178개국 가운데 176위, 1997년 전반기는 최하위, 1997년 후반기는 180개국 중에서 178위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의 안정성은 최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다.

일본공사채연구소의 『100개국 투·융자 컨트리리스크(국가신용도) 조사』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은 14개 평가 항목을 이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정권 안정성, 내란·폭동·혁명 위험, 전쟁 위험, 정책 지속성, 국제적 지위, 국제수지 구조, 외채상환능력, 재정정책의 효율성, 금융정책의 효율성, 외환정책, 투자정책, 성장 잠재력, 산업 성숙도 등이다. 일본공사채연구소의 평가는 북한의 순위를 1993년 1월 기준으로 82위, 1994년 1월 기준으로 95위, 1996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최악인 2점으로 나타낸 바 있다.

이 외 다른 기관의 국가위기 평가에서도 북한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7년 1월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의 국별 신용도 평가결과에서 북한은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하였으며, 독일 잡지 《한델스 블라트》도 북한을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최하위인 135위로 두었다.

국가위험 지수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한 지표와 함께 다른 주관적·객관적 판단으로 해당국가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안정성/불안정성은 외국기업의 투자 건수로도 유추될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건수는 1985~86년에 12건, 1987년 22건, 1988년 17건, 1989년 21건, 1990년 4건, 1991년 17건, 1992년 20건, 1993년 2건, 현재에는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다. 기존에 있었던 투자들도 재일 조총련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이다.

국가별 위험 지수의 효용가치는 투자여부(go-no-go)만을 결정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³⁾ 오히려 어떠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 비즈니스는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대되는 이윤이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붕괴할 것인가 또는 언제 붕괴할 것인가만을 알기 위해 북한 위기지표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붕괴 하더라도 어떠한 속성을 지닌 붕괴인지, 아니면 붕괴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양태로 지속 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진다.

3) Mikkal Herber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onald Solberg, ed., *Country-Risk Analysis: A Handbook* (London: Routledge, 1992).

2.1.2 사회주의국가들 대상의 브레진스키의 비교국가적 위기 지수

브레진스키(Brzezinski)의 위기 지수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5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위기를 비교한 것이다.⁴⁾ 총 10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의 대중적 지지의 상실, 미래에 대한 사회의 비판, 생활수준의 저하, 공산당의 사기 저하, 종교행위의 증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충돌, 경제적 사유화의 증대,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정치적 다원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공개적 요구, 인권문제에 대한 정권의 수세 등이 다. 각 지표마다 ‘아주 사실’은 3, ‘사실’은 2, ‘부분적으로 사실’은 1, ‘사실이 아니다’는 0의 점수를 배겨 그것을 합산하여 위기지수를 만들었다.

<표 1>에서 북한은 8점을 얻어 상대적으로 덜 불안정한, 즉 ‘위기가 아닌’ 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10가지 지표 가운데 ‘아주 사실’로 인정된 항목은 없으며, ‘사실’로 분류된 항목은 ‘미래에 대한 사회의 비판’, ‘생활수준의 저하’, ‘인권문제에 대한 정권의 수세’의 세 항목이다. ‘부분적으로 사실’로 분류된 항목은 ‘사회주의의 대중적 지지의 상실’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충돌’의 두 항목이다. 나머지 항목인 ‘공산당의 사기 저하’, ‘종교행위의 증대’, ‘경제적 사유화의 증대’,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정치적 다원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공개적 요구’의 다섯 항목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분류를 한 바 있다.

<표 1> 브레진스키 위기지수와 실제 체제붕괴시기

| 국가 | 위기지수 | 실제체제붕괴시기 |
|--------------------|------|-----------|
| 심각한 위기 상태로 분류된 5개국 | | |
| 폴란드 | 27 | 1989년 4월 |
| 헝가리 | 23 | 1989년 10월 |
| 유고 | 22 | 1990년 1월 |

4)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 | | |
|-------|----|-------|
| 모잠비크 | 21 | 존속 |
| 에티오피아 | 20 | 1987년 |

위기 상태로 분류된 6개국

| | | |
|------|----|-----------|
| 앙고라 | 19 | 존속 |
| 루마니아 | 18 | 1989년 11월 |
| 체코 | 16 | 1989년 12월 |
| 소련 | 15 | 1991년 12월 |
| 쿠바 | 15 | 존속 |
| 베트남 | 12 | 존속 |

위기가 아닌 상태로 분류된 4개국

| | | |
|------|---|-----------|
| 북한 | 8 | 존속 |
| 중국 | 8 | 존속 |
| 동독 | 7 | 1990년 7월 |
| 불가리아 | 6 | 1989년 12월 |

출처: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Sung Chul Yang, "Preface and Introduction," in Sung Chul Yang, ed., *Democracy and Communism: Theory, Reality and the Futur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2.1.3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민족통일연구원의 시계열적 위기자수

민족통일연구원 김성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⁵⁾ 브레진스키의 10가지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 다섯 분야에 걸친 15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37개의 측정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이념' 분야의 '공식이념의 기능'에 대한 측정항목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집단주의 명제',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우리식 사회주의 우

5)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이현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월성 명제' 등이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측정항목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 대가' 등이며,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에 대한 측정항목으로는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와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등이다.

다음으로 '엘리트' 분야에서 '엘리트의 사기'에 관한 항목으로는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과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이 있으며, '엘리트 갈등'에 관한 항목은 '집단적 갈등 유무',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등이 있고, '관료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부지침의 침투력'과 '하위조직의 자의성'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적 경제영역'에 대해서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을 측정하고,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식생활', '생활품 및 주거지', 'GNP 증감추이' 등을 사용하였으며, '대외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무역'과 '외채'를 측정항목으로 이용하였다.

'통제' 분야에서는 '사회통제'에 대해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이동', '탈북자 증감추이' 등을 측정하였고,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불만표출',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체제비판 행위' 등을 측정하였으며, '반(反)문화의 형성'으로는 '청소년 문화', '종교활동', '전통적 집단의식' 등을 측정항목으로 이용하였다.

'대외관계'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남한변화의 인지도' 항목과 '중국변화의 인지도' 항목을, '안보자원의 확보'로 '곡물 생산량과 외부유입량' 항목과 '원유 도입량' 항목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항목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37개 측정 항목 가운데 30개 항목에 대해 30명의 탈북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신뢰성 없는 대상자로 처리된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7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네 가지 척도는 '체제에 전혀 위해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임'을 1, '체제에 위해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임'을 2, '체제에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을 3, '체제에 대한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음'을 4로 두었다. 이렇게 얻어진 측정항목들의 위기지수를 평균하여 각 지표의 위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하여 총 위기지수 산출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표 2> 민족통일연구원의 연도별 북한 위기지수

| 연도 | 위기지수 |
|-------|------|
| 1986년 | 1.9 |
| 1987년 | 1.9 |
| 1988년 | 2.0 |
| 1989년 | 2.1 |
| 1990년 | 2.3 |
| 1991년 | 2.3 |
| 1992년 | 2.5 |
| 1993년 | 2.6 |
| 1994년 | 2.8 |
| 1995년 | 2.7 |

출처: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이한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렇게 조사된 15개 지표 가운데 북한체제가 취약하게 보이는 지표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대외경제관계’, ‘안보자원의 확보’ 등이었으며, 강하게 보이는 지표는 ‘관료기구의 기능’과 ‘엘리트 갈등’의 두 가지였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는 체제위기의 임계(臨界)점을 2.5로 보고 북한이 1992년에 이미 이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체제변혁의 임계점을 3.0~3.5로 보고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01년~2008년 사이에 체제변혁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시기에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의 지탱 이유로 지적한 ‘공식이념의 기능’ 지표와 ‘사회통제’ 지표의 위기지수가 3.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통제’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방정식에서 ‘사회통제’ 값이 3.0 이상을 갖게 되는 ‘연도’ 값, 그리고 ‘연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공식이념의 기능’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방정식에서 ‘공식이념의 기능’ 값이 3.0 이상을 갖게 되는 ‘연도’ 값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2.2 북한체제 위기 지표의 구축

북한체제 위기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는 브레진스키의 지표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지표가 더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는 지표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지표는 객관적인 수치화를 하였다는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측정 문항 가운데 일부는 위기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 수준을 측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귀하의 동료들은 일상 생활에서 집단과 나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체제의 안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 “귀하 직장의 간부들 사이에서 학교, 지역 또는 혈연에 따른 연대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생각합니까?”와 “귀하는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학연, 지연, 혈연에 바탕한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들에서 ‘없다’ 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체제의 안정을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브레진스키 위기지수와 민족통일연구원 위기지수는 모두 개별 지표들의 단순 합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각 영역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15개 지표가 동일한 비중(weight)을 가진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보고서 스스로 ‘공식이념의 기능’지표와 ‘사회통제’지표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또 하나의 지표 내에서도 여러 측정항목들의 비중이 동일하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응답집단의 크기가 작고 또 수치의 차이가 적어 통계적으로 신뢰할 정도가 아니다. 즉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면 위기수준 수치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북한에 대한 자료의 제한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결과를 얻는 것은 여론조사자료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도 통계적 유의성(significance)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넷째, 측정 문항들이 붕괴의 선행적 현상들이라기보다 동시적인 현상들이다. 즉 직관적으로 느끼는 총체적인 위기 수준에 대한 질문과 동어반복적(tautological)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 동일한 시기에서 과거 여러 시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엄밀한 의

미의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다. 더구나 면접을 실시할 때 “각 문항에 대한 시기별 척도(scale)의 변화에 유념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특히 사회주의 대변혁(1989년)과 김일성 사망(1994년)을 기점으로 한 변화여부에 주의를 바랍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데이터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지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주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종종 더 정확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애매모호하게 예측되어 사전(事前)과 사후(事後)에 각기 다르게 말해지기도 한다.

지표의 가치는 정확성만큼이나 객관성에도 있다. 사전과 사후, 그리고 누가 예측하더라도 동일한 예측내용이 되도록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연구자가 개별지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자신의 결론과 독립적으로 코딩하지 않고 자신의 결론과 일치되도록 코딩하여 그 지표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아니 된다. 먼저 개별지표를 구축한 이후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먼저 결론을 내린 후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개별지표를 코딩하는 것은 오히려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인 행위이다. 투입될 자료는 연구자와 독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론에 대한 선입관이 없는 연구자가 지표구축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1인 연구자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들을 종합하는 델파이기법(delphi analysis) 또는 조건부 가정을 엄밀히 적용하는 베이즈(Bayesian)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투입될 데이터의 수집을 연구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만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내용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어, 데이터와 결론이 동어반복적인 상황을 예방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표 또는 각 측정문항의 가중치는 경험적인 관찰에 의해 계산하지, 단순한 산술적 합계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시켜 지표 본래의 목표인 객관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구성되는 지표는 만일 그것이 정확할지라도 지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지표보다 차라리 지표 없이 직관으로 예측하는 것이 경제성에서 더 나을 것이다.

이색한 지표의 구축은 정확성과 객관성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객관적 자료의 획득 비용이 전문가와 탈북자 면담과 같은 주관적 자료의 획득 비용보다 훨씬 작다.

지표의 구축은 먼저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개별 지표들의 구축에서 시작된다. 기존 이론들에서 연역적으로 강조되었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검증된 변수들 또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용한다. 새로운 개별 지표를 위한 변수의 선별 원칙은 그 변수가 해당 요인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는 대표성, 그 변수가 경험적으로 종속변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는 관련성, 그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집가능성, 그 수집된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 등이다.

2.2.1 비교국가적 방정식

북한을 제외한 14개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권 위기가 있었던 제3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체제 붕괴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구한다. 14개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국가들도 함께 포함시킨 것은 사회주의 정권의 특수성 여부를 가려내고 계수의 유의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국가자료(cross-national data)를 통해 설명 변수들의 계수(가중치)를 구한다. 즉 각 국가의 무너진 시점을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중요성과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 가중치는 개별지표들의 합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을 통해 비교론적 시각에서 장기적인 북한체제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2.2.2 시계열적 방정식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 예측은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로 접근한다. 비교국가론적 방정식이 장기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시계열적 방정식은 중·단기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첫째, 앞선 비교국가적 방정식에 북한의 시기별 변수 값들을 대입하여 북한의 위기 지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분

석 차원이 다른 데에서 오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와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방정식은 북한 변수들로부터만 구한다.

둘째, 커태스트러피(catastrophe)이론과 같은 모델을 통해 단일 수치가 아닌 이중적 수치를 보여주는 체제변화 방정식을 만들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또한 단일 수치를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용하지 않는다.

셋째, 회귀방정식 없이 전문가판단(systematic expert judgement)이나 델파이기법 등을 통해 개별 지표의 가중치를 구하여 종합지표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대상 설문으로는 분야별 또는 지표별 가중치를 질문하는 것보다 전체변화나 종합위기지수를 직접 질문하는 것이 엉뚱하지 않고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체제위기에 관한 질문지를 배포하는 방법은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적 질문이다. 매월 각 전문가에게 <표 3>과 같은 설문지를 발송하여 집계할 수 있으며, 이 자료의 추이분석을 통해 변화방향을 유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방법 또한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여기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답변의 처리에도 전문성과 엄밀성이 요구된다.

넷째, 체제불안정(위기)에 대한 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 평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른 계량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분기별 또는 월별 단위의 자료는 통계적 유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경향이 강하며, 또 대부분 변수의 분기별 또는 월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사례수 감소로 통계적 유의성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한다. 통일부,⁶⁾ 한국은행, 한국농업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KOTRA, 북한 정부 등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이용하되, 서로 다른 수치일 때에는 연구자가 판단하여 좀 더 타당한 수치를 채택하였다.

연도별이든 분기별이든 북한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지만, 선행지표는 절대치보다 변화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변

6) 여기서 사용하는 통일부의 자료 대부분은 그 부처의 명칭이 통일원일 때 발표된 것이다.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화의 방향만 정확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선행지수도 절대 수치보다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을 사용하여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 3>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지

()년 ()월 설문

아래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시행합니다. 응답자들의 평균치만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18개월 이내 북한에서 최고지도자 암살, 쿠데타, 대규모 폭동, 혁명, 통일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럴 것 같다
3. 모르겠다
4. 그렇지 않을 것 같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B-1. 위 질문에서 '예'(1 또는 2)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시기와 그 양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붕괴시기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유추 값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개월 후)

(양상:)

B-2. '아니오'(4 또는 5)라고 응답하셨다면 언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1.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년경)
2.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 참고로 지난 설문에서의 선생님의 응답과 모든 응답자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질문(년 월)

2차 질문(년 월)

...

북한체제 위기 변수(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으로는 전문가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그것을 이용한 민족통일연구원 위기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위기 지수를 이용한다. 이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해당 시기의 여러 계량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방정식을 구한다.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얻은 시계열방정식의 회귀계수는 개별 지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별지표들을 가중치한 것이 종합지표이다.

이렇게 얻은 회귀방정식에 미래 북한의 상황변수(독립변수)들을 대입하여 미래 북한의 위기 지수를 구한다. 위기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별지표들의 미래 값들은 추이분석(trend analysis)을 통해 구한다. 각각 개별적으로 추이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개별 지표들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그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형(linear)함수를 이용하였다.

정책 선택의 결과에 직결되는 지표의 미래의 값은 추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나진·선봉 지역의 투자효과, 금강산 관광의 외화획득 등의 지표들과도 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외관계도 주변4국의 대(對)북한 교역량과 인적 왕래와도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표들은 자연적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정책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정책적 선택이 아닌 자연적 추이와 관련된 변수들만의 추정된 미래 값을 이용하여 미래 북한의 위기지수를 구하고 그것의 시계열적 변화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북한의 체제변화 예정시점은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 새롭게 계산되어 수정된다. 이는 눈 또는 비가 오는 예정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자료입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자료(case)의 추가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고, 새로운 방정식은 동일한 조건(독립변수 값) 하에서도 새로운 예측치를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지표의 구축은 일종의 시스템이다.

3. 지표의 내용

북한체제 변화 지표의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부(government), 정권(regime), 국가(state)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정부의 차원은 특정 자연인이 정치권력을 계속 장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부시 행정부’라고 칭하듯이 ‘행정부(administration)’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정권의 차원은 그 구성원 변화와 관계없이 헌정체제의 변경 유무 또는 권력자-비권력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제5공화국 체제 수호’와 ‘북한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체제’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물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김정일 정권’, ‘마르코스 정권’, ‘네처 정권’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권위적인 통치형태에 대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산 정권’과 ‘군사 정권’의 예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집권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국제체제(international regime)의 개념과 다를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차원은 현재 북한지역의 배타적인 관할권 경계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두 분단국이 단일국가로 바뀌는 것은 국가 차원의 변화이다.

이러한 세 차원의 구분은 민주국가에서 분명하지, 비민주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정권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⁷⁾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를 한 개인이나 한 정당이 계속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CPP정당이 가나이고, 가나는 CPP정당이다”는 엔크루마 정부의 슬로건은 정부, 정권, 국가의 세 가지 개념이 당을 통해 용해되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의 당”,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운명” 등의 구호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북한체제의 세 차원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차원에서 주의를 요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일반 정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와

7) Stephanie Lawson, "Conceptual Issues in the Comparative Study of Regime Change and Democrat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25 (January 1993), pp.183-205.

는 조금 달라야 한다. 비교정치체제론의 문헌에 나오는 내각교체 빈도, 데모 수, 스트라이크 수, 폭동 수, 사망자 수, 처벌 수, 정치범 수 등은 불안정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들인데, 이는 주로 민주체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후기전체주의국가나 독재정권의 불안정성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권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사회구조적 요인, 정치제도적 요인, 국제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1인당소득, 문맹률, 교육수준, 도시화 정도, 의사소통의 양과 질, 사회 동질성의 수준, 불평등 정도, 권력분산의 정도, 교차적 균열구조, 대집단주의, 묵종 문화, 신뢰 문화, 평등 문화, 타협 문화, 신교도 비율, 중산층 비율, 노동자계급의 비율 등이 있다. 정치제도적 요인으로는 제도화 수준, 협의제 장치, 정당체제의 분열성, 의원내각제/대통령제, 군부개입 등이 있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식민지유산, 경제적 종속, 외채, 군사적 종속, 주변국의 정권 변화 등이다.

이러한 비교국가적인 정치발전론에서 다루는 것 외에, 개별국가의 정권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쿠데타, 대중항쟁, 경제 위기, 전쟁 등이다. 경제 위기가 가져다 주는 정권변화의 방향도 당사국 국민의식의 변화와 강대국의 개입 등으로 바뀌었다는 연구도 있다.⁸⁾

북한과 관련해서는 경제 사정, 지식인의 이반, 지도자의 지도력, 통제력의 약화, 주변국과의 관계, 외부의 지원 등의 점진 변화 요인 외에 식량 사정, 외부의 식량 지원, 지도자의 건강, 군부 동향 등의 급변 변화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북한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체제라기보다 전체주의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점도 많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사회주의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맑스-레닌주의 정권의 붕괴 지표로 언급되는 것은 이념의 위기, 제도의 위기, 사회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기의 위기, 국제적 위기 등이다.⁹⁾ 사회주의체제에

8) Mark Gasiorowski,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Regime Change: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9, No.4 (December 1995), pp.882-897.

9) Howard Wiarda,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ung Chul Yang, ed., *Democracy and Communism: Theory, Reality and the Futur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대한 도전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거부감 정도 등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북한체제를 거부하는 기존의 귀순자들조차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보여 주지 않는다. 사회주의 고수나 개방이냐는 것은 북한정권의 정책선택의 대상이지, 그것의 선택에 따라 북한정권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고수되지만 현재 집권층의 생명이 종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사회주의는 포기하되 현재 집권층이 존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지속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북한정권의 정책선택의 대상으로서만 이해한다.

셋째, 분단국이라는 사실도 북한체제의 위기지표를 다른 국가들의 체제위기지표와 구분시키는 점이다. 브레진스키 지표에 따르면 동독의 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동독은 상대적으로 일찍 붕괴했다. 이는 분단이라는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분단이라는 요인이 오히려 붕괴를 지연시키는 면도 있을 것이다. 상호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과 경험하지 못한 분단국간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 분단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만들어지는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개량적 지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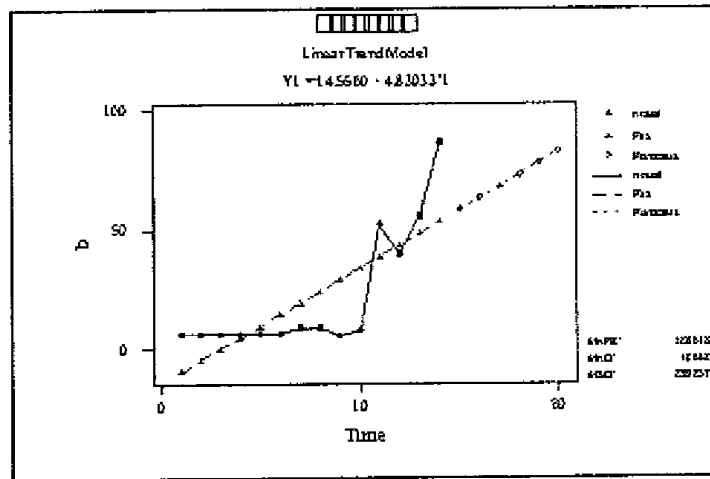
3.1 체제불만 상황

먼저 정치 및 사회 영역이다. 여기에는 현 체제에 대한 저항, 상위층의 망명, 군부의 이탈, 지배체제 논쟁빈도, 지식인 이반, 로동당 입당 동기의 강도, 사적 소유의 정도, 통제력 약화, 탈북주민 수, 아사자 수, 부정부패 정도, 외부문화 유입, 지식인 및 학생의 수, 교육수준 증가, 종교활동의 정도 등의 변수들이 있다. 이 가운데 객관적인 개량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탈북자의 수에 관한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의 수는 매우 급격히 증가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대신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주민의 수는 알려져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귀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귀순자들의 배경은 다양화되었으며, 상류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정권 붕괴의 가능한 형태는 민중봉기, 식량난, 군부쿠데타 등이다. 민중반란은 현재 북한주민의 의식수준과 정보차단으로 어렵다.

<그림 1> 남한 이주 탈북 주민 수의 추이



<표 4> 남한 이주 탈북 주민 수의 추이

| 연도 | 탈북 남한 이주민 수 (명) |
|-----------|-----------------|
| 1949-1969 | 511 |
| 1970-1979 | 38 |
| 1980-1989 | 64 |
| 1990 | 9 |
| 1991 | 9 |
| 1992 | 6 |
| 1993 | 8 |
| 1994 | 52 |
| 1995 | 40 |
| 1996 | 55 |
| 1997 | 86 |
| 1998 | 58 |
| 1999 | 63 |

| | |
|------|----|
| 2000 | 68 |
| 2001 | 72 |
| 2002 | 77 |
| 2003 | 82 |

*1998년도는 9월 25일 현재 49명임

인간은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속감과 유대감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집단주의를 매개로 지배를 유지하는 상징들이 있다. 정치적 상징으로는 국기, 국가, 당기, 당가, 제복, 초상화, 동상, 배지, 화폐 의장, 우표 의장, 건축물, 훈장, 구호나무, 친필바, 자언마위글발과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 추모식, 기념식, 군대열병, 군중시위, 역사미화 등과 같은 무형적 방식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징수단은 북한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김일성 추모식에 참가하거나 또는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것은 동일한 집단이라는 일체감을 부여하여 지배관계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추모대회도 유혼을 통해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일성 주석의 '영생화 작업'도 공산주의 천년왕국의 '영생론'을 상징으로 하여 '유혼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슬픔은 전염성이 강한 감정통합의 최고 수단이라는 데에 기초하여,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오히려 주민통합과 체제유지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후계자의 충성심으로 후계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여, 애도 분위기를 후계자에 대한 충성맹세로 만들고, 잠재적 반대세력의 반발을 사전에 제압하기도 했다.

동유럽국가들은 시민사회의 강함이 있어서 독재의 유지가 용이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를 정형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가부장적 지배가 용이하다. 이러한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체제유지에 이용한다.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충효가 중요한 덕목이다. 북한은 김일성-아버지, 로동당-어머니, 김정일-장손, 주민-가족의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비유된다. 권력세습도 후계자가 장자이자 충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부친에 대한 애도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전통문화의 요소 가운데 합리적이고 반외세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권력세습기에 이르러서는 가부장적 가치를 아

주 높이 내세운다.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에서 이탈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체제내부만큼은 ‘주체 영화’만을 상영하기 위해 계속 캄캄하게 두고 있다. 사상교육은 북한체제유지의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사상교육의 효과는 훨씬 효과적이다. 현 지배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어린 시절부터 주입시켜 왔다.

북한은 1947년 6월 ‘보건국령 제5호’로 ‘보육원 규정’을 발표하여 유치원교육의 일부분을 의무교육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취학전 교육은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를 따라하도록 반복시키고, 유치원의 식사 간식시간에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복창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2년간 배우는 교과목은 총 8과목인데, 이중 2과목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이야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이야기’의 2과목이다.

인민학교의 4년 동안의 총 3,451 교육시간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의 두 과목에 배당된 시간은 304시간이다. 고등중학교의 6년간의 총 수업시간 6,742시간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역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현행 당정책’ 등 독립된 정치교육 시간만도 669시간에 이른다.¹⁰⁾ 기타 정규과목에 포함된 정치교육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어교과서뿐만 아니라 음악교과서의 가사 그리고 각급 학교 자연계열 교과서와 수학문제에서도 그러한 개인숭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또 방학기간에는 모든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혁명전적지와 사적지의 답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은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 및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정치사상 과목이 40%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의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현 체제에 사상적으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를 바꾸려는 동기가 작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사상적 이탈의 가능성은 과거보

10) 통일원, 『95북한개요』 (통일원, 1995).

다 높지 않다.

반체제혁명의 과정에는 늘 지식인의 이반이 있어왔다. '인테리적 근성'이라는 말은 북한사회에서 지식인들의 부정적 평가를 의미할 정도로 지식인들은 본질적으로 체제비판적이다. 1960년대 북한은 지식인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추진하여 지식인이라는 사회집단을 없애고 지식인들이 체제수호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식인에 대한 숙청과 해외방명금지 등 지식인의 비판의식 표출을 줄이고 좌절감을 주어 체제에 순응시켰다. 지식인이 정권불안정을 가져온 경우는 대부분 기존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주로 외국 조류의 영향이었다. 북한의 지식인 정책은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정권부정의 견해 돌출을 예방하였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학생을 포함한 지식인들에 대한 통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외국조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별목공들을 비롯한 여러 외국 방문자들에 대한 사상교화작업이 실시되고 있다.¹¹⁾ 예컨대 귀환별목공들에 대한 사상검토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감시대상자'로 분류되어 각 사업소 보위부장과 당비서 책임 하에 사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은 어린 때부터 주민들에게 체제순응적 사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식인에 대해서도 통제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불만이 표출되어 조만간 체제붕괴로 갈 가능성은 낮다.

3.2 경제 상황

북한 체제의 유지는 권력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수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력, 경제성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현재의 업적, 이에 대한 적절한 선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962년부터 공약해왔던 '쌀밥, 고깃국, 기와집, 비단옷'은 정권 공고기에 어느 정도 실현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즉 개별가치의 제공에 의한 설득이 있었다. 북한은 정권 초기에 토지개혁 등을 통해 이미 많은 인민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토지개혁, 국유화, 경제성장 등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치의 제공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11) 《내외통신》, 주간판, 제983호 (1995년 12월 14일).

통합과 통제를 위해 물질적인 요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왔다. 현재의 최고지도자도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선전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릉성변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겠다는 혁명적 각오를 튼튼히 가질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또 “현 시기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할 문제는 식량문제”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체제 위기 지표에서 경제 영역의 대표적 변수는 경제난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북한 GNP는 1988년 161.28억US달러, 1989년 177.20억 달러, 1991년 155.54억 달러, 1993년 116.78억 달러, 1995년 52.15억 달러이다. 또 북한이 제출한 1인당GNP는 1988년 868달러, 1989년 911달러, 1990년 835달러, 1991년 753달러, 1993년 543달러, 1995년 239달러이다. 북한이 제출한 북한의 외채는 1988년 39.35억 달러, 1989년 45.75억 달러, 1991년 56.47억 달러, 1993년 67.79억 달러, 1994년 71.45억 달러, 1995년 76.53억 달러이다. 그런데 북한의 농업생산량과 곡물수요량을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북한의 발표는 믿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물론 북한 경제에 대해 외부에서 발표되는 수치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경제지표들은 주로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북한 GNP 추계는 입수 가능한 북한의 품목별 생산량에 남한의 시장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몇 가지의 가정을 전제하고 추정된 수치에 불과하다.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관계기관들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하여 남한의 가격, 환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소득통계 관련지표들을 추정한 것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사회주의국가들도 국민소득통계 편제시 SNA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자료의 부족 등에 따른 추정방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북한의 생산방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 일부 지표의 정확도가 낮으나,¹²⁾ 국내외적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 추정 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타국과의 비교 연구가 아닌 북한의 시기별 비교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위 추정치를 이용할 수 있

12) 함택영,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실증적 고찰: 최근 북한실태 분석을 위한 북·중·러 접경지역 현지조사 II-1」 《동북아연구》 제2권 (1996년 겨울), pp.43-68.

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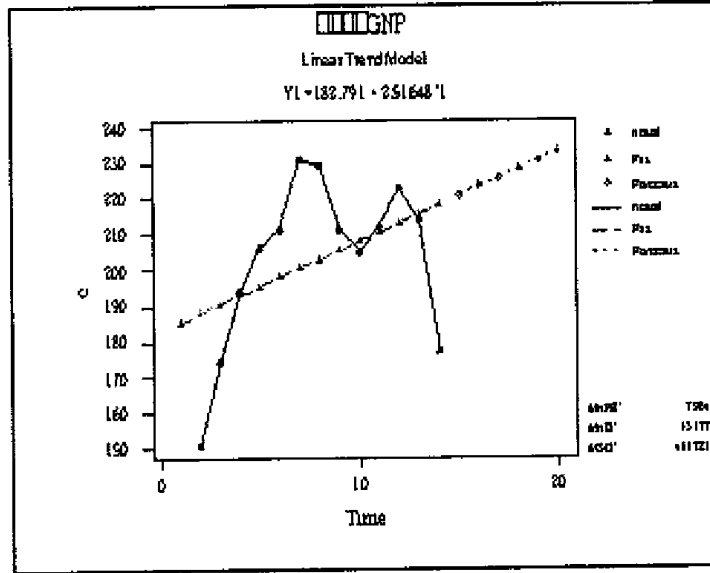
<표 5> 북한 총생산의 추이

| 연도 | 명목GNP | 1인당GNP | 실질GNP성장률 | GDP성장률 |
|------|-------|--------|----------|--------|
| 1985 | 151 | | 2.7 | |
| 1986 | 174 | | 2.1 | |
| 1987 | 194 | | 3.3 | |
| 1988 | 206 | | 3.0 | |
| 1989 | 211 | | 2.4 | |
| 1990 | 231 | 1,064 | -3.7 | -3.7 |
| 1991 | 229 | 1,038 | -5.2 | -5.1 |
| 1992 | 211 | 943 | -7.6 | -7.7 |
| 1993 | 205 | 904 | -4.3 | -4.2 |
| 1994 | 212 | 923 | -1.7 | -1.8 |
| 1995 | 223 | 957 | -4.5 | -4.6 |
| 1996 | 214 | 910 | -3.7 | -3.7 |
| 1997 | 177 | 741 | -6.8 | -6.8 |
| 1998 | 161 | 681 | | |
| 1999 | 152 | 647 | | |
| 2000 | 147 | 621 | | |
| 2001 | 141 | 597 | | |
| 2002 | 135 | 571 | | |
| 2003 | 129 | 54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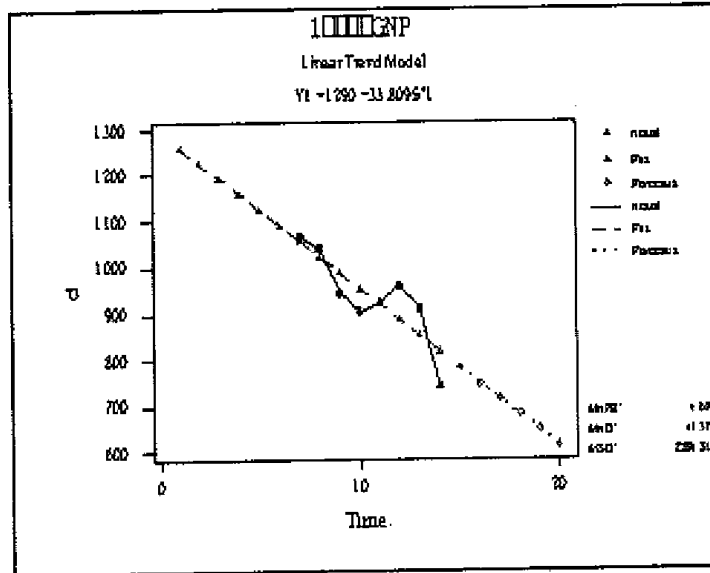
*명목GNP의 단위는 억US달러, 1인당GNP의 단위는 US달러, 실질GNP성장률과 GDP성장률의 단위는 %임.

**미달러표시 명목GNP = 원화표시 명목GNP /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그림 2> 북한 GNP의 추이



<그림 3> 북한 1인당GNP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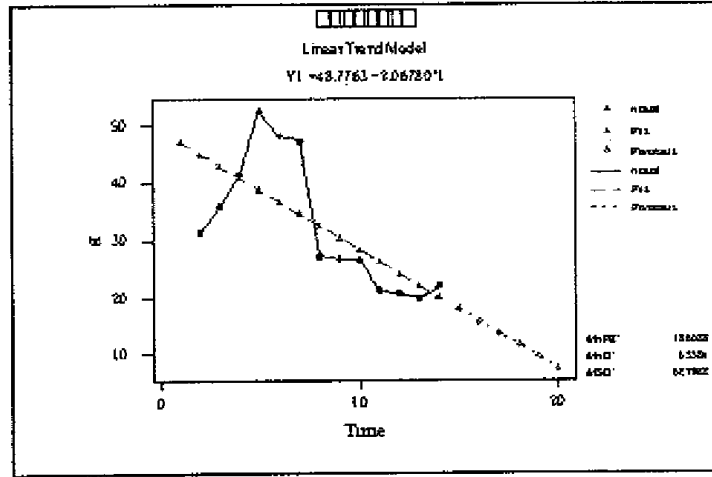
<표 6> 북한 교역규모의 추이

| 연도 | 교역규모 | 수출 | 수입 |
|------|--------------|-------------|--------------|
| 1985 | 31.0 | | |
| 1986 | 35.7(15.2) | | |
| 1987 | 41.4(16.0) | 16.4 | 25.0 |
| 1988 | 52.4(26.3) | 20.3(23.8) | 32.1(28.4) |
| 1989 | 48.0(-8.4) | 19.1(-5.9) | 28.9(-10.0) |
| 1990 | 47.2(-1.7) | 19.6(2.6) | 27.6(-4.5) |
| 1991 | 27.2(-42.4) | 10.1(-48.5) | 17.1(-38.0) |
| 1992 | 26.6(-2.2) | 10.2(1.0) | 16.4(-4.1) |
| 1993 | 26.41(-0.7) | 10.21(0.1) | 16.20(-1.2) |
| 1994 | 21.08(-20.2) | 8.39(-17.8) | 12.69(-21.7) |
| 1995 | 20.52(-2.7) | 7.36(-12.3) | 13.16(3.7) |
| 1996 | 19.76(-3.7) | 7.26(-1.4) | 12.50(-5.0) |
| 1997 | 21.77(10.2) | 9.04(24.5) | 12.72(1.8) |
| 1998 | 17.76 | | |
| 1999 | 15.69 | | |
| 2000 | 13.62 | | |
| 2001 | 11.56 | | |
| 2002 | 9.49 | | |
| 2003 | 7.42 | | |

*단위: 억달러(전년대비%)

**남북교역 제외

<그림 4> 북한 교역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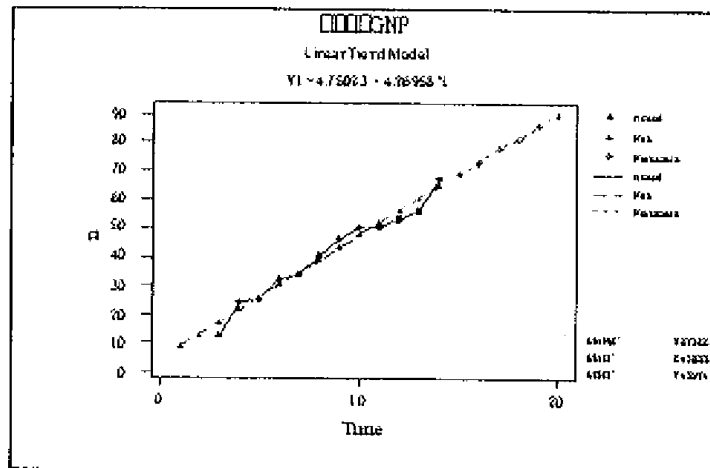
<표 7> 북한 제조업 생산의 추이

| 연도 | 제조업 생산 성장률 (%) |
|------|----------------|
| 1990 | -3.5 |
| 1991 | -13.4 |
| 1992 | -17.8 |
| 1993 | -1.9 |
| 1994 | -3.8 |
| 1995 | -5.3 |
| 1996 | -8.9 |
| 1997 | -16.8 |

<표 8> 북한 외채의 추이

| 연도 | 외채(억US달러) | 외채/GNP(%) |
|------|-----------|-----------|
| 1986 | 22.3 | 12.9 |
| 1987 | 47.8 | 24.7 |
| 1988 | 52.8 | 25.2 |
| 1989 | 67.8 | 32.1 |
| 1990 | 78.6 | 34.0 |
| 1991 | 92.8 | 40.5 |
| 1992 | 97.2 | 46.1 |
| 1993 | 103.2 | 50.3 |
| 1994 | 106.6 | 50.3 |
| 1995 | 118.3 | 53.0 |
| 1996 | 120.0 | 56.1 |
| 1997 | 119.0 | 67.3 |
| 1998 | | 68.8 |
| 1999 | | 73.1 |
| 2000 | | 77.3 |
| 2001 | | 81.6 |
| 2002 | | 85.9 |
| 2003 | | 90.1 |

<그림 5> 북한 GNP대비 외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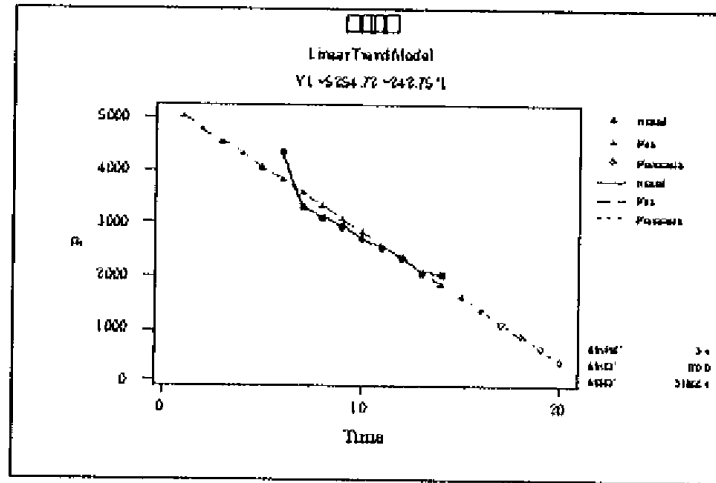


<표 9> 북한 에너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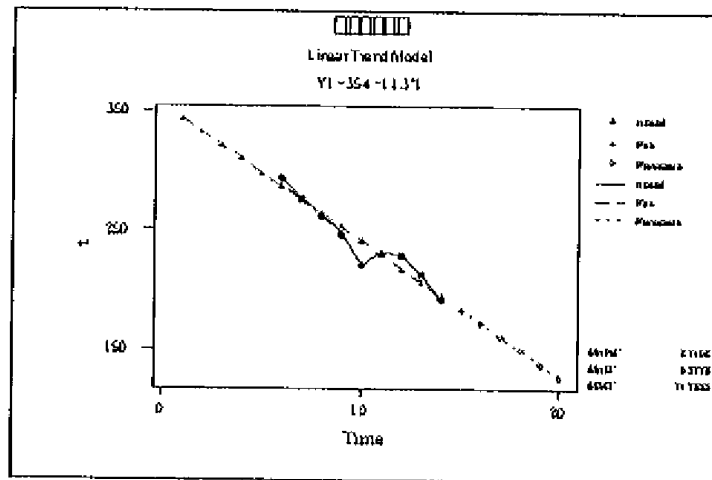
| 연도 | 석탄생산량 | 원유도입량 | 발전량 |
|------|---------------|--------------|-------------|
| 1985 | | 256 | |
| 1986 | | 226(-11.7%) | |
| 1987 | | 300(32.7%) | |
| 1988 | | 311(3.7%) | |
| 1989 | 4,330(6.3%) | 256(-17.7%) | 294(4.2%) |
| 1990 | 3,315(-23.4%) | 252(-1.6%) | 277(-5.8%) |
| 1991 | 3,100(-6.4%) | 189(-25.0%) | 263(-5.0%) |
| 1992 | 2,920(-5.8%) | 152(-19.5%) | 247(-6.1%) |
| 1993 | 2,710(-7.2%) | 136(-10.5%) | 221(-10.5%) |
| 1994 | 2,540(-6.3%) | 91(-33.0%) | 231(4.5%) |
| 1995 | 2,370(-6.7%) | 110(20.8%) | 230(-0.4%) |
| 1996 | 2,100(-11.4%) | 93.6(-14.5%) | 213(-7.4%) |
| 1997 | 2,060(-1.9%) | 110.6(17.1%) | 193(-9.4%) |
| 1998 | 1,915 | 95.2 | 174.5 |
| 1999 | 1,791 | 87.1 | 173.2 |
| 2000 | 1,725 | 15.0 | 161.0 |
| 2001 | 225 | 0.0 | 150.5 |
| 2002 | 645 | 0.0 | 139.7 |
| 2003 | 400 | 0.0 | 128.0 |

*석탄생산량과 원유도입량의 단위는 만톤(전년대비%)이며, 발전량의 단위는 억KWh(전년대비%)임.

<그림 6> 북한 석탄생산량의 추이



<그림 7> 북한 발전량의 추이



조사된 북한의 경제지표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이래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교역규모도 연속 8년째 감소하다가 1997년에 감소추세를 멈추었다. 외채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다가 1997년에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GNP는 감소하여 왔기 때문에 GN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조업생산도 1990년이래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지표 악화를 낙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더구나 에너지 생산도 석탄, 원유, 전기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선행 경제지표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북한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경제가 조만간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

위와 같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미화시켜 물질적 빈곤의 문제가 정권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여 왔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대량탈출로 정권의 불안정이 고조되어도, 그 정권이 동독처럼 붕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식량난에 관한 시나리오 검증은 곡물수급의 계산을 통해서이다. 즉 식량생산량, 재고량(비축분), 수입 및 외국지원분, 가용식량, 총수요량, 최저소비량, 총부족량 등을 계산한다.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곡물생산량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식량 수요량의 추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성인 1인의 1일 생활에 필요한 칼로리를 가지고 전체 북한 주민의 식량수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급량을 기준으로 총 소요량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산에 근거하여 1997년도 상반기에 북한의 곡물수급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으며, 북한의 재고식량이 바닥날 시점에 대해 여러 추정들이 있었다. 1997년 1월 북한이 발표한 1996년 12월 현재 식량재고량은 24.6만 톤이었다. 1997년 4월 4일 북한적십자 백용호 서기장이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1997년 3월말 현재 재고량은 6만 톤이었다. WFP 버티니 사무국장은 1997년 4~5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97년 6월에, 통일원은 100만 톤 외부지원을 감안하여 1997년 7~8월에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식량생산량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다가 최근 식량원조를 위해 다시 밝힌 바 있으나, 그 신뢰도는 높지 않다. 1997년 1~2월의 북한 발표에 따르면, 1996년 식량생산량은 250.2만 톤이었으며, 1997양곡연도(96/11~97/10) 총수요량은 784.0만 톤이고 따라서 533.8만 톤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6년 식량생산량과 1997양곡연도 총수요량에 대해서 통일원, 안기부,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세종연구소, FAO/WFP, IFRC(국제적십자연맹), CIA, 중국, 러시아 등이 각기 다르게 추정하였지만, 모두 총부족량은 22%감량배급을 전제로 해도 최소 200만 톤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족분은 외국의 원조 등으로 보충되었다.

1997년 식량생산량과 1998양곡연도 총수요량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다르게 발표하였다. 북한은 1998년 3월에 총수요량 627만 톤, 생산량 214.8만 톤, 부족량 412.2만 톤으로 발표하였다. FAO/WFP 보고서는 총수요량 461.4만 톤, 생산량 266.3 만톤, 부족량 195.1 만 톤으로 발표한 바 있다. UNDP는 총수요량 420만 톤, 생산량 224만 톤, 부족량 196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은 총수요량 618.8만 톤, 생산량 255.9만 톤, 부족량 362.9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 통일원은 1997년 12월 총수요량 638.6만 톤, 생산량 348만 톤, 부족량 290.6만 톤이며, 20%감량을 기준으로 하면 총수요량 541.3만 톤, 부족량 193.3만 톤이라고 추정하였다. <표 10>의 생산량과 부족량은 주로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추정치에 의존하고, 도입량은 주로 통일부의 추정치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다.

1998년 가을 수확기를 맞이함으로써 1999년 상반기까지의 식량수급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1999년 상반기 이전에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탈출이나 식량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표 10>에서 보듯이 북한의 식량생산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른 조치가 없는 한 이 식량난이 조만간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식량난과 경제난은 북한위기의 대표적 구성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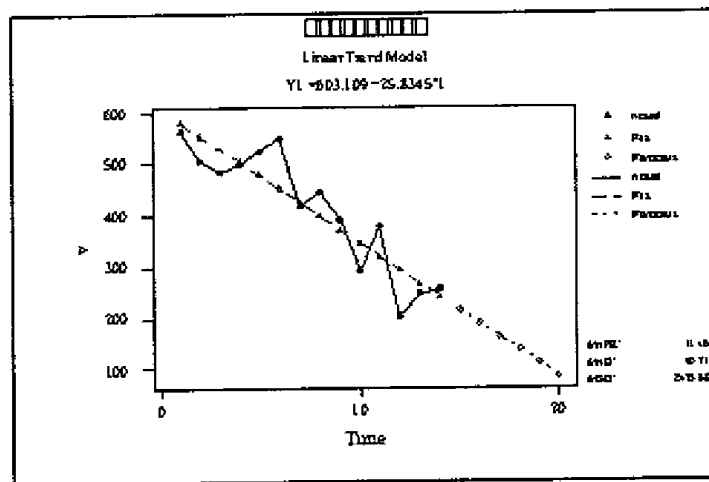
<표 10> 북한 식량 수급의 추이

| 연도 | 곡물생산량(만M/T) | 도입량(만M/T) | 부족량(만M/T) |
|------|-------------|-----------|-----------|
| 1984 | 560.0 | | 29.7 |
| 1985 | 503.0 | | 37.2 |
| 1986 | 482.5 | | 60.6 |
| 1987 | 495.2 | | 56.3 |
| 1988 | 521.0 | 69.1 | 41.9 |
| 1989 | 548.2 | 86.1 | 28.0 |
| 1990 | 418.2 | 91.0 | 94.5 |
| 1991 | 442.7 | 129.0 | 133.5 |
| 1992 | 389.8 | 83.0 | 199.6 |
| 1993 | 292.3 | 109.3 | 314.2 |

| | | | |
|------|-------|-------|-------|
| 1994 | 376.8 | 49.0 | 238.8 |
| 1995 | 200.6 | 96.2 | 361.8 |
| 1996 | 244.7 | 105.0 | 361.4 |
| 1997 | 255.9 | 163.0 | 362.9 |
| 1998 | 215.6 | | 393.2 |
| 1999 | 189.8 | | 423.6 |
| 2000 | 163.9 | | 453.9 |
| 2001 | 138.1 | | 484.2 |
| 2002 | 112.3 | | 514.6 |
| 2003 | 86.4 | | 544.9 |

*수해로 인한 재고손실량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95년의 경우 62.6만톤이 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1994년 이후 곡물도입량에는 곡물원조가 포함되어 있고, 부족량 계산에는 도입량을 고려하지 않았음.

<그림 8> 북한 곡물생산량의 추이



그런데 식량난과 경제난이 체제붕괴로 가려면 그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배고픔’ 이유가 정권에게 있다고 북한주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고픔’보다 ‘배아픔’이 체제위기에 더 영향을 미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정권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다. ‘배아픔’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굳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배아픔’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의 붕괴도 결코 '베고프' 때문이라기보다 '베아프' 때문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외국과의 개방과 긴장은 체제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3.3 대외관계 상황

세 번째 영역은 대외 및 통일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체제의 주변국들의 붕괴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은 동유럽국가와 달리 도미노현상이 중단되도록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대신에 주변에 적대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지속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표 11> 남북한 통관교역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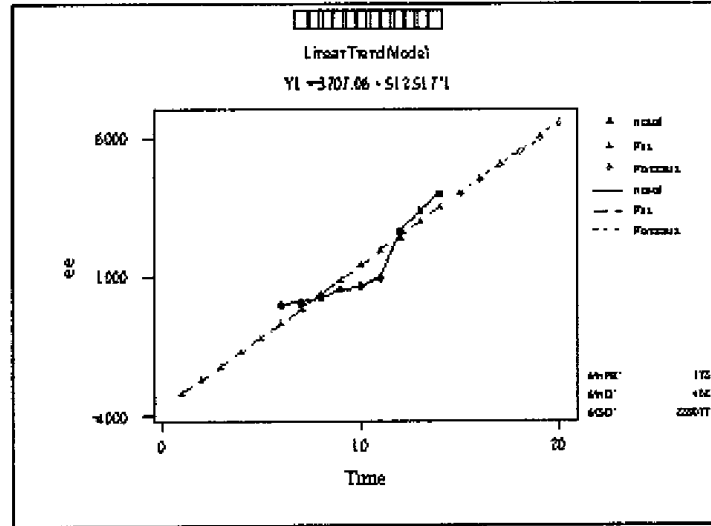
| 연도 | 반입 | | | 반출 | | | 합계 | | |
|------|-------|-----|---------|-------|-----|---------|-------|-----|---------|
| | 건수 | 품목수 | 금액 | 건수 | 품목수 | 금액 | 건수 | 품목수 | 금액 |
| 1989 | 66 | 24 | 18,655 | 1 | 1 | 69 | 67 | 25 | 18,724 |
| 1990 | 78 | 21 | 12,278 | 4 | 3 | 1,187 | 82 | 24 | 13,465 |
| 1991 | 300 | 50 | 105,722 | 23 | 17 | 5,547 | 323 | 67 | 111,269 |
| 1992 | 510 | 81 | 162,863 | 63 | 24 | 10,563 | 573 | 105 | 173,426 |
| 1993 | 601 | 77 | 178,166 | 97 | 21 | 8,425 | 698 | 98 | 186,591 |
| 1994 | 708 | 83 | 176,298 | 267 | 42 | 18,248 | 975 | 125 | 194,546 |
| 1995 | 976 | 99 | 222,855 | 1,668 | 90 | 64,435 | 2,644 | 189 | 287,290 |
| 1996 | 1,475 | 125 | 182,399 | 1,908 | 102 | 69,638 | 3,383 | 227 | 252,037 |
| 1997 | 1,833 | 145 | 193,069 | 2,185 | 129 | 115,269 | 4,018 | 274 | 308,338 |
| 1998 | | | | | | | 3,981 | 282 | 359,021 |
| 1999 | | | | | | | 4,493 | 313 | 396,476 |
| 2000 | | | | | | | 5,006 | 344 | 433,932 |
| 2001 | | | | | | | 5,518 | 375 | 471,387 |
| 2002 | | | | | | | 6,031 | 406 | 508,843 |
| 2003 | | | | | | | 6,543 | 438 | 546,298 |

*금액의 단위는 천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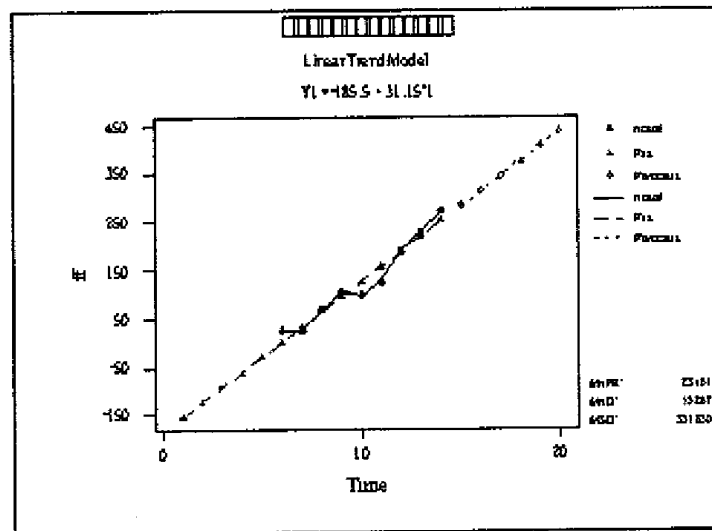
**쌀지원은 제외함.

***남북한교역은 1988년 9월부터 승인되었으나 실제 통관은 1989년부터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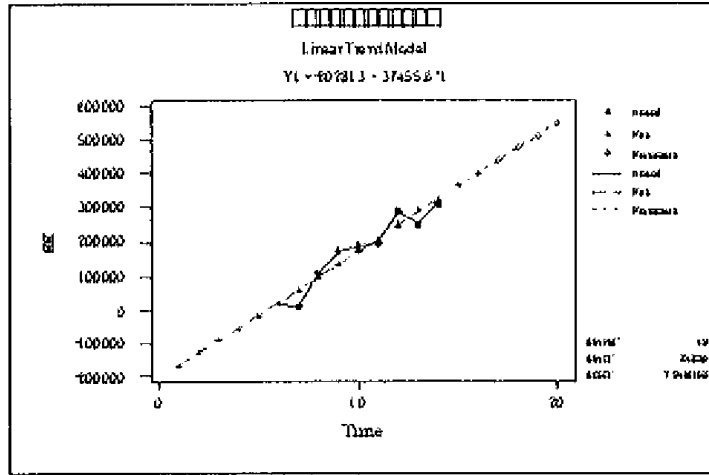
<그림 9> 남북한 통관 건수의 추이



<그림 10> 남북한 통관 품목수의 추이



<그림 11> 남북한 통관 금액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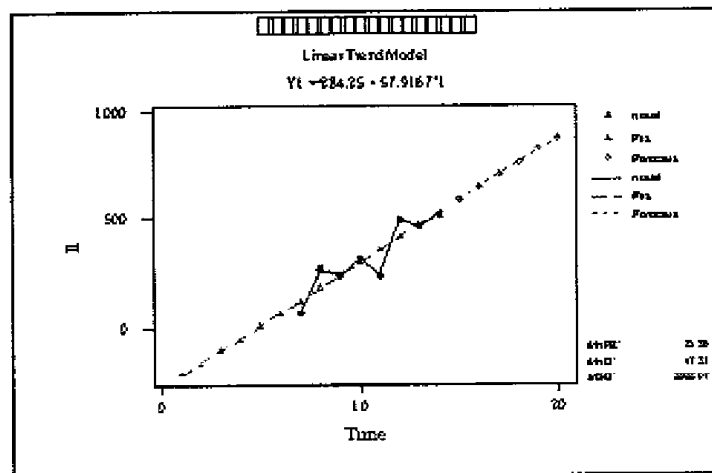
<표 12> 남북한 주민의 상대방 방문의 추이

| 연도 |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 건(명) |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 건(명) |
|------|------------------|------------------|
| 1990 | 3(183) | 4(291) |
| 1991 | 10(237) | 3(175) |
| 1992 | 8(257) | 3(103) |
| 1993 | 4(18) | 2(6) |
| 1994 | 1(12) | 0 |
| 1995 | 53(539) | 0 |
| 1996 | 28(146) | 0 |
| 1997 | 136(1,015)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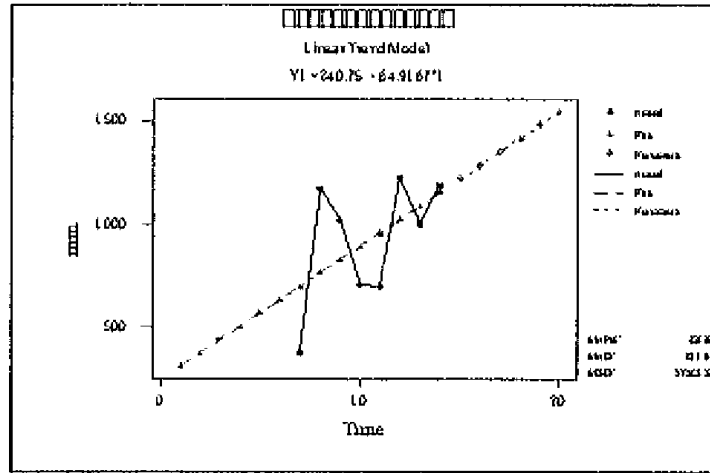
<표 13> 남북한 주민간 접촉의 추이

| 연도 | 남북한 주민간 접촉실적 건(명) |
|------|-------------------|
| 1990 | 62(377) |
| 1991 | 266(1,173) |
| 1992 | 238(1,015) |
| 1993 | 313(707) |
| 1994 | 237(691) |
| 1995 | 494(1,222) |
| 1996 | 465(1,003) |
| 1997 | 516(1,191) |
| 1998 | 585(1,215) |
| 1999 | 642(1,279) |
| 2000 | 700(1,344) |
| 2001 | 758(1,409) |
| 2002 | 816(1,474) |
| 2003 | 874(1,539) |

<그림 12> 남북한 주민간 접촉 건수의 추이



<그림 13> 남북한 주민간 접촉 명수의 추이



<표 14> 남북한 이산가족 접촉의 추이

| 연도 | 생사확인(가족) | 서신교환(통) | 제3국상봉(가족) |
|------|----------|---------|-----------|
| 1990 | 35 | 44 | 6 |
| 1991 | 127 | 193 | 11 |
| 1992 | 132 | 462 | 19 |
| 1993 | 221 | 948 | 12 |
| 1994 | 135 | 584 | 11 |
| 1995 | 104 | 571 | 17 |
| 1996 | 96 | 473 | 18 |
| 1997 | 164 | 772 | 61 |

중국이라는 체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체제의 연장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중국이라는 체제가 북한체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체제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관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 외국의 인권문제 지적 빈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과의 접촉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 동유럽의 경우, 서유럽과의 접촉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체제의 위기는 증폭되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앞서 강조한 것처럼 남한과의 접촉 자체는 북한체제의 연장에 도움이 되는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으나, 북한체제 변화의 선행지표로서의 대남 접촉은 북한체제의 위기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개방 정도가 체제위기 지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남북한 교역은 건 수, 품목 수, 금액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실적은 북한 핵 위기 때인 1993년과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 때인 1994년에 주춤하였지만 1990년대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은 1994년이래 한 건도 없다. 남북한 접촉은 남북한의 대내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시기를 제외한 접촉은 과거에 비해 꾸준한 편이었다.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은 그 목적과 계기에 따라 순수 주민 접촉, 경수로 건설인력 파견, 금강산 개발인력 파견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모두 북한의 위기수준을 나타내는 정도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간 통관과 남북한주민간 접촉의 추이만을 계산하였다. 그 추이를 보면 남북한 교역량은 꾸준히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이것은 교역보다 접촉이 정부 통제에 더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되 그것에 부수되는 인적 교류 증대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부문은 개방하지만, 정치안정에 영향을 줄 부문은 오히려 더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관계 변수 가운데 가장 북한 정권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무력분쟁 가능성이다. 동유럽국가 정권들이 사회주의 몰락의 파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외부의 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부 기인한다. 제2차 대전 이후 동유럽 어느 국가도 외국과의 전쟁을 겪은 바 없으며, 분단되어 전쟁한 경험도 없다. 잔존하는 사회주의 국가 즉 북한, 베트남, 중국, 쿠바 등은 분단되어 전쟁을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강력

한 외부 적이 존재하여 왔다. 물론 생존하지 못할 조건에서는 외부의 적이 존재한다 해도 체제몰락은 필연적이다.

북한은 늘 외부의 적을 강조하여 왔다. “제국주의는 ... 공동의 원수입니다.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써만 ...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 반제투쟁을 잠시라도 멈추거나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¹³⁾ “우리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승리하였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승리하였으며 ...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채동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 세계 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위협성은 조선에도 있고 ...”¹⁴⁾

모든 일상업무가 전투 또는 투쟁으로 명칭되었다. 위기감 조성을 통한 대중동원책이다. 전 주민들을 군 조직처럼 조직화하였으며, 모든 경제건설은 전투이며, 모든 작업장이 전장이고, 작업량 초과달성이 전쟁승리이며, 모든 노동자는 전사이고, 최고지도자는 최고사령관이며, 당정의 부서 책임자는 하급부대의 장으로 인식된다. 긴장의 확대재생산 즉 계속혁명이 북한정권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로 되어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적 구속과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북한은 경제난을 ‘미제국주의’와 ‘남조선괴뢰’의 복침에 대한 대비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대내적으로 선전한다.

북한-일본 수교가 거론되는 시기에도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해 “일본이 해외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은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군비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해외침략의 첫 공격대상은 바로 우리(북한)이며 실지로 일본자위대와 육해공군은 언제든지 조선반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며 긴장의식을 유지시키고 있다.¹⁵⁾ 또 1997년 3월 17일에는 ‘조평통’ 서

13) 『김일성저작집』 40, 1986.5-1987.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129-130.

14) 『김일성저작집』 36, 1981.1-1981.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p.248-250.

15) 《내외통신》, 주간판, 제977호 (1995. 11. 2).

기국 보도를 통해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무력분쟁 가능성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하여 무력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체제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제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무력분쟁을 일부러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체제 붕괴 직전에는 무력분쟁을 일부러 회피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무력분쟁의 가능성은 체제불안정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겠지만, 체제불안정을 나타내는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무력분쟁 가능성의 출발점은 남북한 군사력의 비교이다. 『국방백서』로부터 정리한 <표 15>에서 보듯이, 북한의 군사력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미군을 제외한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큰 열세에 있지 않다. 특히 북한 권력층들의 인식은 더욱 그렇다. 체제가 붕괴되는 것보다 남침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표 15> 북한 군사력의 추이

| 연도 | 지상/해/공군 | 전/장갑차 | 야포 | 전투/지원/잠수함 | 전술/지원/헬기 |
|-------|-----------------|-------------|--------|------------|-------------|
| 1990 | 87만/4.5만/8.0만 | 3,600/2,300 | 9,400 | 426/240/24 | 840/480/280 |
| 1991 | 87만/4.5만/8.2만 | 3,600/2,500 | 9,500 | 440/250/24 | 850/480/290 |
| 1992 | 88만/4.6만/8.2만 | 3,700/2,500 | 9,800 | 445/270/25 | 850/480/290 |
| 1993 | 90만/4.6만/8.4만 | 3,800/2,500 | 10,300 | 434/310/26 | 850/480/290 |
| 1994 | 90만/4.6만/8.4만 | 3,800/2,500 | 10,800 | 434/320/26 | 850/480/290 |
| 1995 | 91만/4.6만/8.4만 | 3,800/2,600 | 10,850 | 434/330/26 | 850/500/290 |
| 1996 | 92만/4.7만/8.8만 | 3,800/2,800 | 11,000 | 430/335/35 | 840/510/290 |
| 1997 | 100만/4.8만/10.3만 | 3,800/2,270 | 11,200 | 430/340/40 | 850/510/310 |
| 1998 | 100만/5.4만/10.3만 | 3,800/2,300 | 12,000 | 440/510/40 | 850/520/320 |
| 남(96) | 56만/6.6만/6.4만 | 2,050/2,250 | 4,700 | 180/50/4 | 530/160/630 |

| | | | | | |
|-------|---------------|-------------|-------|----------|-------------|
| 남(97) | 56만/6.7만/6.3만 | 2,150/2,250 | 4,800 | 180/40/5 | 550/180/630 |
| 남(98) | 56만/6.7만/6.3만 | 2,200/2,250 | 4,850 | 170/30/6 | 550/180/570 |

<표 16>은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한 것이다. 다른 출처를 이용했던 앞서의 표들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남북한간의 비교와 그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기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

<표 16> 남북한의 인구·산업능력 비교

| 항 목 | 연도 | 북한 | 남한 | 남한/북한(배) |
|------------|------|--------|--------|----------|
| 인구(천명) | 1995 | 23,261 | 45,093 | 1.9 |
| | 1996 | 23,558 | 45,545 | 1.9 |
| | 1997 | 23,855 | 45,991 | 1.9 |
| 명목GNP(억달러) | 1995 | 223 | 4,526 | 20.3 |
| | 1996 | 214 | 4,804 | 22.4 |
| | 1997 | 177 | 4,374 | 24.7 |
| 1인당GNP(달러) | 1995 | 957 | 10,037 | 10.5 |
| | 1996 | 910 | 10,548 | 11.6 |
| | 1997 | 741 | 9,511 | 12.8 |
| 석탄생산량(만톤) | 1995 | 2,370 | 567 | 0.2 |
| | 1996 | 2,100 | 495 | 0.2 |
| | 1997 | 2,060 | 451 | 0.2 |
| 발전용량(만kW) | 1995 | 724 | 3,218 | 4.4 |
| | 1996 | 739 | 3,572 | 4.8 |
| | 1997 | 739 | 4,104 | 5.6 |
| 발전량(억kWh) | 1996 | 213 | 2,055 | 9.6 |
| | 1997 | 193 | 2,244 | 11.6 |
| 목불생산량(만톤) | 1996 | 369.0 | 614.5 | 1.7 |

| | | | | |
|-------------|------|-------|---------|-------|
| | 1997 | 348.9 | 614.3 | 1.8 |
| 쌀생산량(만톤) | 1996 | 134.0 | 532.3 | 4.0 |
| | 1997 | 150.3 | 545.0 | 3.6 |
| 철광석생산량(만톤) | 1996 | 344.0 | 22.1 | 0.06 |
| | 1997 | 291.0 | 29.6 | 0.1 |
| 비철금속생산량(만톤) | 1996 | 11.6 | 62.1 | 5.4 |
| | 1997 | 10.8 | 72.2 | 6.7 |
| 자동차생산량(만대) | 1996 | 0.85 | 281.3 | 330.9 |
| | 1997 | 0.64 | 281.8 | 440.3 |
| 조선생산량(만G/T) | 1996 | 5.0 | 779.8 | 156.0 |
| | 1997 | 3.8 | 744.9 | 196.0 |
| 강철생산량(만톤) | 1996 | 120.8 | 3,890.3 | 32.2 |
| | 1997 | 101.6 | 4,255.4 | 41.9 |
| 선박보유(만톤) | 1996 | 92.1 | 699.3 | 7.6 |
| | 1997 | 95.0 | 675.6 | 7.1 |

<표 16>에서 보듯이, 석탄생산량과 철강석생산량에서만 북한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 나머지 지표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인구수를 고려한 곡물생산량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작지 않지만, 국력비교에서는 절대 생산량을 비교하기 때문에 곡물생산량에서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에서도 북한은 열세이다. 공업생산량에서는 북한은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한간 격차의 변화를 보면, 인구, 석탄생산량, 곡물생산량 등에서는 남북한간 격차의 변화가 별로 없다. 명목GNP, 1인당GNP, 발전용량, 발전량, 비철금속생산량, 자동차생산량, 조선생산량, 강철생산량 등에서는 남한의 우위가 점차 더 심화되고 있는 반면, 쌀생산량과 선박보유에서는 남한의 우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철강석생산량에서는 남한의 열세가 줄어들고 있다.

적대국관계에서는 힘의 우열관계 변화가 전쟁발발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렇게 열위에 있

지 않다면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도발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만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북한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의 순수전쟁능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듯하나, 잠재적이고 장기적 전쟁능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북한의 판단뿐만 아니라, 남한과 미국의 판단에도 좌우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무력분쟁의 가능성은 전쟁능력뿐만 아니라 북한이 느끼는 적대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로동신문》의 제6면 기사를 이용하여 북한의 적대감 표출 변화를 알아보면, 중국에 대한 비난의 기사는 없었으며, 우호적인 기사들만이 몇 차례 있었다. 적대감을 표현한 대상은 남한, 미국, 일본, 러시아이다.

<표 17>에서 보듯이, 1994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36개월 동안 남한을 비방하지 않았던 달은 한번도 없으며, 남한을 우호적으로 다룬 기사는 한번도 없다. 제6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대남 비난의 정도는 매우 높다.

<표 17> 《로동신문》 제6면의 대외 비난 빈도

| 연/월 | 대남한 | 대미국 | 대일본 | 대러시아 |
|-------|-----|-----|-----|------|
| 94/8 | 4 | 3 | 15 | 0 |
| 94/9 | 1 | 3 | 16 | 1 |
| 94/10 | 1 | 4 | 15 | 1 |
| 94/11 | 1 | 3 | 18 | 4 |
| 94/12 | 3 | 4 | 21 | 1 |
| 95/1 | 1 | 5 | 12 | 2 |
| 95/2 | 3 | 4 | 7 | 0 |
| 95/3 | 2 | 8 | 20 | 2 |
| 95/4 | 1 | 6 | 7 | 2 |
| 95/5 | 1 | 9 | 7 | 1 |
| 95/6 | 1 | 10 | 7 | 3 |

| | | | | |
|-------|----|----|----|---|
| 95/7 | 13 | 7 | 3 | 0 |
| 95/8 | 9 | 9 | 14 | 0 |
| 95/9 | 7 | 9 | 20 | 1 |
| 95/10 | 9 | 7 | 13 | 0 |
| 95/11 | 10 | 13 | 11 | 0 |
| 95/12 | 10 | 14 | 11 | 6 |
| 96/1 | 4 | 8 | 6 | 2 |
| 96/2 | 3 | 6 | 2 | 3 |
| 96/3 | 2 | 15 | 4 | 2 |
| 96/4 | 13 | 9 | 6 | 0 |
| 96/5 | 3 | 7 | 6 | 0 |
| 96/6 | 8 | 10 | 15 | 1 |
| 96/7 | 6 | 5 | 7 | 1 |
| 96/8 | 8 | 5 | 20 | 1 |
| 96/9 | 8 | 7 | 10 | 1 |
| 96/10 | 6 | 3 | 6 | 1 |
| 96/11 | 6 | 9 | 4 | 0 |
| 96/12 | 3 | 6 | 4 | 0 |
| 97/1 | 11 | 8 | 11 | 3 |
| 97/2 | 7 | 4 | 8 | 0 |
| 97/3 | 5 | 7 | 9 | 1 |
| 97/4 | 12 | 6 | 7 | 2 |
| 97/5 | 1 | 9 | 12 | 0 |
| 97/6 | 6 | 6 | 12 | 0 |
| 97/7 | 13 | 7 | 6 | 0 |

제6면에 나타난 기사 수만을 본다면, 남한을 비난하는 빈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32건의 비난 기사가 있었고,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84건의 비난 기사가 있었으며,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86건의 비난 기사가 있었다. 즉 대남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무력분쟁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

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백서 1997~1998』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하고 사정거리 1,000km 이상인 노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작전배치 단계에 와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 2호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 1호, 2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1,500km, 4,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1997년 9월에는 북한이 일본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동 1호를 북한 북서부지역에 실전배치 했음이 확인되었으며, 1998년 8월말에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하는 논란을 가져온 광명성 1호라는 물체를 발사한 바 있다. 북한에게는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대결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즉 외부와의 긴장 조성을 통해 대내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한·미·일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표현은 대내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그만큼 대내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하지만 그 강도는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1970년 이래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반미공동투쟁월간’, ‘조선인민과의 국제적 연대성 월간’, ‘반미 반전 반핵 평화운동기간’ 등으로 정하고 반미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이러한 행사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1996년 6월 16일자 5면에서 ‘미군유골발굴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미실무회담 진행’이라는 기사에서 “쌍방은 이번 합의가 조미사이에 신뢰를 도모하며 관계를 전진시키는데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 측에 대북 적대시 정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 1996년 6월 25일자 로동신문 1면 사설에서 “... 대결상태에 있는 조미관계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 미군부의 호전세력 ... 미군부와 남조선의 호전분자들 ...”라고 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미국 전체가 아닌 미국내 강경파만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 호의적인 기사를 낸 적도 있다. 1996년 5월 27일자 6면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결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들의 보수적인 립장은 미국내에서 비난을 받고있다. 그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나라들을 함부로 걸고들면서 전국적인 반미사일방어체계를 창설하고 그것을 일본과 남조선 등에도 도입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어 그는 레건시기의 《별세계전쟁계획》까지 다시 들고나오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이 아마도 미국집권세력에 대한 북한의 유일한 호의적인 보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로동신문》의 기사로 보아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 17>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았던 달은 없었으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 빈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 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66건,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12건,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77건이 있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비난 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48건,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15건,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109건이 있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비난 기사이나, 그 빈도와 강도는 한·미·일에 비해 매우 낮다. 러시아에 대한 비난 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7건,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6건,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9건이 있었다.

이 외 주변국과의 군사협정 정도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계량적 지표와는 관계가 없어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4. 종합 위기 지표

앞서의 변수들 가운데 민족통일연구원의 위기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9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들은 외채/GNP, 외채, 석탄생산량, 원유도입량, 발전량, 남북한 통관반입 건수 등이다. 0.8에서 0.9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들은 1인당GNP, 수입, 수출, 곡물생산량, 식량부족량, 남북한 통관반입 품목수, 남북한 통관반입 금액 등이다. 0.7과 0.8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들은 탈북 남한이주민수, 실질GNP성장률, 교역규모, 남북한 통관반출 품목수 등이다. 이 변수들은 사례수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이것이 아마도 미국집권세력에 대한 북한의 유일한 호의적인 보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로동신문》의 기사로 보아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 17>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았던 달은 없었으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 빈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 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66건,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12건,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77건이 있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비난 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48건,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15건,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109건이 있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비난 기사이나, 그 빈도와 강도는 한·미·일에 비해 매우 낮다. 러시아에 대한 비난 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7건, 1995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16건,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9건이 있었다.

이 외 주변국과의 군사협정 정도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계량적 지표와는 관계가 없어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4. 종합 위기 지표

앞서의 변수들 가운데 민족통일연구원의 위기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9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들은 외채/GNP, 외채, 석탄생산량, 원유도입량, 발전량, 남북한 통관반입 건수 등이다. 0.8에서 0.9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들은 1인당GNP, 수입, 수출, 곡물생산량, 식량부족량, 남북한 통관반입 품목수, 남북한 통관반입 금액 등이다. 0.7과 0.8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들은 탈북 남한이주민수, 실질GNP성장률, 교역규모, 남북한 통관반출 품목수 등이다. 이 변수들은 사례수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북한의 위기를 설명하는 지표들

| 변수 | 베타회귀계수 |
|-------------|--------|
| 원유도입량 | -0.709 |
| 외채/GNP | 0.541 |
| 교역규모 | 0.351 |
| 곡물생산량 | -0.163 |
| 식량부족량 | -0.145 |
| 탈북 남한 이주자 수 | 0.118 |
| 명목GNP | 0.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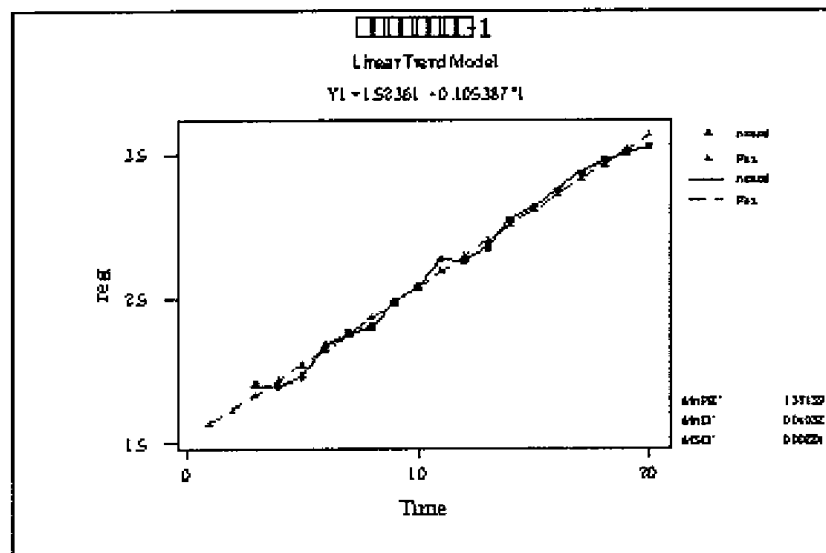
N = 10
R2 = .986

<표 19> 북한 위기자수의 추이

| 연도 | 위기자수 |
|-------|------|
| 1986년 | 1.91 |
| 1987년 | 1.90 |
| 1988년 | 1.97 |
| 1989년 | 2.18 |
| 1990년 | 2.26 |
| 1991년 | 2.31 |
| 1992년 | 2.48 |
| 1993년 | 2.59 |
| 1994년 | 2.77 |
| 1995년 | 2.76 |
| 1996년 | 2.85 |

| | |
|-------|------|
| 1997년 | 3.04 |
| 1998년 | 3.13 |
| 1999년 | 3.24 |
| 2000년 | 3.35 |
| 2001년 | 3.45 |
| 2002년 | 3.50 |
| 2003년 | 3.55 |

<그림 14> 북한 위기지수의 추이



북한체제의 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북한이 인위적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앞에 언급한 여러 지표 가운데 그러한 속성을 가진 변수들을 제외시켰다. 또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가능하면 여러 연도에 걸쳐 입수가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 변수만을 선택했다. 즉 <표 18>에 있는 7가지의 변수만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만들었다. 지극히 적은 사례수로 인해 개별 변수의 유의성은 인지 못했지만, R2이 .986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설명력이 높다.

이 회귀방정식에 앞에서 구한 개별 지표들의 추정치를 대입하여 얻은 북한의 위기지수는 <표 19>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4>이다.

위기지수가 3이라는 것은 '체제에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을 말하고, 4는 '체제에 대한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음'을 말하는데, 만약 체제변혁의 임계점을 3.5이라고 한다면, 2002년의 북한체제는 변혁의 길목에 서게 된다고 개괄적으로 전망된다. <그림 14>에 따르면 위기지수가 '체제의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은' 4가 되는 지점은 2006년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체제는 착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4>의 곡선은 급강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강하도 아니다.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의 착륙으로 볼 수 있다.

연착륙(soft-landing)의 개념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불안정한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연착륙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점진적으로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연착륙으로 본다. 즉 연착륙은 경착륙(hard-landing) 또는 파열착륙(crash-landing)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기존체제가 결과적으로 종식(landing)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체제지속(no-landing)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응에 있어서도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비둘기파(dove)와 이에 반대하는 매파(hawk)는 공히 북한이 하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반면, 벌새파(hummingbird)만이 북한체제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대응을 논한다.

북한에 대한 개량적 지표들은 자국의 개혁과 외국의 원조가 없다면 북한체제가 도발이든, 자체소멸이든, 추락이든, 착륙이든 간에 계속 하강하는 추세이지 회복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혁 없는 북한체제의 붕괴는 시기가 문제이지 붕괴여부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시기는 북한체제의 현재 고도, 즉 북한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지만 연료계기관은 바닥을 가리켜도 공중급유와 같은 외국 원조가 있으면 북한체제는 지속될 수도 있다. 즉 북한체제의 붕괴여부와 시기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비록 추락지점(도발여부)은 북한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연료공급(외부원조)은 외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아무도 북한에게 식량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체제는 현재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주변국들이 그것이 전쟁이든 또는 자연적 소멸이든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반곤이 혁명과 범죄의 아버지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구를 염두에 두면, 북한정권은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경제문제만 해결된다면 정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정권의 변화 없이 경제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딜레마이다. 정권안정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필요한데, 그 대외개방은 정권불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만일 개방된다면, 기존 정권에게 정통성을 가져다 준 많은 근거들이 그 설득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 식의 제한된 경제개방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개방으로 과연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경제악화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계속 폐쇄를 고집할 수는 없다. 극도의 경제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면적 개방을 통한 근원적 대처보다 폐쇄정책의 골격 하에서 외국의 원조와 제한된 경제협력을 통한 단기적 대처에 치중할 것이다. 실제 북한의 식량난은 외국의 원조로 일부 해결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면적인 개방보다 현재와 같은 폐쇄와 외국의 원조라는 선택을 할 것이다. 물론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정책이 그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권 변화에 있어 경제난의 중요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지만, 북한 정권의 변화에 있어서는 경제난의 비중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조건에서 경제 지표가 위기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큼의 또는 더 중요한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실지로 동유럽국가에서도 경제난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외부의 환경도 중요했다. 동유럽에서 동독은 경제적으로 상위에 있었으나 먼저 붕괴했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상 약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아직 '사상이 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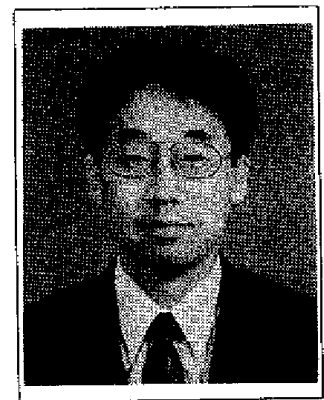
계량적 지표들은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표들을 포함시켜야 하나, 북한 체제라는 비행기의 계기판이 외부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을 만큼 북한은 폐쇄적이다. 그렇다 하여 계기판 없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눈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모두가 붕괴하고 쇠퇴한다는 식의 장기예측은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단기예측은 쉽지 않다.

북한체제에 대한 개량적 지표로 판단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내부적 개혁과 외부적 원조 없이 2006년 이후에도 체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북한에게는 대내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 금강산 관광의 개발 등이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개량적 지표는 남한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이 크다는 것도 보여준다. 북한 변화의 틈을 벌리거나 북한 변화 지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남한의 직·간접적 개입은 적대적이기보다 우호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또 일방적으로 양보적이기보다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

統一에 對備한 北韓 保險産業의 民營化方案 研究



申 東 昊(보험개발원)

목 차

| | |
|---------------------------|-----|
| <요약문> | 61 |
| 1. 서론 | 65 |
| 2. 북한 보험산업 현황 | 68 |
| 3. 체제전환국가의 보험산업 민영화 | 83 |
| 4.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 103 |
| 5. 결론 | 118 |
| ※ 참고문헌 | 122 |

【요약문】

동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동구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한 간에는 경제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인적 및 물적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보험산업이 규모면에서 세계 제6위의 보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보험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 보험산업에 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보험산업의 특징은 국영독점체제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고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상품의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고, 보험협회, 보험교육기관 등과 같은 보험관련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생명보험은 조선중앙은행의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재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에서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 보험산업의 발달정도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보험 통계자료의 제한성을 전제로, 1996년도 북한 보험시장의 규모는 약 3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남한의 624억 7천만달러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간의 생·손보 점유비율을 비교해 볼 때, 남한은 생명보험시장이 약 76%로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손해보험시장이 약 7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보험산업은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 규모, 보험인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도로 전환하는 체제전환국가의 경험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구동독 및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보험산업 민영화 경험을 살펴보았

다. 체제전환은 일종의 제도가 진화하는 과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험산업의 체제전환은 곧 국영 보험에서 민영보험시장으로의 점진적·단계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과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되던 각종 사회보장은 감소하게 되고 개인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민영 생명보험 및 노후복지를 위한 연금보험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또한 국영기업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각종 손해보험을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마련이다. 특히 민영 생명보험시장의 등장은 체제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제거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체제전환국에서 보험산업의 민영화는 경제 전 분야에 성공적인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및 정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민영화도 사유화의 진전과 경제의 발전속도에 따라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외의 민영 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국내자본의 미성숙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자본유입과 경영기술이 선호되었다.

체제전환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적합한 보험관련법의 보완 및 제정이 시급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보험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외국의 보험감독기관, 보험협회의 협조가 도움이 되었다.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이러한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을 통하여 시행착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민영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남북정협 활성화단계의 전략과 통일 준비단계의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북한은 경수로 건설공사 지역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 보험사업을 태외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한 및 외국의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한 사례는 없다. 이는 기업의 속성상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진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경수로건설, 남북정협 관련보험, 금강산관광보험 등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사고에 대한 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정협의 규모가 더욱 증가한다면, 남한 보험회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현재까지도 동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제개혁의 바람은 이미 냉전체제가 종식되었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남북한¹⁾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그 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²⁾의 경수로 건설사업, 그리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최근 남한 신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남한 기업의 북한진출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남북한 특수상황에 따른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동서독 통일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붕괴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에 비하여 보험측면에서의 남북한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진행되어 왔다. 보험분야에서는 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가 한국개발연구원(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93)과 일부 인문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³⁾. 그 외에 북한의 보험제도에 관한 연구가 보험개발원(1997)과 보험감독원(1997)에서 진행되었다⁴⁾. 그러나 구체적인 북한 보험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보험산업의 비교, 통일시 남북한

1)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은 이하 각각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함.

2) 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이하 'KEDO'라고 함)는 한·미·일 3국 주도하에 북한에 유상으로 제공할 경수로발전소의 공급과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국제컨소시엄으로 1995.3.9에 설립되었다. 참조: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개관 - 추진현황과 과제 -』, 1997.9.

3) 정경배 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1993)』,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진 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4; 나병균,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정립방향』, 한림대학교, 1997.

4) 고평석, 『북한보험제도』,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자료(97-01), 1997.; 신동호, 안철경, 『남북경협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97-2, 1997.; 삼성보험금융연구소,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이에 따른 손해보험업계의 대응방안』, 1995.8.

보험산업의 통합 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과거의 연구도 북한 보험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통계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통일부가 3년전부터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북한 및 통일문제관련 연구용역과제」중에도 보험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남한이 세계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다른 연구분야와의 불균형은 유감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남북한 보험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보험산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이미 경수로건설 공사지역,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보험분야에서도 개방정책을 시도하여야 하며, 보험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하여 남한 및 외국 보험업계와의 교류를 증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보험산업에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국영 독점 보험회사의 민영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준비단계의 일환으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남북한 보험산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보험산업은 계획경제체제에서 국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다수의 민영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 보험산업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도 북한의 보험제도에 관한 현황은 과거의 국내 및 외국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논문들과의 차별화, 그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총론이 아닌 각론화를 시도하고자 하며,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 보험관련 자료들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으나, 아직 소개되지 않은 국내외 자료를 통하여 북한의 보험산업에 관하여 조사·분석한다.

둘째, 보험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외국사례는 과거 동서독 통일의 경험과 동유럽 체제 전환국가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민영화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방안을 제시한다. 단, 사회보험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제I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서술한다. 제II 장에서는 북한 보험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논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보험제도, 보험사업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남북한보험시장의 규모를 비교하며, 각종 보험지표를 활용하여 북한 보험산업의 현황을 논한다.

제III장에서는 구동독 및 동유럽국가를 포함하는 체제전환국가의 보험산업 민영화 경험에 관하여 조사·분석한다. 보험산업에서 민영화의 필요성과 목표 및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민영화시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한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현재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국가의 보험산업 민영화 경험은 남북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제IV장에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 경제전반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서 북한 보험산업의 대외개방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은행권의 북한진출 사례를 살펴본다.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단계 전략과, 중장기적으로 통일 준비단계⁵⁾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V장에서는 앞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참고문헌을 첨부한다.

5) 본고에서의 통일 준비단계는 현재의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남북한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통일이 가까워지는 미래의 시기를 의미한다.

2. 북한 보험산업 현황

2.1. 보험제도

2.1.1. 국영독점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념에 의하여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주도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물질적·문화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화의 분배를 제한하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뜻밖의 사고로 근로자의 생명 및 협동단체의 재산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목적으로, 그리고 국가재산이 대외교역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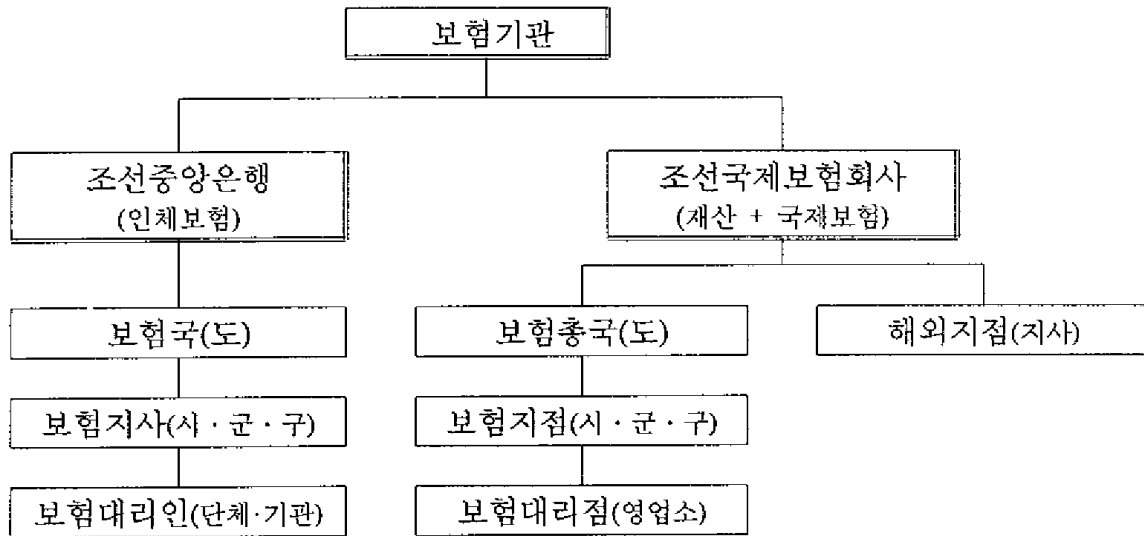
북한 보험법⁶⁾ 제3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보험회사)이 운영하는 국영독점체제이다. 따라서 민영보험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직되고 폐쇄된 보험시장이다. 국가보험기관은 보험회사의 기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행정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보험기관은 인체보험(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조선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와 국제보험(재보험)과 비생명보험(손해보험)을 담당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를 의미한다.

북한의 보험사업은 보험계약자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보험료는 대부분이 중앙은행의 국고로 귀속되거나, 낮은 이율의 정기에금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또한 국영독점체제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굳이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⁷⁾. 이러한 현상은 북한 보험법에 자산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험법은 제5장 제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4.6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되었음. 참조: 고평석, 「북한보험제도」,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자료(97-01), 1997.2.

7)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보험기관은 매우 제한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다.

<그림 1> 국가보험사업의 운영체계



2.1.2. 감독제도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이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험사업을 감독하는 기관도 국가행정기관이다. 북한의 보험사업은 국내보험이나 국제보험에 대한 국가의 명령,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국가검열성의 정령·결정·지시,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하여 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다⁸⁾.

보험법 제44조에서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감독)는 국가보험 관리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국가보험 관리기관은 국가보험위원회이며 북한보험제도의 최고 정책 및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 보험법과 규정 세칙들의 집행상태를 감독·통제한다. 동 위원회는 재정부, 중앙은행, 농수산위원회, 철도부, 건설부, 해운부, 육운총국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이 참여하며,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다⁹⁾.

의무보험,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보험법 제10조),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표 기준조건(표준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험법 제11조). 또한 보험자는 연간결산이 끝나면 재정상태표(재무재표), 손익계산서를 국가보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8) 북한은 제10기 최고인민위원회(1998.9.5)에 헌법을 개정하여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었다. 과거 정무원 산하의 11개 위원회 중에서 국가계획위원회 1개만을 남기고 모두 폐지하거나 성으로 개편하였다. 국가보험위원회의, 재정부의 개편된 명칭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참조: 『한국경제』, 1998.9.7.

9) 고평석, 전게서, p.129.

있다(보험법 제12조).

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제조치는 벌금제도(보험법 제45조)를 시행하며, 결과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적, 형사적 책임(보험법 제46조)을 묻기도 한다. 또한 분쟁 발생시에는 협의, 재판 및 중재기관을 권장(보험법 제47조)하고 있다.

2.1.3. 보험상품 및 요율산출

보험은 인체(인)보험과 재산(재물)보험으로 나뉘어진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제해(상해)보험이 포함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이 속한다(보험법 제2조). 또한 향후 보험수요가 증가할 경우 보험의 종류를 늘린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연성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에도 의무보험과 보장성보험이 존재하고 있다. 임의보험은 자원보험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여객보험, 자동차 제3자책임보험¹⁰⁾이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만기 생존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보험법 제31조). 여객보험, 제해보험, 재산보험은 보장성상품으로 운영하며,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는 소멸된다(보험법 제34조).

북한은 국영 독점보험기관이 직접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역시 국영의 보험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ISO, 독일의 GDV, 일본의 요율산정회, 남한의 보험개발원 등과 같은 전문적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2.2 보험사업의 운영주체

2.2.1 조선중앙은행

2.2.1.1 저금·보험치의 조직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인체보험사업은 조선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보험

10) 정무원결정(1996.9) 제49호에 의거하여 북한 거주 대사관, 함양, 합작회사의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제3자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차체보험은 자원(임의)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재해보험이 포함되고 있다.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저축목적의 만기보험과 보장성 목적의 사망보험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장성 목적의 사망보험금의 액수는 높지 않을 것이며, 보험료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직제도를 살펴보면, 도내에 설치된 보험국은 도, 시, 군(구역)의 보험지사를 지도하는 행정업무만 담당한다. 보험지사는 보험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집행단위이며,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기일군(경리담당자)이 보험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조선중앙은행은 보험형태에 따라 저금소에서도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¹²⁾.

북한에서 인체보험을 전담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은행으로 하여금 생명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념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보험기관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하여 볼 때, 북한에서는 생명보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인체보험과 관련된 보험료규모, 보험요율, 손해율, 사업비 등의 통계자료는 알려진 바가 없다.

2.2.1.2 모집제도

생명보험의 운영주체는 조선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로서 해당단위 경리담당자가 보험사업을 담당한다. 조선중앙은행은 각 도별로 총지점과 각 시·군·구에 지점을 두고 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체 및 기관에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인을 위촉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대리점, 중개대리점, 손해감정대리점, 손해청산대리점으로 구분되며, 보험대리인은 총대리인, 개별적인 대리인, 전임대리인과 겸임대리인, 인체보험대리인과 재산보험대리인으로 구분된다¹³⁾. 그러나 북한의 보험대리인은 전업대리인이

11) 곽평석, 전게서, p.19.

12)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정책보고서, 해연 97-1, 1997.5, p.60.

13) 보험감독원, 전게서, p.121.

아니라 각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험기관의 대리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에는 전업모집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모집인 수당이 없으며, 경쟁이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2.1.3 기 타

인체보험의 대상자는 북한주민 및 협동단체이다. 보험계약자인 주민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할 때, 또는 보험기간 만료시에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북한 보험법의 특이한 사항은 여객보험, 재해/재산보험에서 보장성정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권이 있는데,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계약기간중에 취소할 수 있으나, 재해보험, 여객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보험법 제27조). 그리고 생명보험가입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험법 제33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보험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북한에서의 재산몰수형이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2.2.2 조선국제보험회사

2.2.2.1 조직

조선중앙은행이 전액출자한 조선국제보험회사(Korea Foreign Insurance Co. Ltd, KFIC)는 국제보험(재보험)사업과 비생명보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북한 유일의 독자적인 전문국가보험기관으로¹⁵⁾ 자본금은 1996년 현재 1억북한원이며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동사는 외국과의 재보험업무를 위하여 편의상 보험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한의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북한 재정부 산하의 대외보험총국으로 알려져 있다¹⁶⁾.

평양 본사에는 총 800여명의 직원과 해상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투자, 조사 등의 업무부서들이 있으며, 전국의 시·군(구역)에 약 200개의 지점을 두고 보험사업을 영위

14) “여객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없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지급 받은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참조: 북한 「보험법」 제34조.

15) 동사는 1946년 4월에 설립된 고려화재보험주식회사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16) 박유환, 전게서, p.60.

하고 있다. 공장과 협동농장단위에는 보험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연합기업소(공단) 등에는 보험대리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2.2.2 재보험 출재 및 수재

조선국제보험회사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국제 재보험시장에 참여하여 왔다. 북한이 국제 재보험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재보험 수재 및 출재를 통하여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 사는 재보험을 외국의 재보험회사에 출재(ceded reinsurance)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브로커(broker)사나 대리점(agent)을 통하여 외국의 재보험 물건(risk)을 수재(accepted reinsurance)하거나 재재보험(retrocession)을 취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Lloyd's의 재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5개국에 지사¹⁷⁾를 운영하고 있다. 재보험의 출재는 화재보험이 전체의 약 70% 수준이며, 기계, 적하, 선박보험이 각각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재는 주로 일본소재의 조총련계 금강보험주식회사¹⁸⁾의 계약을 비례재보험(quota-share) 방식으로 인수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관련 통계는 물론, 보험관련 통계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Swiss Re의 자료(1995.12)¹⁹⁾에 의하면, 조선국제보험회사의 1993년 총수입보험료는 5억 3백만북한원이며 보유보험료는 2억4천 7백만북한원이며, 나머지는 해외재보험시장에 출재를 하였다. 조선국제보험회사가 1993년에 지불한 재보험료는 약 2억5천 6백만북한원이며, 이는 약 1억 1천6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3년에는 전년도 대비하여 재보험의 해외출재율이 47.6%에서 49.2%로 증가하였다. 1993년의 손해율은 73.8%이며, 영업이익은 1천9백만북한원이었다. 또한 책임준비금은 3억 2천만북한원 이었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도 책임준비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동 사는 프랑스(St. Cloud), 스위스(Basel), 독일(Hamburg), 파키스탄(Karachi), 베네수엘라(Caracas) 5개국에 해외보험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총련계인 금강보험주식회사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갖고 있다.

18) 금강보험주식회사는 일본 조총련계가 1977.4.18에 설립하였으며, 생명/손해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자본금은 2천만엔이며, 동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점과 영업소를 63개 갖고 있다. 직원은 250명, 모집인은 650여명 정도이다.

19) Swiss Re,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North Korea)」, 1996, p.161.

<표 1> 조선국제보험회사 출수제 현황

(단위: 백만북한원, %)

| 구 분 | 1987 | 1992 | 1993 |
|-------------------|--------|---------|---------|
| 총수입보험료 | 326.2 | 504.201 | 503.874 |
| 순보험료 | 211.8 | 240.0 | 247.976 |
| 보유율(%) | 64.9 | 47.6 | 49.2 |
| 손해율(%) | 77.0 | - | 73.8 |
| 이익금 | 28.8 | - | 19.112 |
| 초기자본금(basic fund) | 60,000 | - | 100,000 |
| 채입준비금 | 193.8 | - | 320.771 |

주 : 1994년도 공식환율은 US\$1이 2.2북한원임(<http://www.oanda.com>).

자료 : Swiss Re, 전게서, 1996, p.161.

조선국제보험회사는 영국의 Lloyd's Syndicate 재보험시장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Devonshire 216 Syndicate가 1992년말까지 입은 누적손실로 인하여 북한도 1백만 영국 파운드와 1천7백만달러의 손실부담금을 1993년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서 지불하여야 하였다. 또한 Rose Thompson Young Syndicate 255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역시 동 Syndicate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북한은 2백만 영국 파운드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²⁰⁾.

2.2.2.3 손익계산서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손해보험시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993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총수입보험료가 5억 3백만북한원에 달하고 있다. 수입항목의 대부분은 어월된 준비금과 수입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산운영에 의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자산운영 형태가 은행이자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투자형태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투자형태는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누적된 자산 총액도 5억 2천5백만북한원으로서 매우 낮으며, 자산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유로서는 북한 금융시장의 미발달이 보험회

19) Swiss Re, 전게서, 1996, p.161.

사의 자산운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익계산서의 지출항목은 대부분이 준비금, 지급보험금, 그리고 출재 재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율의 폭이 매우 크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익은 전년도인 1992년과 비교하여 약 67.3%가 감소한 1천 9백만복한원을 기록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영업비용(9천 8백만복한원)의 비율이 총수입보험료(5억 3백만복한원)의 약 19.48%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계획경제하의 국가들은 영업비의 비율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²¹⁾. 그 이유로서는 보험계약율의 연도별 편차가 적으며, 독점체제이므로 시장에서 경쟁비용이 없으며, 낮은 임금수준, 낮은 사무자동화에 따른 일반 경상비의 절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영업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에서보다는 국제 보험시장에서의 재보험 영업을 위한 해외지사 유지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추산된다.

<표 2> 조선국제보험회사 손익계산서(1993)

(단위: 백만복한원, %)

| 과 목 | 금 액 | 증감율 ¹⁾ | 과 목 | 금 액 | 증감율 ¹⁾ |
|--------------------------|------------------|-------------------|----------------------|------------------|-------------------|
| 1. 수입 | | | 2. 지출 | | |
| 책임준비금(b/f) ²⁾ | 176.984 | -8.5 | 기말 책임준비금 | 152.564 | -13.8 |
| 지불준비금(b/f) | 98.870 | +22.8 | 기말 지불준비금 | 168.207 | +70.1 |
| 총보험료 | 503.874 | -0.1 | 지급보험금 | 388.613 | +12.9 |
| 재보험수수료 | 71.398 | +12.5 | 재보험료 | 255.898 | -3.1 |
| 재보험손실 ³⁾ | 213.594 | +22.3 | 재보험 수수료 | 12.824 | -8.3 |
| 은행이자 | 16.153 | -21.9 | 영업비용 | 98.182 | +2.4 |
| 투자수익 | 49.405 | +3.2 | 투자비용 | 36.329 | +25.0 |
| 기말책임준비금 | 5.365 | +797.2 | 기타비용 | 3.316 | +61.1 |
| | | | 전기이월 재보험 적립금(b/f) | 0.598 | -64.7 |
| | | | 이익 | 19.112 | -67.3 |
| 합 계 | 1,135.643 | | 합 계 | 1,135.643 | |

주 : 1) 증감율은 전년도대비.; 2) b/f(brought forward)는 이월금.

3) 재보험분담 지급보험금(reinsurer's share of claims paid)

자료 : Swiss Re, 전제서, 1996, p.161.

21) 구동독의 경우 총보험료 대비 영업비용은 6%였다. 참조: Zschockelt, W., 「 Die Transformation vom Versicherungsmonopol zum Versicherungsmarkt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 wissenschaft*, 1991, p.582.

2.2.2.4 대차대조표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누적된 총자산이 5억 2천 5백 만북한원으로서 보험료 규모(5억 3천여북한원)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자산항목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의 비율이 낮고, 채권의 비율도 매우 낮아서 부동산 시장 및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투자비율이 높은 편이나 구체적인 투자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동사의 현금 및 예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부채항목에서는 준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의 비율은 약 5.7%로서 매우 낮은 형태를 갖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매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증감율을 전년도인 1992년과 비교하여 보면, 지불준비금이 70.1%, 채권은 -55.4%, 이익은 -67.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증감율의 폭이 일부 항목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3> 조선국제보험회사 대차대조표(1993)

(단위: 백만북한원, %)

| 과 목 | 1993 | 증감율 | 과 목 | 1993 | 증감율 |
|---------------|----------------|-------|---------------|----------------|-------|
| 1. 자 산 | | | 2. 부 채 | | |
| - 동산 및 부동산 | 79.291 | +4 | - 자본금 | 100.000 | 0.00 |
| - 현금 및 예금 | 202.578 | +18.9 | - 특별준비금 | 55.000 | 0.00 |
| - 투자 | 190.318 | +5.8 | - 책임준비금 | 152.564 | -13.8 |
| - 채권 | 30.475 | -55.4 | - 지불준비금 | 168.207 | +70.1 |
| - 기타 자산 | 22.372 | +10.9 | - 채무 | 26.476 | +17.2 |
| | | | - 기타 채무 | 3.675 | +25.2 |
| | | | - 이익 | 19.112 | -67.3 |
| 합 계 | 525.034 | | 합 계 | 525.034 | |

주 : 1) 증감율은 전년도대비; 2) b/f(brought forward)는 이월금.
 자료 : Swiss Re, 전세서, 1996, p.161.

2.3 북한 보험시장 규모

2.3.1 통계자료의 제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폐쇄적이며, 체제안정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비밀과 안정성”²²⁾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통계자료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²³⁾, 간혹 발표되는 통계자료도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부분적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계획경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통계자료의 집계 및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동독의 경우에도 통계는 정치적인 목적과 사회주의 선전에 이용되었으며, 통계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다. 또한 통계자료의 집계 및 분석방법에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며²⁴⁾, 발표되는 자료도 정확한 설명과 주해의 결여, 통계자료의 불투명한 계산방법 등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북한의 보험제도에 관해서 일부 연구가 되어 있으나, 보험산업 규모에 관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 경제 통계집」에도 보험에 관한 자료는 1966년까지의 통계가 반페이지 소개된 정도이다²⁵⁾. 그 외에 Swiss Re(1996)에서 발표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도 1993년도 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1997)에서 북한의 보험산업 규모에 관한 추정을 하였으나, 북한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남북한 보험시장 규모를 비교할 때, 어떤 시점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공정환율과 대외교역을 위한 무역환율, 그리고 여행자 및 개인거래에 사용되는 환율 등의 복수환율제도가 실시되고 있다²⁶⁾. 따라서 어느 환율

22) 통계청, 「1998년도 한·독 통계협력회의 및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서」, “북한경제통계의 실태와 과제”, 고일동·오강수, 1998.7, pp.231~232.

23)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은 1967년까지 발간되었으며, 이후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고 있음. 참조: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 1996, p.183.

24) 통일후 구동독 통계청의 한 고위관료는 TV대담프로에서, “좋은 변수는 통계에 반영하였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요인은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

25)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 1996, p.183.

26) 공정환율은 1USD당 2.21북한원이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는 1997.6.1부터 1USD당 210북한원

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북한 GNP 추계치, 보험개발원의 추정자료, 그리고 Swiss Re의 Sigma 등을 참조하여 북한 보험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보험경제학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3.2 보험시장 규모 추정

현재 북한의 보험시장 규모에 관한 연구실적은 미비한 편이며, 단지 보험개발원(1997)에서 1995년도의 인구수와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하고 북한 보험규모를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보험시장규모를 추정한 사례²⁷⁾가 있을 뿐이다.

<표 4> 북한보험시장규모(1005) 추정

(단위: 백만USD)

| 전체 보험시장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
| 387.83 | 272.36 | 106.47 |

북한의 1995년 기준 보험시장 규모는 전체보험료 3억 8천7백만달러, 손해보험료 2억 7천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중 -3.7%의 성장을 감안하면 1996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보험시장 규모는 3억 7천만달러(3천억남한원), 손해보험시장은 2억 6천만달러(2천1백억남한원)²⁸⁾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Swiss Re의 자료²⁹⁾에 의한 조선국제보험회사의 1993년도 보험료(손해보험시장)규모인 5억 3백만북한원, 즉 2억 2천9백만USD³⁰⁾과 어느 정도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험개발원의 추정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참조: 통계청, 전게서, 1998.7, p.239.; 『조선신보』, www.korea-np.co.jp, 1997.8.13.

27) 자세한 추정과정은 신동호, 안철경, 전게서, pp.41~43 및 부록을 참조할 것.

28) 1996년 기준 대미 환율은 1USD당 804.78남한원임.

29) Swiss Re, 『World insurance in 1996: Modest growth in the insurance industry』, 『Sigma』, No.4/1998, pp.22~27.

30) 1996년 기준 대미 환율은 1USD당 2.20북한원임.

2.3.3 남북한 보험시장 규모 비교

남북한 보험시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화폐단위를 USD로 변환하였다. 남한의 자료는 『Sigma』의 자료를, 그리고 북한의 보험료 규모는 추정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1996년도의 총보험료는 남한은 총 624억 7천만USD, 그리고 북한은 3억 7천만USD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보험시장 규모는 남한의 약 0.59%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은 남한이 472억 3천2백만USD, 북한이 1억 1천만USD이며, 손해보험은 남한이 152억 3천8백만USD, 북한이 2억 6천만USD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남북한 보험시장 규모 비교(1996)

(단위 : 백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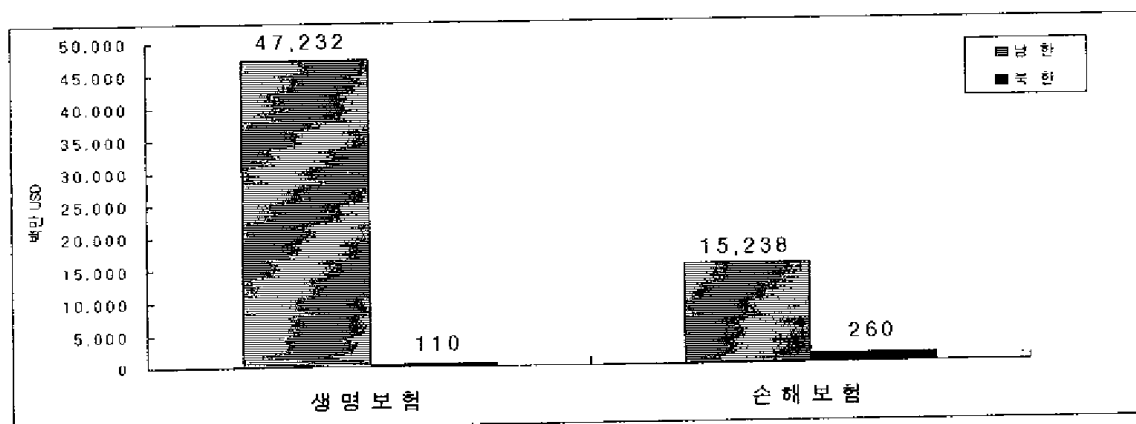
| 구분 | 총보험료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GNP ³⁾ |
|------------------|-----------------|-----------------|-----------------|-------------------|
| 남한 ¹⁾ | 62,470 (100) | 47,232 (100) | 15,238 (100) | 480,400 (100) |
| 북한 ²⁾ | 370 (0.59) | 110 (0.23) | 260 (1.7) | 21,400 (4.45) |

주 : ()은 남한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의 평가치임.

자료: 1) Swiss Re, 전계서, 1998, pp.22~27.

2) 보험개발원, 전계서, p.43.; 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p.188.

<그림 2> 남북한 보험시장 규모 비교(1996)



주 : 북한의 점유율은 추정치임.

자료 : Swiss Re, 전계서, 1998, P.28.

북한의 보험료규모 추정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남한 대 북한의 평가치를 비교해 보면, 전체 보험료는 약 100:0.59, 생명보험은 100:0.23, 그리고 손해보험은 10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이 발표한 남한 대 북한의 GNP 평가치³¹⁾ 100:4.4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남북한의 총보험료 수준이 세계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남한의 1996년 총보험료는 624억 7천만USD로서 세계 제6위로 나타나며, 북한의 총보험료를 3억 7천만USD로 추정했을 때, 약 56위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남한이 2.97%, 그리고 북한이 약 0.017%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총보험료 대비 세계 순위(1996)

| 순위 | 국가 | 화폐 단위 | 총보험료 (Mill. 미국화폐) | ’95대비 증가율 | | Mill. USD | 세계시장 점유율(%) |
|------|----|----------|----------------------|-----------|-------|-----------|----------------|
| | | | | 명목(%) | 실지(%) | | |
| 6 | 남한 | KRW | 51,629,598 | 11.7 | 6.5 | 62,470 | 2.97 |
| (56) | 북한 | KPW | (796) | - | - | (370) | (0.017) |

주 : 북한의 () 순위 및 총보험료 등은 추정치이며, 1996년도 1USD는 2.15북한원임.

자료 : Swiss Re, 전게서, 1998, pp.22~23.

2.3.4 보험밀도 및 보험투영율

한 국가의 보험산업의 발전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는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와 보험투영율(insurance penetration)이 있다. 보험밀도는 국민 1인당 지불하는 연간보험료이며 보험투영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총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남한은 총보험료의 규모면에서는 세계 제6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질적인 면을 반영하는 보험밀도는 세계 제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보험투영율은 13.24%로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에서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

31) 남한 대 북한의 1996년 GNP비율은 $480,400:21,400(\text{USD})=100:4.4$ 이다. 참조: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p.188.

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생명보험의 비약적인 발전에 근거하고 있다. 주로 사회보장제도가 미발달함에 따라 노후복지를 위하여 개인의 생명보험을 통한 준비가 중요시되며,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주민 1인이 부담하는 보험밀도(연간보험료)는 15USD, 세계 제70위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투영율은 1.72%로 나타나³²⁾ 요르단(1.74%) 수준인 세계 제54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로서는 일반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계획경제의 특징에 따른 저임금정책과 낮은 투자정책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표 7> 보험밀도 및 보험투영율(1996)

(단위 : USD, %)

| 보험밀도 | | | 보험투영율 | | |
|------|-----|---------------------|-------|-----|-----------------------|
| 세계순위 | 국 가 | 보험료 | 세계순위 | 국 가 | 비율(%) |
| 17 | 남 한 | 1,372 | 2 | 남 한 | 13.24 |
| (70) | 북 한 | (15 ¹⁾) | (54) | 북 한 | (1.72 ²⁾) |

주 : 1) 북한의 ()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 1) Swiss Re, 전세서, 1998, pp.28~29.

2) 유럽상공회의소, 「A Practical Business Guide on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1998.3, p.18.

그러나 남한 및 외국의 수준과 달리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여 북한의 보험산업 수준을 간접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사회주의체제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북한 보험제도의 특수한 상황이 감안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Swiss Re가 발간하는 『Sigma』(No4./1998)의 「세계 보험산업 1996」에서 북한은 제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자료의 폐쇄성 및 비신뢰성을 대변하고 있다.

남한의 1인당 연간보험료가 1,372USD인데, 북한의 수준은 단지 15USD로서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생활하며, 남한주민의 연간보험료의 약 1% 수준인 15USD

32) 보험밀도 = 총보험료/인구수 = 370m USD/23.9m명 = 15USD/명

보험투영율 = (총보험료/GDP) · 100 = (370m USD/21,500m USD) · 100 = 1.72%

를 보험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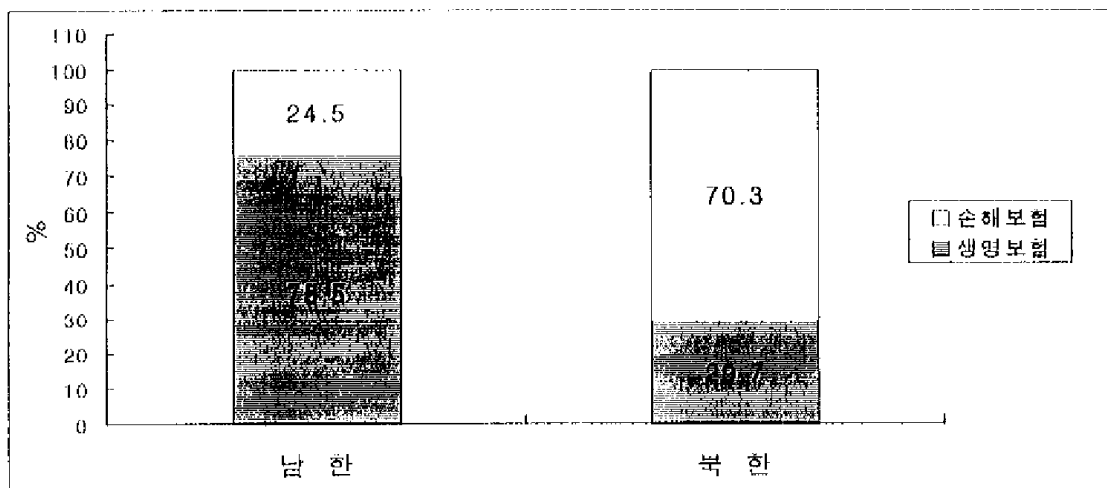
2.3.5 생·손보 점유비율

남북한간의 특이한 사항은 남한은 생명보험시장의 비율이 약 75.5%로 손해보험시장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편이나, 북한은 오히려 손해보험시장의 비율이 70.3%로 우세하여 남한과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유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하의 국가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잉여소득의 획득이 불가능하므로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추가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이 여유재원, 혹은 보험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영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당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서 미발달한 현상은 체코, 러시아 등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관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생명보험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³³⁾.

<그림 3> 남북한 생·손보 점유율 비교(1996)



주 : 북한의 점유율은 추정치임. 자료 : Swiss Re, 전세서, 1998, P.28.

33)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트남, 알제리아는 생명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참조: Swiss Re, 『Sigma』, No.4/1998, p.28.

3. 체제전환국가의 보험산업 민영화

3.1. 민영화의 필요성, 목표 및 방법

3.1.1. 민영화의 정의 및 필요성

민영화(privatization)를 광의로 해석할 때, “민간부분의 경제활동 증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국유재산을 단순히 민간에게 임대 및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것도 광의의 민영화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정의는 “국유재산소유권을 민간에게로 이전하는 것”³⁴⁾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 사유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보험산업의 민영화라 함은 국가 소유로부터 민간 자본을 통한 사유화로 전환을 의미한다.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보험산업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는 보험이 위험관리 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자본을 형성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계획경제에서도 보험은 위험의 분산기능과 자본축적의 기능을 일부 갖고 있었으나³⁵⁾, 국영 독점의 보험제도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 위험분산의 기능 및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였다³⁶⁾.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국영 독점 보험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오로지 다양한 민영 보험회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진다. 체제전환에 따른 보험산업 민영화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³⁷⁾.

첫째, 민영의 기업보험 종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은 보험을 통하여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여유 자본 및 인력을 보다 더 생산적인 요소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34) 윤진수,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41, 1993.12, p.24.

35) 국영기업체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도 저축 목적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36) 보험료는 국가재정에 귀속되며,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자산운영이 제한적이며, 이익은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효율적인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37) Zschockelt, W., 전게서, 1991, p.586.

둘째, 국가는 사회보장의 일부분을 개인책임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은 신설되는 민영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각종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보험수요의 감소는 필연적이다.

셋째, 민영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전한 자본은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이 된다.

넷째, 과거의 국영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을 소홀히 하였으나, 민영 보험회사는 국내외의 재보험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보험종목이 출현하고 판매조직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모집인, 중개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보험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3.1.2 민영화의 목표

동유럽 체제전환국가³⁸⁾들은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몰락이 계기가 되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급속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구동독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자원의 부족, 노하우(know how)의 결여 등의 이유로 집진적인 체제전환의 과정을 채택하였다. 체제전환국가의 목표는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고,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이다. 또한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³⁹⁾.

보험산업의 민영화도 이러한 전체 체제전환의 목표와 동일한 개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국영 독점의 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다수의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은 기존의 국영 독점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계속 존립시키면서, 민영 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민영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38)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참조: OECD, DAFFE/AS/WD(97)14, 1997.6.23.

39)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이미 OECD에 가입하였으며, EU가입도 추진중이다.

첫째, 국영 독점 보험회사의 민영화는 전반적인 사회적 수용성과 공평성에 일치하여야 한다. 과거의 국영 보험회사가 시장경쟁제도에서도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 보험종사자 및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경영기술의 획득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구 사회로부터 새로운 경영자의 유입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know how)와 경험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필요한 재원의 확보이다. 국영 독점 보험회사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경제제도에 대비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필수적이다. 자본유입의 방법은 초기에 국고로부터의 지원, 투자가의 발굴 등이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합작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3.1.3 민영화의 방법

국유재산을 민영화할 때, 어떤 방법이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시장경제에의 적응정도, 새로운 시장경제 경영기법의 도입, 자원확보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⁴⁰⁾.

첫째, 기존의 국영 독점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국가가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주인이 되는 상호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주식회사라는 시장경제의 기업형태를 도입함에 따라 시장경제에의 수용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영 보험회사를 단순히 주식회사로 형태를 전환할 때, 시장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노하우의 도입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신규 자본의 유입도 국내자본의 미성숙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국영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이 명시된 「사유화 증서」(coupon)⁴¹⁾를 국민에게 무료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로써 국영기업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이전됨으로써 민영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쿠폰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가치가

40) Halstenbach, E., 「Die Überführung von Versicherungswirtschaften aus einer zentralplanwirtschaftlichen in ein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1997, pp.6~8.

41) 기업자산의 일정액 이상을 사유화증서로 전국민에게 무상 분배하여 기업의 주식을 청약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윤건수, 전게서, pp.37~45 참조.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쿠폰의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동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쿠폰제도가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자본유입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소유자에게 기업을 반환하는 것은 사회적인 수용성,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협작을 통하여 민영화에 필요한 신규자본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는 민간의 국내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영 보험회사를 단지 국내자본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구의 새로운 경영기법의 전수, 세계경제에의 연결 등도 가능해 진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민정서상 반감, 그리고 저가로 매각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에의 순응도는 긍정적이 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표 8> 민영화 방법의 장단점 비교

| | 주식/상호회사 | | 무상배분 | | 합작회사 | |
|----------|---------|-------|------|---------|---------|--------|
| | 북가 | 보편개약지 | 쿠폰 | 구소유자 반환 | 순수국내 자본 | 국내외 자본 |
| 시장경제 수용성 | + | + | ++ | - | + | + |
| 기업경영 효율성 | - | - | - | - | + | ++ |
| 신규자본 유입도 | - | - | - | - | + | ++ |

주 : -는 부적합, +는 보통, ++는 적합을 의미함.

자료: Halstenbach, 전게서, E., 1997, p.8.; 윤건수, 전게서, 1993, p.31.

3.2 민영화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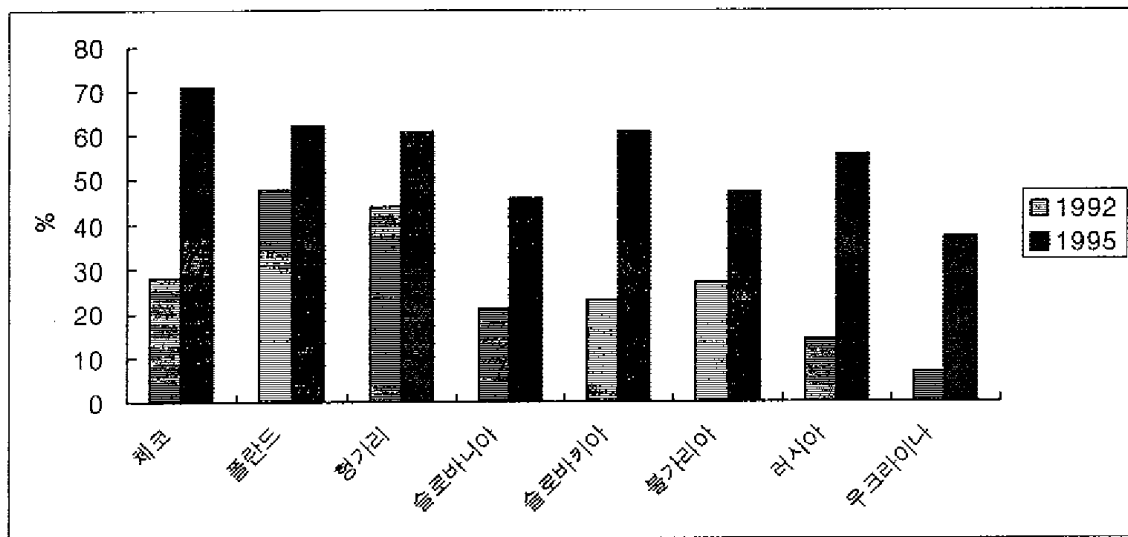
3.2.1 진행 현황

계획경제체제 국가에서는 국유재산의 비율이 전체 국가경제에서 90~95% 이상이다. 따라서 체제전환시에 민영화대상의 규모는 매우 크며, 민영화의 진행은 정책적인 의지 외에도 상당한 인적 및 시간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는

국유재산의 비율이 5~10% 정도이며, 현재에도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다⁴²⁾.

체제전환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라도 단기간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이룩하기는 불가능하다. 충격요법을 통한 급진적인 민영화는 GDP의 격감, 실질소득 및 생활수준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Swiss Re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국유재산의 민영화가 40~50%정도 진행되기 위해서는 약 4~5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GDP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그림 4> 체제전환국가의 민영화 추이



자료 : Swiss Re, 『Sigma』, No.8/1996, p.5.

대부분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특성 및 정책에 따라서 민영화의 진행을 상이하게 추진하였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 반면에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중·소기업에 비하여 민영화의 속도도 매우 늦게 진행되었다. 이들 국가에서의 민영화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42) 칠레는 GDP의 25%를 민영화 하는데 15년, 영국의 경우 GDP의 4.5%에 8년이 소요되었다. 남한의 경우도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의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다.

43) Swiss Re, 『Sigma』, No./1996, p.7~8.

체코의 경우 1990년도 초부터 진행된 민영화는 약 5년이 지난 1995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약 71%를 나타내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에 이미 약 45%이상의 민영화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1995년에 이르러서야 약 61% 정도의 민영화 비율을 기록하였다.

3.2.2 공통적인 문제점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은 민족이 이질적이고 언어가 다르며, 경제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체제전환은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별로 전환의 주체(국가, 민간), 전환속도(radical, gradual), 전환의 순서(timing, sequencing) 등에 차이가 있었다⁴⁴⁾. 분명한 사유재산권의 정립과 민영화의 전진비율은 보험산업의 민영화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산업의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도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제도 및 보험 관련법의 미비이다.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새로운 시장경제에 적합한 보험회사의 인가조건, 자산운영, 소비자보호 및 보험계약법 등에 관한 법률제도가 불완전하거나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보험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분명한 감독기준 등에 관한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였다.

둘째,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반 경제여건이 미비하였다. 보험산업은 경제 및 다른 산업분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률,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육성책이 권장되지만,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이러한 여건들이 미비하였다.

셋째, 인적자원이 결여되어 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보험회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보험종사자에 대한 인적자원의 수요가 급증한다. 특히 과거 계획경제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업 보험보집인, 보험브로커 등에 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하의 보험산업에 필요

44) 체제전환 정책에 관해서는, 참조: 박제훈, 「체제전환과 통일의 비교정치경제학」, 한국비교경제학회,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1995, pp.16 ~23.

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넷째, 보험문화(insurance culture)의 미발달이다. 계획경제의 특징상 민영 보험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국영 기업제도 보험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일반 국민들 역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험문화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같이 발전하게 된다.

3.3 민영화 추이

3.3.1 경제지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후 1990년의 독일통일과 구소련의 몰락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은 계획경제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체제전환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은 GDP의 성장률이 낮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GDP성장률은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 긍정적이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체제전환국가의 인구 및 경제지표(1994)

(단위 : %)

| 국 가 | 인구(백만명) | GDP 성장률 ¹⁾ | 인플레이션률 | 실업률 |
|-------|---------|-----------------------|--------|-----|
| 체 코 | 10.33 | 2 | 11 | 7 |
| 폴 란 드 | 38.60 | 4 | 30 | 16 |
| 헝 가 리 | 10.29 | 1 | 25 | 13 |
| 슬로베니아 | 1.99 | 2 | 18 | 18 |
| 슬로바키아 | 5.35 | -2 | 18 | 18 |
| 불가리아 | 8.50 | -2 | 55 | 18 |
| 에스토니아 | 1.60 | -6 | 25 | *2) |
| 러 시 아 | 148.30 | -7 | 500 | 2 |

주 : 1) 전년도 대비임.; 2) 알려지지 않음.

자료 : Swiss Re, 『Sigma』, Nr.1/94, p.22, p30.

이들 국가들은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하여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동독과 같이 서독의 경제적인 도움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원의 부족, 인력 및 노하우(know how) 부족 등의 공통적인 이유로 점진적, 단계적인 체제전환의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3.3.2 보험수요

동구권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수요에 큰 변화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크게 보험수요의 증가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업보험분야에서는 신설 보험회사를 통하여 과거의 국영독점보험회사가 공급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기술보험, 신용보험 등의 신상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험수요의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개인보험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사회보장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생명/연금보험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보험수요의 억제요인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시장퇴출에 따른 취업인구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증가율보다 낮음에 따른 실질임금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적절하지 못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따른 잠재 보험수요의 미개발 요인을 들 수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안정에 따라, 또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의 증가에 따라 보험수요의 증가율은 다른 산업분야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도 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각각 체코 13%, 헝가리 28%, 폴란드 39.9% 라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⁴⁵⁾.

45) Knüttel, H.D., Die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märkte in Mittel- und Ost- Osteuropa, Versicherungswirtschaft, Nr.52, 1997. p.24.

<표 10> 보험밀도 및 보험투영율(1996)

(단위 : USD, %)

| 국 가 | 보험밀도 ¹⁾ | | 보험투영율 ²⁾ | |
|-------|--------------------|-----|---------------------|-------|
| | 세계순위 | 보험료 | 세계순위 | 비율(%) |
| 체 코 | 37 | 143 | 39 | 2.83 |
| 크로아티아 | 39 | 127 | 37 | 2.99 |
| 헝 가 리 | 44 | 98 | 45 | 2.26 |
| 슬로바키아 | 46 | 83 | 43 | 2.37 |
| 폴 란 드 | 47 | 79 | 44 | 2.26 |
| 러 시 아 | 56 | 38 | 63 | 1.29 |
| 루마니아 | 77 | 8 | 79 | 0.50 |
| 우크라이나 | 81 | 3 | 81 | 0.39 |

주 : 1) 보험밀도=총 보험료/인구수; 2) 보험투영율=(총보험료/GDP) · 100

자료 : Swiss Re, 전계서, 1998, pp.28~29.

보험산업의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서 보험밀도와 보험투영율이 있다. 계획경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달정도와 발전속도가 낮은 편이므로, 보험투영률과 보험밀도 역시 저조하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가는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의 수준이 100달러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보험밀도가 10달러 이내로 더욱 낮으며 보험밀도의 세계순위도 77위 및 81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보험투영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2% 내외를 나타내고 있어서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현재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보험투영율은 0.5% 및 0.39%로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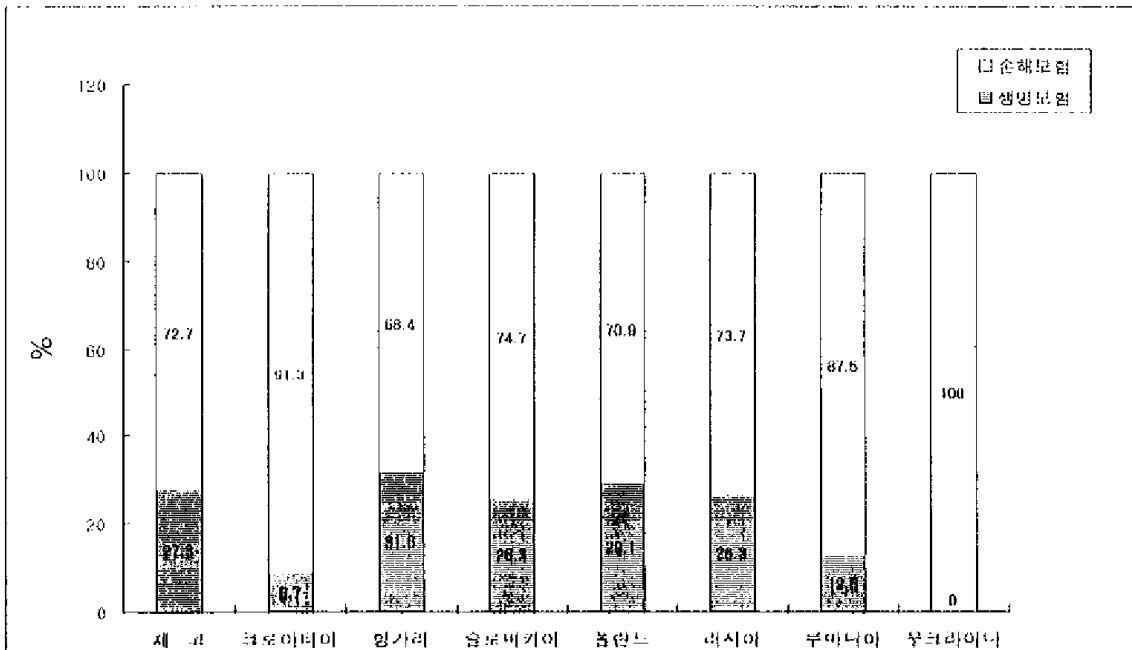
3.3.3 생·손보 점유율 비교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 된지 약 5년 정도가 지난 1996년도의 보험시장 생·손보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일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유로서는 국민들의 낮은 소득수준, 보험을 이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려는 보험인식의 부족, 생명보험회사의 미발달, 그리고 생명보험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세제혜택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생명보험시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보장성위주의 기업성 손해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사회주의 특성상 생명보험시장은 미발달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 이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까지는 손해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이 구축된다.

<그림 5> 체제전환국가의 생·손보 점유율 비교(1996)



자료: Swiss Re, 전게서, P.28.

3.3.4 보험회사의 경쟁 강화

3.3.4.1 민영 보험회사의 설립

동구권국가들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부분적인 구조조정을 서서히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

면서 스스로 일부 모순되는 점을 시정 내지는 보완하려는 시도였었다.

1989년의 독일통일을 계기로 동구권국가들은 계획경제체제를 전면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⁴⁶⁾. 보험산업의 민영화도 이러한 체제전환의 한 분야로서 시작되었으며, 관련 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독점시장구조를 해체함에 따라 자유경쟁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폴란드는 1985년, 헝가리는 1986, 그리고 동독을 포함하는 기타 동구권국가들은 1990년부터 보험회사의 국가독점체제가 해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영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11> 체제전환국가의 보험회사 수(1994)

(단위 : 개)

| 국 가 | 총 보험회사수 | 국내보험회사 | 외국보험회사 ¹⁾ |
|--------------------|---------|---------------------|----------------------|
| 체 코 | 27 | 18 | 9 |
| 폴 란 드 | 32 | 25 | 7 |
| 헝 가 리 | 26 | 14 | 12 |
| 슬로베니아 | 11 | 9 | 3 |
| 슬로바키아 | 14 | 10 | 4 |
| 불가리아 ³⁾ | 15 | 15 | 2) |
| 에스토니아 | 17 | 14 | 3 |
| 러 시 아 | 2,500 | 2,500 ⁴⁾ | 2) |

주 : 1) 합작회사도 포함됨.; 2) 알려져 있지 않음.

3) 1996.7 현재 약 70~100개 보험회사가 난립. 4) 1,000여 보험사는 인가가 없음.

자료 : Swiss Re, 『Sigma』, Nr.1/94, p.22.

설립되는 민영 보험회사의 형태는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소규모의 공제 성격의 상호보험회사, 부분적인 합작회사(joint venture), 그리고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가 각각 설립되었다. 외국자본은 주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그러나 순수 국내 자본만으로 설립

46) 이현대, 오광우 공저,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과 산업구조개편」,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15집, 1997, p.265.

된 보험회사의 수는 미비하며, 이러한 보험회사는 대부분 전직 국영 독점보험회사들이 대주주로 출자하였다⁴⁷⁾.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와 합작하거나 자회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체제전환사에 선진 외국의 노하우(know how)와 자본이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3.3.4.2 경쟁강화

동구권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보험회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독점 국영보험회사는 계속 국영체제로 남거나, 혹은 민영화되더라도 일단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신설 보험회사에 비하여 인적 및 물적자원, 혹은 기존의 전국적인 판매망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체제전환의 성공여부는 독점 국영보험회사의 민영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경제분야에서 사유화제도의 성공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⁴⁸⁾

일부 신설보험회사들은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의 경험이 부족하며, 또한 경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특화전략을 추구하면서 전문분야에 집중하게 된다. 순수한 국내자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선호된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서구 선진보험회사들의 자본참여, 합작회사를 통하여 새로운 선진 보험기법, 민영보험회사 운영방법 등 시장경제의 노하우(know how) 전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의 종류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현대적인 보험판매방법이 도입되면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자문의 필요성이 증가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초기에 외형위주의 시장점유율 확장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새로운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필요이상의 보험상품을 권장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초기에 높은 성장률을 이룩할 수 있다.

47) Zschockelt, W., 전게서, 1991, p.595.

48) Halstenbach, E., 전게서, 1996, p.8.

3.3.4.3 사업비의 증가

보험회사의 총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를 비교해 봄으로써 해당 보험회사의 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시장경제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보험계약율의 연도별 편차가 작으며, 타 보험회사와 경쟁이 없고, 보험회사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또한 보험회사의 사무자동화 비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절감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전의 동독은 사업비율이 총보험료의 6%이며, 서독은 상대적으로 높은 약 25%의 사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⁴⁹⁾.

그러나 다수의 국내외 민영보험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며, 전업 보험모집인제도의 확장 등으로 보험회사의 사업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민영화 초기에 보험회사의 사업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3.3.4.4 자산운영의 활성화

계획경제하에서는 국가가 보험회사를 독점으로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영 규모와 각종 보험기술상의 준비금 적립금이 적은 편이다. 특히 1989년 통일전의 동독과 서독 보험산업의 자산운영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동독의 자산운영규모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2.4배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독은 4배의 운영규모를 나타내고 있다⁵⁰⁾.

또한 자본시장이 미발달되어 있고, 국가가 보험회사의 소유주이며 자산운영의 주체로 되어 있다. 동시에 국가자신이 자산운영의 고객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익은 다시 국가로 귀속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은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산운영의 결과는 시장경제하의 상황과 비교하여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동독과 서독 생명보험의 자산운영 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다.

49) Zschockelt, W., 전계서, p.582.

50) Zschockelt, W., 전계서, p.581.

<표 12> 동서독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영 수익률 비교(1989)

(단위: %)

| 구분 | 자산운영 수익률 |
|----------|----------|
| 동독 (DDR) | 4.0 |
| 서독 (BRD) | 7~7.5 |

자료 : Zschockelt, W., 전게서, p. 582.

3.3.5 보험감독 규제

체제전환국가들은 향후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보험 감독법을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하였다⁵¹⁾.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1996년까지 체코, 불가리아에서는 독립된 보험감독기관이 설립되지 않았고 재무성에서 보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헝가리, 러시아에서는 보험감독기관이 설립되었어도 재무성이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및 가격규제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생·손보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에 한하여 요율을 사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 초기에는 어느 정도 보험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며 규제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의 설립은 생·손보를 구분하여 초기자본금의 규모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입은 합작사의 최대 지분 참여율, 지회사설립 규정, 국경간 거래 등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 일부 국가의 제반 법규 장악력이 혼란스러움에 따라서 보험감독법의 효력이 미비하여 형식적으로 보험회사를 감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가리아, 러시아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난립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마피아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음성적인 지하자금을 합법적인 보험금으로 불법 세탁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⁵²⁾.

51) Müller, H., 「Neuaufbau der Versicherungsaufsicht in Mittel- und Osteuropa」, in: *Versicherungswissenschaft in Berlin*, Heft 13, 1997, VVW, Karlsruhe, p.3.

<표 13> 보험감독 규제(1996)

| | 보험감독법 | 가격 및 상품 규제 | 시장진입 규제 |
|------|---|---|--|
| 체코 | -1991.5 제정 -재무성이 감독업무 수행 -독립된 보험감독기관이 미존재.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독점으로 운영함. -보험요율은 사전 인가제 | -보험회사 설립자본금 · 생보 CZK 70m · 손보 CZK 22~156m -외국보험사에 대한 진입규제 없음. -국경간거래(cross border) 허용되지 않음. |
| 폴란드 | -1995.10 신보험법 제정 -보험감독기관 존재 | -감독기관은 의무보험만 감독 -의무보험: 자동차·농작물·농가건물배상책임보험 -지급여력규정은 EU규정을 따름. -생·손보 업무 구분 | -보험회사 설립자본금 · 생보 ECU 800,000 · 손보 ECU 200,000~400,000 외국보험사의 시장진입은 재무성의 인가사항임. -국경간거래(cross border) 허용되지 않음. |
| 헝가리 | -1996.1 신보험법 적용 -보험감독기관 존재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국가가 규제하며, 보험요율은 재무성이 사전 확정함. -생·손보 업무구분은 1996.1.부터 -생명보험에 한하여 세제혜택 1995.1.1부터 적용. | -보험회사 설립자본금 · 생보 HUF 250m · 손보 HUF 350m -외국보험사는 자회사, 혹은 합작을 통하여 시장참여 -서비스의 자유가 없음. |
| 불가리아 | -신보험법은 없음. -1948년의 구법이 존재 -독립된 보험감독기관이 미존재 | -의무보험은 국영보험회사가 독점으로 운영. | -보험회사 설립자본금 · 생보 Leva 100m · 손보 Leva 150m -외국보험사의 자본참여는 최대한 49%까지임. |
| 러시아 | -1993.1 신보험법 제정 -보험감독기관 존재, 1996.7부터 재무성의 감독을 받음. | -의무보험: · 의료보험, 여객상해, 일부 공무원을 위한 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 검토중임(1996) | -보험회사 설립자본금 · 생보 ECU 350,000 · 손보 ECU 250,000 -외국보험사의 시장진입은 합작회사에 한하며, 최대한 49%임. -국경간거래(cross border) 허용되지 않음. |

자료: 1) Swiss Re, 『Sigma』, No.8/1966, pp.34~37.

2) Knüttel, H.D., 「Die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märkte in Mittel- und Osteuropa」, *Versicherungswissenschaft in Berlin*, No.13, 1997, pp.17~26.

52) 불가리아는 1994년에 15개의 보험회사가 1996년에 100여개로 증가했고, 러시아는 2,500개의 보험사 중에서 약 1,000개는 미인가임. 참조: Swiss Re, 전제서, 1996, p.17.

3.4 민영화 사례

3.4.1 구동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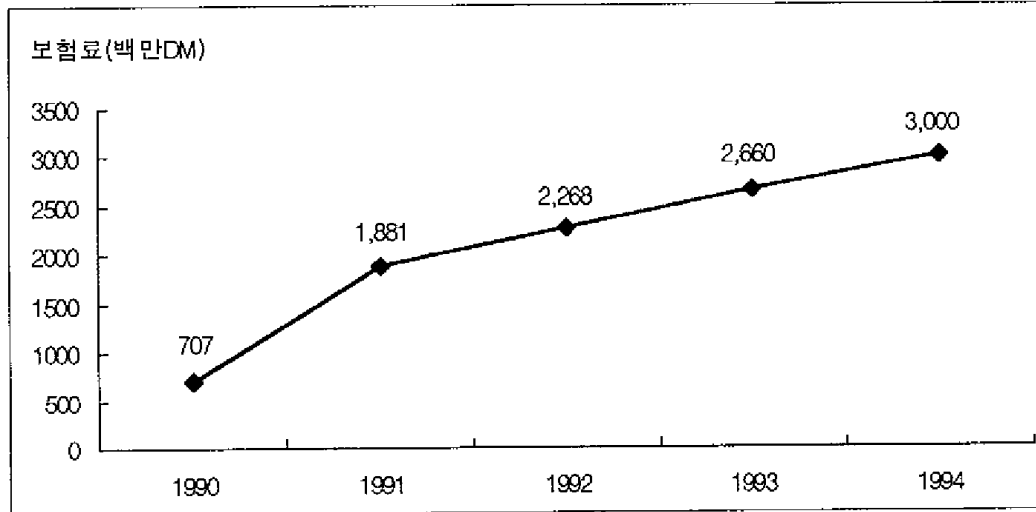
구동독은 서독 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국영보험회사를 민영화하였다. 독일통일 직전(1990)에 구동독의 국영보험회사는 서독 알리안쯔(Allianz)보험회사에 2억 7천만DM에 51%의 지분을 매각하고 독일보험주식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였으며, 통일직후 1992년에 알리안쯔사가 나머지 지분 49%를 4억 4천만DM에 흡수하여 완전한 자회사로 운영하였다⁵³⁾.

알리안쯔사는 독일보험(주)에 대규모의 서독자본과 인적자원 및 서구식 경영기법을 투입하여 구동독지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였다. 동사는 설립시기인 1990년도에는 7억DM의 보험료수입과 2억DM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보험료가 증가하여 1994년에는 30억DM의 보험료를 실현하였다. 손실은 1991년에 약 5억 7천만DM의 적자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는 약 5천만DM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4년까지 판매조직, 보험상품 설계, 보험인프라 정비, 구조조정 및 교육에 투자한 금액은 1992년의 추가지분(49%) 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약 20억DM 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1994년까지 동사는 총 14억DM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199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독일보험(주)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었다. 독일보험(주)은 다른 신규 진출 보험회사에 비해서 기존 구동독 국영보험회사의 전국적인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익실현까지는 총 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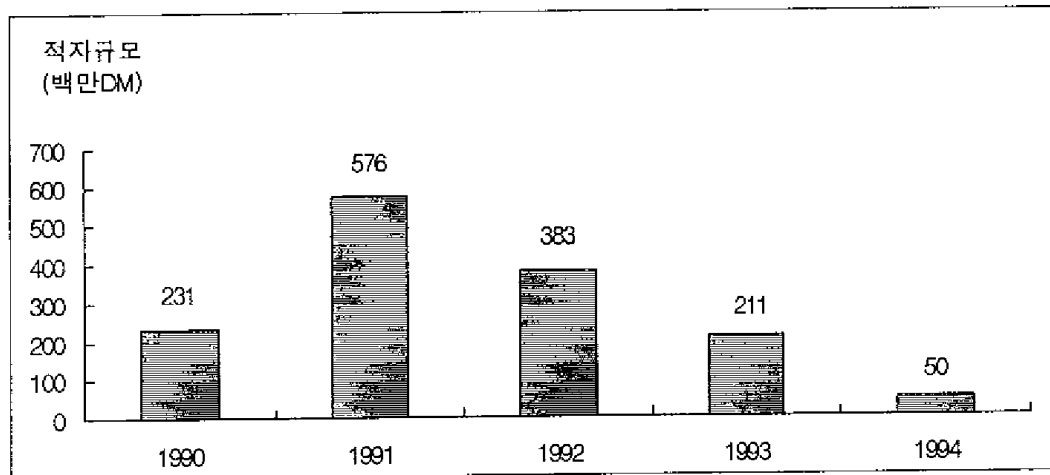
53) Baden, Gerd-Uwe, 「Probleme bei de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1995, p.50.

<그림 6> 독일보험(주)의 연도별 보험료 추이



자료 : Allianz AG, 「Deutsche Versicherungs-AG/Allianz」, 1997.

<그림 7> 독일보험(주)의 연도별 영업실적(적자) 추이



자료 : Allianz AG, 「Deutsche Versicherungs-AG/Allianz」, 1997.

3.4.2 헝가리

동구권국가들 중에서 체제전환이 가장 활발한 나라들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3개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영 보험회사를 민영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헝가리가 있다⁵⁴⁾. 헝가리 정부는 체제전환 초기인 1990년에 보험산업을 시장경제

54) Halstenbach, 전게서, p.7.

체제에 맞게 신속하게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⁵⁵⁾을 높게 책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자본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투자자의 참여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단지 자본동원 능력이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헝가리는 독점의 국영 보험회사를 독일의 Allianz사와 네덜란드의 AEGON에 각각 분리하여 매각하였다. 판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며, 헝가리 보험시장은 즉각적으로 서구식의 보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 국내 민영 보험회사도 설립되었으나, 자본과 보험회사 운영기술 등의 열세로 인하여 외국보험회사가 헝가리 보험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헝가리 보험감독청은 외국 보험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규모가 비교적 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자동차보험요율은 사전 인가제로 운영되어 의도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요율이 장기간 적용되었다. 따라서 외국 보험회사는 구조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 반면에, 보험계약자는 낮은 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3.4.3 체코 및 폴란드

1990년 이후 국가독점체제가 무너진 이후 체코는 체제전환 초기(1991)에 보험회사수가 3개였으나 1995년에는 35개사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총 25개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3개사가 체코의 순수 국내자본으로, 7개사는 외국자본으로, 5개사는 국내외 합작자본의 형태를 갖고 있다⁵⁶⁾.

<표 14> 체코의 보험회사수 추이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보험회사수 | 3 | 12 | 20 | 27 | 35 ^{U)} |

주 : U) 34개사는 일반 보험회사이며, 1개사는 전문 의료보험회사이다.

자료: Mesrsmid J., Zur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der Tschechischen Republik, *Versicherungswirtschaft*, Nr. 52, 1997. p.27.

55) 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자본금은 1억 Forint(약 100,000USD)이다.

56) 체코는 체제전환(1991)이후 1995년말에 동구권국가 중에서 최초로 OECD에 가입하였다. 참조: 이현대/오광우, 전개서, p.280.

폴란드는 1990.7에 사유화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헝가리도 1990.2에 사유화를 관리 및 감독하는 국가재산청을 설립하여 시장경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제전환결과 GDP 대비 서비스/기타 부분의 비율이 각각 50%(1993)⁵⁷⁾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보험산업도 국가 독점운영제도에서 다수 보험회사의 경쟁제도로 전환되었다. 보험회사의 수도 체제전환 초기의 독점 국영제도에서 1991년에는 25개사로, 1994년에는 32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외국과 합작사 및 순수 외국보험회사의 수도 7개(1994)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국영보험회사는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이들 국영보험회사는 자본력, 전국적인 영업망,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은 국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0%(1991)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시장으로의 전환이 실현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통일독일의 구동독지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⁵⁸⁾.

<표 15> 폴란드의 보험회사수 추이

| | 1991 | 1994 | 1995 |
|-------|------------------|------------------|------------------|
| 보험회사수 | 25 ¹⁾ | 32 ²⁾ | 41 ³⁾ |

주 : 1) 국영보험회사는 2개임; 2) 국내사는 25개이며, 7개사는 외국합작사임.

3) 생명보험사는 13개이며, 손해보험사는 28개임.

자료: 1) Zschockelt, W., 전게서, p.587;

2) Swiss Re, 『Sigma』, No1/94, p.22.; No.8/96, Table III.

3.5 OECD의 권고모델

3.5.1 규제외 정도

건전한 보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회피되어야 한다. 규제의 정도는 해당 국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체제전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보험시장의 발전 상황에 따라 규제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제1항).

57) 폴란드는 55.0%, 헝가리는 59.8%임. 참조: Zschockelt, W., 전게서, p.587.

58) 구동독 국영보험회사와 서독의 Allianz보험회사가 Deutsche보험회사를 합작 설립(49:51)하여 초기에 9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실현하였다.

독점으로 운영되는 국영보험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원보험 및 재보험시장에서 다수의 보험회사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허용자산의 종류와 한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3.5.2 민영 보험회사의 설립 및 기능

민영 보험회사의 설립은 엄격한 인가제도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분석과 최소자본금의 충족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보험회사는 시장경제에서의 보험사업에 필요한 법적, 회계 및 경영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2항). 또한 외국보험회사의 설립은 국내사와 비교하여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국경간거래(cross-border), 재보험 등은 자유화되어야 한다(제4항).

체제전환 초기에는 보험회사만이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권장된다(제3항).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도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이러한 금융기관의 보험판매사업은 적절히 감시되어야 한다.

3.5.3 보험감독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험감독기관의 설립은 필수적이며,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제5항). 보험회사는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제12항),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과 자본비율에 대한 감시, 적정과세와 준비금 규정을 감독하여야 한다(제8, 제9항).

보험감독기관은, 체제전환 초기 단계에 보험요율과 보험상품의 사전인가제도를 유지하며(제10항), 보험회사의 모집조직은 등록제로 운영되도록 하며, 브로커는 제정을 보증하거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제15항).

국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또는 위험이 큰 분야 등은 의무보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제6항). 특히,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요율은 경험통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보험감독기관은 특히 의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가입 및 운영은 특별히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제16항).

3.5.4 정부의 역할

체제전환국가는 정부의 역할과 보험감독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정하고 개방된 보험시장의 발전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에 적합한 보험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제19항). 또한 국내외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장 및 감시하기 위하여 보험감독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산업은 스스로 자율규제기준을 설정하여 보험감독기관 및 정부의 의도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0항).

4.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보험의 발전은 국민경제, 즉, 건전한 민간경제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검토는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체도가 도입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정으로 한다. 그에 앞서 북한 보험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다면, 남북경제협력 단계에서도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북한이 통일에 대비하여 보험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떠한 준비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비용을 최소화하며,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단계와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도를 도입하여 보험산업을 민영화하는 통일 준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요율은 경험통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보험감독기관은 특히 의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가입 및 운영은 특별히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제16항).

3.5.4 정부의 역할

체제전환국가는 정부의 역할과 보험감독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정하고 개방된 보험시장의 발전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에 적합한 보험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제19항). 또한 국내외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장 및 감시하기 위하여 보험감독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산업은 스스로 자율규제기준을 설정하여 보험감독기관 및 정부의 의도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0항).

4.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보험의 발전은 국민경제, 즉, 건전한 민간경제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검토는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체도가 도입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정으로 한다. 그에 앞서 북한 보험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다면, 남북경제협력 단계에서도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북한이 통일에 대비하여 보험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떠한 준비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비용을 최소화하며,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단계와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도를 도입하여 보험산업을 민영화하는 통일 준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민영화 가능성 검토

4.1.1 북한 보험시장의 대외개방 가능성 검토

북한 보험법 제3조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의 보험회사와 북한영토 밖의 조선동포도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동포」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때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영역범위가 남한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남한 보험회사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동포」에 대한 개념정의가 논란중의 하나로 부각하자,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대경추, 1996.9)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분담집」을 작성하여,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는 해외동포와 남한동포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경추의 이러한 설명이 북한의 보험법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북한 보험법 제6조에서는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혹은 외국인은 북한 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 보험기업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남한주민을 외국인에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관해서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남한 보험회사가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때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사무소에 관한 규정」(94.2.21 정부원결정 8호)을 활용할 수 있다. 동규정은 외국기업이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사무소를 설치하여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차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북한은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지만 일단 남한 및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시장을 개방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의 경우 남한의 외환은행이 이미 경수로⁶⁰⁾ 건설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외환 및 일부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분야에서도 업계 공동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경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위해서 남한의 보험사 직원이 북한을 단기간에 방문한 사례는 있었다⁶¹⁾.

59)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보험제도」, 북한뉴스레터 4월호, 1997, p.13.

60) 보통의 물(경수, light water)을 사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하는 원자력발전소(reactor)를 뜻한다.

61) 제일화재는 4천1백만달러 규모의 경수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주간사회사로서 경수로 공사장에서

그러나 보험의 보수적인 성격상 보험회사가 기업보다 먼저 북한에 진출하거나, 동시에 진출하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남한 및 외국의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한 사례는 없다. 이는 기업의 속성상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진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경수로건설, 남북경협 관련보험, 금강산관광보험 등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사고에 대한 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의 규모가 더욱 증가한다면,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1.2 은행의 북한 진출 사례

4.1.2.1 ING동북아시아은행

네덜란드의 ING그룹은 1995.12에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ING동북아시아은행(ING North East Asia Bank)을 합작으로 설립하였다. 초기자본금은 2백만USD이며, ING측이 70%, 북한측이 30%의 지분참여를 하였다⁶²⁾. 원래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평양에 지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하여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외국계 무역회사와 지원단체(UN, EU, 기아구제기관 및 유럽계 투자기관)를 위한 외환업무 등의 단순 은행거래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자조건 및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고 있다. 상주직원은 ING은행의 지점장 1인과 북한인 3인⁶³⁾으로 구성되어 있다. ING동북아시아은행은 1997년에 이미 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북한에서 유일한 외국계 은행으로서 교두보를 확고히 선점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생한 화재 피해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1998.7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사고피해액은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62) ING동북아시아은행, Shareholders Profile, 내부자료, 1998.7.

63) 북한직원은 전혀 은행업무 경험이 없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주체사상' 정치연구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조: 극동문제연구소, 「극동문제」, 1998.8. pp.43~54.

4.1.2.2. 외환은행

남한의 외환은행은 1997.12.11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역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현지 출장소를 설치하여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진출은 KEDO와 북한간의 금융관련 협의내용에 따라 성사되었다. KEDO 뉴욕본부는 경수로건설 관련 은행업무(예금, 송금, 환전, 외화대출, 당좌대월)를 취급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을 KEDO 은행출장소로 선정하였다(1997.8). 외환은행 출장소는 북한의 은행관련 법률을 적용 받지 않으며, 경수로 공사착공 14개월후 또는 부지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지점으로 승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한측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 출장소는 경수로공사 지역내에서만 관련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북한측과의 직접적인 은행업무 교류는 없는 상태이다. 곧 경수로건설 본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3-5년후에는 약 3-5천여명의 남한 기술자들이 북한에 상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환은행의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EDO측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측과 합영은행을 설립할 때에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남북한간 합영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외환은행의 북한 진출 사례는 남한의 보험업계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4.2 남북경협 활성화단계 전략

4.2.1 경수로건설 및 금강산관광보험 활성화

4.2.1.1 경수로건설공사 관련보험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KEDO가 설립되어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게 되었다. 공사비의 70%인 32억USD를 남한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1998.9 현재 본공사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2-3년까지 남한측의 인력이 약 1천명, 그리고 5년후 5-6천명의 인력과 각종 장비 및 차량들이 경수로 건설지역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측은 경수로 공사와 관련된 보험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⁶⁴⁾, KEDO측

64)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자재해보험, 건설조립보험, 조립보험, 기계파손보험, 화재보험

은 북한 보험회사의 위험담보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능력있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기를 기대하였다. 그 결과 경수로 예비공사 보험계약은 남한의 손해 보험회사가 각각 인수하게 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북한에서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⁵⁾. 이에 따라 북한측은 자동차제3자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조선국제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경수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남한측의 각종 차량들을 위한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대인 및 대물보상)은 1차적으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인수하였으며, 동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위험은 남한측 보험회사가 인수하였다. 이에 남한측 보험회사는 업무 및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특수지역⁶⁶⁾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신설(1997.7.)하여 북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배상책임손해를 초과하는 위험을 남한의 보험요율체계에 따라 담보하게 되었다.

경수로 공사와 관련되어 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업무는 KEDO측의 주계약자인 한국 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수로 예비공사와 체결된 보험종목은 다음과 같다.

<표 16> 경수로 예비공사 관련보험종목

| 보험종목 | 보상내용 |
|----------------------|------------------------------|
| 건설공사보험 ¹⁾ | 건설공사중 발생가능한 사고로 인한 보상 |
| 동산종합보험 | 비품 및 장비 등 동산에 대한 책임 |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사업수행중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보상 |
| 파견자신변안전보험 | 파견 인력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전쟁위험 반영) |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현장 파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시 배상 |
| 자동차보험 | 남한 및 북한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차량보험 |
| 전문가배상책임보험 | 설계 잘못으로 재시공 등에 대한 보상(건축설계사) |

주 : 1)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액은 4천1백만달러로 알려져 있으며(『경향신문』, 1998.7.13.), 기타 종목의 보험가액 및 보험료는 공개되지 않았음.

및 해상수송화물보험을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인수하기를 희망하였다.

- 65) 정무원결정(1996.9.1) 제49호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 합영, 합작기관(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지사, 사무소 대리인 포함)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문전기제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를 보상하는 보험(3자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66) 특수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4.2.1.2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1990.8에 해외여행보험요율을 근거로 하여 최초로 인가되었으나, 그동안 북한방문이 불가능함에 따라 실제로 판매된 경우는 없었으며, 경험실적에 의한 요율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남북경색이 완화되어 금강산관광이 1998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남북한주민왕래보험’⁶⁷⁾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동보험의 요율과 담보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다.

북한지역은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지역으로서, 그 위험의 성격이 일반적인 국내지역과는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1998.8에 개정된 동 보험에서는 예상될 수 있는 인질구조비용, 석방보석금, 인질위로금 및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지역 여행에 따른 과거의 경험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외여행보험과 KEDO신변안전보험의 요율을 차용하여 시험요율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남북한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경험실적을 근거로 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남북한주민왕래보험 약관 개정내용(1998.8)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보통약관 | -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특별비용 | <좌 동> <좌 동> |
| 특별약관 | - 질병사망 - 질병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신 실> - 인질위험담보 <신 실> |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인질구조비용 및 석방보석금 - 인질위로금담보 - 전쟁위험담보 |
| 기 타 | - 단체포괄계약 <신 실> - 공동인수 | <좌 동> - 상품다수구매자담보 <좌 동> |
| 보험가입 금액 | - 사망·후유장해 : 1억원 - 의료실비 : 1,000만원 | - 사망·후유장해 : 5억원 - 의료실비 : 5,000만원 |

주 : 신위험요율은 KEDO 신변안전보험요율 및 해외여행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보험개발원, 「남북한주민왕래보험 요율조정안」, 1998.

67) ‘금강산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예상되며, 상해보험과 관광비직립 목적의 저축성 성격을 갖는 금강산관광 관련 장기보험상품도 인가(1998.9)되었다.

보험가입금액은 과거에는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의료실비 1,000만원에서 개정된 약관에서는 사망·후유장해시 5억원, 의료실비는 5,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다수구매자에 대해서는 할인율⁶⁸⁾을 적용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필요한 5일간의 여행에 필요한 보험료는 약 10,000~1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2.2 남한 보험업계와 교류확대

4.2.2.1 남북한 보험기술상 차이 극복

남북한간에는 보험상품의 종류, 의무보험의 종류, 보험요율 산출기준, 보험요율 체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기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이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장경제하의 보험문화(insurance cultur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남북한간에는 기본적인 보험용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18> 남북한 주요 보험용어 비교

| 남한 | 북한 | 남한 | 북한 |
|---------|------------|--------|-------|
| 여행상해보험 | 관광보험 | 항공기체보험 | 비행기보험 |
| 재보험 | 국제보험 | 인보험 | 인체보험 |
| 특약보험 | 덧보험 | 임의보험 | 자원보험 |
| 보험가액 | 보험가격 | 재물보험 | 재산보험 |
| 사업회계년도 | 보험결산년도 | 재무재표 | 재정상태표 |
| 표준약관 | 보험계약표 기준조건 | 상해보험 | 재해보험 |
| 보험회사 | 보험기관/자 | 감독 | 지도통제 |
| 지급준비금 | 보험보상준비금 | 종합보험 | 포괄보험 |
| 계약부활 | 보험복귀 | 선박보험 | 배보험 |
| 보험업법 | 보험법 | 선하증권 | 배집증권 |
| 비상위험준비금 | 보험예비금 | 원수보험사 | 피재보험사 |

자료: 1) 김치중, 「용어풀이로 살펴본 북한보험제도」,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1997.5, p.50.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험법』, 1995.4.6.

68) 상품다수구매자에 대해서 1증권당 피보험자수가 500/1,000/2,000명이상인 경우에 각각 10/15/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조: 보험개발원, 전계서, 1998.8.

북한은 국가가 외국과 상호 보험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⁶⁹⁾. 민영화 초기 단계에는 국가차원에서 남한의 보험 관련 기관과의 인적 및 정보의 교류를 시작하되, 향후 민간차원에서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보험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KEDO 지역내의 남한 출장소(지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를 계기로 남북간 보험관련 통계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향후 보험제도 및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4.2.2.2 남한 보험업계의 지원 유도

북한의 보험시장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준비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은 남한 보험산업의 잠재력과 경험⁷⁰⁾을 지원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는 곧 국영 독점 보험시장에서 다수의 민영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경쟁제도로의 전환이며, 점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남한 보험업계의 지원을 능동적으로 유치한다면 북한은 이러한 시행착오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에서 남한 보험업계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 남한은 북한의 보험법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제도에 합당한 보험법의 제정⁷¹⁾이 필수적이다. 남한의 보험법 및 보험 관련제도와 정책경험은 북한 보험법의 보완 및 개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에 기여하게 된다. 북한 보험법이 시장경제제도에 준하게 보완된다면 남한 및 외국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보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남한은 생보 및 손보험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대학교의 보험학과, 사설 보험교육기관 등의 기간에서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보험업계 인력, 공무원, 대학생을 초청

69) 북한 보험법 제7조에서는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0) 남한의 보험산업은 1997년도 보험료 규모면에서 세계 제6위이며,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성장이 가능한 역동적인 보험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71) 중국은 1995년에 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내용이 불완전하여, 현재까지 소비자보호,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여 각종 세미나 개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케하거나, 남한의 전문 인력이 북한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IMF가 북한에 제공하는 훈련 및 기술적지원 프로그램에 남한 보험업계가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은 남한 보험업계와의 공동 창구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남한은 1996.10에 OECD가입을 계기로 보험시장을 대외적으로 대폭 개방한 경험이 있어, 북한 보험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남한은 북한 보험협회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보험인력 양성, 보험통계 집적, 보험요율 산출 및 검증, 보험상품의 검증, 연구업무, 대국민 보험인식의 향상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당국과 보험감독기관을 상대로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문활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4.3 통일 준비단계 전략

본 장에서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북한 보험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4.3.1 보험법 보완 및 개정

4.3.1.1 독립된 보험감독기관 설립

북한에서는 비상설로 운영되는 국가보험위원회⁷²⁾가 보험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내각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 분야의 중앙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따라서 서구의 보험감독제도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보험감독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형식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의 위원회로 판단된다. 북한 자체적으로는 경쟁시장에 적합한 보험감독에 필요한 운영기법, 전문인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동독,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의 체제전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전반 및 보험산업에 경쟁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현재의 비

72) 북한은 제10기 최고인민회의(1998.9.5)에서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산하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성으로 개편하였다. 국가보험위원회의 변경된 명칭과 조직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상설 감독기관을 폐지하고 국가 행정기구로부터 독립된 보험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보험감독기관은 남한의 금융감독원과 같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설 보험감독기관은 보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보험산업의 육성,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설립기준, 자유경쟁보장, 시장경제에 합당한 재무기준과 회계제도, 자산운영 등에 관한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일정기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험감독기관의 운영경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된다.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보험감독기관은 부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스스로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수입원은 보험회사로부터의 각출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감독기관은 초기에는 보험회사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종사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외국⁷³⁾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한의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연수원, 보험협회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보험감독법을 개정한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3.1.2 중국 사례

중국은 1995.10에 보험감독법을 제정하여 인민은행(People's of Bank of China)이 보험감독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업무가 주가 되며, 보험감독업무는 단지 부수적이며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⁷⁴⁾. 현재 중국의 보험시장은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험하는 변환기에 있다. 중국은

73) 북한은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공무원을 외국으로 파견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운영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1998.4에 표명하였다. 필요한 재원은 세계은행(IBRD)이 지원하며, 교육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실시하였다. 참조: 『한국경제』, 1998.4.11.

74) Li Wenquan, 「China: Versicherungsaufsicht auf dem Wege zur Marktwirtschaft」, in Versicherungswirtschaft, Nr.12/1998, p.851.

과거 보험시장을 독점하여 왔던 국영 중국인민보험공사(PICC)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산업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수의 민영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해 졌으며,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되었다.

중국은 국영 독점의 인민보험공사를 1998.8에 해체하여 생명보험, 재산보험, 재보험의 3개 보험회사로 각각 독립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보험감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중국은 1998.7에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통하여 인민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 지급여력 등의 보험감독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보험규제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⁷⁵⁾. 중국의 보험감독제도는 3단계로 구분되어, 보험감독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그리고 보험회사의 자율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관련 단체로서 중국은 향후 2000년까지 보험협회⁷⁶⁾를 설립하여 협회중심의 자율감독기능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요율 계산, 표준약관, 보험상품 개발, 통계집적,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험산업에 경쟁제도를 도입할 때, 보험감독법의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둘째,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보험협회의 기능이 중요시된다.
- 셋째, 개정되는 보험감독제도는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2 보험시장 민영화 추진

4.3.2.1 단계별 민영 보험사업 허용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의 보험사업자도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역에 보험시장을 개방하여 민영 보험사업을 허용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는 민영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국영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국가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75) 『한국경제』, 1998.8.27.

76)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 보험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통일된 중앙의 보험협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민영보험회사를 설립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한 및 외국과 합작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합작사를 통하여 상품개발,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계리업무, 회계, 회사경영 측면에서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을 수 있으며, 북한도 합작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업의 종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으로 분리하며, 각 보험회사는 점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단계별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보험은 당분간 국영보험제도를 유지하며,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민영화 초기에는 보험사업 영업 지역별, 보험 종류별로 구분하여 민영 보험회사의 초기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영 보험회사를 공사화할 때에는 초기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정 금액을 국가제정에서 자본금을 할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설 보험회사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방안과 초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영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자산부분은 남한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자산평가를 실시하며, 부족한 경우 역시 국가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부동산가치의 평가, 주가가격의 결정 등의 자산평가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개인재산의 허용, 대외 테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폐제도 개혁 등의 분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경제제도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제도가 불완전하므로, 신설되는 보험회사 자산의 평가 역시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2.2 생명보험회사의 설립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생명보험업무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일 준비단계에는 생명보험업무를 은행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생명보험회사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두개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과도기 동안 국가가 전액 출자하는 국영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일부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의 경우 국영 보험회사와 다수의 국내외 민영보험회사가 현재까지 공존하고 있다. 둘째, 남한 및 외

국의 보험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구동독 및 동유럽국가의 경우 국내자본 및 경영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호되는 사례이다.

공사화하는 방안은 기존의 보험계약 이전이 별 문제가 없으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명보험계약은 신설 보험회사가 전부 인수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체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사회보장이 감소되기 마련이며, 생명 및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수준은 재평가되어야 하는데, 국가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의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새로 도입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혼란 및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특별 조항을 제정하여 보험 계약갱신시, 보험요율 변경시 보험계약자의 해약권⁷⁷⁾ 등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민영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할 때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모집인 및 전국적인 지점망 확보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무를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할 때 모집조직 및 전국적인 지점망을 신규로 설립하여야 하나, 이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 노하우를 필요로 하게 된다.

4.3.2.3 조선국제보험회사 개편

현재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보험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행정기구인 대외보험총국이 손해보험과 재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업무와 재보험업무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손보사와 재보사의 설립여건, 사업의 허가, 자본금, 책임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되는 보험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손보사와 재보사가 각각 민영화 될 때, 초기에 필요한 자본금 및 책임준비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 하면 과거 국가재정으로 귀속되었던 수입보험료의 일부분을 신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77) 북한 보험법 제27조에서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은 해약할 수 있으나, 제해보험, 려객보험은 도중에 해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조직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국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과거의 조직이 경쟁제 도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새로이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중개인의 도입도 고려될 수 있으나, 북한의 보험시장 규모상 초기에는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의 재보험은 다른 보험종목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외국과 교류를 진행하여 왔다. 이미 해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 재보험회사와의 활발한 출·수제업무를 통하여 국제 재보험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4/95년의 냉해 및 홍수로 인한 농작물손실을 해외 재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경향이 있다⁷⁸⁾. 북한이 남한과의 합작 재보험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북한측 주식을 남한의 대한재보험사에 매각하거나 수출보험공사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의 재보험시장에 대해서는 ING Group, Munich Re, Swiss Re와 같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3 남한 보험업계의 북한 진출

4.3.3.1 남한 보험업계 출장소(지점) 유치

북한은 경수로 예비공사를 계기로 이미 남한 보험업계와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경수로 본공사를 계기로 남북한간의 보험교류는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수로 예비공사에서 자동차보험은 남북한간에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임무분장이 이루어진 사례⁷⁹⁾가 있으며, 북한은 이미 자동차보험 외에 다수의 경수로 관련보험종목에서 계약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KEDO 지역인 함경남도 남호지구에서는 '시장경제의 실험'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지점과 남한의 외환은행 출장소가 설치되어 이론적으로는 상호 경쟁 및 은행간 환거래, 여·수신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보험분야에서도 북한은 KEDO 지역내에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지점을 설치하고 있으

78) 북한은 1988년부터 영국의 Lloyd's, 스위스의 Winterthur, 독일의 Aachener Re, 일본의 Chiyoda Fire 등에 농작물보험(Crop 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4/95년의 피해로 인한 농작물보상금의 규모는 1천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참조: 김현주, 「미스테리의 북한 농작물보험금」, 대한재보험주식회사, 「위험과 보험」, 1998년 여름호, p.36.

7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서비스 절차」, 「경수로사업 관련자료집」, 1997.12, pp.141~142.

로, 남한 보험업계의 출장소(지점)를 유치하게 된다면 남북한간에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보험법 제3조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 및 남한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동 지역에서 남한 보험업계와의 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 최근 KOTRA의 「북한의 최근 외국인투자유치동향」(1998.8.20)에 따르면, 동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건수는 77건에 6천2백만달러의 투자금액이 실현되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외국인 및 남한기업의 투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동 지역에서의 남한 보험업계의 출장소나 지점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출장소(지점)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 및 협력상대자⁸⁰⁾와의 사전협의 사항이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 북한내에서 출장소 설립 승인에는 약 2-3개월로 예상되며, 업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안으로 출장소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남한에서는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행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보험업법 제7조)가 필요하다. 남한내의 소요기간은 약 2-3개월로 예상되며, 인가후 출장소 개설 준비기간에 약 5개월을 감안하여야 한다. 외환은행이 KEDO 지역내에 출장소(지점)를 설치한 사례를 참조하여⁸¹⁾, 남한 보험업계가 북한에 출장소(지점)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규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19> 출장소설치 남북한 관련법규

| 남 | 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법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수로대상사업국.

81)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경수로사업 관련자료집」, 1997.12, p.133.; 외환은행, 「KEDO 지역내 은행진출」, 사내자료, 1998.

4.3.3.2 남한과 직접 보험거래 시도

현재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정되고 있으며, KEDO 지역내에는 단지 출장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북한은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⁸²⁾, 모두 북한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외국인투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점에서는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의 원보험물건에 대한 인수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 보험법에 의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내에 보험사업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보험료의 30% 이상을 동법 제13조에 의해 북한이 정하는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남한 보험회사가 북한에 진출할 때, 보험영업의 규제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재보험의 국제적 성격의 특성상 다른나라의 보험기관과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남한 보험회사와의 재보험거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경제교류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남한의 보험회사와 접촉이 어렵다면, 해외의 재보험 브로키회사를 통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의 재보험물건을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에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위험과 신용위험 등을 담보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수출보험은 최소한의 보호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한의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나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진출 남한기업의 보험물건을 북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결 론

동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동구유럽의 사회주

82) 남포에서 삼천리총회사와 합영사업을 하고 있는 (주)대우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요를 모두 북한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4.3.3.2 남한과 직접 보험거래 시도

현재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여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정되고 있으며, KEDO 지역내에는 단지 출장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북한은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⁸²⁾, 모두 북한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외국인투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점에서는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의 원보험물건에 대한 인수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남한의 보험회사가 북한 보험법에 의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내에 보험사업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보험료의 30% 이상을 동법 제13조에 의해 북한이 정하는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남한 보험회사가 북한에 진출할 때, 보험영업의 규제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재보험의 국제적 성격의 특성상 다른나라의 보험기관과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남한 보험회사와의 재보험거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경제교류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남한의 보험회사와 접촉이 어렵다면, 해외의 재보험 브로키회사를 통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의 재보험물건을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에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위험과 신용위험 등을 담보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수출보험은 최소한의 보호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한의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나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진출 남한기업의 보험물건을 북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결 론

동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동구유럽의 사회주

82) 남포에서 삼천리총회사와 합영사업을 하고 있는 (주)대우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요를 모두 북한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의 국가들은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한 간에는 경제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보험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상호 깊은 관련이 있다. 더욱이 남한의 보험산업이 규모면에서 세계 제6위의 보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보험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 보험산업에 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보험산업의 특징은 국영독점체제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상품의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고, 보험협회, 보험교육기관 등과 같은 보험 관련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생명보험은 조선중앙은행의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재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에서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 보험산업의 발달정도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보험 통계자료의 제한성을 전제로, 1996년도 북한 보험시장의 규모는 약 3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남한의 624억 7천만 달러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도 남한의 1인당 보험료는 1,372달러이며, 북한은 약 15달러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북한간의 생·손보 점유비율을 비교해 볼 때, 남한은 생명보험시장이 약 76%로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손해보험시장이 약 7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보험산업은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 규모, 보험인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도로 전환하는 체제전환국가의 경험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구동독 및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보험산업 민영화 경험을 살펴보았다. 체제전환은 일종의 제도가 진화하는 과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험산업의 체제전환은 곧 국영 보험에서 민영보험시장으로의 점진적·단계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과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되던 각종 사회보장은 감소하게 되고 개인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민영 생명보험 및 노후복지를 위한 연금보험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또한 국영기업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각종 손해보험을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마련이다. 특히 민영 생명보험시장의 등장은 체제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제거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체제전환국가에서 보험산업의 민영화는 경제 전 분야에 성공적인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및 정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민영화도 사유화의 진전과 경제의 발전속도에 따라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외의 민영 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국내자본의 미성숙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자본유입과 경영기술이 선호되었다. 체제전환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적합한 보험 관련 법의 보완 및 제정이 시급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보험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외국의 보험감독기관, 보험협회의 협조가 도움이 되었다.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이러한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을 통하여 시행착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을 살펴 보고자 민영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단계의 전략과 통일 준비단계의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북한은 경수로 건설공사 지역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 보험사업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한 및 외국의 보험회사가 북한에 직접 진출한 사례는 없다. 이는 기업의 속성상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진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경수로건설, 남북경협 관련보험, 금강산관광보험 등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사고에 대한 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의 규모가 더욱 증가한다면,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은 자연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 활성화단계에서 북한은 남한 보험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남북한간에는 보험제도, 보험상품 및 요율체계, 국민들의 보험인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증대를 통하여 시장경제에 필요한 보험법의 보완, 보험전문 인력 양성, 보험상품 개발, 보험요율의 산출, 통계집적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실현 가능한 사전단계로서 경수로건설공사 관련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남북경협 관련보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 준비단계 전략에서 북한은 크게 3가지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 첫째, 보험법의 보완 및 개정이다. 민영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감독기관의 설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의 보험법 개정 사례는 북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단계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선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수행하던 생명보험 업무를 은행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전문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과 재보험회사로 분리시켜 국가조직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셋째, 남한 보험업계의 북한진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남한 보험업계의 출장소 유치, 남한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거래 시도, 그리고 남북한 보험회사의 합작이 추진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고평석, 『북한보험제도』,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자료(97-01), 1997.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개관-추진현황과 과제-』, 1997.9.
- , 『경수로사업 관련자료집』, 1997.12.
- 극동문제연구소, 「극동문제」, 1998.8.
- 김치중, 「용어풀이로 살펴본 북한보험제도」,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1997.5.
- 김현주, 「미스테리의 북한 농작물보험금」, 대한재보험주식회사, 『위험과 보험』, 1998년 여름호.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보험제도」, 북한뉴스레터 4월호, 1997.
-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정책보고서, 해 연 97-1, 1997.5.
- 박제훈, 「체제전환과 통일의 비교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한국비교경제학회, 1995.
- 보험개발원, 「남북한주만왕래보험 요율조정안」, 내부자료, 1998.
- 삼성보험금융연구소,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이에 따른 손해보험업계의 대응방안」, 사 내자료, 1995.8.
- 신동호, 안철경, 『남북경협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97-2, 1997.
- 윤건수,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41, 1993.12.
- 유럽상공회의소, 「A Practical Business Guide on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1998.3.
- 이현태, 오광우,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과 산업구조개편」, 경상논총 제15집, 한독경상학회, 1997.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 , 「1998년도 한·독 통계협력회의 및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서」, 「북한 경제통계의 실태와 과제」, 고일동·오강수, 1998.7.
- 통일원,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 1995.

-----, 『북한 경제 통계집』, 1996.

〈외국자료〉

Allianz AG, 「Deutsche Versicherungs-AG/Allianz」, 1997.

Baden, Gerd-Uwe, 「Probleme bei de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1995.

Halstenbach, E., 「Die Überführung von Versicherungswirtschaften aus einer zentral- planwirtschaftlichen in ein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1997.

ING North East Asia Bank, 「Shareholders Profile」, 내부자료, 1998.7.

Knüttel, H.D., 「Die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märkte in Mittel- und Osteuropa」, *Versicherungswirtschaft*, Nr.52, 1997.

-----, 「Die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märkte in Mittel- und Osteuropa」, *Versicherungswissenschaft in Berlin*, No.13, 1997.

Li Wenquan, 「China: Versicherungsaufsicht auf dem Wege zur Marktwirtschaft」, in *Versicherungswirtschaft*, Nr.12, 1998.

Mesrsmid J., 「Zur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der Tschechischen Republik」, in *Versicherungswirtschaft*, Nr.52, 1997.

Müller, H., 「Neuaufbau der Versicherungsaufsicht in Mittel-und Osteuropa」, in: *Versicherungswissenschaft in Berlin*, No.13, 1997.

OECD, DAFPE/ AS/WD(97)14, 1997.6.

-----, 「OECD News Release」, www. oecd.org, 19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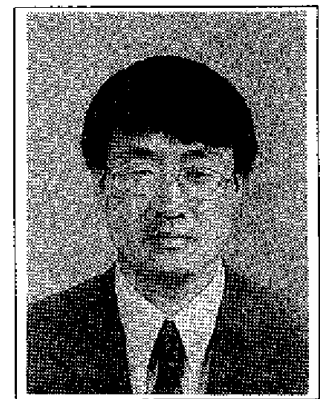
Swiss Re, 『Sigma』, Nr.1/1994.

-----, 『Sigma』, No.8/1996.

-----, 「World insurance in 1996 : Modest growth in the insurance industry」, 『Sigma』, No.4/1998.

Zschockelt, W., 「Die Transformation vom Versicherungsmonopol zum Versicherungsmarkt - gesamtwirtschaftliche und betriebswirtschaftliche Probleme」,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91.

러시아 極東地域의 北韓 勞動力에 관한 研究



李 埰 文(경북대)

목 차

| | |
|-------------------------------------|-----|
| <요약문> | 127 |
| 1. 문제의 제기 | 131 |
| 2. 이론적 배경 | 132 |
| 3. 연구방법 | 134 |
| 4.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관과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 | 136 |
| 5.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 | 139 |
| 6.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에 대한 전망 | 166 |
| 7. 정책활용방안 | 170 |
| ※참고문헌 | 178 |

【요약문】

본 논문은 이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노동력의 러시아 극동지역에의 유입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이다. 즉 본 논문을 통해서 북한의 노동력이 어떻게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입되었는가, 현재 그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장래 북한에서의 체제변화를 가정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가지는 합의(合意) 등에 관해 고찰한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국제노동력이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흡인·배출 모델과 세계적 모델은 가장 정통적인 모델로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두 이론은 모두 인구이동의 주체로서 ‘개인’을 들고, 합리적으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개인’을 국제적인 인구이동의 주체로 간주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인구이동의 대상자, 목적지, 목적지에서의 작업의 종류와 조건을 결정하는 북한과 소련의 경우와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서의 국가간의 이민을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국가간의 인구이동을 설명할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문헌 분석적인 방법의 하나인 메타자료분석방법이 이용된다. 메타자료분석은 일정한 자료들의 분석결과를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용된 각 분석방법과 그 과정상의 기본 전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자료들을 그들의 질(質)과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 서로 관련된 것들을 통합한다. 그리하여 분석대상으로써의 기존 연구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선정상의 편견 또는 오차의 개입을 가능한 배제할 수 있는 임의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유입에 관한 러시아의 관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본문에 들어가서는 먼저, 북한근로자의 소련노동력파견의 하나의 형태로서 먼저 북한 유학생에 의한 근로실습이 거론되며, 여기에서 북한의 학생들이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근로실습(work-study)의 일환으로 소련의 일정기관에서 연수생으로 노동을 하게 된 역사와 작업에 대한 급료가 북한이 소련에 진 빚을 상계(相計)하는데 사용된 과정을 밝힌다. 다음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을 어업, 임업(벌목업), 건설업, 광산업 및 농업에 종사한 근로자들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서의 북한노동력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작업과정을 본 논문은 고찰한다. 그리하여 최초로 북한의 노동자들

이 이업노동자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1946년 5월 ~ 7월 사이에 소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 쌍방협상에 기초하여 오로지 수산업에만 종사하기 위해 사할린에 파견된 2,000 명이 파견된 것이 처음이다. 아직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업노동자로 일한 북한 근로자들중 정확히 몇 명이 북한으로 귀국하지 않은 채로 러시아에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업노동자로 소련에 왔다가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입업근로자 또는 건설노동자로 일하였고, 그후 각지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개인적으로 러시아 공민권을 획득, 소련시민이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제소 별목작업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원이 기존의 문헌에서 주장하고 있는 1967년 3월2일 체결된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련방영토 내에서 의 별목 및 목재종합기공협정”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및 목공의 소련파견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소련영내에서의 별목에 관한 협정은 1953년 7월 30일에 체결된 별목협정이 그 기원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 다음으로 1953년과 1998년까지의 북소간의 입업협정의 역사를 문헌조사에 의해 공개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별목작업을 총지휘하는 입업대표부는 하바로프스크에 있고, 그 아래 여러 곳에 사업소를 두고 있고 각 별목사업소에 존재하는 작업중대, 직속중대 및 특공중대로 역할과 조직을 고찰한다. 또한 기존의 1995년 2월 24일 평양에서 조인된 새로운 입업협정을 대체하여 현재 199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있는 새로운 협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러시아-북한간의 논점을 정리한다.

북한 근로자와 러시아 거주 북한공민권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하바로프스크의 북한 입업대표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 별목공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업부의 일부를 담당하며 이곳의 한인들의 선무(宣撫)공작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제시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집단이 외국인 근로자들인 중국인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데다 모두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내안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인근 중

국의 거대한 인구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선호를 러시아에 품어왔던 황하른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망으로써 1993년 말부터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개해 왔던 “북한을 해체하는 정책”(политику оттор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에서 물러서서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국익에 맞추어 남북한에 대해서 균형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해 온 과정을 살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관계의 정상적인 복원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와 마약밀매문제가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본 연구에서 보았던 것처럼 1946년 북한의 노동력이 처음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을 한 이후로 많은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북한으로서도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러시아로 송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귀한 외화나 원자재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던 북방정책(대러시아 정책 및 대 북한 정책)을 하나로 연계할 필요성, 즉 북한-러시아의 연계전략을 제기한다.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대한 자원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1. 문제의 제기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 전체영토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지역으로써 비록 이 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동토(凍土)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지만 무한정으로서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과 러시아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접하고 있는 태평양지역의 독특한 접경지대로써 최근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러시아 극동지역은 그 방대한 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구(약 800만명)로 인해 그 전(全)개발 기간중 항상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1980년대까지는 이 지역에서의 높은 인구의 자연증가율과 임금유인정책에 의한 소련연방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해 노동력 부족이 어느 정도 지탱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됨과 더불어 상황은 급변하여 노동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Дадашев, 1995). 이런 추세와 더불어 1989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부터의 인구유출(人口流出)이 인구유입(人口流入)을 능가하고, 급기야 1992년 극동지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Kim, 1994) 이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북한노동력(北韓勞動力)의 연구에 대해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이곳의 벌목장에서 일하던 북한 벌목공(伐木工: лесоруб)들이 인권유린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탈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벌목공들은 1953년도부터 간헐적으로 체결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영토내에서의 벌목 및 목재종합가공협정'(일명 林業協定)에 의거하여 개설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벌목장에서 노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벌목공들의 상당수가 족쇄에 채워지거나 고문 등에 의해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는 중, 이곳을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만주지역의 소위 조교(朝僑: 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들의 밀고나 특무(特務: 북한의 정보원 내지 기관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송환되어 처형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북한 탈출 벌목공들의 처리 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또는 인도적인 방안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제성호 1994; Ginsburgs 1997; 김명기 1997; 이정우 1997).

그러나 이러한 벌목공사태에 대한 시사적(時事的)인 언론의 보도에 가려져, 북한의 대(對)러시아 정책이나 러시아의 대(對)북한 정책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김부기 1994; Багрианская 1965; 레프첸코 1994; 바자노프 1997), 실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의 유입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이 어떻게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입되었는가, 현재 그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장래 북한에서의 체제변화를 가정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자들이 가지는 함의(含意) 등에 관해 연구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국제노동력이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흡인·배출 모델(pull·push model)과 세계적 모델(globalist perspective)이 자주 거론된다. 인구의 흡인·배출(pull·push) 모델은 인구이동의 가장 단순하지만, 또한 가장 정통적인 모델로서, 필요이상의 과잉인구를 가진 국가와 더 많은 인구(주로 노동력)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간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 인구이동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인구를 배출하는 요인으로써는 일반적으로 실업, 경제적인 침체,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들 수 있고, 인구를 흡인하는 요인으로써는 고임금, 많은 취업기회, 양호한 근로조건 등을 들 수 있다(Thomas 1961). 또한 흡인·배출 모델은 국가간의 소득격차에 의한 경제적 차원만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흡인·배출에 의한 모델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확실히 흡인·배출 모델이 주장하듯이 소득의 격차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격차가 인구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격차가 인구이동의 전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소득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격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이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에 따라 북한 탈출 벌목공들의 처리 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또는 인도적인 방안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제성호 1994; Ginsburgs 1997; 김명기 1997; 이정우 1997).

그러나 이러한 벌목공사태에 대한 시사적(時事的)인 언론의 보도에 가려져, 북한의 대(對)러시아 정책이나 러시아의 대(對)북한 정책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김부기 1994; Багрянская 1965; 레프첸코 1994; 바자노프 1997), 실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의 유입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이 어떻게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입되었는가, 현재 그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장래 북한에서의 체제변화를 가정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자들이 가지는 함의(含意) 등에 관해 연구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국제노동력이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흡인·배출 모델(pull·push model)과 세계적 모델(globalist perspective)이 자주 거론된다. 인구의 흡인·배출(pull·push) 모델은 인구이동의 가장 단순하지만, 또한 가장 정통적인 모델로서, 필요이상의 과잉인구를 가진 국가와 더 많은 인구(주로 노동력)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간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 인구이동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인구를 배출하는 요인으로써는 일반적으로 실업, 경제적인 침체,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들 수 있고, 인구를 흡인하는 요인으로써는 고임금, 많은 취업기회, 양호한 근로조건 등을 들 수 있다(Thomas 1961). 또한 흡인·배출 모델은 국가간의 소득격차에 의한 경제적 차원만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흡인·배출에 의한 모델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확실히 흡인·배출 모델이 주장하듯이 소득의 격차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격차가 인구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격차가 인구이동의 전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소득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격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이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러한 소득이나 사회 문화적 격차가 준다고 해서 인구이동이 줄어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¹⁾ 여기에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의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과 함께 인구이동의 또 다른 하나의 모델로서 거론되는 이론은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globalist perspective)이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사센(Sassen 1988)에 의하면,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은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전제로 한다. 경제의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특히 1960년대 이후 현저하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일체화와 통합과정으로 국경이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자본의 국제화가 진전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고전적인 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는 국가간에 토지, 노동, 자본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으나, 세계경제시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여 유통과정의 국제화와 생산과정의 국제화가 진전된다. 이러한 자본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본격화하는 것은 「중심부」의 농촌지역으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 여의치 못할 때라고 할 수 있다(成家克德 1991). 이러한 저임금의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주변부」 또는 「반주변부」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심부」국가의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통합이 된다고 본다.

이상의 두 이론에서 보듯이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과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 모두 이동의 주체로서 ‘개인’을 들고, 합리적으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개인’을 국제적인 인구이동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인구이동의 주체가 항상 개인일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동진출이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인 근로자의 이동의 주체는 오히려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나 제3세계국가의 경우 국가에 의한 이민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기의 두 모델은 모두 이러한 국가에 의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이민은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흔히 보이는 개인에 의한 인구이동과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인구이동의 대상자, 목적지, 목적지에서의 작업의 종류와 조건을 결정한다.

1. 예를 들어 일부학자들은 미국으로 이동해오는 멕시코인 들의 대부분이 반드시 멕시코의 최빈곤지구나 미국과의 접경지구에 사는 사람만은 아니며, 미국에 이주해 오으로써 가장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멕시코인들만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Alejandro Portes & Robert Bach (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4를 참조하기 바람.

여기에는 인구유입국뿐만 아니라 인구유출국의 이민정책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소련에 송출하는 노동력의 배경으로 간파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엄청난 대외채무로서,²⁾ 북한의 노동력 송출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러한 대외채무를 변제하고 외화획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³⁾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인구이동의 대표적인 두 모델, 즉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과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은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북한의 노동력 수출에 관한 본 연구는 상기의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과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문헌 분석적인 방법으로써 메타자료분석 (meta data analysis) 방법이 이용될 것이다. 메타자료분석은 일정한 자료들의 분석결과를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용된 각 분석방법과 그 과정상의 기본 전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자료들을 그들의 질(質)과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 서로 관련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李知勳, 1993).

따라서 이 메타자료분석에 있어서 그 분석의 성격상,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에서 조영된, 그리고 많은 기존의 연구들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그다지 많다고

2.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약 4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內外通信 綜合版 (65) (1997. 7.1 ~ 9.30) p. 170).

3. 특히 아시아의 저소득층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민자들에 의한 모국으로의 해외송금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의 1987년 상품수출액은 각각 10.74억 달러와 41.72억 달러인데 반해서, 양국의 해외자국민에 의한 송금액은 각각 6.17억 달러와 21.72억 달러에 달해, 자국민의 모국송금액은 자국의 상품수출액의 50% ~ 60%에 이르기도 했다(成家克德 1991:398).

여기에는 인구유입국뿐만 아니라 인구유출국의 이민정책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소련에 송출하는 노동력의 배경으로 간파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엄청난 대외채무로서,²⁾ 북한의 노동력 송출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러한 대외채무를 변제하고 외화획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³⁾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인구이동의 대표적인 두 모델, 즉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과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은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북한의 노동력 수출에 관한 본 연구는 상기의 인구의 흡인·배출 모델과 인구이동의 세계적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문헌 분석적인 방법으로써 메타자료분석 (meta data analysis) 방법이 이용될 것이다. 메타자료분석은 일정한 자료들의 분석결과를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용된 각 분석방법과 그 과정상의 기본 전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자료들을 그들의 질(質)과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 서로 관련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李知勳, 1993).

따라서 이 메타자료분석에 있어서 그 분석의 성격상,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에서 조영된, 그리고 많은 기존의 연구들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그다지 많다고

2.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약 4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內外通信 綜合版 (65) (1997. 7.1 ~ 9.30) p. 170).

3. 특히 아시아의 저소득층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민자들에 의한 모국으로의 해외송금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의 1987년 상품수출액은 각각 10.74억 달러와 41.72억 달러인데 반해서, 양국의 해외자국민에 의한 송금액은 각각 6.17억 달러와 21.72억 달러에 달해, 자국민의 모국송금액은 자국의 상품수출액의 50% ~ 60%에 이르기도 했다(成家克德 1991:398).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분석대상으로서의 기존 연구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선정상의 편견 또는 오차의 개입을 가능한 배제할 수 있는 임의선택(random selection)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첫째로는 연구관점의 문제이다. 기존의 북한-러시아 관련의 기존연구들이 나름대로 기여는 하였으나, 대부분 한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연구들은 대다수가 북한 또는 남한 심지어 서방(西方)의 관점에서 북한-러시아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러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러시아간의 관련활동에 대해서는 극히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유입에 관한 러시아의 관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둘째로, 연구자료의 문제으로써, 대부분의 기존의 북한-러시아 연구들은 러시아의 1차 자료나 러시아에서 발행된 2차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구미나 일본의 연구물들을 소개 또는 번안(翻案)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鄭漢求, 1995). 이로 인해 메타자료분석에서는 자료의 편중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러시아 자료 및 관련 연구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러시아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러시아 자료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상기 자료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물론 이렇게 러시아의 자료에 편중함으로써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 즉 자료의 타당성(validity)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당히 많은 소련의 통계자료들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짐으로써 해서 이로 인한 오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⁴⁾ 따라서 이러한 타당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서방의 자료와 러시아의 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4. 소련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계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는 Dellenbrant (1986:31-32)를 참조하라.

4.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관과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 전체영토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지역으로서 러시아 연방 11개 경제지역 중의 하나로서 사하공화국,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지방, 아무르주, 캅차트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체면적은 약 620만 평방 킬로미터로서 러시아 전체영토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약 8백만 정도로 러시아 전체인구 1억5천만여명의 5.4%에 불과하다(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1994).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배우기 위해 구소련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인력유인정책을 썼다. 예를 들어 이 극동지역의 농산물 등에 대한 면세정책, 아파트의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비의 인하, 이 지역으로의 이사비용을 무료로 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거나 추가소득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이 사용되었다(Мильнер 1979).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의 탄생을 계기로 이러한 유인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다시금 이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인구유출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표1.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변화, 1989-1995 (단위: 천명)

| 러시아 극동지역 | 총인구 (1989) | 총인구 (1995) | 비세트변화 (1989-1995) | 진대수변화 (1989-1995) | 자연증가 (1989-1995) | 순인구이동 (1989-1995) |
|-----------|------------|------------|-------------------|-------------------|------------------|-------------------|
| 극동지역 (합계) | 7,941 | 7,667 | -3.4 | -274 | 160 | -434 |
| 사하 공화국 | 1,081 | 1,035 | -4.3 | -46 | 65 | -111 |
| 연해주 | 2,258 | 2,278 | 0.9 | 20 | 19 | 0 |
| 하바로프스크주 | 1,609 | 1,601 | -0.5 | -9 | 21 | -29 |
| 유테인 자치구 | 216 | 216 | 0.2 | 0 | 3 | -3 |
| 아무르주 | 1,058 | 1,051 | -0.7 | -7 | 21 | -28 |
| 캅차트카주 | 466 | 423 | -9.3 | -43 | 9 | -52 |
| 마가단주 | 386 | 282 | -26.9 | -104 | 10 | -114 |
| 쭈코트카 자치구 | 157 | 101 | -35.5 | -56 | 4 | -60 |
| 사할린주 | 710 | 681 | -4.2 | -30 | 8 | -37 |

자료: Госкомстат 1990; Госкомстат 1994; Госкомстат 1995
(Heleniak(1995:457)에서 재인용)

이 표에 의하면 1989년에서 1995년 사이에 극동지역전체에 있어서 약 43만 여명이 러시아극동지역을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⁵⁾

따라서 최근의 극동지역의 자체노동력으로서 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 특히 인근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⁶⁾ 이러한 노동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련의 저명한 정치주간지 ‘노보예 브레미야’(Новое время)지의 기자 알렉산드르 구벨(1989:53-54)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은 이미 외국의 노동력을 쓰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것은 大海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현재 수백 명의 중국인·베트남인·북한인을 쓰고 있으나, 우리한테는 수천명 어찌면 수만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관심은 상호적인 것이다. 지도를 보라. 이곳에서 중국까지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이다. 베트남까지는 좀 멀기는 하나 그래도 거리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간과는 비교할 것이 못된다. 뿐만 아니라 직통인 海路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판 네 있다. 우리들은 소련유럽부에서 그곳에서도 필요한 일손을 끊임없이 불러대고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남아도는 인력이 있다. 그쪽에서는 이들 일손에게 어떻게 일거리를 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소련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인구이동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회주의국가간의 인구이동은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인구이동과는 몇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간의 인구이동은 이들 국가간의 계획과 규제에 의한 일시적인 노동력이동이라는 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⁷⁾ 이러한 인구이동은 이들 국가

5. 이와 비슷한 추세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표적 도시 블라디보스톡의 노동력시장 조사에서도 1992년과 비교해서 1993년에는 출생자수는 645명이나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1,459명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최근의 블라디보스톡의 인구변화에 대해서는 Ю.Н. Казаков, “Рынок тру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1996, no. 7, pp. 112-115를 참조.

6. 최근의 한 자료에 의하면 아무르지역의 생산분야에만 약 20,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Vardomsky 1992:82).

7. 사회주의국가들간의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T. Ваис(1975),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н СЕВ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9 를 참조할 것.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원조의 한 형태의 표현이라고 강조되며,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합을 고양시키고, 각국의 기술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인구이동의 대표적인 예로서 1967년 10,000 내지 12,000여명의 헝가리 근로자들과 35,000여명의 폴란드 근로자들이 동독에서 작업을 한 이후, 20,000여명의 폴란드 및 불가리아 근로자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한 예도 있고, 수천명의 불가리아 노무자들이 소련에서 일한 사례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선발된 국제사회주의연합근로자 수천명이 몽고에서 일한 사례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Ваис 1975).

1989년 현재 소련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주의 근로자의 규모는 10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약 160,000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중 대부분은 북한, 베트남 및 불가리아 출신들로서 '자유고용'(free hire) 방식으로 일하게 된 근로자들이다(Ginsburgs 1990:7).⁸⁾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력규모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으나 미나키르(Minakir 1994:183)에 의하면 1989년 현재 26,000여명이 있다고 하며 이들은 대부분 북한, 쿠바,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온 근로자들이다(표3 참조).⁹⁾

8.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89년 현재 10개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약 120,000명의 근로자들이 소련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로 자연자원이나 자연연료의 채취분야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소련 추과의 합작기업 등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 60,000명 가운데 절반이 소련의 섬유산업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계제작과 건설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Ушкалов 1989).

9. 참고로 러시아 극동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북한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를 보면 북한(842명), 중국(2146), 베트남(60), 불가리아(32), 한국(45), 일본(9), 캐나다(5), 미국(2), 뉴질랜드(2), 몽고(2), 영국(2)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블라디보스톡의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Ю.Н. Казаков, "Рынок тру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7(1996), pp. 112-115를 참조하라.

5.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

5.1 북한 노동력 진출의 배경

5.1.1 재소 북한인(在蘇北韓人)의 기원

북한과 관련된 재소한국인들의 기원은 1945년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8.15 해방이 되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고문관 2진으로서 약300명¹⁰⁾의 재소한국인들과 함께 북한에 진주하여 초기 북한정권내의 「소련파」의 모체를 이루었다(Stephan 1971). 이들 재소한국인들은 소련의 북한점령기간동안 소련군대를 도와 정부, 당, 학교 등 전 분야에서 고문관 또는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48년 북한정권수립 이후에도 노동당과 북한군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노동당과 내각에서 활약한 소련 극동지역 출신인 허가이, 소련 타시켄트 출신의 박창옥 및 하마로프스크출신의 남일, 그리고 소련 타시켄트 출신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 북한 도시건설상(建設相) 등을 역임하고 1956년 대표적인 친소파 숙청사건의 하나인 최창익 사건으로 소련에 망명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원 연구원을 역임한 김승화¹¹⁾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당 간부로서는 박창식, 김열, 김재욱 등이 있었고, 군 간부로는 김웅, 한일무 등이 있으며, 언론계에서 활동한 사람은 기석복과 태성수 등이고, 학계에서는 허익, 오완복, 박영, 김용성 등이 있었다 (Suh 1987:104-106).

그러나 1950년대 6.25사변이 끝나고 스탈린이 사망하자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고, 북조선 건국시 여러 가지 사업에 큰 역할을 했던 재소한국인들은 북한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소련파’로 몰려 숙청당했고, 이중 상당수가 소련으로 되돌아갔다.¹²⁾ 이런 가운데서 소련에서 파견된 재소한국인을 숙청하는 마지막 근거가 된 것은 1957년 12월

10. 서대숙교수(Suh, 1987:107)는 1945년 8월과 1949년 1월 사이에 북한에 들어온 초기 재소 한국인들의 수를 427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11. 김승화 (金承化, Kim Сын Хва)는 1965년에 저술한 러시아 제정시대와 소비에트 정권시대의 한국인들의 역사에 관한 연구서인 蘇聯韓人史概說(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 Ата: Наука)로 잘 알려져 있다.

12. 노다(野田正彰 1992:92)는 약 500명의 재소 한국인이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에서의 권력투쟁의 결과 50명은 행방불명되었고 450명이 소련으로 되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소련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이중국적에 관한 협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재소한국인으로 하여금 북한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북한의 인민이 되거나 소련국적을 가지려면 북한에서 철거하라는 것이었다 (이광규 · 전경수 1993:190).

5.1.2 북한 유학생의 근로실습(work-study)

북한근로자의 재소파견의 하나의 형태로서 먼저 북한 유학생에 의한 근로실습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학생들이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근로실습(work-study)의 일환으로 소련의 일정기관에서 연수생으로 노동을 하게 된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원인은 먼저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한국 점령기간동안 한국인으로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되어 있었거니와 설사 교육을 받은 사람도 기술자로서 공업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적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군대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전문적 기술자도 함께 떠남으로써 소련의 원조로 지급된 기계와 장비를 작동할 기술자가 없었다. 소련의 전문가가 북한으로 파견되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런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학생들을 소련에 파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1948년 8월4일에 조인한 북소간의 합의는 바로 이 북한 학생들이 소련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도록 규정한 최초의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합의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2년 9월1일에 만료되는 이 협정에 대신해서 1952년 5월 6일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미국무성의 자료는 당시의 소련에서 근로실습에 참가하는 초기의 북한 학생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949년 기술자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또 북한인들에게 스탈린의 사상과 러시아 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하에서 약 500명 정도의 북한인들이 소련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해당 학생의 지도력, 학습능력, 가족배경 등을 참고로 하여 북한의 각 지방의 교육청, 대학과 사회기관 등에 의해서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정치보위국과 노동당 중앙본부에 의해 승인된 150명의 학생을 매년 소련에 파견하게끔 되어 있었다. 1950년에는 약 400명의 후보자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선정된 학생들은 소련으로 가기 직전에 1개월반 동안 집중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소련에 도착한 후 2년간 러시아어를 공부한 후 기술연수와 사상연수를 위해 소련

의 초급대학이나 종합대학으로 파견되었다. 이들 학생들 이외에도 매년 25명의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는 소련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특별기회가 주어졌다.”¹³⁾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소련대학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수업이 교실내의 강의뿐 만 아니라 도제(徒弟)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외국학생이라고 해서 이러한 실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북한 학생들 또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자기의 관심분야와 일치되는 분야에서 실습을 통한 노동을 해야만 했고, 이 실습참가자들은 일정한 급료를 지불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공식적인 학습과 근로실습의 비율은 여러 해 동안 많이 바뀌곤 했지만 이 두 가지의 작업이 계속 병행되었다.

이러한 학습과 근로실습을 병행한 북한 학생들은 소련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도 북한의 작업장에 배치될 때까지 소련의 자매기관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⁴⁾ 여기서 일한 작업에 대한 급료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소련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았으며, 이들은 급료의 단지 20~30%만이 자기들이 직접 루블화로 지급 받았다. 나머지는 소련과 북한당국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서 소련당국이 차지한 비율은 북한이 소련에 진 빚을 상계(相計)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가져간 몫은 북한의 화폐로 바꾸어 후일 작업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의 은행에 예치되었다(Ginsburgs 1989).

그리하여 1953년에서 1960년 2,000명 이상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소련 국내에서 이러한 근로실습을 받았고, 1951년과 1961년 사이에 200명의 연구원을 포함한 1,035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했다 (Bazhanova 1992:157).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북한 유학생수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감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 강조한 「자력갱생」노선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3.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118, Far Eastern Series 103, released Jan. 1961, pp. 107-108 Ginsburgs(1989), p. 416 재인용.

14.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6-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осква 1981, pp. 407-408.

5.2 북한 노동력 진출의 경과 및 실태

5.2.1 어업노동자

최초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어업노동자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1946년 5월~7월 사이의 기간에 소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 쌍방협정에 기초하여 오로지 수산업에만 종사하기 위해 사할린에 파견된 2,000 명이 파견된 것이 그 시초였다.¹⁵⁾

그후 소련은 캅차카, 사할린, 쿠릴열도 등지에서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1948년부터 1년 ~ 3년간 북한과 노동계약을 맺고 대략 12,000여명의 어업근로자를 파견했는데¹⁶⁾ 이는 소련어업국(Soviet Fisheries Administration)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업 및 수산물가공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북한노동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급증하는 노동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획고는 러시아 전체 어획고의 10%에 불과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극동 이외의 타지역에서는 어획고가 급감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극동지역의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획고는 러시아 전지역어획고의 40%로 급증함으로써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Чичканов & Орлов 1983).

또 다른 북한근로자 파견의 배경으로서, 북한과 소련이 시도한 많은 합작사업을 들 수 있다. 어업에서도 합작사업의 일환으로 1954년 ~ 1955년 사이에 소련은 북한에 23척의 어선을 제공했고, 1966년에는 두 척의 대형수송선 차이코프스키호와 타시켄트호를 제공하여 북서 태평양의 어로활동을 위한 수산물가공공장의 역할을 해 왔는데 (Bazhanova 1992:162), 여기에서도 노동력은 북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15. 이것은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회 부회장 김춘경(1997:161)씨가 전한 내용이다. 그러나 名越健郎(1992:99)와 정혜정(1995:71)은 1948년에 북한근로자가 사할린에 처음 왔다고 하며, Ginsburgs(1989:400)는 북한 근로자가 어업노동자로서 소련에 오게 된 것은 1951년 이전이라고만 밝히고 있고 구체적인 인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6.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118, Far Eastern Series 103, released Jan. 1961, pp. 107-108 Ginsburgs(1989:400; 1990:6)에서 재인용.

북한 어업노동자의 파견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될 북한 근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거나, 타 지역으로 송환하는데 있어서 강압수단이 작용한 증거는 없지만(Ginsburgs 1989:400, 1990:6; 이시연 1996:67), 캄차카 지역의 어장에서의 근로조건은 열악한 편이어서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작업중 사망하거나 후일 귀국한 근로자들도 특별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했다.¹⁷⁾ 이들 근로자들에 의한 조국 북한으로의 임금의 송금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국민들에게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사할린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노무자의 경우, 이들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단기간이었으며, 소련과의 근로계약이 1949년 2월 13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송금액은 노임의 50%까지 할 수 있었으나, 근로계약이 그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100루블 이상의 송금은 허용되지 않았다(김춘경 1997:162). 캄차카의 어업시설에서 노동에 종사했던 북한 근로자들중 7할은 북한으로 귀국했으며,¹⁸⁾ 현재 약 2,000명이 캄차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名越健郎 1992:99).

아직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어업노무자로 일한 북한 근로자들중 정확히 몇 명이 북한으로 귀국하지 않은 채로 러시아에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가 처음에는 어업노무자로 소련에 왔다가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업노무자 또는 건설노무자로 일하였고, 그후 각지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면서¹⁹⁾ 개인적으로 러시아 공민권을 획득, 소련시민이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특히 북한 노무자들은 건축에 관련된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종료후에는 대우가 좋은 건축기술자로서 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러시아 극동의 여러 지역으

17. 북한의 계약근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노무자 생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불만의 표시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들 노무자들을 모두 귀국시키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춘경 1997:162).

18. 나고시(名越健郎 1992:99)에 의하면 캄차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효만 1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19. 이러한 초기 북한의 파견노무자들이 캄차카, 사할린 등지에서 하바로프스크시에 이주하여 농사를 짓고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장사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이들의 수효는 현재 약 200명이라고 추산된다(이광규 · 진정수 1993:329).

20. 이러한 부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러시아 극동의 하바로프스크에 거주하는 이시연씨의 경우로, 그는 1948년 북한정권 초기 소련으로 건너가 어업노동자로 일하다가 다시 임업노동자가 되어 하바로프스크로 이주하였다. 그 후 건설노무자를 거쳐 76년 직업소방대 교관이 되어 84년까지 복무했다(이시연 1996:62-67).

로 흩어져서 일을 했다(정혜정 1995:71). 그러나 외국, 특히 북한의 파견노부자들에게는 파견근로의 계약기간중에는 소련 공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계약의 근로기간 만료후 소련 공민권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북한에서 파견된 기관요원들의 감시망을 뚫고 원하는 공민권을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북한당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서, 1958년 6월까지 소련과의 노동계약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북한 노부자들과 또 이전에 일본의 공민권을 가진 한인들에게는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요청에 의해 사할린주 내무기관이 발소된 북한공민권을 회복하거나 새로 받도록 하기 위한 안케뜨(анкета: 申請書)를 내어주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나훗카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비공민들의 안케뜨 117건을 포함한 207안케뜨가 접수되었는데 이들에게 모두 북한공민권이 주어졌다(김춘정 1997:163).

5.2.2 별목작업노부자

현재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의 재소 별목작업노부자들이다. 이는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별목장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 별목공들이 인권유린과 굶주림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탈출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극동지방에 파견된 북한의 근로자들중 수적으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이루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재소 별목공들이다.²¹⁾

북한의 별목공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된 근거가 되는 업업협정은 1967년 3월2일 체결된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련방영토내에서의 별목 및 목재종합가공협정” (Ginsburgs, 1989:406; 제성호, 1994:51; 정혜정, 1995:70; Kim, 1995:78-9)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별목공의 소련파견의 기원은 그 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표2 참조), 소련영내에서의 별목에 관한 협정은 1953년 7월 30일에 체결된 별목협정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Bazhanova 1992:158-162). 이 협정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 극동

21. 북한의 노동력이 이렇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별목작업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과거에는 20만 명의 최수불 별목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최수불을 관리하는 소련 내부성은 소련내에서 3번째로 큰 별목작업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Grigor'yev 1994).

지역의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 1957년 ~ 1962년 사이에 150만 입방미터의 침엽수를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권리를 무료로 얻고, 또 소련이 원목을 국경선까지 운반해주는 대신, 북한측은 그들의 원목 1입방미터를 벌목할 때마다 소련에 제공할 1.33입방미터의 원목을 더 벌목하여 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표2. 러시아-북한간의 임업협정 역사

| 체 결 일 시 | 체 결 내 용 |
|---------------|--|
| 1953. 7. 30. | 1957년 ~ 1962년 사이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 150만 입방미터의 침엽수 벌채권을 북한에 아양 |
| 1960. 12. 24. | 1953년 7월30일 협약의 유효기간을 10년간(1972년까지) 연장합의 |
| 1964. 9. 24. | 북한의 벌목중단합의, 북한 벌목단 1964년 12월 31일 이전 소련을 떠나기로 합의 |
| 1966. 6. 22.* | 소련측은 1970년까지 북한에 가용재목제공 합의 |
| 1967. 3. 2. | 북한의 소련에서의 중단된 벌목재개 합의 |
| 1969. 4. 12. | 1967년 3월 2일의 합의사항 재조정 및 보완 합의 |
| 1971. 12. 3. | 1967년 3월 2일의 합의사항 재조정 및 보완 합의 |
| 1972. 6. 24. | 1967년 3월 2일의 합의사항 재조정 및 보완 합의 |
| 1975. 1. 28. | 북한의 벌목량 증산 합의 |
| 1977. 3. 2. | 양국간 벌목협력 합의 |
| 1982. 3월 | - 하바로프스크지역내 생산합영체 산하에 10개의 제재소 설치 합의 (연간 500만 입방미터의 원목처리) - 아무르지역내 생산합영체 산하에 5개의 제재소 설치 합의 (연간 240만 입방미터의 원목처리) |
| 1987. 3월 | 임업분야 협조확대에 대한 의정서 합의 |
| 1991. 8. 8. | 임업협정 재계약, 이 계약의 효력은 1993년 12월 31까지로 함 |
| 1995. 2. 24일 | -임목생산량 1991-1993년의 수준보다 30%감축, -북한 벌목공의 수를 15,000명 내지 20,000명에서 7,000명으로 감축 -벌목공들에 대해 러시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함 -러시아내의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근로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함 -노무자들에게 임시거주권 발급, 외출허용 -북한 노무자들의 1일 8시간 근무규정 -러시아 인권단체들의 북한 벌목작업장 출입허용 |

(자료: 저자가 관련자료를 참고로 작성; *Bazhanova(1992:159)는 6월 22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Ginsburgs(1989:406)는 6월 20일로 기록하고 있다)

소련과 북한은 1960년 12월 24일 상기의 협약의 유효기간을 1972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동의를 했으나, 북한측이 규정된 벌목량을 위반하고²²⁾ 또 소련측과의 여타 문제로 마찰을 빚게됨에 따라 1964년 9월 24일에 개최된 양국간의 교섭결과 북한은 벌목을 중단하고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련을 떠나기로 합의하였다.

중단된 러시아-북한간의 벌목사업은 1967년 3월 2일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에 의해서 재개되었다. 이 합의가 있기전 이미 1966년 6월 20일의 양국간의 회담에서 이미 이 회담에 대한 암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양국은 소련영토내에서 북한정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벌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1968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소련측은 현재의 북한-소련간의 무역협정의 조건에 따라 1970년까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농업용 복제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²³⁾

1967년 3월 2일자 합의의 구체적 협력사업은 1967년 4월 29일의 연차합의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북한의 벌목기관, 즉 임업대표부가 설립되고 하바로프스크와 이부르지역에서 원목가공이 시작되었다. 소련측이 해야 할 일은 벌목작업이 진행될 벌목지역을 지정하고, 임목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며, 벌목작업이 합의된 사항에 따라 진행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새로운 장비사용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작업절차, 작업의 안전기준, 및 산불방지규칙의 준수여부도 포함이 되었다. 기존의 거주시설이라든가 벌목작업장의 보조시설은 북한측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무자를 위한 주거시설, 도로, 창고, 철도 및 작업구역, 행정구역, 문화시설 등의 건립에 대해서는 소련측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벌목경험이 있는 노동력의 제공, 벌목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 의료지원, 통역원 및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 소모품, 의복, 여가 등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북한측은 물자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건립, 장비

22. 1964년 9월 24일의 회담에 의해 확인된 합의서에 의하면 1957년 10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북한측은 585만 7,500입방미터의 원목을 벌목했으며 이중 251만 8,400입방미터의 원목을 북한에 가져가야 했으나 실제로 1,500입방미터가 더 많은 251만 9,900입방미터를 북한으로 반입했음을 확인했다(Bazhanova 1992:159).

23.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6-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осква 1981, pp. 244.

의 보수 및 유지, 근로자들에 의한 산불방지규칙의 준수여부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벌목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부상에 대해서도 북한측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Ginsburgs 1989,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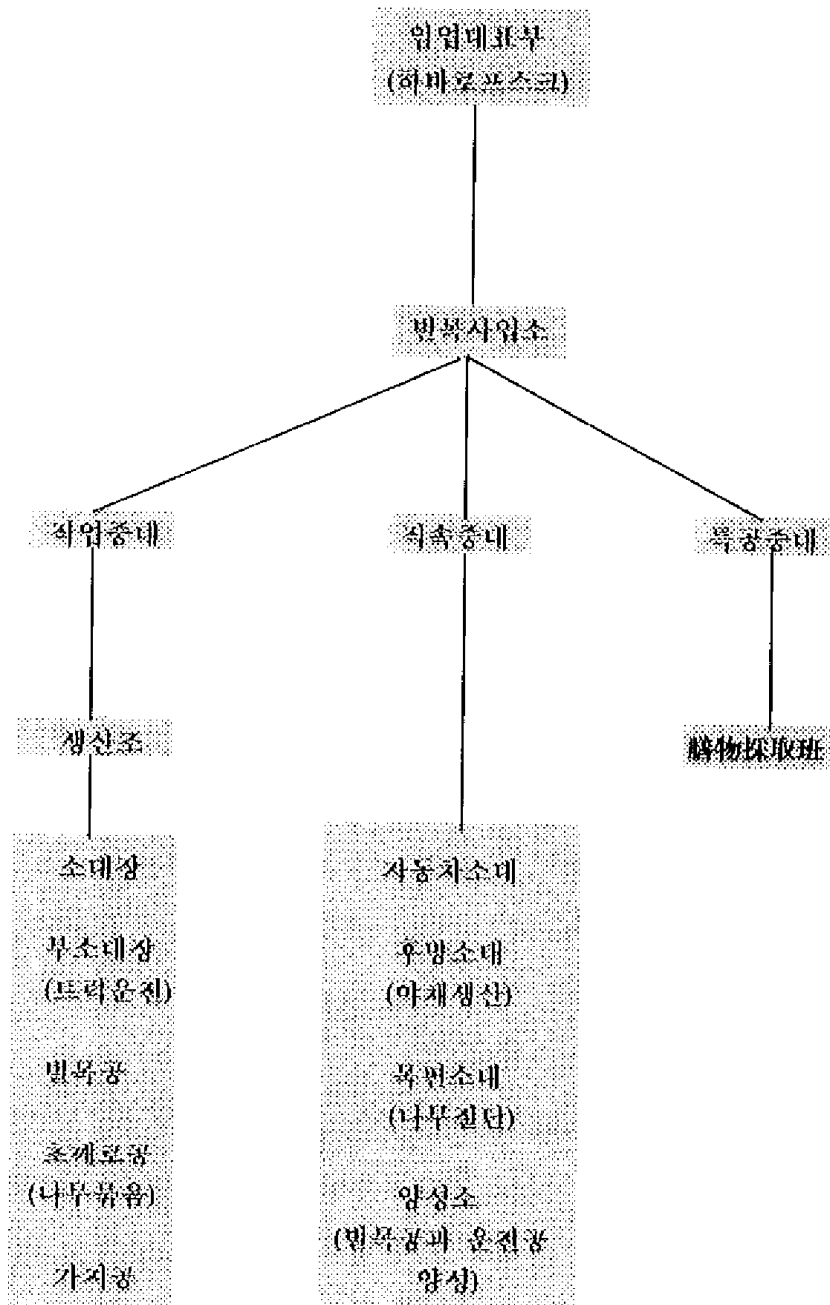
벌목작업후에는 벌목지역의 재식림(再植林)에 관한 소련측의 관련법규에 따라 재식림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이러한 재식림을 위한 나무의 종자나 장비 및 이에 필요한 유류(油類)는 소련측이 제공하도록 했다.²⁴⁾ 특히 북한의 벌목작업 관련기관은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중 소련영토내의 채류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위임을 받았으며 노무자들이 영내에서 채소를 기른다는가, 물고기를 잡는다는가 하는 일 등도 북한측에 위임되었다.

북한의 벌목사업의 조직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벌목작업을 총지휘하는 임업대표부는 하바로프스크에 있고, 그 아래 여러 곳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데 1개 사업소에는 1,000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벌목사업소는 작업중대, 직속중대 및 특공중대로 나뉘어 있다(도표1 참조). 작업중대에는 5 ~ 6개의 생산조가 있으며 각 생산조에는 소대장, 트랙트 운전사인 부소대장, 벌목공, 나무를 묶는 초깨로공, 밀대공, 가자공 등이 있다. 이들은 식당차가 부설되어있는 가건물 숙소에서 자고 여기에 부설된 식당차에서 식사를 한다. 직속중대에는 자동차중대, 야채를 생산하는 후방중대, 나무를 절단하는 목면중대, 벌목작업장내의 상점, 근로자를 감시하는 안전부, 그리고 벌목공과 운전공을 훈련시키는 양성소가 있다. 이와같이 작업을 하는 작업중대와 직속중대 이외에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에게 바칠 선물로서 사슴, 멧돼지, 곰, 산양 등을 수렵하여 녹용과 옹담을 채취하는 선물채취반이 있다(이광규 · 전경수 1993:389).

1967년 3월 2일의 협약에 대한 보완책이 1969년 4월 12일, 1971년 12월 3일 및 1972년 6월 24일의 합의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소련과 북한은 벌목한 원목의 일정량(20%)까지 소련에 팔기로 하였고, 북한의 요청에 따라 1975년 1월 28일에 개최된 제12차 소련-북한 경제 · 과학 · 기술 문제에 관한 정부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합동벌목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장래 양국의 임업합영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24. 사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벌목작업은 대부분 나무를 잘라내는데에만 관심을 가졌고 특히 구소련 시대의 말기에는 벌목후의 재식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경관을 해치고, 지역하천을 오염시키며,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Peterson 1995:296)

도표1. 벌목 사업소의 구성조직



(자료: 이광규·진경수 공저(1993:389), 이시연(1996), 정혜정(1995) 등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합의하였고 북한의 벌목량도 늘이기로 하였다.²⁵⁾ 또한 북한의 벌목지역도 체그도민(Чегдомын)이외에도 제야(Зея), 제투락(Джетулак), 턴다(Тында)지역으로 확대되고 연간 벌목량도 370만 입방미터에서 550만 입방미터로 확대되었고, 목재를 절단해서 만든 대팻밥(шелка)을 연간 40만 입방미터, 그리고 소나무에서 채취한 수지로 된 테레빈 연간 약 5,000톤이 벌목장에서 수집되어 이 가운데 일부를 계약에 따라 소련에 제공됐다.²⁶⁾

1981년 소련측은 벌목, 대팻밥 및 테레빈 수집을 1982년과 1985년 사이에 북한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벌목량은 1985년까지 290만 입방미터로 줄이기로 하였다. 뒤이어 1982년 3월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하바로프스크의 우르갈레스(Ургаллес) 생산합영체와 아무르지역의 턴다(Тында) 생산합영체 산하에 각각 10개와 5개의 제재소를 설치하여 연간 500만 입방미터와 240만 입방미터의 원목을 각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Bazhanova 1992:161). 이러한 소련과 북한과의 임업합영사업은 종래의 원조관계에 입각하여 북한내의 산업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나 협력을 제공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러시아측은 원자재 즉, 목재와 기계,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노동력과 일정 형태의 기계 및 공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으며, 이 경우 투자액과 생산품의 배분은 제품을 외국시장에 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구상되었다.²⁷⁾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벌목노동자의 수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으나 자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의 하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학자 파벨 미나키르(Minakir 1994:183)의 것으로 이에 의하면 1989년 현재 하바로프스크지역과 아무르지역의 북한 벌목공의 수를 각각 13,350명과 7,200명으로 추산하여 총 20,550명의 북한 벌목공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표3

25. М. Мещеряков, "СССР-КНДР,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1975, No. 8, p. 13.

26.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삼림지역의 34%를 점하고 있으나 낙후된 설비로 인하여 소련의 재목은 세계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하였다.

27.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과의 합영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는 소련극동지역의 약초와 북한의 동양 의학지식을 결합하여 치타(Чита)시에 건립된 합영계약회사 '피튼'이 있었고('내외통신', 91.7.31. 보도판 7405호),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금속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철강공장과 러시아 극동지역 철강업체 아무르스탈(Амурсталь)의 결합, 연해주의 포시에트만(灣)에서의 수산자원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한 합영기업,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러시아 측이 농도, 농기계, 비료 등을 제공하는 합영농장건설 등이 있었다(전홍찬 1993/4:216).

참조). 노동자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30,000명까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진즈버그스(Ginsburgs 1990:7-8, 1992:192)는 1989년 현재 북한 벌목공의 수를 20,000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이 15개의 벌목장을 4년마다 돌아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 벌목공의 수는 조금 감소한 15,0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⁸⁾ 또 이스턴 이코노미리뷰의 기자인 제프 릴리(Jeff Lilley)는 1993년 시베리아 벌목장에 관한 특집기사에서 북한 벌목공의 수를 16,000-20,000명으로 보도하였다.²⁹⁾ 그러나 아카하(Akaha 1995:103)는 1994년 현재 7,000명의 북한 벌목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벌목장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인권침해로 인하여 탈출하는 벌목공들의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러시아와 북한간의 임업협정은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들 벌목공들은 벌목장에서 족쇄에 채워지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잔인한 비인간적 학대행위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러시아측의 항의가 거세어짐에 따라 1993년 만료된 임업협정이 재협상에 이르지 못했고 6개월 기간의 가계약을 맺어 벌목사업이 지속되어 오다 1995년 2월 24일에야 정식임업협정을 맺게 되었다.³⁰⁾ 1995년 2월 24일 평양에서 조인된 새로운 임업협정은 1998년 12월31일 까지 유효하도록 되어있다(Ginsburgs, 1997:408; Moskalenko, 1996:49; Yakubovsky, 1996: 461).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임목생산량에 있어서 1991과 1993년 사이에 합의한 원목산출량의 30%를 감축하고, 북한 벌목공의 수를 이전의 계약에 명시되었던 15,000명 내지 20,000명에서 7,000명으로 줄이기로 하였다(Yakubovsky, 1996:461). 또 이 새로운 협정은 북한벌목공들이 러시아의 법을 준

28.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No. 3(1993), p. 12.

29. Jeff. Lilley, "Great Leader's Gulag: Siberian timber camps are relics of the Cold Wa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3. Sep. 9, p. 22. 이와 비슷한 시기의 러시아의 유력지 이즈베치야도 비슷한 수의 노동자를 추산하여 1994년 약 15,000명의 벌목공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으며, 이들이 북한과 러시아간의 임업협정이 현재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러시아를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Борис Резник, "Корейцы расконсервировали в тайге старый урановый рудник" *Известия*, 1993년 7월 23일)

30. 하마로프스크지역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은 북한 벌목장의 열악한 인권상황으로 재계약에 반대했으나 북한 벌목장에서 벌목한 목재의 2/3를 러시아가 소비하게 되었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재계약이 성사되었다. - 하마로프스크지역의 주지사 텃함에 의하면 북한벌목공이 없다면 이 지역의 임산업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Известия*, 1994년 5월 12일, p. 3). 특히 여기에는 북한 벌목공에 의해 채벌된 목재는 해외에서 러시아 벌목공이 벌채한 목재보다 해외시장에서 25%나 싸게 팔리므로 경화(硬貨)가 부족한 이 지역의 경제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모른다(Jeff Lilley, "Great Leader's Gula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 September 1993, pp. 21-22).

수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Ginsburgs, 1997:408) 1995년부터 북러임업노동계약의 체결과 함께 증명제도의 변경으로 노무자들의 임시거주권이 지급되도록하여 외출이 허용되었다. 이 협정으로 하바로프스크의 체그도민에 있는 5,000명의 북한근로자는 모두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되었고(정혜정 1995:76), 러시아가 북한근로자의 벌목작업으로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는 약 5천7백만 불로 정해졌다.

표3.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수 (1989년 현재)

| 산업/국가 | 연 해 주 | 하바로프스크지역 | 아무르주 | 러시아극동 (합 계) |
|-------|-------|----------|-------|----------------|
| 건설업 | 1,963 | --- | 400 | 2,363 |
| 중 국 | 240 | --- | 400 | 640 |
| 베트남 | 1,723 | --- | --- | 1,723 |
| 벌목업 | --- | 14,270 | 7,200 | 21,470 |
| 북 한 | --- | 13,350 | 7,200 | 20,550 |
| 베트남 | --- | 200 | --- | 200 |
| 쿠 바 | --- | 720 | --- | 720 |
| 농업 | --- | --- | --- | 840 |
| 경공업 | 500 | 895 | 100 | 1,495 |
| 베트남 | 500 | 895 | 100 | 1,495 |
| 합 계 | 2,463 | 15,165 | 7,700 | 26,168 |

(자료: Minakir 1994:183)

또한 이 협정에서는 러시아내의 북한 벌목공들은 러시아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여 1일 8시간근무를 확실히 하고, 북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떠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인권방지를 위해 그동안 러시아의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한대로 러시아 법집행자들로 하여금 북한이 운영하는 벌목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Akaha, 1995:103).

5.2.3 건설노무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건설노무자들 중에는 1948년 이후 어업노무자로 소련으로 갔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건설노무자 계약서를 받게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유는 건설노무자의 대우가 좋고, 또 소련에서 북한노무자들은 건축에 관련된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정혜정 1995:71)

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들은 중국근로자들보다 수적으로는 적지만,³¹⁾ 더 규율이 잡혀있고, 법을 더 잘 준수함으로써, 북한 건설노무자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 같은 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264명의 북한건설근로자들이 25층짜리 건물의 건설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은 아랍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습득한 건축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건설노무자들은 이곳에서 북한 건설자용 자용으로 건설된 조그만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이들 북한 건설자용 마을은 식당, 샤워실, 사우나실 등을 포함한 조립식가옥으로 된 현장사무실 등으로 되어있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북한에서 가져온 물자로 완전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와 기술자들 외에도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안전부 요원들도 이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³²⁾

1989년 8월2일에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대표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표간에 체결된 소련영내(蘇聯領內)의 건설사업협력에 관한 합의문에 따르면³³⁾ 북한측은 소련영내에서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타 자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며,³⁴⁾ 여기에 대하여 소련측은 건설물자와 건설장비를 공급하기로 되어있

31. 러시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할당된 노무자의 비율은 전체외국인 노무자의 3.26%로서, 예를 들어 1994년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북한 노무자는 3,747명이었다(Ю. Арацкий, "Зачем Россиян чужая рабсила?" *Юрид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s. 36-37(1994), p. 7).

32. Ю.Н. Казаков, "Рынок тру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1996, no. 7, pp. 112-115.

33.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ин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1990, no. 5, p. 42.

34. 노무자와 선징은 북한에서 당에 대한 혁명성에 따라 선발되나, 러시아에서의 작업은 러시아측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근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Новосибирск)에서 3년간 일한 뒤 북한으로

다(부록 참조). 또한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50%에 대해서는 소련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제공한 크레딧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양측 은행이 크레딧의 변제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절차를 결정토록 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20%는 소련측이 북한측에 제공한 건축시공기술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도록 하였고, 또 수익의 20%는 소련측의 물자로 북한에 지급되며, 마지막 남은 수익 10%는 소련의 루블화로 북한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소련영내의 북한인은 현행 소련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이 합의문은 부록으로써 북한측이 수행할 소련에서의 긴급한 건설사업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1. 하바로프스크에 건립될 144세대의 아파트와 방 120개 규모의 유치원 등을 포함하는 객실 500개 규모의 복합호텔
2. 하바로프스크에 건립될 180세대의 아파트를 포함하는 객실 1000개 규모의 복합호텔
3. 하바로프스크의 2000석 규모의 서커스 공연장
4. 나홋카의 객실 300개 규모의 호텔
5. 블라디보스톡의 객실 800개 규모의 호텔
6. 연해주 하산(Хасан)에 건립될 기차역사(汽車驛舍)

5.2.4 광산노무자와 농업노무자

먼저, 북한노무자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산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1982년 워싱턴 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 June 3, 1982)가 사할린의 탄광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근로자의 밀수에 관련된 보도가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는

귀국하는 노무자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로) 올 수는 없다. 당으로부터 혁명성을 인정받아서 뽑힌다. 나는 평남 진남포 공업학교를 나와 모 사업소에 전기공으로 일하던 중 선발됐다. 40여명의 일행과 함께 노보시빌스크로 와서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러시아 사업소로부터 배정받은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측이 정해주는 작업장에서 몇 조로 나눠 일했다. 각자의 전공에 따라 어떤 근로자는 기계 부분을, 어떤 근로자는 노무부문을, 또 어떤 근로자는 전기 부문에 배속되어 작업했다.』 (러시아 하산역에서 북한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와의 인터뷰에서, 崔普植(1993:580).

아마 1948년을 전후해서 약 5만 명의 북한계약노동자가 캄차카와 사할린 등지에서 작업을 하었는데 이들의 일행이라고 보여진다. 이들 중의 과반수가 계약이 끝난 뒤 북한으로 돌아갔으나 남아있는 사람도 많았다. 이후 한국동란과 동서진영의 냉전으로 사할린의 한인 4만3천명(1967년)이 2개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1958년 북한 영사관 직원이 사할린에 와서 무국적자들에게 북한국적취득을 권유하고, 이곳에서 야수 활발하게 한인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기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북한시민권(65%)을 택하고 25%는 소련시민권을 택했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4,000여명은 무국적상태로 한국이나³⁶⁾ 일본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였다(Stephan 1972:226-227).

현재 사할린 한인이 북한국적을 소유하는 경우는 북한의 계약노동자가 북한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과 일제때 강제노역자로 이곳에 징용된 후 일본군이 철수하고 난 후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한 이후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또 50년대 후반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할린에서 북한으로 약3,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갔으나(花房征夫, 1996:77) 현재까지 이들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농업노동자의 경우로서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농업생산량의 일부분만을 자체 생산하며 상당량의 농산물을 여타 지역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에서 북한과의 합작사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생산량은 주민들의 수요에 채소, 멜론, 수박의 경우 56%, 감자의 75%,

35.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 June 3, 1982)에 의하면, 군식산(Kum Suk San)이라는 사할린의 소련탄광의 중장비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가 평양에 있는 자기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북한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지진 동소탑 한 개와 26개의 소련제 손복시계를 빌반출하려다가 사할린 세관에 적발되었다. 그는 사할린의 우달레고르스크에 있는 소련제관소에 끌려가서 "교화노역"(corrective labor)을 선고받았는데 소비에트카야 로시야(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지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 매달봉급의 20%를 소련당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할린의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Ginsburgs (1990:13)에서 재인용).

36.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南사할린 거주 한인들 31,00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5,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Гениальный Чародов,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хотят ост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Известия*, 1998년 6월 16일, p. 3).

과일과 머루류의 10%, 육류의 43%, 우유의 38%, 달걀의 83%만을 각각 충족시킴으로서 북한과의 합작사업의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Bazhanova 1992:88). 현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의 과일과 채소의 부족현상은 계속되리라고 보여지므로 이 지역에서 북한과의 합작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유익하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련이 토지를 공급하며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북한인들이 연해주의 우수리지역과 항카호 근처에 약 100여명의 북한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고, 연해주의 다른 3곳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Helgeson 1990:78).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1994년 12월 이즈베스치야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대인자치구(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의 행정부는 이 지역의 공터를 북한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주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측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의 노동력이 감소하여 이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의 공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이들 중국인들의 노동의 질이 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심지어 농산물을 훔치기까지 하여 중국인들과의 계약은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안으로서 북한의 노동력에 기대를 걸게 되었고 북한은 농산물생산액의 1/10가격으로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북한측은 유대인자치구의 행정부에 농업 기구, 비료, 북한농민을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치구행정부측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다.³⁷⁾

5.3 북한 노동력의 급료지불문제와 對러借款의 상황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근로자의 임금채정과 지불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의 규모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949년 이후 북한이 소련에 상환해야 할 신용 및 차관의 규모는 엄청난 것이어서 낮추어 잡아도 매년 8억루블(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Ginsburgs 1989:420). 그리하여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벌목공 및 여타 노동자들을 계속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고용하

37. Борис Резни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рвуща на пол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звестия*, 1994년 12월 27일.

는 것이 러시아측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바자노프 1997:200).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고용된 북한노동자들의 임금채정문제는 양국간의 큰 관심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근로자의 임금문제와 이들의 노동력에 의한 생산품을 소련측과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나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우수하나 (이시연 1996:66), 벌목공의 경우 북한 근로자의 벌목 노동의 질이 러시아인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하며 따라서 북한벌목공들에 의해 채취된 목재는 러시아근로자들에 의한 것보다 25% 정도 싸게 해외에서 팔린다고 한다 (Minakir 1994:183; Wishnick, 1995:267; Lilley, 1993:23; Kim, 1994:1066-67).

북한 근로자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하여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근로자가 벌목한 목재의 65%는 소련이, 나머지 35%는 북한이 갖는다는 조사보고서가 있다(정혜정, 1995:70). 이외는 달리 1989년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소련영내의 건설사업협력의 원칙에 관한 합의에 따르면 북한측은 소련측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소련영내에서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타 자재를 공급하며 여기에 대하여 소련측은 건설물자와 건설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건설사업에서의 상호지불 및 거래관계에서는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50%는 소련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제공한 차관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했으며, 나머지 50%에 대해서 소련측이 북한에게 물건과³⁸⁾ 루블(ruble)화로 갚는 것으로 되어있다 (Ginsburgs, 1997:394; Казаков, 1996:114). 구체적으로 그 나머지 50%의 수익 가운데, 20%는 소련측이 북한측에 제공한 건축시공기술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도록 했고, 또 20%는 소련측의 물자로 북한에 지급되도록 했으며, 나머지 10%은 소련의 루블화로 북한에 지급되도록 하였다(부록 참고).

그러나 러시아 극동의 경제학자 미나키르(Minakir 1994:183)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근로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북한·러시아간의 분배비율은 그 상품의 생

38. 물건 중에는 러시아로부터 해산물(рыбпродукция)로 계산하여 받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로는 보통 해산물 이외에도 (광물)비료와 러시아산 자동차 또는 임산자원 등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수송된 것들이다(Казаков, 1996:113-4).

산원가에 의해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업용 목재를 생산하는 경우 북한·러시아간의 분배비율은 1:1.55이며, 공업용 대뿔밥(щепка: wood chips)의 경우 1:1.28로 보고 있다.³⁹⁾

한편 러시아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련에 오기 이전에 각국의 국내담당자들과 사전에 결정되어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임금의 수준은 소련의 고용주가 소련법령에 규정된 규칙과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일하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근로자의 급료지불방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간주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봉급을 일부분은 현지에서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며 나머지는 그 근로자의 명의로 본국에 송금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본국으로 송금되는 임금을 전체 임금의 1/2 또는 1/3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Ginsburgs, 1990:9-10). 따라서 이와 비슷한 규칙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북한 근로자들의 한달 급료 500 루블중 20%는 현금으로 현지에서 수령하고, 나머지는 북한은행을 통해서 자기가족에게 송금이 되도록 하였다고 한다(Ginsburgs, 1989:409, 1990:22-23). 그러나 최근 북한 노동자의 임금지급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에서 일할 때 받았던 평균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임금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이 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가족이 임금을 받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혜정, 1995:76-77).⁴⁰⁾

특히 북한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에서 당국이 근로자의 임금을 소련에 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 또한 소련도 북한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북한측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련에서 작업을 할 북한의 근로자를 모집할 때 이들로부터 사례비를 거두는 것이 최근

39. 그러나 진즈버그스(Ginsburgs 1990:11)는 소련의 극동에서 일하는 불가리아 노동자의 벌목작업의 경우 소련과 불가리아의 분배비율이 1.33입방미터 대 1입방미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과 소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 북한노동자와 비슷한 월남노동자의 경우, 가족에게 송금이 되더라도 본국의 가족은 송금중 극히 적은 일부만 귀한 소련의 루블화로 받고, 나머지는 베트남 국내화폐로 받는다고 한다(Ginsburgs, 1989:408).

탈북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⁴¹⁾

구체적으로 북한근로자의 임금액수에 관해서 하나부사(花房征夫, 1996:77)는 블라디보스톡 근처의 하산지역에는 1995년 9월 현재 북한노동자의 임금은 러시아인의 1/3정도인 7,000 - 10,000루블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카자코프(Казаков, 1996: 113-4)에 의하면 1992년 북한 건설자 한명 당 급료는 약 1400루블이었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 근로자 1인당 급료의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5.4 북한 노동자에 대한 현지법의 적용문제

소련과 사회주의국가들의 계약노동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즉 자국의 법에 따르는가 또는 당지의 소련법에 따르든가 하는 것이다.⁴²⁾ 먼저 외국무역계약의 약관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는 각자 자국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유고용’(free hire) 형식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일을 할 경우는 소련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벌목공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Ginsburgs 1990:8). 따라서 벌목공의 노동시간, 생산할당량, 임금, 근로절차 등은 노동력 송출국, 즉 북한법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의 선례는 1967년 3월 2일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소련영내의 북한 벌목공에 관한 합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⁴³⁾

그러나 최근 벌목공의 인권유린 등이 보도된 후 1995년 2월 24일 합의된 새로운 임업협정에서는 북한벌목공이 관련 러시아 법규를 따르도록 법률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

41. 러시아에서 3년을 인하면 북한에서 3년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며, 특히 소련제 손목시계, 희귀상품, 약품, 광물 등 북한에서 팔면 몇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특권이 보장되는 관계로(이광규 · 전경수 1993:389), 많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러시아에서의 작업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42. 러시아 소재 탈출 북한벌목공의 법적지위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1)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는 러시아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와 러시아의 동의에 따른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개입하는 경우, (2) 러시아 한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는 한국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러시아에 대한 벌목공의 망명사실을 통지하고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러시아 사무소에 직접 벌목공이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Ginsburgs (1997, 1992), 재성호(1994) 및 김명기(1997)를 참조하기 바람.

43. Е.М. Аметистов,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СССР,”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1977, no. 7.

경되었다:

“1995년 2월 24일 북한-러시아간의 합의는 러시아 영내에서 작업을 하는 북한인의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특히 작업기간, 작업에 대한 임금율, 작업장(별목장)내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러시아 연방법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 합의에서는 질서와 범죄퇴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북한별목기업이 러시아 사법당국에 협조해야 함을 북한측이 인정한다. 이것도 물론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될 것이다.”⁴⁴⁾

5.5 在러 북한공민과 북한 노동자의 연계성

1940년대 후반 주로 어업관련 파견노동자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온 북한 근로자들은 그후 임업노동자나 건설노동자로서 신분이 변화되어 하바로프스크에 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소련공민증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약 2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광규 · 전경수 1993:329). 이들 외에 일부는 조선공민증(朝鮮公民國證)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곳 하바로프스크에서 농사를 지어 야채를 시장에 팔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곳으로 재 이주한 중앙아시아 출신의 한인들과 이곳의 한인 주민들간의 정확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표4 참조). 이들은 조선공민학습조(朝鮮公民國學習組)를 조직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집에 모여 주체사상을 학습한다고 하며, 하바로프스크시내의 북한 임업대표부와 연락을 갖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바로프스크의 북한 임업대표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 별목공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이곳의 한인들의 선부(宣撫)공작의 전진기지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이곳의 북한주민들에게 달력, 신문, 책자 등을 배포하는 일, 이곳 학생들을 모아 북한견학을 시키는 일 그리고 일반인의 북한 방문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朴文臣 1997; 이광규 · 전경수 1993).

또한 지역적으로 하바로프스크는 북한 별목공의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알려진 북한 별목장 체그도민(Чегдомын)과는 불과 차로 10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다.

44.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4(1995), p. 72.

체그도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북한 벌목장을 북한당국이 이곳 하바로프스크지역에 설치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이 지역은 한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한인들은 러시아에 온지가 거의 1세기 이상되어 완전히 러시아에 동화된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서 이들이 이곳의 북한 벌목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고려되었다. 둘째 이곳 벌목장은 사실상 외부지역으로 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벌목공들이 이 지역 주민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당국으로서의 벌목공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상에 감염될 우려가 적다는 점이 강조되었다(Ginsburgs 1989:410).

표4.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통계

| 지 역 | 기존 거주자 | 제이주자 | 합 계 | 합 계* |
|---------|--------|-------|--------|---------|
| 연해주(합계) | 10,760 | 7,500 | 18,260 | 10,000* |
| 우수리스크 | 2,500 | 2,500 | 5,000 | ---- |
| 파르티잔스크 | 1,500 | 1,500 | 3,000 | ---- |
| 나홋카 | 1,800 | 500 | 2,300 | ---- |
| 블라니보스톡 | 2,000 | ---- | 2,000 | ---- |
| 아르좁 | ---- | 3,000 | 3,000 | ---- |
| 스파스크탈리 | 2,000 | ---- | 2,000 | ---- |
| 달네고르스크 | 720 | ---- | 720 | ---- |
| 아르세니에프 | 240 | ---- | 240 | ---- |
| 하바로프스크 | 9,720 | 80 | 9,800 | 8,500* |
| 사할린 | 36,000 | ---- | 36,000 | 43,000* |
| 캅차카 | 5,000 | 80 | 5,080 | 2,000* |
| 마가단 | ---- | ---- | ---- | 1,900* |
| 합 계 | 61,480 | 7,580 | 69,060 | 64,500* |

(사료: 대부분의 통계는 이광규(1995:59)에서 인용하였으나 여기에서도 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표의 통계는 헤야오사부(惠谷 治 1996:60)가 옛 소련권의 한국인 조직인 '국제코리아연합회'의 김영웅(金永雄)회장과와의 인터뷰에서 김회장이 밝힌 것을 인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바로프스크시는 북한의 경제대표부⁴⁵⁾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미국·일본·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영사관이 이곳에 있으며,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고려인들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비교적 생활 수준이 높고, 이 지역이 러시아·중국 간 경제적·군사적인 면에서 전략의 요충지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이 지방에 북한 별목장이 있는 관계로 하바로프스크 지방은 북한측에 의해 특별관심지역으로 분류, 관리되어 오고 있다.⁴⁶⁾ 이러한 북한의 관심 및 선무공작은 북한에게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예들 들어 이곳의 고려인들은 이곳의 한국인 기업체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 주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⁴⁸⁾

5.6 중국인 불법이민과 북한 노동력 진출의 관계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집단이 중국인과 북한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데다 모두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45. 그러나 1995년 9월 하바로프스크의 북한 경제대표부는 모스크바 무역 참사부 지부로 격하되었다.

46.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곳 하바로프스크에도 러시아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친북한 단체인 ASOK(Ассоциация Содействия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й: 조선통일촉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 북한에 행사가 있는 때는 많은 재소한국인들을 모집하여 북한 방문단을 주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이 ASOK는 북한측의 통일정책을 학습하거나 그 정신을 재소 한국인들에게 보급하며, 북한에 책보내기, 북한 예술단이 왔을 때 돕는 일, 전시회를 돕는 일 등 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업을 돕고 있다 (고재남, 1996:442-43; 이광규 & 전경수, 1993:403, 409-412).

47. 특히 “북한에서 온 파견노동자와 북한 출신이 많이 거주하는 베트로바노르스크(Ветрованорск)시 옆에 있는 소도시의 한인 2천명은 돈을 모아 평양의 아동재봉소를 건설하여 주었고 북한의 주민들에게 냉장고를 기증하였다고 한다. 북한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곳 주민들이 북한에 관한 많은 사항을 알고 있고 북한에 다녀온 경험도 있으며 북한과 친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이광규·전경수 1993:338).

48. 이들 재소 한국인들이 가끔 실토하는 말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는 북한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다.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었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조국(한국)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는 말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朴文臣 1997:122-123).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당부분이 원래는 중국의 영토로서 중국에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로서도 인근 중국의 거대한 인구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북한의 노동력을 위협적인 중국의 노동력에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왔다는 점이다.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중국의 영토로서, 아무르 지역이 1858년 아이훈(璦琿)(지금의 黑河:Хэйхэ)에서의 협약에 의해 러시아에 편입된 직후, 연해주는 1860년 베이징(北京)조약에 의해 러시아로 편입되었다(孟繁策, 1996). 이후 러시아는 편입된 극동지역을 통치하면서 극동의 황색인종에 대한 경계심의 표시로서의 황화론(黃禍論: желтая опасность)과 이에 대한 반발로서 한인수용론(韓人收容論)이 교차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러시아에 풍미하였던 황화론에 의하면, 한인, 중국인 및 일본인들은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 문화적,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들과 러시아인들이 공존하기 힘들며 이들 황인종의 평화적인 러시아 극동지역의 침령을 막기 위해 이들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1905년 ~ 1910년 연해주 총독이었던 운테르베르거르(П.Ф. Унтербергер)는 한인을 지목하여 중국인들보다 더 위험하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광범위한 긴축활동을 하는 일본의 앞잡이로 간주하였다.⁴⁹⁾ 그는 이전의 연해주 총독(1898-1902)이었던 그로데코프(Н.И. Гродеков)의 노화(露化)정책과는 반대로 한인을 러시아 극동에서 몰아낼 방도를 모색하는데 열중하였다(Stephan 1994:79-80).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 극동의 톰스크 지사와 연해주 지사를 역임했던 곤다티(Н. Гонд

49.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한인들이 1937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추방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1937년 4월 23일자 프라우다는 이것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В своей работе иностранные шпионы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меняют всевозможные ухищрения и способы маскировки. Еще до перехода границы они снабжаются фальшивыми советск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паспорта, профсоюзные билеты, удостоверения совет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командировоч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 т. п.), советской валютой, одеждой, в том числе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Агенты маскируются под внешность жителей того района, где по заданию сво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ни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шпионскую работу. При этом разведка учитыва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каждого данного района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ылает агентов корейской, кита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ли русских белогвардейцев.” И. Володин, “ИНОСТРАННЫЙ ШПИОНАЖ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авда, 1937년 4월 23일, p. 5).

atti)같은 인사는 한인들이 비록 탈세를 하고 징병을 회피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충성스럽고,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쉽게 러시아인과 동화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인들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Граве 1912). 이어 곤다티가 1911년 운데르베르게르에 뒤이어 연해주 총독이 되어 한인귀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러시아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다.⁵⁰⁾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19세기말의 황화론을 둘러싼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종에 대한 편견의 역사적인 흐름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0대 후반 구소련연방의 붕괴를 전후하여, 중·러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많은 중국인들이 농촌에서 대도시로 몰려드는 소위 ‘맹류(盲流)’ 현상⁵¹⁾이 이곳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맹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의 대표적인 예로서 1988년 4월 흑룡강성(省) 성장(省長)인 후첩(侯捷)은 성급(省級)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흑룡강성의 300만 명의 실업자들 중 100만 명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건설과 삼림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도 있다

50. 예를 들어 연해주의 한인들에 의한 러시아 시민권의 취득은 1910년을 고비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다음의 표5가 잘 보여주고 있다.

표5. 연해주 한인들의 러시아 시민권 취득 현황(1906-1914)

| 연 도 | 러시아 귀화한인 | 미귀화 한인 | 합 계 |
|------|----------|--------|--------|
| 1906 | 16,965 | 17,434 | 34,399 |
| 1907 | 16,007 | 29,907 | 45,914 |
| 1908 | 16,190 | 29,307 | 45,497 |
| 1909 | 14,799 | 36,755 | 51,544 |
| 1910 | 17,080 | 36,996 | 54,076 |
| 1911 | 17,476 | 39,813 | 57,289 |
| 1912 | 16,263 | 43,452 | 59,715 |
| 1913 | 19,277 | 38,163 | 57,440 |
| 1914 | 20,109 | 44,200 | 64,309 |

(자료: П.ф. Унтербергер (1912), *Приамурский край, 1906-1910 гг.*

pp. 2-3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Ф. Киришбаум); С.Д. Аносов (1928), *Корей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p. 27 (Хабаровск: Книжное дело), Wada(1987) p. 30 재인용.)

51. ‘맹류(盲流)’의 정식명칭은 ‘노동인구의 맹목적 유동’(勞動人口의盲目流動)으로 노동인구의 유동은 중국내륙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경제가 과열됨으로써 도시지역의 건축업 등이 성황을 이룸과 동시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를 더욱 번창하게 하였으나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의 ‘맹류(盲流)’ 문제에 대해서는 江振昌, 『大陸社會的民工‘盲流’問題』 『中國大陸研究』 民國78年 第31卷 第12期, pp. 47-53 참조하라.

(毛里和子 1989:132). 중국인 노동자는 주로 계절노동자인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건설과 농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89년 총외국인 노동자의 2.4%를 차지하였으나(표3 참조) 1992년에는 1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Minakir 1994:183-4). 이들 중국인들은 러시아 원동지역 곳곳에 불법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반화(反華)감정을 불러 일으켜 다시금 황화론(黃禍論)의 정서가 점점 강하여 지고 있는데,⁵²⁾ 현재 중국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원동지역에 공식적으로 약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중국 근로자들이 주로 아파트 건설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畢英賢, 1993).⁵³⁾ 비록 일부에서는 이러한 중국노동자에 의한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없지는 않으나,⁵⁴⁾ 이러한 중국근로자들의 인구압력에 대한 러시아 극동지역주민의 반발과 우려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⁵⁵⁾

52.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국인의 인구압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재문 1998; 王承宗 1996; 내외경제정책연구원 1994:40; 戴萬欽 1996:72-3; 畢英賢 1993:8; Shlapentokh 1995:310-11, 315-16; Moltz 1995:519-23; Hyer 1996:294-307; Kerr 1996; Kim 1995:75-76, 1994:1068-70; Hao 1991:239-41; 吉成大志 1995: 24-26; Wishnick 1995:258, 264.

53. 그러나 러시아측 통계에 의하면 약 15만 명의 중국인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Коммерсантъ, 1994년 5월 26일, p. 14).

54. 예를 들어 중국의 극동지역에서의 인구압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러시아 자유무역지구의 지정의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인의 러시아 출입국절차를 간소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中共在俄羅斯的非法移民問題, 也另凸顯出中共與俄羅斯長程關係的矛盾. 俄羅斯方面估計, 目前共有一百多萬的中國大陸人民居留在俄羅斯境內, 其中多數係非法入境. 據傳在俄羅斯遠東及西伯利亞的某些城鎮和村莊, 來自中國大陸的人口甚至超過當地俄羅斯人. 俄羅斯在一九九四年秋曾發起驅逐非法入境中國人的取締行動. 俄羅斯方面的確擔心, 來自中共的非法移民潮, 如果不加以取締, 中共遲早會覬覦俄羅斯的領土. . . . 中共與俄羅斯的邊界貿易, 在長程上對俄羅斯有隱憂, 因為俄羅斯會擔心中共人民湧入, 也擔心在經濟上會過度依賴中共. 另外, 俄羅斯也擔心中共垂涎天然資源. 尤其俄羅斯國防部長葛拉契夫一九九五年八月間, 曾在內閣會議中指出, 中共人民正以和平的方式「征服」俄羅斯的遠東地區, 甚至還組織若干軍事訓練活動. 然而, 在一九九六年當中, 俄羅斯仍然會出現不少主張擴大雙方邊貿的另一種聲音. 俄羅斯學者拉瑞金便曾主張, 爲了擴大中俄國境附近俄羅斯特別經濟區以及自由貿易區的效能, 俄羅斯必須簡化雙邊國境地區人民彼此入境的繁複手續" (戴萬欽, 1996: 72-73)). 또한 지역적 근접성에 의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주장하는 러시아 측의 논문으로는 Гребенщиков (1993)를 참조.

55.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수입된 육류에 의한 전염병의 감염, 수입된 중국의 열악한 상품의 질(質)에 대한 혐오, 그리고 국경분쟁을 둘러싸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러시아 주민들의 반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자료들은 이러한 예를 잘 증명하고 있다: Борис Резник, "Русский с китайцем... Игра без правил. Кто в выигрыше?" *Известия* 1996년 11월 11일, p. 4; Владимир Мухеев & Геннадий Чаролев, "Авилов подверг Китай двойной проверке, но кто даст гарантии, что яшур из-за Великой стены не гуляет по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звестия* 1997년 3월 14일,

따라서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위협이 되고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1953년 주은래와 스탈린의 회담시에도 나타났는데 당시 주은래는 스탈린에게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후복구를 위해 도시와 건설사업에 250,000여명의 중국인 근로자의 파견을 제의했으나 소련측은 이를 거절하고 북한인력을 끌어들이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Ginsburgs 1990:6).

또한 노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중국의 근로자들보다 북한의 근로자들의 질(質)이 낮은 점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근로자에 대한 선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1994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태인자치구(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의 행정부는 이 지역의 공터를 외국근로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문제에 대하여 처음에는 중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열악한 중국인의 노동의 질 때문에, 중국측 대신에 북한측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음이 보도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의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수는 북한이 중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표6 참조).

표6.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의 추산

| 러시아 극동지역 | 하바로프스크 | 아무르 | 연해주 |
|-------------|--------|-------|-------|
| 외국인근로자의 합계 | 15,000 | 8,500 | 7,090 |
| 북한근로자의 비율 | 90% | 90% | ? |
| 중국인 근로자의 비율 | 10% | 9% | 85% |

자료: Andrei Admidin, "Utilization of Foreign Labor Force in the Russian Far East: Problems and Prospects," mime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habarovsk, 1993 (Kim 1994:1067)에서 재인용.

p. 1.

56. Борис Резни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рвуца на пол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звестия*, 1994년 12월 27일.

6.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에 대한 전망

6.1 전망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붕괴하고 모스크바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거의 최저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새로 입각한 러시아 정부 관료들은 김일성과 그의 왕국을 국제적인 부랑아로 사정없이 비난하였고, 러시아는 과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제공해오던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를 사실상 중단하였다. 또한 그 동안 양국간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양국간의 상호우호협정(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도 1995년 만료되어 재협상을 해야 했다 (Известия 1997년 1월 23일, p. 3).

그러나 1993년 말부터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개해 왔던 “북한을 해체하는 정책”(политику оттор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국익에 맞추어 남북한에 대해서 균형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해 왔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북한을 경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의 파트너로서 미국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급감하게 되자, 이제 이러한 북한을 경시하는 러시아정부의 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러시아 하원의 공산주의성향의 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⁵⁷⁾

이러한 변화된 정책의 기초에 맞추어 러시아의 야당의원들은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 지도층과 접촉관계의 확대를 추진하며 주체사상과 자주노선을 따르는 북한이 거둔 성과를 찬양하고 있다.⁵⁸⁾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 이그냐텐코 부총리가 이끄는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제1차 무역 및 경제 과학 기술협력에 관

57.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 “Диалог на новой основе: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обменялись проектам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говор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6년 9월 18일, p. 4.

58. 예를 들어 러시아 하원의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세부지정학적 문제에 관한 소위원회 의장인 모나스티르스키(Михаил Монастырский)는 다음과 같이 북한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И основные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кажд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широта души, огромная любовь к своей родине, преданность однажды выбранному пути - все это не может не вызывать глубокого уважения.” Беседавал Мельниченко, “Михаил Монастырский: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отвечает коренным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вестия* 6월 26일, p. 3.

한 양국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간의 정치적, 경제적 대화가 활성화 되었다.⁵⁹⁾

비록 러시아인들이 북한은 한국과 대적할 만한 경제적 매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긴장완화⁶⁰⁾에 발맞추어 북한벌목공 및 여타 노동자를 러시아 극동지역에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상환받는 유일한 방법들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바자노프 1997).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상품공급규모의 거의 1/4이 북한측의 노동력제공의 형태로 보상이 되는데, 최근 이 노동력제공은 하바로프스크지역과 아무르주의 목재채벌과, 께메롭스코이와 이르쿠츠크, 그리고 부랴찌의 공업목탄(工業木炭)생산, 주택과 하부구조건설에 사용되었다 (레프첸코 1994:42).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6년 북한·러시아간 경제협력을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체결된 다수의 협정 중에는 러시아 극동지역내 벌목작업의 정상화와 러시아의 농업, 건설, 채굴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1996년 5월 러시아측이 북한으로의 목재의 철도운임료 500만 불을 받지 못해 북한행 화물철도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벌목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북한 근로자들 중 5,000명이 러시

59. 이러한 움직임들은 러시아 하원의 지정학 소위원회에서 지리노프스키의 파벌로 분류되는 미트로파 노프가 주도하였는데, 그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고위급 정치적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Mikheev 1997:370):

- 이그나텐코와 러시아 하원의장 셀레즈네프와 같은 고위급인사에 의한 북한측과의 지속적인 방문 및 접촉
- UN 등에서의 회담에서 러시아측에 의한 북한비난의 자제
-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쌍무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정치조약을 비준하는 일

60. 최근들어 북한과 러시아간의 경제교류의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양국간 교역구조의 개선조짐을 들 수 있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1996년부터 교역총액은 전과 다름없이 감소했고, 수입 또한 여전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러수출이 수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전년 대비 증감율도 예년보다 훨씬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7.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현황(1991-1996)(단위: US 천만 달러)

| 연 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수 출 | 18 | 7 | 4 | 4 | 1.5 | 2.9 |
| 수 입 | 28 | 25 | 19 | 10 | 6.8 | 3.6 |
| 교역총액 | 46 | 32 | 23 | 14 | 8.3 | 6.5 |
| 전년대비증감율(%) | -- | -30 | -28 | -39 | -40 | -22 |

(자료: 『내외통신』(綜合版)(65), 1997. 7. 1. - 9. 30, p. 170)

아 극동지역을 떠난 일도 있었는데(Ginsburgs, 1997:410-411), 최근에 다시 러북한간의 화물수송선 운항의 재개를 위한 협상도 상기의 협정중에 포함되어 있다.⁶¹⁾

뿐만 아니라 1997년 러시아 외무장관 카라신(Григорий Карасин)의 북한 방문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민의 상호방문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양국민의 상대방국가의 방문은 명령에 의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부터는 비자에 의해 상대방국가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이것은 먼저 약 20,000에 가까운 러시아 극동에 있는 북한벌목공에게 먼저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다.⁶²⁾

그러나 이와같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관계의 정상적인 복원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인권문제와 마약밀매문제라고 할 수 있다.

6.2 인권문제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벌목공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들이 쥐는 러시아 극동지역 벌목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벌목공의 생활이 탈출벌목공에 의해 널리 알려지면서 이들 북한 벌목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벌목장을 방문했던 러시아 하마로프스크의 한 저널리스트에 의하면 북한의 안전요원들이 벌목공들의 여권과 그들의 신분증을 압류함으로써 벌목공들의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3배가 넘는 63명의 벌목공이 탈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북한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이곳 벌목장내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했다고 한다.⁶³⁾

61. 그 이외에 이 협정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자노프 1997:203):

- 러시아의 기관들 (김책 제철소, 자동차 배터리 및 소규모 전기 엔진공장 등)과 과거 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북한 기업들간 협력관계 활성화
- 야쿠치아의 석탄광산 공동개발
-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이쿠치아 - 한국간의 가스관의 건설
- 러시아 연방에 대한 북한 채무의 상환
- 양국간 무역의 청산 방식과 마터제의 제도입
- 공동투자(현재 약 40건 정도 존재)
- 과거 소련이 건설해 준 북한 기업의 현대화

62. Геннадий Чародеев, "Теплый прием в холодном Пхеньяне," *Известия* 1997년 1월 28일, p. 3.

63. Jeff Lilley, "Great Leader's Gulag: Siberian timber camps are relics of the Cold War," *Far Eastern*

이러한 북한 벌목장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러시아 영내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감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하며,⁶⁴⁾ 러시아 측의 검사 및 법률적인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운용되는 이러한 감옥을 가능케 하는 입법협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벌목사업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므로 해서, 인권단체의 반대에는 러시아 관계당국이 야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Lilley, 1993:21-22), 연방정부는 벌목공의 탈출상황에서도 인권보다 북한·러시아간의 형제국의 중요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Ginsburgs 1997:384-86). 이와함께 러시아 의회도 여전히 1996년 러시아 국회청문회에서 보듯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벌목공이 러시아와 북한의 우의적인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노동자의 사용에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ikheev, 1997:368, 370).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에 의해 운영되는 벌목장의 장래는 인권단체의 반대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러시아 국회의 보수파와 개혁파의 힘의 대결에서 결정될 것(Lilley, 1993:23)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6.3 밀수 문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들은 하바로프스크의 벌목장과 연해주 우수리지역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마약밀매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폭로됨으로써 러시아내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Economic Review, 9월 9일(1993), p. 22.

64. 이러한 러시아 인권단체의 비난을 모면하고, 또 20년 이상 지속된 소련과 북한의 입법협정이 1991년 1월 만료되기 전에, 구(舊)입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입법협정에 대한 양국간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1990년 북한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인권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 근로자들의 감독자들을 포함한 수 백명 이상의 북한파견자들을 소련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켰다고 한다 (Stanislav Glukhov, "Emulating the CIA?" *Moscow News*, 1991 no. 28, p. 3).

65. 하바로프스크지역의 채그도민에 있는 러시아의 공공생태위원회(public ecological committee)는 북한벌목장의 인권상황에 항의하면서 소련-북한 입법협정 파기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cancellation of the onerous USSR-DPRK treaty which had turned the Verkhne-Bureinsky District into a colony ravaged by the barbarous timber felling" (Stanislav Glukhov, "Better in Jail than at Home," *Moscow News*, 1991 no. 11, p. 11).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의 우수리지역에서 북한근로자들이 치약 속에 217g의 아편을 숨긴 사실을 밝혀낸 일도 있다.⁶⁶⁾

문제는 마약밀수사업이 북한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1992년 체그도민(Чегдомын)의 벌목장에서 일하던 한 북한 벌목공의 말에 따르면, 벌목장의 관리소장은 북한당국의 비호하에 북한에서 마약을 들여와 러시아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운반하기도 한다고 한다.⁶⁷⁾

그리하여 최근 북한 벌목공의 수가 격감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중의 하나는 벌목장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벌목업보다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일부 벌목공들은 벌목장주위에서 엔화나 위조달러를 거래하거나, 금괴, 사향노루, 곰쓸개, 녹용 등의 밀매와 같은 다른 부업을 통해 달러벌이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⁶⁸⁾

7. 정책활용방안: 소련-북한의 연계 전략

지금까지의 본 연구에서 보았던 것처럼 1946년 북한의 노동력이 처음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을 한 이후로 많은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8 참조). 북한으로서도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러시아로 송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귀한 외화나 원자재를 어느 정도 획득

66. Анна Феофилактова,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наркотическом фронте" *Сегодня* 1996년 8월 28일, p. 7.

67. Георгий Безмен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обвиняет Пхеньян в наркобизнесе" *Сегодня* 1996년 11월 12일, p.4.

68. 북한을 떠나서 소련에서 수 십년 동안을 거주해왔던 한 前북한의 엘리트에 의하면 소련측이 오로지 북한과의 우의와 선린관계(friendship and good-neighborliness)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북한측은 오히려 소련에서의 밀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근로자에 의한 밀수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North) Korean side is involved in smuggling gold and musk deer glands. But that's not all. They have been smuggling black bear bile and axis deer antlers worth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nnually. Chegdomyn taiga produce has been marketed throughout South-East Asia, yet the USSR hasn't received any profit." (Alexander Makhov, "Pyongyang's Long Hand," *Moscow News*, 1991 no. 11, p. 11)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의 우수리지역에서 북한근로자들이 치약 속에 217g의 아편을 숨긴 사실을 밝혀낸 일도 있다.⁶⁶⁾

문제는 마약밀수사업이 북한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1992년 체그도민(Чегдомын)의 벌목장에서 일하던 한 북한 벌목공의 말에 따르면, 벌목장의 관리소장은 북한당국의 비호하에 북한에서 마약을 들여와 러시아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운반하기도 한다고 한다.⁶⁷⁾

그리하여 최근 북한 벌목공의 수가 격감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중의 하나는 벌목장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벌목업보다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일부 벌목공들은 벌목장주위에서 엔화나 위조달러를 거래하거나, 금피, 사향노루, 곰쓸개, 녹용 등의 밀매와 같은 다른 부업을 통해 달러벌이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⁶⁸⁾

7. 정책활용방안: 소련-북한의 연계 전략

지금까지의 본 연구에서 보았던 것처럼 1946년 북한의 노동력이 처음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을 한 이후로 많은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8 참조). 북한으로서도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러시아로 송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귀한 외화나 원자재를 어느 정도 획득

66. Анна Феофилактова,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наркотическом фронте" *Сегодня* 1996년 8월 28일, p. 7.

67. Георгий Безмен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обвиняет Пхеньян в наркобизнесе" *Сегодня* 1996년 11월 12일, p.4.

68. 북한을 떠나서 소련에서 수 십년 동안을 거주해왔던 한 前북한의 엘리트에 의하면 소련측이 오로지 북한과의 우의와 선린관계(friendship and good-neighborliness)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북한측은 오히려 소련에서의 밀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근로자에 의한 밀수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North) Korean side is involved in smuggling gold and musk deer glands. But that's not all. They have been smuggling black bear bile and axis deer antlers worth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nnually. Chegdomyn taiga produce has been marketed throughout South-East Asia, yet the USSR hasn't received any profit." (Alexander Makhov, "Pyongyang's Long Hand," *Moscow News*, 1991 no. 11, p. 11)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던 북방정책(대러시아 정책 및 대 북한 정책)을 하나로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대한 자원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등이 이미 제기되기도 했으나(朴遠培 1990), 여기에서는 결과를 중심으로 고려해 보려고 한다.

먼저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간의 상호보완성을 생각해 보면 북방정책에서 소련·북한의 연계전략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표8에서 보듯이 한국으로서는 자본, 기술, 경영 및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측으로서는 토지와 원자재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노동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표8 한국, 북한, 러시아의 상호보완성

| 구 분 | 러 시 아 | 한 국 | 북 한 |
|--------|-------|-----|-----|
| 노 동 력 | +- | --- | +++ |
| 자 본 | -- | +++ | --- |
| 기술, 경영 | +- | +++ | -- |
| 토 지 | +++ | --- | --- |
| 시 장 | + | +++ | + |
| 원 자 재 | +++ | --- | -- |

(주: + 약간 유리, ++ 유리, +++ 매우 유리, - 약간 불리, -- 불리, --- 매우 불리. 자료: 구천서·이병화(1997:174)를 바탕으로 저자가 원자재 항목을 보완한 것임)

따라서 이 표에서 보듯이 세 국가가 상충되는 영역보다 서로 보완적인 요소를 훨씬 많이 보유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의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본다면, 러시아측으로서는 엄청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할 만한 노동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앞의 7페이지에 있는 표1에서 보았다시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인근 중국에서 엄청난 인구 압력에 협조를 느끼고 있고⁶⁹⁾ 최근 양국간에 타결된 국경문제에 대한 강한

69. 러시아 극동지역의 러시아 주민들과 인근 중국인들 사이의 상호불신은 서로 교류가 많아질수록 심

불만과 함께, 이에 대한 하나의 내안으로서 북한의 노동력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미 러시아의 벌목작업에서 북한이 획득한 많은 작업경험을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한다면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업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임업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교류가 있었으나 한국은 이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전무한 형편이다.⁷⁰⁾ 이미 전세계 목재자원보유국들이 자국의 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정이 개선된다는 2050년대에도 우리나라의 총목재지급율은 겨우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임업연구원 1998:199) 부족한 목재를 해외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임업협정체결국가들 및 이외의 국가들 약15개국과 적극적인 임업협정을 체결하고, 또 이들 30개 산림자원보유국 및 국내 임산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로부터 94명을 초청하여 조립, 산림경영, 사방 등을 연수교육시킴으로서 임업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니(林業研究院 1998), 러시아와는 이러한 교류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방대한 산림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시급한 임업교류도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기 국내 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언론이 북한과 러시아간의 비인도적인 임업협정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양국간의 임업협정이 새로운 형태로 존속되는 이면을 한 번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필요한 식량의 40%만이 자급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식량과 사료용 및 공업용 곡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북한 또한 매년 100 ~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나 국제시

.....
 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Борис Резник. "Русский с китайцем... Игра без правил. Кто в выигрыше?" *Известия* 1996년 11월 11일, p. 4).

70. 북한의 삼림면적은 약 985만여 헥타르로 여기에서 매년 300만 입방미터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량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련에 벌목권을 파견한 직후부터 매년 약 150만 입방미터의 원목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卞興相 1992:163; 兪柄一 1992:79). 이에 반해서 한국은 현대그룹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스베블리야 (Светлая)와 비킨(Викин)지역에서 1991년 연해주목재산업(Приморлеспром)과 합작기업으로 산림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세제와 법규의 잦은 변동 및 환경문제와 소수민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Наталья Островская, "Концерн 'Hyundai' уничтожает уссурийскую тангу" *Известия*, 1994년 6월 28일, p. 5).

장에서 곡물을 수입할 형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곡물을 생산한다면 3국 상호간에 흥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의 붕괴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농업이 거의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비료, 농약,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소포즈 책임자와 지방정부 농업담당자들은 정미소, 콤바인, 양수장, 축산기자재 등 구소련의 붕괴 이후 농정(農政)의 마비로 인해 녹슬어 가는 대규모 시설과 자재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여 이에 대한 한국자본의 진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구천서 · 이병화 1997).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과일과 채소의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다.⁷¹⁾ 특히 겨울철과 봄철의 채소 부족현상은 심각하며, 매년 채소와 과일의 절반이 러시아의 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공화국 및 동부유럽국가들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콩과 채소를 재배한 경험이 있는 북한 노동력의 이용은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노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정확한 북한노동력의 수급 상황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에버스테트(Nicholas Everstadt)의 추정에 의하면 1995년 북한의 총인구는 23,487,000명으로 노동가능인구를 16세 이상으로 볼 때, 현 인구의 약65%인 15,180,000명이 노동가능인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4개의 연령으로 나누어 볼 때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는 16 ~ 29세(청년)가 6,706,000명, 30 ~ 44세(장년)가 5,245,000명, 45 ~ 59세(갱년)가 2,661,000, 60 ~ 64세(노년)가 568,000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995년 현재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는 아직도 청장년이 많은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아직도 젊고 왕성한 노동(생산)가능인구를 작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²⁾

특히 북한은 과도한 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노동력의 이용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90 ~ 1995년 사이

71.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채소, 멜론, 수박의 경우는 56%, 감자는 75%, 과일과 머루류는 10%, 육류는 43%, 우유는 38%, 달걀은 83%만이 자급되고 있다(Bazhanova 1992:88).

72. Nicholas Everstadt의 미확인 자료, 윤황(1996:62-63)에서 재인용.

에 총인구의 약5%가 군 병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표9 에서 보듯이 군 병력의 비율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이래 인구증가율이 감소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 병력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당부분의 군 인력이 노동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1990년 초에는 총병력의 약 10%인 10 ~ 15%가 노동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윤황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북한에서 무장 해제된 군 병력을 포함한 수만명의 잉여노동자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이들 유휴인력의 이용은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9. 북한 군 병력의 규모와 경제성장률 (단위: 만명)

| 연 도 | 국제전략문제소 (IIS) 추산 | 대한민국 국방부 추산 | 경제성장률(%) |
|------|------------------|-------------|----------|
| 1990 | 111.1 | 99.0 | -3.7 |
| 1991 | 111.1 | 99.5 | -5.2 |
| 1992 | 113.2 | 101.0 | -7.6 |
| 1993 | 113.2 | 103.0 | -4.3 |
| 1994 | 112.8 | 103.0 | -1.7 |
| 1995 | 112.8 | 104.0 | -4.6 |

(자료: 윤황(1996:67)에서 일부 관련없는 항목을 삭제한 것임)

또한 통일이 될 경우에도 러시아-북한과의 연계전략이 북한의 난민을 흡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만약 통일된다면, 통일에 전후해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상당수가 남한으로의 정착과 이주를 시도할 것이나 남한이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럴 경우 상당수가 제3국이나, 특히 만주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李宗勳 1995).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으므로 적응이 용이할 것이며, 이들 지역이 경제발전의 초

기에 있으므로 일자리나 돈벌이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들은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국·북한·러시아간의 상호협작은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 록〉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대표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표간에 체결된 蘇聯領內的 건설사업협력의 원칙에 관한 합의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ин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⁷³⁾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대표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표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의 관계에 입각하여 양국의 通商-經濟 협력의 발전을 목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북한측은 소련측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소련영내에서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및 기타 자재를 공급한다. 여기에 대하여 소련측은 건설물자와 건설장비를 공급한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소련과 북한간의 상품거래와 지불에 관한 합의와 1990년부터 시작된 6년간의 의정서에는 소련측이 지정한 북한측에서의 건설사업의 조건과 목록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중 긴급을 요하는 조건과 목록은 이 합의문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건설사업에서의 상호지불 및 거래관계는 현재의 이 합의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 지게 된다: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계산되는 수익의 50%에 대해서는 소련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제공한 크레딧의 변제에 사용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 은행이 크레딧의 변제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절차를 결정한다.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계산되는 수익의 20%는 본 합의에 따라서 소련측이 북한측에 제공한 건축시공기술에 대한 대가로 지불될 것이다.

73. 1989년 8월2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됨 (자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1990, no. 5, p. 42)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계산되는 수익의 20%는 소련측의 물자로 북한에 지급될 것이다.

북한측이 시공한 건설사업에서 계산되는 수익의 10%는 소련의 루블화로 북한에 지급될 것이다.

제3조: 이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소련영내의 북한인은 현행 소련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4조:

상기 제1조에 규정된 건설사업협력의 구체적인 조건은 양국의 관련기관사이의 계약으로 합의될 것이다.

제5조:

본 합의는 조인된 날로부터 1995년 12월31일 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이 합의의 효력은 어느 일방이 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연장된다. 본 합의는 로어본과 조선어본의 2부로 되어 있으며, 1989년 8월2일 모스크바에서 조인이 되었고, 이 2부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 *

아래의 사항은 본 합의문의 부록으로써 계약조건에 의해서 북한측이 수행할 소련에서의 긴급한 건설사업의 목록이다.

1. 하바로프스크에 건립될 144세대의 아파트와 방 120개 규모의 유치원 등을 포함하는 객실 500개 규모의 복합호텔
2. 하바로프스크에 건립될 180세대의 아파트를 포함하는 객실 1000개 규모의 복합호텔
3. 하바로프스크의 2000석 규모의 서커스 공연장
4. 나훗카의 객실 300개 규모의 호텔
5. 블라디보스톡의 객실 800개 규모의 호텔
6. 하산(Хасан)에 건립될 기차역사(汽車驛舍)

참고문헌

〈국문(國文)참고문헌〉

- 구벨, 알렉산도르. 1989. 「소련 極東과 대외경제협력: 끈란한 출발」 『今日のソ連邦』 1989년 6월15일호/ 1989년 7월호 『共產圈研究』(極東問題研究所), pp. 51-61에서 번역 전재.
- 고제남. 1996. 「구소련지역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현황」 『구소련지역 민족분쟁의 해부』, pp. 416-446.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구천서 · 이병화. 1997. 『연해주: 농업개발과 환경여건』 서울: 책만드는 집.
- 김명기. 1997. 「在러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北韓』 2월호, pp. 121-135.
- 김부기. 1994.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統一問題研究』 6(2):63-83.
- 김춘경. 1997.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 생활과 운명」 『교민논총』 제1집, pp. 150-166.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1994. 『러시아 極東地域 便覽』. 서울.
- 레프첸코, 겐나디 Y. 1994.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제관계: 現況과 展望」 『中蘇研究』 18(1):41-45.
- 마자노프, 에프게니. 1997.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평화논총』 제1권 제1호, pp. 191-205.
- 朴文臣. 1997. 「러시아 極東地域,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하마로프스크지방을 중심으로」(1). 『극동문제』 9월호, pp. 47-57.
- _____. 1997. 「러시아 極東地域,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하마로프스크지방을 중심으로」(3). 『극동문제』 11월호, pp. 115-128.
- 朴遠培. 1990. 「鄭周永의 승부수, 소련진출 내막」 『新東亞』 7월호, pp. 298-308.
- 下興相. 1992. 「북한의 林業실태」 『北韓』 1월호, pp. 162-169.
- 俞炳一. 1992. 「‘세당찾기운동’으로 황폐화된 북한의 山林실태」 『北韓』 5월호, pp. 68-81.
- 윤 황. 1996. 「북한 노동력의 현황과 구조」 『北韓』 9월호, pp. 60-75.
- 李光奎. 1995. 「러시아 極東地域 韓人社會의 諸問題」 『在外韓人研究』 제5호, pp. 5-95.

- 李光奎 · 全京秀 共著. 1993. 『在蘇韓人: 人類學的 接近』 서울: 집문당.
- 이시연. 1996. 「황량한 러시아 벌판에서의 비운의 한민족」 『北韓』 8월호, pp. 62-67.
- 이정우. 1997. 「북한 이탈주민 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北韓』 2월호, pp. 136-145.
- 李宗勳. 1995. 「중양아시아 韓人의 沿海州 再移住現況과 政策課題」 『韓民族共榮體』 第3號, pp. 75-105.
- 李知勳. 1993. 『社會科學의 메타分析方法論』.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 이채문. 1998. 「市場社會主義下에서의 中央政府 · 地方政府간의 權力關係: 러시아 沿海州의 경우 (1991 -1997)」 『국제지역 연구』(한국외국어대) 제2권 제4호 (1998년 10월, 가을호)에 게재 예정.
- 林業研究院. 1998. 『林業經濟動向年次報告書』 林業研究院 研究資料 第140號.
- 全洪燦. 1993/4. 「蘇聯의 對北韓 經濟 · 軍事援助政策에 관한 연구」 『中蘇研究』 통권 60권, pp. 183-228.
- 鄭漢求. 1995. 「국내외 러시아 극동 · 시베리아지역 연구동향」 『러시아연구』(대륙연구소) 2(1):7-15.
- 정혜정. 1995. 「在러동포가 본 소련 벌목현장의 人權」 『北韓』, 12월호, pp. 70-77.
- 제성호. 1994. 「북한 탈출동포의 처리방안: 國際法的 考慮를 중심으로」 『北韓』 6월호. pp. 50-63.
- 崔普植. 1993. 「북방의 프론티어 - 大平原에서」 『월간조선』 9월호. pp. 556-589.
- 「내외통신」 91.7.31. 보도관7405호
- 『내외통신』(綜合版)(65), 1997. 7. 1 - 9.30, p. 170

<노문(露文)참고문헌>

- Аметистов, Е.М. 1977.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СССР," *С 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no. 7.
- Арацкий, Ю. 1994. "Зачем России чужая рабсила?" *Юрид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s. 36-37.
- Багрианская, Д.С. 1965.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ветского

- союз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no. 1, pp. 19-25.
- Безыменский, Георгий. 1996. "Перебежчик обвиняет Пхеньян в наркобизнесе" *Сегодня* 11월 12일, p. 4.
- Ваис, Т. 1975.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н СЕВ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9.
- Владимиров, Юрий. 1996. "Диалог на новой основе: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обменялись проектам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говор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9월 18일, p. 4.
- Володин, И. 1937. "ИНОСТРАННЫЙ ШПИОНАЖ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авда*, 1937년 4월23일, p. 5.
- Граве, В. 1912.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ускъ XI.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въ Приамурь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 Ф. Киршбаум.
- (「極東露領に於ける黄色人種問題」. 『露・亞經濟調査叢書』 第49卷. pp. 1-214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四年.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 Гребенщиков, Эдуард. 1993. "Тихоокеа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интеграция"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1, pp. 86-96.
- Дадашев, А. 1995. "Региональный рынок труда в России: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управлени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38(8):63-70.
- Казаков, Ю.Н. 1996. "Рынок тру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7, pp. 112-115.
- Ким, Сын Хва. 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 Ата: Наука.
- Мольниченко, Беседовал. 1997. "Михаил Моностырский: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отвечает коренным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вестия* 6월 26일, p. 3.
- Мещеряков, М. 1975. "СССР-КНДР,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No. 8.
- Мильнер, Г. 1979. "Проблемы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трудовыми ресурсами районов Сибири и

-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ауки*, no. 2, pp. 61-68.
- Михеев, Михеев & Геннадий Чародеев. 1997. "Авилов подверг Китай двойной проверке, но кто даст гарантии, что ящур из-за Великой стены не гуляет по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звестия* 3월 14일, p. 1.
- Островская, Наталья. 1994. "Концерн 'Hyundai' уничтожает уссурийскую тайгу" *Известия*, 6월 28일, p. 5.
- Резник, Борис. 1996. "Русский с китайцем... Игра без правил. Кто в выигрыше?" *Известия* 11월 11일, p. 4;
- 1994.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рвуща на поля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звестия*, 12월 27일.
- Ушкалов, И. 1989. "Человеческий фактор интегр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ран-членов СЕВ*, no. 6.
- Феофилактова, Анна. 1996.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наркотическом фронте" *Сегодня* 8월 28일, p. 7.
- Чародеев, Геннадий. 1998.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хотят ост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Известия*, 6월 16일, p. 3
- , 1997. "Теплый прием в холодном Пхеньяне," *Известия* 1월 28일, p. 3.
- Чичканов, В. & В. Орлов. 1983. "Биолог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океана" *Плановое хозяйство* 1:62-69.
-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инци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1990, no. 5, p. 42.
-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No. 3(1993), p. 12.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4(1995), p. 72.
- Известия* 1997년 1월 23일, p. 3
- Коммерсантъ*, 1994년 5월 26일, p. 14)
-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6-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осква 1981, pp. 407-408.

〈영문(英文)참고문헌〉

- Akaha, Tsuneo. 1995. "Russia in Asia in 1994." *Asian Survey* 35(1):100-110.
- Bazhanova, Natalia. 1992. *Between Dead Dogmas and Practical Requiremen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North Korea, 1945-1990*, Moscow, Russia.
- 梁浚容 譯, 1992 "北韓과 蘇聯과의 經濟協力"(pp. 1-169) 『가로에 선 北韓經濟: 對外 經協을 통해 본 實相』,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 Dellenbrant, Jan Ake. 1986. *The Soviet Regional Dilemma: Planning, People, and Natural Resources*. Armonk, N.Y.: M.E. Sharp, Inc.
- Ginsburgs, George. 1997. "Cooperation in Extradition Matters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1(2) (Summer/Fall):378-416.
- , 1992.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enal Matter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6(1):169-201.
- , 1990. "Imported Asian Labor in the USSR." *Asian Perspective* 14(2):5-45.
- , 1989. "Labor Policy and Foreign Workers: The Case of North Korean *Gastarbeiter* in the Soviet Union." Pp. 399-424 in *Soviet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Policy*, edited by George Ginsburgs. Boston: Dordrecht.
- Glukhov, Stanislav. 1991. "Emulating the CIA?" *Moscow News*, no. 28, p. 3
- , 1991. "Better in Jail than at Home," *Moscow News*, no. 11, p. 11
- Grigor'yev, Aleksey. 1994. "Forced Labor Logging Russia's Forests," *Taiga News* no. 4.
- Hao, Yufan. 1991.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Far East." *Korea and World Affairs* 15(2):230-58.
- Heleniak, Timothy. 1995. "Economic Transition and Demographic Change in Russia, 1989-1995." *Post-Soviet Geography* 36(7):446-458.
- Helgeson, Ann C. 1990. "Population and Labor Force." Pp. 58-82 in *The Soviet Far East: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Development*, edited by Allan Rogers. N.Y.:

Routledge.

- Hyer, Eric. 1996. "Dreams and Nightmares: Chinese Trade and Im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0(2):289-308.
- Kerr, David. 1996. "Opening and Closing the Sino-Russian Border: Trade,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tical Interest in Northeast Asia." *Europe-Asia Studies* 48(6):931-957.
- Kim, Won Bae. 1994. "Sino-Russian Relations and Chinese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A Porous Border" *Asian Survey* 34(12):1064-1076.
- , 1995. "Migration." Pp. 65-86 in *The Russian Far East in Transition: Opportunities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dited by Mark J. Valencia. Boulder, CO: Westview Press.
- Lilley, Jeff. 1993. "Great Leader's Gulag: Siberian timber camps are relics of the Cold Wa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 9, pp. 21-22.
- Makhov, Alexander. 1991. "Pyongyang's Long Hand," *Moscow News*, no. 11, p. 11.
- Mikheev, Vasily V. 1997. "Russian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 after Yeltsin's Re-election as President."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1(2)(Summer/Fall): 348-77.
- Minakir, Pavel A. (ed.) 1994. "(Russian Far East)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y." Pp. 156-197 in *The Russian Far East: An Economic Handbook*, trans. by Gregory L. Freeze. Armonk, N.Y.: M.E. Sharpe.
- Moltz, James Clay. 1995. "Regional Tension in Russo-Chinese Rapprochement." *Asian Survey* 35(6):511-527.
- Moskalenko, Yuri. 1996. "External Economic Cooperative Between the Amur Region and Countries of Northeast Asia."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Far Eastern Affairs)*, no. 1, pp. 46-53.
- Peterson, Domosthenes James. 1995. "Russia'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in Light of Economic Regionalization." *Post-Soviet Geography* 36(5):291-309.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 Investment and Labor Fl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lapentokh, Dmitry V. 1995. "Russia, China, and the Far East: Old Geopolitics or a New Peaceful Cooper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8(3): 307-318.
- Stephan, John J. 1994.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 1971. "The Korean Minority in the Soviet Union" *MIZAN* 8(3); 「蘇聯內 韓國少數民族」 『北韓』, 1972년, 12월호, pp. 221-231에 전재.
- Suh, Dae-Sook. 1987. "Soviet Koreans and North Korea." Pp. 101-128 in *Koreans in the Soviet Union*, edited by Dae-Sook Suh. Honolulu, HI: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 Thomas, Brinley. 1961.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Trend Report and Bibliography*. Paris: UNESCO.
- Vardomsky, Leonid. 1992. "Blagoveshchensk and Heihe Engage in Across-the-border Cooperation."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Far Eastern Affairs), no. 2, pp. 81-86.
- Wada, Haruki. 1987.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Pp. 24-59 in *Koreans in the Soviet Union*, edited by Dae-Sook Suh. Honolulu, HI: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 Wishnick, Elizabeth. 1995. "Whose Environment?: A Case Study of Forestry Policy in Russia's Maritime Province." Pp. 256-68 in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edited by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 Armonk, NY: M. E. Sharpe.
- Yakubovsky, Vladimir B. 1996.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DPRK: Problems and Perspectives." *Korea and World Affairs* 20(3):451-73.
- The Washington Post, June 3, 1982

〈중문(中文)참고문헌〉

- 江振昌, 1989. 「大陸社會的民工‘盲流’問題」 『中國大陸研究』 民國78年 第31卷 第12期, pp. 47-53.
- 戴萬欽. 1996. 「對俄羅斯「中國政策」的展望」 『問題與研究』 第35卷 第2期 2月, pp. 65-77.
- 孟繁策. 1996. 「中俄黑龍江邊境貿易的歷史回顧與展望」, 『中國邊境史地研究』, 第1期, pp. 106-112.
- 王承宗. 1996. 「俄羅斯民族及其問題」 『問題與研究』 第35卷 第8期, pp. 13-25.
- 畢英賢. 1993. 「俄羅斯與中共關係的建立與發展」 『問題與研究』 第32卷 民國82年 第4期 pp. 1-11.

〈일문(日文)참고문헌(번역서포함)〉

- 名越健郎. 1992. 「시장경제에 기대가 부푼 캄차카」 『極東問題』 12월호, pp. 96-102.
- 成家克德. 1991. 「現代國際勞動力移動의 條件: 濟의 國際化와 民族集團에 着目して」 『社會學評論』 48(4):392-405.
- 野田正彰. 1992. 「사할린의 한국인」 『北韓』 11월호, pp. 84-96.
- 花房征夫. 1996. 「극동시베리아 경제기행」 『極東問題』 8월호, pp. 65-81.
- 惠谷治. 1996. 「옛 소련거주 ‘고려인’ 인구통계」 『極東問題』 3월호, pp. 57-61.
- 毛里和子. 1989. 『中國とソ連』 岩波書店. 김하림 역, 『중국과 소련: 그 30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는 재생활 것인가』, 서울:사민서각, 1990.
- 吉成大志. 1995. 「極東ロシアが中ロの國境劃定に異議: 關係改善を図るモスクワ外交に大きな障害」 『世界週報』, 8月 8日. pp. 22-27.

北韓의 消費生活方式 및 消費文化와 統一後 適應問題



金 聖 淑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목 차

| | |
|--------------------------------|-----|
| <요약문> | 189 |
| I. 서론 | 195 |
| II. 이론적 배경 | 197 |
| III. 북한의 소비환경 | 202 |
| IV.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 | 209 |
| V. 남북한 소비문화의 비교 | 236 |
| VI. 북한주민의 통일이후 소비생활 적응문제 | 245 |
| VII. 결론 | 252 |
| ※참고문헌 | 258 |

【요약문】

통일이후의 통합과정은 거시적인 혹은 정책적인 통합방안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40년간 분단되어 있는 상황,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경제구조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남한과 매우 다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생활모습의 내면에 있는 생활문화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규명을 통해서 통일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통합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남한의 소비문화를 물질주의, 집단주의, 체면소비, 동조소비, 과시소비, 과소비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진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북한의 소비환경과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양식의 특징을 구명한다. 이를 위해 의식주생활 등 소비자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생활 양식과 婚喪祭 양식, 문화·여가 생활, 교통·여행 생활을 생활을 포함하는 선택적 소비생활 양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출간된 잡지 『천리마』와 『조선여성』을 내용분석하고 <북한방문기>와 <귀순자의 증언>을 자료조사하여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고찰된 북한의 소비양식을 토대로 남북한 소비문화를 비교하였다. 셋째, 북한의 소비양식과 소비문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 소비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식생활에서는 주식인 쌀의 공급마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기, 식용유, 과일 등의 부식의 양과 질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식생활의 내용이 주로 된장, 고추장 등 장류와 각종 남새(채소)류 특히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을 주로 먹고 있었다. 의생활에서는 남자들은 주로 인민복, 신사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나이 든 여성일수록 작업복 차림이나 짙은 색깔로 입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밝은 정장차림으로 옷차림새에 신경을 쓰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사회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옷차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의류산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생활의 경우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모니카 주택, 고층 아파트 등은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생활편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주택부족으로 최악 수준의 주택마저 배정받기 힘들고 배

정 받기 위해서는 수년을 기다리고 뇌물을 주어야 하는 등 주거수준이 매우 낮다. 또한 여러 가족이 한 집에 동거하는 <동거살이> 등이 일반적인 것이어서 주택은 잡자는 곳으로 전락하여 주거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혼상제 양식은 축의금 등 상부상조의 정신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었고 축의금의 크기 등이 매우 큰 것은 남한의 소비양식과 비슷하였다. 환갑잔치나 제사, 명절, 그리고 장례 절차에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소비양식으로 상당히 간소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에 전통적인 행사 규모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절대적인 물자부족으로 인해 간소화하는 것이자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여가생활은 개인적이며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주민들 교육용으로 다양한 문화매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선택권이 거의 없다. 의무적으로 단지 그것들을 수용할 뿐이기 때문에 여가나 문화에 대한 특별한 욕구도 없는 듯하다. 교통 및 여행양식은 북한의 여행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북한은 이동성이 적은 사회이다.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전차, 택시 등이 있다. 그러나 석유부족으로 인해 택시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농촌에서는 목탄차, 달구지 등이 더 많이 이용된다. 개인적인 승용차의 이용은 특권층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열차는 장거리 여행에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짧은 거리는 출퇴근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 한다. 매우 열악한 시설에다가 연착도 일상적인 일이지만 대체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초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장거리는 불가능하지만 고향방문 등 상당한 이동이 있다고 하며 이럴 때는 여행중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게 다닌다고 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소비생활 양식에서 네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매우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사회 전체가 차중하고 있다. 그리고 배급제로 인하여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소비욕구가 상당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생활은 욕구가 억제된 소비양식이다.

둘째, 이러한 열악한 소비생활은 평균적인 북한주민의 모습이다. 소비생활 양식은 계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배급의 양과 질은 계층에 따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소비생활을 통해 계급적 신분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북한의 소비양식은 계급적 폐쇄된 소비양식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양식은 하나의 당

지침으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이상형이 된다. 하나의 획일적인 소비문화를 양산하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양사람들은 소비생활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교통시설과 여가생활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북한 소비생활양식을 토대로 남북한 소비문화를 소비환경측면, 소비가치관측면, 소비행동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먼저 소비환경 측면에서는 남한이 1993년을 기점으로 소비주도계층인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북한은 아직 중간계층과 빈곤계층의 경계선상에 있는 수준이었다. 소비자사회인가 아닌가는 그 사회의 삶의 양식에서 중요한데 소비자사회에서는 육류위주의 소비행태, 자동차이용의 보편화, 일회용품의 사용, 그리고 과시적 소비의 일반화 등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비해 북한의 소비환경은 충분치 못한 곡류, 자전거나 도보의 교통시설, 내구재에 대한 소비 욕구 등으로 요약된다. 남북한 유통기관의 비교에서도 남한의 다양화되고 최첨단화되는 유통기관(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장마당>(도시) <농민시장>(농촌)과 암시장 거래, 그리고 그 곳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은 소비환경에서 매우 큰 격차를 느끼게 하였다.

소비가치관의 비교에서 남북한 공통적인 소비가치관으로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인한 체면주의와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지적되었는데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적인 생활관과 윤리관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한과는 상이한 특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남북한의 상이한 소비가치관으로 분석되었는데 최근의 몇몇 북한연구에서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논하였지만 이는 상류층의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북한사회 전반의 소비생활에서는 물질주의가 표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행태면에서 남북한의 비교는 체면소비, 동조소비, 과시소비 측면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남북한 모두 유교문화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체면소비적 행태가 두드러졌는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유교문화의 전통이 더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 이러한 현상이 더 강했다.

동조소비 특성에서도 외형적으로는 남북한이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계급사회인 북한의 경우 소비생활이 그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계급에 맞춰 소비생활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북한사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소위 '당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북

한사회의 '바람직한 소비패턴'이 동조의 기준이 되었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자유주의 국가이므로 동조하고자 하는 집단이 다양하였는데 유행이나 대세를 맹목적으로 따르기와 같은 획일적인 동조소비 현상도 있었다. 과소비 행태는 남한에서 두드러진 소비문화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상류층과 일부 신흥부자들(북한에서는<갑작부자>라고 함. 북송동포들이나 외화벌이를 하는 무역일꾼 가운데 돈을 번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남한의 경우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과소비 행태가 일부계층이 아닌 전 사회계층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사회적 과소비를 양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소비문화의 비교를 통해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겪을 수 있는 소비생활문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소비측면에서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소득획득의 기회가 적어지고 임금수준의 전반적 하락으로 인한 소득획득의 갈등,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과 사회주의적 소비가치관간의 갈등, 과소비, 향락적 소비, 배급주의 등 소비행동에서의 갈등,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에 대한 무지와 부적응에서 오는 심리적 당황, 허무감 등을 진단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북한주민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소비자문제들과 소비자 정책적 요구들, 그리고 북한주민의 남한의 소비환경에의 부적응에서 오는 파행적 소비행동이 사회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극심한 계층적 소비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통일이후 개인적 소비생활이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소비생활 적응문제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겪게될 개인적인 소비생활문제는 대체로 남한의 소비환경과 소비문화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생활에서의 교류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의 남한 소비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감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교육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소비자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각종 소비자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일이후 북한주민에게 소비자태도 영역, 소비자지식 영역, 소비자기능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이후의 야기될 소비생활문제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정책면에서 상품표준과 상품안전기준 등의 융통성있는 적용이 불가피하며 각종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피

해구제업무도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한주민들의 소비생활이 건전화에 우선되어야 한다.

I. 서 론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대비 방안 등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근간에는 정치·경제적인 통일방안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일반에 대한 실태에도 관심이 기울어지는 듯하다. 최근 들어 북한의 여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어 거시적인 차원이외의 미시적인 부분까지도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실생활 특히 의식주생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광범위한, 따라서 개략적인 분석만이 진행되어 왔을 뿐 심층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데는 직접적인 관찰과 조사가 불가능한 점, 간접적인 자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실생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통일이후의 통합과정은 거시적인 혹은 정책적인 통합방안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40년간 분단되어 있는 상황,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경제구조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남한과 매우 다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생활모습의 내면에 있는 생활문화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규명을 통해서 통일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통합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의 생활문화는 크게 사고방식 즉 내면화된 가치, 신념과 생활양식 즉 무엇을 먹고 입고 사용하는가, 어떻게 즐기는가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가장 첨예하게 표출되는 분야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소비생활이다. 또한 소비생활은 소비자개인의 가치·선호·신념 등을 표출하는 기제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경제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일단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어떻게 획득하며 어느 정도 획득하느냐와 관련된다. 그리고 남한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환경과는 달리 북한은 계획경제하에 중앙정부에서 소비품목을 강력히 통제하는 소비환경에 있다. 요컨대 소비생활은 구조적인(사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이 동시에 관련되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북한주민의 실상을 자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실생활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생활 영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의 소비생활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그들에게 소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또한 소비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업자(혹은 생산자)에 대비되는 영역인데 체제가 다른 그들에게 소비란 용어가 과연 적합한 가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생존을 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많은 연구에서 상류층의 소비생활은 극도로 다양하며 사치적이라고 까지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의 소비생활은 분석 가능한 대상이다.

한편 소비생활은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소비생활이 특히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소비생활이 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일상생활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생활이 계층별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는 소비문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의 의·식·주 등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생활, 사회활동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문화생활을 위한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양식을 구명하고 남한과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소비양식에 함축된 소비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통일 후 새로운 소비환경에 처하게 되는 북한주민의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분석할 때 일차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파악해야 했기에 연구과정 중에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일차자료가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실상, 즉 식·의·주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알려주는 일차자료에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우선 접근 가능한 신문과 잡지 등을 탐색하여 가장 주민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는 『천리마』와 『조선여성』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는 북한사회의 정적성으로 볼 때 이상적인 상태만을 맹목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제적인 일상생활을 알기 위해 귀순자들의 증언집과 북한방문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문화의 정의와 현대 소비문화

문화란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획득하는 지식, 신념, 기술, 도덕, 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 등에 포함된 복합적인 전체”(Taylor 1981) 혹은 “한 사회의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 사회적 규범과 양식의 총체적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가 가지는 대표적 성격은 첫째, 문화는 행동의 기준이 되며 규범을 제공한다. 즉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의 방향 및 요구충족 방법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이상적 행동패턴이나 사고를 규범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규범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태도, 행동,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이 철 1997).

둘째, 문화는 한 개인이 학습하는 일련의 규칙 및 행동패턴이나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전되어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다음세대에 계승, 전수된다. 문화의 학습과정은 미묘하여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적 처벌과 보상기제를 통하여 문화적 규범을 받아들리게 된다.

셋째, 문화는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서 향유되는 가치관이나 관습은 그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의 특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소비는 경제적 행위일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행위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욕구자체가 자생적이라기 보다는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 제도, 규범들이 제품의 속성, 생산양식, 사용방법 등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행위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소비는 물질적 소비욕구의 일차적 만족을 벗어나 정신적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포함하여 상징의 소비, 기호의 소비로서 소비자체가 의식과 행동방식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물질문화의 상징적인 속성은 사물이 셋트로 어울려서 의미를 전하게 하며 제품 보완물은 짝이 되는 제품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재화를 제공하는 연상(image)을 만들어 낸다(Baudrillard 1970). 결국 소비재를 생산하는 디자인이나 생산체계는 전적으로 문화적 소산이며 소비자가 시간, 관심, 소득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소비재는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재의 의미를 사용하여 문화적 범주·원리를 사용하고 사고를 활용하

며, 라이프스타일을 창조·유지하며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 변화를 창조 혹은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란 그 특성에 있어서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소비와 문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McCracken 1988) 문화형성의 주된 구성요인으로서의 소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개인소비자들이 소비재를 이용하여 자아를 드러내듯이 소비문화는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현대사회에서 소비문화는 어떠한 것인가? 루리(Lury 1996)는 소비문화를 물질문화의 구체적인 형태로 보고 있으며, 현대소비는 이제 기능적인 것 이상의 의미 즉 상징의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특히 현대사회 안에서 소비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기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소비문화는 생활세계의 삶의 양식이 소비주의적 메커니즘에 편입되어 있으며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형성에 관여하게 된다. 대중 소비주의문화는 비로소 사회관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간과 집단의 행동양식,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정체성의 형성과정의 핵심적 기제가 된다(강명구 1995)

2. 한국의 소비문화

현대의 소비문화가 기능적인 의미이상의 상징과 기호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관계를 규정짓는다면 이미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소비문화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소득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의 양적 증대, 소비수준의 향상,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소비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비규모와 양식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차원의 변화이상의 행동양식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소비문화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치체계에 있어서 물질주의를 들 수 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경제적 재화에 대한 관념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로 형성된 물질주의는 과시소비, 모방소비 등을 부추기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제는 학문이나 도덕가치보

다 물질적 가치가 한국 사회의 주된 가치로 떠오르면서 어떤 사람의 평가가 물질적인 잣대로 주로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소비하는가로 이어진다.

소비문화에 물질주의는 전통사회의 가치와 대치되는 것이라면, 집단주의와 체면주의는 전통사회의 가치가 현대에 그대로 수용된 예이다. 유교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된다. 한국인은 자기가 소속한 집단 및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해를 희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암묵리에 합의된 사회적 규범을 어길 때에는 그 개인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강한 집단동조의식은 한국인의 소비패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한국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 자기주위의 가족, 이웃 또는 친구들의 결정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와 같은 집단동조의식으로 인해 제품당 특정상표가 집단의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이 철 1997).

이러한 집단동조의식은 소비에 있어서 어떤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고 그 집단의 성원들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성, 동조(conformity)성향으로 나타난다. 동조행동은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거나 집단의 응집력이 강한 또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큰 경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성영신 1998). 이러한 동조행동은 특히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행동 규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대세따르거나 유행을 쫓는 소비행동은 동조소비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인의 체면소비는 과거의 '양반의식'에서 기원되었으리라 추론된다. 우리조상들이 생활원리로 삼았던 유교의식에는 예와 분수를 중시하며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엄격한 소비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소비규범으로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을 수 있으나 관혼상제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비의 규범은 예를 갖추고 분수를 지키며 형식을 살리는 것을 중시하였다. 사회적 신분이 와해된 오늘날에도 과거로부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계층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소비를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따르지 않을 때 예를 명분으로 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경제수준을 넘어 신분에 맞는 소비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면 소비'이다(이 철 1997)

체면소비와 유사하면서도 그 심리적 기제는 조금 다른 것으로 '허세소비'가 있다. 있

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대신에 실제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세가 꼭 소비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와 같은 대중소비사회에서 이와 같은 위장은 소비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보편적이다(성영신, 1998) 외제선호심리, 유명상표를 무조건 선호하는 심리, 백화점 물건이면 무조건 좋아하는 심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현상은 남들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실제 자기 모습이상으로 자신을 평가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최고', '최대', '일류'를 선호하는 소비행동으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아방어기제가 '허세'라는 연구결과(박영숙 1993)를 볼 때 허세소비가 한국인의 대표적인 소비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 가운데 과시소비성향은 뚜렷한 현상이다. 과시적 소비는 타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부를 소비를 통해 표현하여 존경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한 개인의 과시적 소비행동은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를 경쟁적으로 드러내는 욕구를 유발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사회적 지위나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타인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소비를 통해 충족시키려 하는 보상행동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제품을 소비하면서 그 기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피코트나 자동차와 같은 가시성이 있는 품목이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서 의례껏 과시소비가 나타난다.

앞에서 제시한 물질주의적 소비성향, 동조소비, 체면소비, 과시소비는 과소비를 야기시킨다. 과소비를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소득에 비해 소비의 양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한다(송보경·김제옥 1997). 1980년대 후반부터 구제금융시대 이전까지 지나친 과소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과소비현상은 비단 경제적 현상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일부계층의 과소비가 전체사회로 파급되고 그런 연유로 국가 전체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3.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는 이성적, 감정적, 사회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심리적 특성은 소비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에서 남한의 소비생활에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특성 그 가운데에서도 비이성적인 측면, 즉 감정적, 사회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통일이후의 통합과정이 거시적인 혹은 정책적인 통합방안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융합과정이라고 할 때 거의 40년간 분단되어 있는 상황,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경제구조하에서 생활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통일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일차적 관심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욕구가 표출되는 소비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통일후 적용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과 문화를 구명하기 위해 우선 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주민생활에 대한 연구는 의식주생활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략적인 통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실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힘들다. 또한 90년대 이전의 연구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치·경제 상황이 많이 변한 현재의 실상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 모두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記述的인 연구였기 때문에 소비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북한주민생활에 대한 일차자료가 매우 중요하였는데 자료를 얻기가 곤란하여서 북한에서 발행된 인쇄매체를 탐색하였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가운데 북한의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잡지 『천리마』였으며 여성생활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는 『조선여성』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들 잡지는 북한의 홍보일변도의 언론행동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상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형이 아닌 실제형을 알고자 ‘북한방문기’와 ‘귀순자의 증언집’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일차자료는 아니지만 북한의 일상생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북한잡지 『천리마』와 『조선여성』은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그리고 귀순자 증언집과 북한방문기는 가능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본 연구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

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남한의 소비문화와 비교를 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첫째는 남북한의 소비환경에 대한 비교였다. 남한은 이미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아직도 1인당 GNP 1천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사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북한의 소비환경이 남한의 소비환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소비자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소비가치관에 대한 비교였다. 남한의 소비문화에 투영된 가치관이 물질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한다면 북한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소비에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에 전통주의적인 가치관이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잔존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한의 소비문화에 대한 비교였다. 남한의 소비문화로 과시소비, 동조소비, 체면소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비문화가 북한의 소비생활에도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새로운 소비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개인소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결론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III. 북한의 소비환경

1. 북한의 경제체제와 소비환경

1996년 6월 한국은행이 추계하여 발표한 북한의 GNP는 223억 달러로 남한은 4,517억 달러로 남한은 북한의 20.3배에 이른다. 1인당 GNP도 북한은 957달러, 남한이 1만 76달러로 북한보다 10.2배 크게 나타나고 있다. GDP성장률은 북한이 마이너스 4.6%인데 비해, 남한은 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식 개념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 2,000달러수준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1년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2,460달러라고 밝

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남한의 소비문화와 비교를 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첫째는 남북한의 소비환경에 대한 비교였다. 남한은 이미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아직도 1인당 GNP 1천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사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북한의 소비환경이 남한의 소비환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소비자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소비가치관에 대한 비교였다. 남한의 소비문화에 투영된 가치관이 물질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한다면 북한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소비에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에 전통주의적인 가치관이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잔존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한의 소비문화에 대한 비교였다. 남한의 소비문화로 과시소비, 동조소비, 체면소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비문화가 북한의 소비생활에도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새로운 소비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개인소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결론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III. 북한의 소비환경

1. 북한의 경제체제와 소비환경

1996년 6월 한국은행이 추계하여 발표한 북한의 GNP는 223억 달러로 남한은 4,517억 달러로 남한은 북한의 20.3배에 이른다. 1인당 GNP도 북한은 957달러, 남한이 1만 76달러로 북한보다 10.2배 크게 나타나고 있다. GDP성장률은 북한이 마이너스 4.6%인데 비해, 남한은 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식 개념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 2,000달러수준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1년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2,460달러라고 밝

했다(통일원, 1996, 184-185)

귀순자들은 증언을 통해 1990년대 들어서 인민들이 더 이상 정부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는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 때문이다. 식량배급이 함남, 함북, 자강, 양강, 강원 등에서 적게는 보름, 많게는 3-6개월쯤 밀리면서 주민들은 각자의 연명을 위해 불자빼돌리기, 암거래, 뇌물수수, 절도, 직장이탈 등의 갖가지 방법을 터득했고 이는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1995년 1월 20일)

북한의 거래는 암시장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암거래는 원칙적으로 안전원의 단속을 받으나 워낙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묵계로 비밀에 부쳐 감싸고 있는 상태이다. 1987년 월남한 김만철의 증언에 의하면 “농민시장에는 아낙네들이 주로 가서 사는데 쌀은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까, 순찰대 몰래 사지요. 그리고 부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주로 된장, 간장 같은 것을 구입하고 농촌에 가서 소채 시래기를 사다가 먹습니다. 그래보면 월급의 대부분이 식량구입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지요”라고 한다(박완서 외, 1991) 1995년 수해이후 암거래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 거의 모든 주부들이 직장일과 집안 일에 시달리면서 또 다시 식량과 부족한 물자를 구하러 물건을 팔러 다닌다.

북한의 대표적인 시장은 구역 <장마당>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경우 장마당 입구에서 관리원에게 공민증을 보여주고 해당구역 사람임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1일 5 - 10원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평양시내 각 구역 <장마당>은 ‘고양이 뿔 말고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건이 다양하다고 한다. 평양시내에서는 대동강구역 복수장마당, 동대원구역 새살림장마당, 사동구역 송신장마당, 대성구역 용흥장마당, 평천구역 부흥장마당, 만경대구역 칠공장마당, 선교구역 산업장마당 등 7곳이 있다. 그러나 최근 평양시내에는 공식적으로 장사가 허용된 <장마당>외에 금방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메뚜기 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메뚜기 시장>은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다니며 생겼다 사라진다’라며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잠깐 형성되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반짝시장>이라고도 한다. <메뚜기 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식료품인데 쌀, 강냉이, 밀가루 등 곡류와 야채를 비롯하여 알튀기(쌀, 옥수수 튀긴 것), 튀기떡, 강냉이 국수, 송편, 죽떡, 만두밥, 카카오(초코렛) 등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등 다양하다고 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5월호, 16).

북한에서 가장 큰 상점으로 <평양제일백화상점>이 있는데 그곳은 상품전시 박물관과 흡사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구경만 했지 구매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한다. 평양남새집은 청진, 회령에 비해 물건이 풍부한 편이었다. 평양남새집에서는 간장, 된장, 조미료 등을 구매증을 가지고 사는데 물건을 사면 영업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도장만큼 돈을 지불해야 한다. 남새집에는 수박도 있었는데 두 주먹을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었다. 다른 채소도 대부분 작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진에 있는 <백화상점>의 물품은 일본 상품과 중국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달러와 엔화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품구입이 가능하다. 시내 구역마다 띄엄띄엄 보이는 남새상점(채소가게)이 있다(남북문제연구소 1996, 13-23).

북한의 일반적인 시장으로 도시에서는 장마당이, 농촌에서는 농민시장이 성행한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92년 초 남포에서 시작된 장마당의 식량판매가 94년에 이르러 전국적 현상이 되었다. 심지어 강계 농민시장에서는 쌀, 부식물, 남새(채소), 신발, 철제용품, 옷가지, 천류, 시계, 자전기 등 여러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주로 주민들간의 알음알이로 사고 판다. 그 외 안주시에는 <홍콩시장>이라고 하는 청남시장이 있는데 중국제품이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

생필품의 만성적 부족현상이 계속되어도 <외화상점>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외화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달러당 암시세가 공정한율의 40-50배로 형성되고 있다. 1달러가 노동자 한달월급(80원-1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당초에는 외국인, 외교관, 무역일꾼 등 해외근무자, 북송동포 및 간부들의 전용물이었는데 이제는 <바꾼돈표>(1달러가 바꾼 돈표 2.15원선)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상품의 품귀현상과 농민시장(도시에선 장마당)에서의 가격폭등으로 북한돈의 가치는 폭락하였다. 그래서 외화상점의 물건들이 농민시장에 나오면 대략 40배쯤 가격이 뛰었다고 한다. 여반절은 “90년대 들어 허전한 생활 때문에 주부들이 두부, 떡, 생선장사 등을 하며 살아간다. 함흥의 국영상점에서 4원 50전 하는 비닐구두가 일단 농민시장에 나오면 1백 60-2백원 정도, 2원 80전 짜리 내의는 30-40원, 1원 50전짜리 가스라이터는 20원 등 10배에서 최고 40배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북한의 생필품 가격을 보

면 <표1>과 같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12-13).

<표1> 북한 생필품 가격

| 품 목 | 국 정 가 격 | 농민시장 가격 |
|-----------|---------|-----------------------|
| 두부 1모 | 14전 | 5 -7 원 |
| 입쌀(1kg) | 8전 | 20-60원 |
| 돼지고기(1kg) | 7원 | 50원 |
| 치약 | 1원 40전 | 10원 |
| 편리화(운동화) | 3원 | 50-70원 |
| 비닐구두 | 4원 50전 | 1백60-2백원 |
| 런닝셔츠(내의) | 2원 80전 | 30-40원 |
| 이발소 | 50전-1원 | 4-5원(호텔) |
| 가스라이터 | 1원 50전 | 20원 |
| 비디오테이프 | | 3백-4백원(88올림픽,음관물 6백원) |
| 녹음기 | 2백 60원 | 2천5백-3천원 |
| 컬러TV | 1천 5백원 | 2만3천원 |
| 냉장고 | 6백 50원 | 1만5천-1만6천원 |
| 자전거 | 4백원 | 1천5백-2천위 |

자료 : 남북문제연구소b(1997),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 12-13.

물가수준을 북한 방문기의 단적인 예를 통해 보면(남북문제연구소a 1996, 23) 북한주민의 물가고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라면 한 봉지값을 물었더니 미국돈으로 42센트였다. 1달러에 2원 40전이지만 실제로 조선 지폐 몇십원이 1달러이므로 라면 한봉지를 사먹기도 힘들 것이다. 주민들 한달 월급이 60원 안팎인데 쌀 1 kg 에 몇십원씩 하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 것 같았다.

2. 북한주민의 소득생활

북한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1987년 현재) 공무원 및 사무원이 16.8%, 국영기업노동자와 협동기업노동자 등 노동자 계층이 57.9%, 그리고 농민(협동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3%으로 이루어져 있다(도홍렬 1997,15) 북한의 농가인구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5년에는 40.8%이던 것이 1985년에는 37.5%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비슷한 수준인 36.7%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호수는 1994년에 191만 4천호로 남한의 155만 8천호보다 약 20%가 더 많다(통계청 1996, 48). 해방당시 농업국가였던 북한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인구가 광공업, 서비스 등 2,3차 산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의 증언¹⁾을 보면 평양시민들은 “현재의 주민생활이 10년 전인 80년대 말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고 더 비참해졌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주민들이 생각하는 10년 전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는데, 현재는 서로 모함하거나 거짓죄인을 만드는 등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가족간에도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금지하던 도박,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쌀, 돈 등 경제문제 때문에 부모형제까지 살인하는 폐륜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5월호, 13).

평양에서는 지방출신 여성들이 무단으로 평양으로 들어와 매춘행위를 하여 돈을 버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방 여성들은 자신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춘행위를 시작하게 되는데 윤락대상은 주로 외화벌이 종사자, 당정간부, 고급간부 자제들로서 한번 몸을 팔면 ‘외화와 바꾼돈’ 10원(북한돈 1,000돈) 정도를 받게 되며 주로 외화식당, 상점, 장마당 등지에서 “꽃사세요”하면서 접근하여 매춘을 하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5월, 18). 심지어는 여대생들도 함흥지역 대학에 유학온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기도 한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 89).

한편 북한여성들은 경제난으로 ‘1자녀 갖기’ 추세가 확산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나 일부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못 낳는 중국인의 ‘씨반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 여성의 임신사실을 확인하면 식량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 돌봐 주고 출산시기가 되면 북한에 와서 아이를 확인하며 3-4 개월이 지난 후에는 중국으로 데리고 간다. 사례비도 여성들의 조건에 따라 2-10만원(북한돈)정도로 차등 지불되고 있다고 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8월, 24).

북한여성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장사(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의 주역

1) 귀순자는 전 북한군 반문점대표부 정치부 직공과상위였던 민용관(1998년 2월 3일 귀순)과 전 자강군 용림군 임산사업소 노동자였던 김명숙(1998년 2월 26일 귀순)이다.

이라고 한다. 귀순자의 증언을 보면 “안주에선 아주머니들이 집안에 편직기계를 갖춰 놓고 옷을 만들어 파는 게 유행이다. 열집에 두집 정도는 부업을 하며 한달에 30벌쯤 만들고 5백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이는 남자의 보통 1달치 월급의 5배정도이다. 또한 여자 교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가내공업을 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여성들의 장사는 중국의 방물장사들과의 교역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만포에 살던 조명순씨의 체험기를 보면(남북문제연구소b 1997, 18),

여성들은 잔돈벌이 보따리장사를 한다. 중국에서 건너온 일용품을 죽은(싼) 값에 사서 칭진 등지로 가 두 배 정도에 팔고 이 돈으로 명태, 낙지 등 수산물을 사면 만포에서 다시 두 배 가격을 붙일 수 있다. 여성들이 장사에서 흔한 것은 수요가 높은 양복지, 샌들, 양말, 내의와 화장품이다. 나 자신은 고사리, 고추 등 남새와 잉어 등 물고기, 산삼, 잣 등의 물건을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물건이 건너오면 재생수매상점²⁾에 전부 넘겨 파는 약간 큰 장사를 해 보았다

북한의 <인민병원>과 인민무력부 소속 <11호 병원>의사들은 공장, 기업소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있는데 90년대전반부터 병원관계자들이 각 구역별로 소재한 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20-4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 대가로 90년대 초에는 돼지고기 5kg, 당과류 10kg, 계란 20개, 현금 300원을 지급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돼지고기 3kg, 당과류 2kg, 현금 100원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혈액채취에 대해 초기에는 “피를 뽑으면 병에 걸리고 영양실조가 심해져 죽는다”며 기피하였으나 최근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죽기전에 고기라도 실컷 먹어보고 죽자”며 자발적으로 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5월, 20).

한편 농촌 주민들의 소득생활은 어떠한가? 과거 농장원 개개인의 노력여부와는 상관없이 수확물 중 ‘국가 정량’을 기준으로 농장원들과 가족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을 분배하여 주었다. 따라서 농장원이 기본적인 분배량을 초과해서 분배받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농장원과 그 가족에게 일정한 분배량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2) 재생수매상점이란 90년대에 등장한 것으로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상점이 위탁받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신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 18). 한국에서 비슷한 유통기관은 중고시장을 의미한다.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북한이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해 96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분조도급제>로 변경하였다. <분조도급제>란 각 농장 작업반 분조별로 국가정량을 초과해 수확량이 많을 경우 '국가납부곡'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잉여분을 농장원들이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농장원들은 초기에는 '일한 만큼 더 많은 양을 분배받을 수 있다'하여 반기는 입장이었으나 원래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불평이 많다고 한다. 국가정량을 초과한 수확분에 대한 분배시 농장관리원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식량대신 상품구매권을 주고 있어 농장원들은 자신이 필요한 식량은 더 받지 못하고 개인 돈을 들여 필요없는 물건을 강제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³⁾.

북한에서는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걸인들이 상당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97년 4월부터 지방주민들의 평양출입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통제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의 걸식자들이 평양으로 수시로 들어와 외국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살인,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엄격한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굳이 평양에 가려는 이유는 쌀,銅, 당과류 등 물품이 지방보다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인데 이들은 평양에서 물건을 사다 지방에 파는 <되거래 장사>로 차익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5월,15). 또한 각 시, 군당위원회는 일명 '꽃제비'(집을 나와 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복잡해서 인근 다른 시, 군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학교걸식학생이 많은데 이들 중 인민학교 1-3학년들은 '꽃제비'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민학교 4학년이상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산에 가서 벌목하여 장작을 만든 후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벌이를 하거나 고기, 조개잡이를 하기도 한다. 조개잡이로 하루에 쌀 5kg 썩 벌 수 있기 때문이다⁴⁾.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을 틈타 암거래시장이 성황하는 가운데 <갑작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북송동포들이나 화교들인데 북송동포들은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보내온 달러나 엔화 덕분에 화교들은 생필품 급절장사로 신흥부자가 된다. 또

3) 국가안전기획부 「최신 북한실상」, 21-22쪽. 귀순자의 증언임. 귀순자는 전 양강도 협동농장원 조남국(98년 3월 12일 귀순)과 전 사회안전부 산하 의화빌이 사업소 지도원 최만수(98년 5월 12일 귀순)임.

4)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 실상, 1998년 9월호, 28쪽. 귀순자의 증언. 귀순자는 전 북한군 민경대대 소총수 손철남(98년 5월 22일 귀순)과 전 남천화학연합기업소 노동자 김문관(98년 5월 12일 귀순)임.

한 갑작부자가 많은 집단은 무역일군을 들 수 있다. 즉 “수출입 과정에는 등급을 조정해 차액을 횡령하거나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남북문제연구소 b 1997, 52).

IV.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

1. 필수적 소비생활 양식

1) 북한의 식생활 양식

휴전 이후부터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가 추진됨에 따라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품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부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식량배급제를 확대 실시하여 오고 있다(『북한개요』 1986, 85). 농촌의 농장원을 제외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배급은 각 직장의 경우 경리부에서, 부양가족은 리·동의 인민반에서 발부되는 배급표로 매달 2회, 1일과 16일에 배급소에서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급기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만 4세이하는 230g, 5-14세는 400g, 15세 이상은 일반노동자 540g, 중노동자·군인 624g, 병·노약자 300g으로 구분하여 배급량에 격차를 두도록 규정하여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내외통신』 종합판 (35), 206). 일반주민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주로 쌀과 옥수수인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역간 차등배급 현황을 보면 평양은 백미와 잡곡이 5:5 내지 4:6, 청진·개성 등 직할시가 4:6 내지 3:7, 기타 도시 및 지방이 3:7 내지 2:8이다(통일원 1986, 85). 그러나 199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혼식비율은 당 및 정권기관 간부와 특수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미:잡곡 비율이 2:8이다(북한연구소편 1994, 77).

농촌의 경우 농민들은 매월 배급제가 아니라 협동농장의 연말결산 배급에 의하여 현물과 현금을 배급받고 있다. 협동농장에서는 1년간 생산한 총생산량 중에서 정권기관의 의무 구매량과 탁아소, 유아원 등의 시설비, 사료, 종자, 비료대, 농기계 임대료, 수리대, 농기구·농장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60%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농장원의 노력공

한 갑작부자가 많은 집단은 무역일군을 들 수 있다. 즉 “수출입 과정에는 등급을 조정해 차액을 횡령하거나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남북문제연구소 b 1997, 52).

IV.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

1. 필수적 소비생활 양식

1) 북한의 식생활 양식

휴전 이후부터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가 추진됨에 따라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품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부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식량배급제를 확대 실시하여 오고 있다(『북한개요』 1986, 85). 농촌의 농장원을 제외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배급은 각 직장의 경우 경리부에서, 부양가족은 리·동의 인민반에서 발부되는 배급표로 매달 2회, 1일과 16일에 배급소에서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급기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만 4세이하는 230g, 5-14세는 400g, 15세 이상은 일반노동자 540g, 중노동자·군인 624g, 병·노약자 300g으로 구분하여 배급량에 격차를 두도록 규정하여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내외통신』 종합판 (35), 206). 일반주민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주로 쌀과 옥수수인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역간 차등배급 현황을 보면 평양은 백미와 잡곡이 5:5 내지 4:6, 청진·개성 등 직할시가 4:6 내지 3:7, 기타 도시 및 지방이 3:7 내지 2:8이다(통일원 1986, 85). 그러나 199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혼식비율은 당 및 정권기관 간부와 특수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미:잡곡 비율이 2:8이다(북한연구소편 1994, 77).

농촌의 경우 농민들은 매월 배급제가 아니라 협동농장의 연말결산 배급에 의하여 현물과 현금을 배급받고 있다. 협동농장에서는 1년간 생산한 총생산량 중에서 정권기관의 의무 구매량과 탁아소, 유아원 등의 시설비, 사료, 종자, 비료대, 농기계 임대료, 수리대, 농기구·농장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60%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농장원의 노력공

수와 부양 가족수틀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다.

<표1>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

| 직종 및 구분 | 배 급 량(g) | 혼식비율(백미:잡곡) |
|-------------|----------|-------------|
| 당 및 정권기관 간부 | 700 | 10:0 |
| 특수군인(정보병) | 800 | 7:3 |
| 군 인 | 700 | 2:8 |
| 중노동자 | 800 | 2:8 |
| 일반 노동자, 사무원 | 600 | 2:8 |
| 대학생 | 600 | 2:8 |
| 고등중학생 | 500 | 2:8 |
| 인민학생 | 400 | 2:8 |
| 유치원 이하 아동 | 300-100 | 2:8 |
| 부양가족 등 무직자 | 300 | 2:8 |

자료 : 정석홍(1997), 『남북한 비교론』, 195.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1966년 곡물 총 수요량을 673만 톤으로 잡고 여기서 배급을 22%가량 감량한다고 해도 1995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 345만 톤으로 추정할 때에 233만 톤이나 부족하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급량이 부족할 때에는 암거래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 식량 암거래 가격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배급가격의 200-300배 정도였으나 식량위기가 가중된 1995년 이후에는 1000배이상으로 암시세도 기준이 없다고 한다(정석홍, 1997;195).

신년과 2월 16일·4월 15일 김일성 부자의 생일, 당 창건일 등에는 이밖에 전국적으로 특별배급을 실시한다(신상옥 최은희 1988, 306). 특별배급이라고는 하지만 돈 받고 주는 유상배급으로 신분제 따라 그 종류와 양과 질이 각각 다르다. 맨아래층은 겨우 식구끼리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돼지고기가 고작이고 그 한층 위에는 돼지고기에 식용유가 추가되고 또 한층 위에는 계란이 추가되는 식으로 올라갈수록 양과 종류가 많아진다. 돼지고기의 양은 세대당 1-2kg, 생선류는 2-3kg을 공급받는다(정석홍 1997, 195).

철저한 배급제와 양곡거래와 현금매식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식이란 거의 없다. 간혹 도시 주민들이 식당에서 국수라도 사먹으려면 식량을 양표(양권)로 바꾸어

양표를 식당에 제시하여야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북한의 잡지 『천리마』에서도 평양의 옥류관과 청류관의 평양냉면 맛을 소개하면서 그 맛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 시민들의 식사가 약간 행해지고 있는 듯하다(『천리마』, 1996년 8월호;79).

또한 공무로 출장 또는 여행을 갈 때는 양표를 지참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이나 식당에 가서 양표를 내와야 식사를 제공받으며 양표없이 일반매식으로 식사할 경우에는 값이 비싸며 공무 출장비로 충당할 수 없다. 이 양표는 출장용 양표와 가정용 양표 및 일반용 양표로 구분되어 있어 출장용은 공무나 관혼상제, 여행할 때 여관이나 식당에서, 가정용은 밥공장, 국수공장에서 사용한다. 일반용 양표는 일반대중식당에서 돈과 같이 제출하면 백반이 제공된다고 한다(『조선일보』 1990년 8월 10일자).

한편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에 성평등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기혼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특히 노동당 5차 대회에서는 부녀자들의 노력동원과 관련해서 6개년 계획 기간에 ‘밥공장’을 대폭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평양을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는 주식물을 가공하는 밥공장과 반제품 부식물과 국거리들을 배급하는 봉사시설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로동신문』, 1984년 4월 2일자).

평양의 아동복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밥공장 시설에 대한 현재의 기능을 읽을 수 있다. 그 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사노동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면서 그 예로 현대식 가구, 다양한 종류의 음식공장을 세웠고 식료품, 국수, 절인 채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내어 집을 떠나 있을 때 가게에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강조한다(Korea Today 1998년 7월호, 46).

북한의 3대 혁명전시관에 대한 사진과 글(『천리마』 1994년 5월호)을 보면 식료공업성과 전시장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50여 가지의 가공식료품이 전시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인삼술, 김치, 어린이식료품, 맥주, 사이다, 청량음료, 과일단물, 강냉이변성가공 방법으로 만든 질좋은 가루와 쌀, 마른 국수, 빵을 비롯한 주식가공물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 고기통조림도 있었는데 소고기, 닭고기, 단고기, 돼지고기가 그 재료로 쓰이고 있었고 맛내기, 메주간장, 고추장 등도 있었다. 더불어 부엌 세간품으로 냉동기, 전기밥가마, 수지그릇들, 그리고 법랑그릇도 전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식생활의 상당부분이 사회화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러한 식료가공품들을 이용하고 있는 가이다.

그러면 식료품의 구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 등은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며, 김치·콩나물·야채·부부 등은 식료품점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다(정석홍 1997, 195). 최근 중앙일보 북한문화유산조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식료품·칫솔·차약·세면도구·내의·신발류 등은 구매카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라고 하였다. 또한 거리에 아이스크림·청량음료·숭사탕을 파는 간이매대도 늘고 있다고 하였다(『중앙일보』 1998년 7월 29일자). 즉 북한에서도 전체물량이나 상품의 다양성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식료품의 구입은 자유롭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의 식생활의 내용은 어떠한가.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권장하는 상차림에 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 본다. 여기서는 상차림의 종류를 밥상, 국수상, 떡상, 명절상으로 나누어 그 정의와 상차림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천리마』, 1994년 9월호;137).

- ① 밥상 : 김치를 가운데 두고 간장, 양념장, 고추장을 그 옆에 둔다. 나물, 쪄개와 같이 국불이 있거나 또는 자박자박한 것(불기있고 연한 것), 더운 반찬 등은 오른쪽에 놓으며(홀리지 않기위해) 구이, 전, 자반, 마른반찬 등은 왼쪽에 놓아야 한다.
- ② 국수상 : 국수를 주식으로 하여 간단히 차려냄. 국수그릇과 김치그릇, 양념장 그릇, 편육접시(또는 닭알, 다진고기구이, 나물 등)을 놓는다. 더운 국수상, 찬국수상, 회국수, 비빔국수 등이 있다. 여기에 식혜나 화채, 과일 곁들인다.
- ③ 떡상 : 떡을 주로 하는 간단한 음식상. 떡과 맑은 장국, 꿀이나 불릿, 국불이 시원한 나박김치와 맛있는 잡채같은 나물들을 접시에 담아낸다. 빵상도 이와같다.
- ④ 명절상 : 큰 둥근상 또는 네모난 긴 상들에 음식을 차려놓는다. 앞접시, 수저, 술잔, 청량음료잔, 포도주·사이다·맥주 등을 부을 수 있는 큰 잔을 뒤에 놓는다. 음식내는 순서는 가장 먼저 단음식과 떡을 내고 김치·회·편육·생나물 순서로 내놓는다(먼저 찬 음식부터). 그 다음은 잡채·전·구이의 순서이고 신선로·갈비찜·생선찜·해삼탕을 내고 국수·밥·국·떡국·만두국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화채와 식혜를 낸다.

북한의 식량난과는 거리가 먼 상차림의 내용이지만 그 사회에서 권장하는 상차림으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식문화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 내용만으로 본다면 남한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남한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전통적인 반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명절상에서는 차례음식이 소개되지 않은 것도 한가지 특징이다. 이외에 소반이라는 것도 소개되고 있는데(『천리마』 1997년 3월호, 75) 독상, 겸상, 제상에 쓰이며 자그마하고 간편하여 음식물을 부엌에서 직접 날라다 그대로 식사하는 상을 의미한다고 하며 평상시 일반 북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소반 정도가 식생활의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등대』라는 잡지에 실린 고미향이라는 1961년에 북한으로 이사진 일본여성의 환갑상을 보면 김정일이 하사한 환갑상이라서 북한에서는 최고급에 속하는 것일텐데 그 상차림을 보면 각종 과일, 떡, 생선, 과자(빵), 술(맥주), 오리, 케익 등이 있었다. 남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음식을 위로 쌓아 올리는 풍습도 비슷하였다(『등대』 1988, 282호).

그들이 평상시 즐겨먹는 음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잡지『천리마』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⁵⁾.

<표2> 북한 잡지 『천리마』에 나타난 식생활 관련 기사

| | |
|----------|--|
| 1998. 6. | · 염소젖으로 만든 음식 몇가지 - 미음, 떡국, 강냉이 지짐 · 장수에 좋은 비피두스균 |
| 1998. 5. | · 뚝감자 음식 몇가지 - 뚝감자밥, 뚝감자국수, 뚝감자빵, 뚝감자떡, 뚝감자지짐과 튀김/범벅음식 몇가지 - 호박범벅, 땅콩범벅/나물을 맛있게 만들려면 |
| 1998. 4. | ·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간장, 된장 -간장의 재료로 콩과 콩깍지불, 된장의 재료로 강냉이가루와 콩비지를 쓰고 있음/철분이 많은 부루/도토리 음식 몇가지 |
| 1998. 3. | · 강냉이전분빵을 만들려면/강냉이 속으로 엿을 만드는 방법/ 산나불을 넣고 만든 가루음식 |
| 1998. 2. | · 섞음음식 몇가지 - 무우전, 무우설기떡, 무우전/ 고추와 마늘 하루 먹는 양 |
| 1998. 1. | · 가정에서 느타리버섯 기르기 |

5) 북한의 식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천리마』를 주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잡지가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가장 주민의 의식주생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녀성』과 같은 여성잡지를 분석한 결과 의식주 생활에 대한 기사보다는 여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사가 주종을 이루었고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과 같은 중앙신문도 그 성격상 주민생활의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고 있었다.

| |
|---|
| <p>1997.11. · 강냉이 음식 몇가지 - 강냉이 농마만두국, 강냉이 무우싹기떡, 강냉이납새빵</p> <p>1997.10. · 마래의 식량 - 풍육란</p> <p>1997. 8. · 딱감자의 저장·가공 방법/ 왜 마늘이 좋은가</p> <p>1997. 7. · 토장국/ 음식불을 맛있게 만들려면/ 영양가와 약효가 높은 감자</p> <p>1997. 5. · 백해무익한 닭배/ 달팽이 요리의 맛을 돋구려면/ 딱감자</p> <p>1997. 4. · 독특한 민족음료 - 송늬/ 건강에 좋은 보약 - 가시오갈피</p> <p>1997. 3. · 봄철 산나물 음식 몇가지-달래, 방아나물, 들나물</p> <p>1997. 2. ·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산나물</p> |
| <p>1996.12. · 건강에 좋은 약초- 구기자</p> <p>1996.11. · 화보:민족음식소개 - 가지찜</p> <p>1996.10. · 대장염에 좋은 도토리 단졸임 · 김장김치 몇가지 - 통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깍두기</p> <p>1996. 8. · 평양냉면 -옥류관과 청류관</p> <p>1996. 7. · 딱감자/ 시원한 콩국과 깨국/ 약효능이 높은 도마도와 날감자</p> <p>1996. 6. · 음식감셋기와 영양원소/ 썩음식 몇가지</p> <p>1996. 4. · 언니에게 산나물을 보내면서 · 건강에 좋은 산나물- 김일성 교시<산나물은 영양가가 많고 맛이 있습니다> · 술맛에 유혹될때 -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p> <p>1996. 3. · 노화방지식료품 - 마늘된장국</p> |
| <p>1995.10. ·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 - 상아찌(재료:무우, 오이, 풋고추, 마늘, 도마도,</p> <p>1995. 9. · 화보:민족음식소개 - 돼지족발 구이</p> <p>1995. 8. · 시원한 냉국 몇가지-오이랭국, 가지랭국, 가두배추랭국, 미나리랭국, 마역랭국</p> <p>1995. 7. · 북청사과</p> <p>1995. 6. · 암예방치료에 좋은 수산물/ 찢가루는 좋은 건강식료품/ 씨없는 수박 · 불로 우유와 고기를 직접 얻을 수 있을까/ 건강에 좋은 냉이</p> <p>1995. 5. · 화보:광천식료공장-고추장, 간장/ 화보:민족음식소개 - 분탕잡채, 고려인삼차</p> <p>1995. 4. · 고구마합성/ 가시오갈피차</p> <p>1995. 3. · 봄철음식 몇가지 - 애탕국, 썩떡, 썩밥, 냉이, 달래, 미나리, 취, 전달래꽃</p> |
| <p>1994.12. · 보기도 좋고 영양가 높은 납새들/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p> <p>1994. 7. · 화보:민족음식소개 - 풋고추전(만드는 방법 소개)</p> <p>1994. 5. · 화보:민족음식소개 - 두부잡채</p> <p>1994. 3. · 화보:민족음식소개 - 대추정과</p> <p>1994. 2. · 화보:민족음식소개 - 약과/조선의 특산 - 다시마 식품(다시마술, 다시마기부,</p> |

| |
|--|
| 1993. 5. · 자랑 떨치는 우리나라 민족요리기술/ 여러가지 식료품 보관에서 알아야 할 점 |
| 1992.12. · 우리인민의 식생활풍습 1992.10. · 우리 민족의 당과와 음료 1992. 8. · 젓배기 한후 어린이들의 영양음식 |
| 1991.12. · 주부들의 음식습씨 |

북한잡지 『천리마』의 기사를 통해서 북한의 식생활 실태를 보면 첫째, 서구음식문화의 영향은 거의 없다. 특히 빵과 과자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었고 화보에서 어린이 식품 정도에만 약간 있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지나친 서구식 식문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은 반면 북한의 식문화는 상당히 전통적이다.

둘째,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 95년이후에 더욱더 식생활에 대한 기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나물이나 감자, 강냉이와 같은 토산물의 조리방법들,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한다던 간장·된장 등도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방법 등 가계생산에 대한 기사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중되는 식량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가계생산의 증가를 권장하고 있는 듯하며 주거환경에 널려 있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이 안드는 산나물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결국 북한에서 즐겨먹는 반찬은 그들의 토산품 특히 감자와 산나물이 대종을 이루며 특히 된장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일성 교시에서도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조선사람의 식생활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된장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천리마』 1998년 3월호, 70).

넷째, 1991년부터 1998년 6월 호까지 고기반찬이 언급된 것은 고기통조림, 명절상차림의 갈비찜 정도로 매우 적었다. 그만큼 고기반찬 기사가 거의 드물며 일상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의 이상적인 일상생활을 그리고 있는 잡지에서도 육류의 언급이 적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육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육류섭취의 과다로 성인병을 걱정하는 남한과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2) 북한의 의생활 양식

경공업 부문에서의 직물부문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피력된 부분으로 김일성은 경제계획을 통한 의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섬유공업의 중대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섬유공업의 중대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방사기계공장의 설비를 확충하고 그 성능을 다 발휘하게 할 것이며 각종 방직 공장에서는 지금부터 생산능률을 더 많이 높여 인민들의 의복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생활의 해결이 1960년대의 최대목표였으며 1970년대 6개년 계획부터는 고압의복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주분 가공을 널리 조직하여 누구나 다 봄매에 맞고 자기기호에 맞는 옷을 해 입을 수 있게”(『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IV, 115) 하는 것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생활이 여전히 화학섬유를 주축으로 하는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섬유공업은 화학사(인건사와 화학섬유)와 모사, 면사를 혼방한 혼방직 계열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북한은 생산력 면에서는 자급이 가능하나 원자재의 수입 등이 어렵기 때문에 입는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정석홍 1997, 127-128).

북한 당국은 “식의주를 완전히 해결했으며” 1년에 1인당 7벌을 배급받는다고 주장한다⁶⁾ 그러나 실상은 겉옷이 풋 입을 정도가 되었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옷감을 신청하면 옷감을 배급받게 되어 있다(『조선일보』 1987년 2월13일자). 최근에는 이 옷감의 배급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 암거래로 옷감을 구하여 만들어 입는다고 한다. 그리고 의류의 공급은 개별적으로 주문하지 않고 단체로 주문해서 생산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의 통제로 공급물량이 제한되어 있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1년에 1벌 정도만을 배급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통일원 1986, 87).

각 사회계층마다 의류를 공급받는 시기와 횟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6) <동아일보>, 1989년 4월 28일자, 황석영씨와의 기내면담.

옷을 선택적으로 입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각 계층별 의류공급의 기준을 보면 연 1,2회 작업복 한 벌을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그러나 학생과 기사, 교원 등에게는 연 2회 교복과 양복지 한 벌이 각각 염가로 제공된다. 그리고 시·군 지역의 당 비서나 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2급 기업소 이상의 당 부비서, 자배인, 기사장급 등 4호 대상 이상은 2년에 1회씩 양복지 한 벌이 반액으로 제공되고 있다. 배급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가가 매우 비싸므로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길성철, 1984;87). 1990년대에서는 1년에 2번씩 5m천을 살 수 있는 공급표를 받는다. 때때로 양복점에서 지은 옷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내의의 경우 배급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조끼런닝은 일반국민에게 1년에 1벌, 그리고 반소매런닝은 1년에 1벌을 배급하며 동내의의 경우도 1년에 1벌을 준다. 따라서 조끼런닝은 품귀현상을 보인다고 한다(손봉숙외 1992, 102). 즉 ‘팬티나 런닝은 여름철에만 입는 것, 하절기에는 양말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문숙재 1997, 214) 속옷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속옷조차도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옷차림새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며 북한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여성복의 경우 평상복 내지는 작업복의 형식으로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치마를 입는 일이 보편적이다. 1980년대에도 이들이 입는 한복에도 배색을 맞춘다든지, 유행을 탄다든지 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옷차림새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당국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단정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상한 인품과 높은 문화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⁷⁾, “옷차림새는 사람의 정신상태의 반영입니다. 옷을 되는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사업과 생활도 되는대로 합니다”⁸⁾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복의 경향을 『조선여성』의 화보를 통해 살펴보면 북한여성들은 한복을 즐겨 입는데 경축일에 관한 화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한복을 입었고 색깔이 붉은색 계통으로 매우 화려하였다(『조선여성』 1991 - 1996). 반면 작업중인 여성들은 공장에서는 대부분 파란색 계통의 작업복 차림에 붉은 천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으며 회

7) <계절과 옷차림>이라는 글, 『조선여성』 1989년 2월호, 31-32쪽.

8) <멋쟁이>이란 글, 『조선여성』, 1995, 1월호

의 또는 공식행사와 같은 모임에서는 검정색 또는 고동색 등 진한색의 투피스 차림이거나 한복차림이 반반이었다.

또한 화보를 통하여 <편지>라는 북한의 최신 정희극에 나오는 배우들의 옷차림을 보면 협동농장의 일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배우들 대부분 작업복 차림으로 여성들의 작업복이 특히 다양한 색깔로 청색, 하얀색과 녹색, 보라색, 분홍색 등 구색을 맞추어 입고 있었다(『조선여성』 1998년 7월호).

특히 모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심은 주목을 끈다. “여성들이 계절과 나이에 맞게 모자를 쓰면 옷차림을 세련되게 하는데 영향을 주어 몸매를 돋우고 화려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인품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잡지 『천리마』에서 <여성들의 겨울모자>, <모자를 썼을 때의 레절> 등에 대해서 기사를 실고 있는 등 모자패션에 대하여 이례적 관심을 나타냈다(『천리마』 1994년 12월 호).

모자를 어떻게 진사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문화적 수양정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여성들의 모자는 하나의 장식품과도 같은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돋구어 준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하여 배의에 이긋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북한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년여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민속놀아로써 율놀이 사진을 보면 중년의 명절 옷차림을 엿볼 수 있는데 사진의 총 9명 가운데 한복을 입은 여성이 5명으로 역시 화려한 의상이었으며 양복을 입은 3명의 여성은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고 레이스 챙모자를 쓴 여성도 2명이나 되어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년여성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북한에서 소위 ‘멋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은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멋쟁이>란 글, 『조선여성』 1995년 1호)

마흔이 되었을까한 녀인이었는데 진자주색 외투에 닙알색 뜨개모자를 단정히 쓰고 까만 털구두를 만질만질하게 닙아 신었다. 감빛 수갑을 낀 손에 연남색 가방을 들었는데 연한 화장으로 흰한 얼굴이 더 밝고 젊잖아 보였고 더운색 계통의 조화로운 차림새로 인하여 눈우를 걸이오는 사람치고는 도무지 추워 보이질 않았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1984년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신사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장려하고 ‘짜짜이 옷’(코비), 점피 등도 유행, 북식문화의 다양화, 세련화의 경향을 보이

기 시작했다(정석홍 1997, 192). “나뉜 옷을 잘 맞추어 입자면 몸매·살색·무늬·재질·색 등을 고려할 것”이라든지(『천리마』 1994년 6월호, 142) “갓난아기의 옷차림은 곧 어머니의 옷차림이다. 곱고 화려하면서도 위생학적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어야 한다”(『천리마』 1996년 3월, 90)라고 역시 여성이외의 가족원의 옷차림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신발도 하이힐을 신도록 권장되고 있는데 “신발은 사람들의 몸차림을 단정히 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라고 하면서 하이힐은 키가 커 보이고 몸매가 날씬해 보이며 피로를 덜어준다고 권장하고 있다(『천리마』 1994년 6월호, 143). “맵시있고 질 좋은 여러 가지 신발을 문수별로 더 많이 생산 공급하자”라는 구호 아래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신발은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에서 생산된다. 가방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듯한데 새형의 가방들을 소개한 잡지(『천리마』 1995년 9월호)를 보면 빨간색, 짙은 색, 검은색, 청색 등 다양한 색깔의 가죽가방을 전시하고 있으나 디자인 면에서나 색상 면에서 우리 나라 70년대를 연상시켰다. 이러한 가방 등은 광천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원산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등지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화장품 생산은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보를 통해서 본 화장품의 종류는 북한에서 특산물이라고 자랑하는 인삼화장품들과 세수 비누와 치약들, 립스틱 등이 있었는데 포장은 상당히 조야한 것들이었다(『천리마』 1994년 5월호).

북한에서는 머리모양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머리를 깨끗하고 곱게 단정하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애절임을 강조하면서 머리가 단정하지 않으면 인품이 떨어진다고 한다. 공훈미용사가 텔레비전에 나와 얼굴형태와 이마모양에 따라 여러 형태의 머리모양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름머리, 청추머리, 들국화머리, 대학생머리, 틀머리 등 머리모양에 따라 각종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파마는 부인들은 물론 할머니들까지 하는데 약 3원내지 5원이 들며 약을 사서 집에서 하기도 한다⁹⁾. 머리모양에 대한 관심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남자들의 짧은 머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남자들 속에는 짧은 머리가 유행하고 있다. 짧은 머리는 강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시대 사람들의 높은 사상감정과 미감을 담은 고상하고 단정한 머리 단장이다”(『천리마』 1998년 1월호, 86).

9) 임정화씨의 증언, 손봉숙, 1991; 105.

그러나 여반철씨 부인 이금옥씨의 증언에 의하면 불자가 귀한 북한에서는 헤저 입지 못할 어른 옷은 이리저리 줄여서 어린이 옷으로 만든다든지, 재활용품을 만들어 생산·판매하는 8.3인민소비품 운동¹⁰⁾을 한다고 한다. 즉 북한에서는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균중적으로 내부에비를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게 하는 폭넓은 대중노동”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¹¹⁾.

다음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잡지 『천리마』에 실린 의생활관련 기사들을 정리하여 최근의 북한의 의생활 모습을 파악하였다. 아래의 기사들을 보건대 북한의 의생활의 특징은 첫째, 전통적인 옷,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평상복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다. 한복의 스타일은 치마길이가 짧고 고름, 깃 등의 모습이 단순화되는 등 생활한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둘째, 기사의 내용이 다양한 의상, 머리, 악세사리의 소개보다는 어떤 차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의복의 다양성이라든지, 개성이라는 가치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스타일만이 존재할 뿐이다. 셋째, 옷차림과 외모에 대한 관심과 장려가 매우 크다. 특히 색깔맞추기나 머리단장 등 옷이외의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기사가 관심을 끌었다. 넷째, 천리마의 기사는 식생활과 의생활에 대한 기사가 대중을 이루었는데 식생활에 비해 의생활 기사가 현격히 적었다. 북한사회의 식량난과 식생활 위주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표3> 북한잡지 『천리마』에 실린 의생활관련 기사

| |
|-------------------------------------|
| 1998. 2 북의 생김새와 깃의 형태 |
| 1998. 1 남자 짧은 머리 |
| 1997. 4 조선마지와 저고리의 유래 ¹⁾ |
| 1996. 11 조선옷 나림질 어떤 순서로조선옷에서 색과 장식 |
| 1996. 8 조선치마 저고리 |
| 1996. 3 갓난애기의 옷차림/미래의 옷 |

10) 1984.8.3일에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제품 전시회를 방문한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한 8.3 인민소비품 운동은 지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유휴노동력, 여유자재, 폐기품 등을 이용하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이를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한 운동이다(전홍덕·박진, 1995;724).

11) 『조선여성』, 1994년 4호.

| | |
|----------|---|
| 1995. 10 | 옷차림을 처녀때처럼 |
| 1995. 9 | 조선의 특산:새형의 가방들 |
| 1995. 7 | 여름철 이부자리 소독 |
| 1995. 3 | 옷차림과 색깔 |
| 1994. 12 | 모자를 썼을 때의 레절 |
| 1994. 6 |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옷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쁜 옷을 잘 맞추어 입자면/굽높은 신발을 신으면 왜 좋은가 |
| 1993. 8 | 어린이 치똥과 색동옷 |
| 1993. 3 |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조선옷 |
| 1993. 2 | 남자조선옷 |
| 1993. 1 | 고유한 조선옷감 |
| 1992. 8 | 새로 나온 가을 옷들 |
| 1992. 7 | 옷손질을 잘하려면 |
| 1992. 6 | 옷차림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갓춤새 |
| 1992. 5 | 옷차림과 몸단장(2) |
| 1992. 4 | 새로운 천과 옷/옷차림과 몸단장(1) |
| 1991. 12 | 보기 좋은 조선여자 차림/처녀들의 머리단장 |
| 1991. 11 | 조선치마 몇가지 |
| 1991. 8 | 치마저고리 색깔마추기 |

3) 북한의 주생활 양식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특징을 보면(정석홍 1997, 196)

첫째, 계급에 따라 주택이 배정되며 계급적으로 높은 층과 낮은 층의 주거환경과 주택구조도 격차가 있다(<표4> 참조).

둘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영주택, 연립주택의 형식으로 집단거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택 규모 및 시설은 주택의 규격화·집단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내부생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내·외장도 거의 획일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마다 독립적 부대시설도 제한되어 있다

셋째, 개인 주택 소유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과거에 소유한 가옥은 그대로 소유권은 인정하되 전매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심한 주택 부족 때문에 직장 이동으로 도시로 전입되거나 결혼하여 분가할 경우, 주택배정이 오래 걸린다.

다섯째, 도시 아파트의 경우도 외형은 그럴듯하나 내부는 고층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거나 중앙식 냉난방 시설도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여섯째, 농촌의 경우 주택개량 사업을 받았으나 형식만 갖추었을 뿐 환경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간오지의 농촌지붕은 너와, 돌기와 등으로 위어진 경우가 태반이다.

<표4> 북한의 계층별 주택구조

| 구분 | 주 택 형 | 가 옥 구 조 | 입 주 대 상 자 |
|----|----------------|---|---|
| 특호 | 독립고급주택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장치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
| 4호 | 신형고중아파트 | ·방 2개 이상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 시설 | ·중앙당 과장급 이상 ·정무원 국장급 이상 ·대학 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
| 3호 |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 ·방 2개 ·부엌 ·창고 |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
| 2호 | 일반아파트 | ·방 1-2 ·마루방1, 부엌1 | ·인민학교·고등학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
| 1호 | 집단 공영주택 | ·방 1-2개, 부엌1 | ·발단 근로자 및 사무원 |
| | 농촌문화주택 | ·단층 연립주택 ·방2, 부엌1, 창고1 | ·협동농장원 |
| | 구 옥 | ·방 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 ·변두리 농민 |

자료: 통일원, 『북한개요(‘95)』, p.290.

북한에서는 주택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은 개인끼리 사고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주택을 배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권이나 사 사고 판다. 얼마나 배정받기 힘든가하면 “결혼하면 집을 바로 배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간부 지식들뿐” 혹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성분 좋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자신이 당간부가 아닌 한 40-45세까지 집을 배정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동거살

이>, <하모니카집>, 그리고 대가족을 이루며 한집에 사는 경우도 많다. 동거살이의 실태를 보면 “평양의 한 아파트단지가 2백호라면 상주인구는 3백50가구가 사는데 이렇게 동거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불편한 것은 화장실 사용 문제” “회령에서 방 두칸에 부엌하나가 있는 단독주택에서 6가구가 살았었다”라고 증언(남북문제연구소b 1997, 97)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일명 하모니카 주택은 가로 3m, 세로 6m의 가구를 다닥다닥 붙여 일렬로 이어지게 건축한 것으로써 하모니카처럼 생긴 것으로 각 가구는 대개 단층구조로 방1개에 부엌이 딸려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공동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100여가구가 3칸짜리 공동변소를 함께 사용한다고 한다(문숙재 1997, 216).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습을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보면(남북문제연구소b 1997, 97),

아파트는 보통 방 2개에 10평정도다. 지방에는 중앙난방이 안돼 가구마다 연탄을 땀다. 화장실은 층마다 공동으로 지어 한층 21가구 정도가 사용한다...합흥의 아파트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다.... 아파트를 배정받아도 구조공사만 끝낸 상태에서 입주함으로써 집주인이 내장공사를 해서 산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전력난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80년대에는 전기사용은 물론 온수, 난방까지 별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일반주민 거주지인 선교구역, 대동강 구역 등에는 전력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전력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각 가정에서는 장마당에서 난로를 사다놓고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모아 매기도 하고 나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롱까지 부수어 쓰고 있으며 집안 화장실의 수도관이 얼어 사용을 못하게 되자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대변을 신문에 싸서 창문으로 던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5월, 13-14).

어떤 귀순자는 “형편이 좋다는 평양 청춘거리의 군관아파트에서도 잘때는 외투까지 입고 잔다.....중앙난방 설비가 낡아 고장이 잦고 연료가 부족한탓”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개성 통일거리의 20층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다. 20층에 사는 노인들은 한번 올라가면 아예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은 어떤 모습인가? 청진에서 노동자·건축설계사를 했던 김영성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99).

주택은 대부분 단층 판잣집으로 공동 생활한다. 화장실도 물론 공동으로 사용한다. 부산에선 특히 일제시대 직원주택의 마루방을 온돌로 개조한 것이 많았다. 단층 판잣집이 아니면 지방에선 한국의 2-3층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송림식 주택이 흔하다. 송림식 주택도 분양받은 개인이 보완 공사를 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파트와 같다.

주택배정과 세집짓기는 각급 행정위(도,시,군에 상당)의 도시경영과 소관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일단 배정되면 사용권은 반영구적이다. 동거살림집에 세집을 배정받으면 주인에게 돈 대신 부식물을 갖다 주며 뇌물을 주어야 집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퇴직을 앞둔 당간부 등은 퇴직후 생활할 집짓기에 치중하게 마련인데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집짓기>는 가능할까? 귀순자 김영성씨가 밝히는 집짓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100).

주로 북송동포나 도행정위원장, 국장 등 당간부들이 달러를 주고 토지 사용권을 획득해 개인주택을 짓는데 텃밭이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적인 주택관리와 같이 개인주택은 도행정위원회 산하 도시계획처에서 관리함으로 여기에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가해 땅을 구한다. 토지 사용료는 없지만 개인주택의 자재 등 건설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개인주택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처에서 도시계획이 잡히지 않은 곳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농토를 사용하려면 그만큼의 농지를 마련 대토한 후 농촌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개인주택 건설을 잘 승인해주지 않으므로 승인 받기 위해 보통 5천원 정도의 뇌물을 주어야 한다.

농촌의 주택모습은 어떠한가? 또 다른 귀순자의 증인을 보면(남북문제연구소b 1997, 99),

신평읍내 주택은 대부분 방 하나 혹은 둘짜리 단층 판잣집이고 농촌의 문화주택은 방이 2개였다..... 탄광노동자의 경우 가구당 방이 하나씩이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화장실은 항상 밭더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물이 넘친다.

다음과 같은 잡지에 실린 <농촌살림집 트라꾸리기>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평화롭고 넉넉해 보여 앞에서 기술한 북한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다(『천리마』 1996년 9월, 87).

나드는 문에 덕대를 크게 매고 거기에 포도나무와 호박넝쿨을 올려 그늘지게 하는 그밖의 집집승우리들은 집앞 울타리쪽에 만드는 것이 좋다.....변소는 재우리옆에 것이 좋다. 솥터와 세수대, 꽃밭과 터밭은 살림방앞과 부엌앞에 만드는 것이 좋다.

2. 선택적 소비활동 양식

1) 혼상제 양식

북한에서는 1955년에 이미 허례허식을 없애고 물질과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관혼상제 간소화 운동이 벌어졌다.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혼상제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귀순자나 방북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 북한에서 혼상제를 치루는 가정이 모두 똑같지는 않으며 세대주의 지위나 경제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치루는 것으로 짐작된다(박혜란,1997;266).

북한에서는 구식혼은 거의 사라지고 약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리고 혼인 적령기도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 방침에 따라 27-28세(최근 30세 정도)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결혼식은 배우자를 결정한 후 해당 직장의 당 책임자 또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후 양가부모끼리 만나는 상견례를 하고 간단한 예물을 교환한 후 식을 올리게 된다. 시장은 자기 집이나 공공장소 또는 직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결혼식당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복은 신랑의 경우 테트론 양복, 신부는 연분홍 빛 짧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왼쪽 가슴에는 두 사람 모두 김일성 배지를 달아야 한다. 결혼식 후에도 간단한 꽃뭉음을 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한 다음 사진을 찍는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검소하게 하는 결혼식의 한 예가 잡지 『조선여성』에 제시되었다(조선여성, 1994년 2호).

넓은 방 가운데 큰 상을 놓고 중심에 활짝 핀 김일성화와 붉게 타는 김정일화를 놓았고 간소한 음식들이 놓여있었습니다. 방북판에 의젓한 새서방과 어여쁜 새색시가 나란히 자리잡았고 가족과 친척들이 단란하게 모여 앉았는데 오락회가 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출한 사회주의식 혼례식은 그리 흔치 않은 듯하다. 실제로는 상당히 풍성한(북한의 경제사정에서는) 상차림과 혼례행사가 곁들여진다. 북한의 혼례절차와

풍습을 귀순자의 증언 속에서 발췌해 보았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 183-186).

1. 먼저 혼례식행사를 보면, 혼례식은 대개 신부집이나 신랑집에서 차례로 <혼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한다. 함경도지방은 신부쪽이 모든 혼수를 준비한다. 평안도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약혼식이 치러지면 그날밤 바로 신부집에서 초례(합방)을 치르도록 하는 이색 풍속이 적지않게 퍼져있다.
2. 약혼식은 신부집에서 하지만 술, 음식은 신랑집에서 날라온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날짜가 가깝게 잡히면 합방을 허용하기도 한다. 약혼 선물은 시계, 수건, 화장품이다. 또는 약혼식에 신랑측에서 음식, 단색 치마저고리, 화장품, 양복지 등을 보내오기도 한다.
3. 약혼식을 한 며칠뒤에 대체로 결혼식을 한다. 결혼비용은 신부측이 3천-4천원정도 든다. 살림장만을 많이 하면 3만-4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함북에서는 <남자는 뺄스만 입고 장가든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살림장만은 전적으로 신부측 몫이다.
4. 결혼예불은 금반지, 만년필 정도가 통상적이고 남자는 시계나 화장품, 펠기도구 등, 여자는 시부모 양복지나 시대 선물로 시누이, 시동생에게 옷한벌이나 치마 한벌 감, 나일론 양말 한켄레 등을 마련한다. 신부쪽에 보낸 함에는 여자 치마와 화장품을 담았다.
5. 부조금은 대개 알짜친구는 1백원, 직장 동료는 10원을 낸다. 부조금의 최하가 5원이다(부조금이 총 2천 2백원 들어왔다고 증언하기도 함). 결혼할 때 친척들이 술, 음식등을 하나씩 맡기도 한다.
6.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사회자의 간단한 선언이 끝나고 노래로 이어진다. <오직 한마음>같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노래 등을 먼저 부른 뒤 유행하는 노래를 독창이나 합창을 하며 흥겹게 논다. 결혼식이 끝날 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를 부른다.
7. 상차림을 보면, 신랑이 받는 결혼상에는 맨앞에 가자미나 명태, 분어같은 생선류를 놓고 다음에 술, 참쌀과자, 사과, 배 등을 겹쳐 담아낸다. 닭 2마리와 큰 떡도 곁들인다. 상에는 국수, 계란, 사탕 등도 함께 놓는데 개수는 짝수로 한다. 생선을 구하지 못하면 밀가루로 고기모양을 만들어 상위에 올리기도 한다. 손님상에는 국수와 시금치, 고사리, 무 등 나물 4-5가지, 그리고 사람수에 맞춰 떡그릇(송편,찰떡 등)하나, 부식접시(돼지고기 한토막, 삶은 계란 반쪽, 사과 반쪽, 가지미 등)하나씩 돌아간다. 잔치를 하려면 1-2년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8. 혼례식은 신부집에서 먼저 하고 다음에 신랑집에서 한다. 신부를 신랑집에 태려갈

때 남자쪽이 차를 준비해 살림살이까지 싣고 간다. 강계에선 모든 세간을 여자가 마련하고 집은 남자가 준비한다. 신랑집에서 하는 잔치가 진짜 결혼식인 셈인데 부모님께 술을 따르고 사진을 찍는다

9. 신혼살림은 재력에 따라 5장 6기(5장은 옷장, 이불장, 찬장, 신장, 책장이며 6기는 냉동기, 세탁기, 선풍기, 전화기, 녹음기, 재봉기 등)를 가져가기도 한다(정석홍 1997, 227). 최소한 5장은 마련하려고 애쓴다. 신부가 TV를 장만해 오면 시집에서 떠받들인다. 이불 3채와 그릇은 기본이고 이불장, 양복장 정도면 잘 가져가는 편이다. 요즘 큰 경대를 갖추는게 유행이다.

북한에서는 혼례가 상당히 크게 치루어 지는 듯하다. 부조금의 규모도 일반적인 노동자의 월급을 80원에서 100원으로 볼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정도다. 그리고 남한의 상업화된 혼례문화와 다를 뿐이지 혼례절차나 신부측에서의 살림장만, 피로연의 풍성함 등 남북한의 혼례문화는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장려하는 혼례문화와 실제의 혼례문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장례는 1-2일장으로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도시의 경우 녹화사업소가 장례를 대부분 맡아서 하고 시골에서는 가정별로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행한다. 상복은 입지 않으며 상장이나 검은 천을 두르는 것으로 하며 해당소재지의 지정된 공동묘지에 매장하는데 북한에서는 최근 묘지난으로 화장을 권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박혜란 1997, 267). 그런데 최근의 귀순자의 증언을 보면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고 직장 동료들이 와서 상기일을 도와주며 밤샘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글은 장례때의 모습을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간추려 보았다(남북문제연구소 1997, 180-181).

장례식때 직장에서 술, 고기 등을 마련해준다. 공장에서는 작업반장이 노동자 몇 명을 미리 보내 상을 당한 집의 일을 돕게 한다. 저녁에 공장일이 끝나면 모두 상가로 몰려간다. 술을 마시며 밤을 샌다. 부조금은 직장에서 1인당 1-2원씩 거둔다. 친척들은 돈을 몇 십원씩 내거나 술을 마련해간다. 장지까지는 직장 차를 이용한다....대개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불법으로 야산에 묘지를 해놓은 곳도 일부 있다..... 도마다 화장터가 하나씩 있어 일부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상주라 하더라도 리본이나 띠를 하지 않는다....곡도 없다. 술을 붓고 절하고 조의를 표하는 정도다. 향은 안피운다. 평양에서는 낙랑구역 정백동에 화장 시설을 크게 지어 70년대 중반까지 화장하기도 했지만 노인들이 김일성에게 탄원을 한 뒤부터 화장 습속은 시들해졌다....

평양에는 장의사도 있고 아파트 형태의 공동묘지도 있지만.....황해도에 가보니 함북과는 장례 풍습이 달랐다. 장사를 치를 때 산에 묘지리를 판 뒤 관을 뜯어 사람만 묻고 빈관은 다시 되가져와 농장원들이 가구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위의 귀순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정조사에 이웃끼리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전통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았다. 그리고 화장에 대한 거부풍조도 남한과 비슷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조금을 내는 형태나 그 양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례절차나 그 격식에 있어서 상당히 간소화되었고 묘지도 거의 공동묘지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장례제도에 있어서 그 이태올로기는 크게 변한 것이 없이 정치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형식만이 바뀌었다.

제사는 종전 후부터 금지했으나 1960년대 말부터 적개존속의 사망시 탈상까지(통상 1년) 제사지내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추석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등 지금까지 살아왔던 축소화된 제사풍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은 이들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 181-183).

아버지 제사는 모든 가정에서 지낸다. 제사는 신정 새벽과 기일, 추석, 한식 등을 지내는 편이다. 추석때는 제대로 격식을 갖춘 제사를 지내고 기일에는 3년쯤 지내다 그 뒤로는 안지낸다. 한식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해서 91년께부터 안지내는 풍습이 생겼다..... 읍력설은 90년대들어와 쇠기 시작했다.....보통 5촌까지는 1년에 한 두 차례 모이는 편이다. 삼촌이나 사촌간에는 가능하면 자주 모여려 한다. 추석에는 묘지를 관리하는 친척집에 대개 모인다.

농촌에서나 일부 도시 가정에서는 전래의 제사의식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집안끼리 모여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제사상 차림은 전통적인 상차림을 금지하고 밥, 떡, 생선, 나물 등으로 간소화시켰다.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제사풍경을 알 수 있다(한성호 외 1994, 김 성씨 수기).

여기서는 흥동백서니 뷔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격식에 맞게 차려 놓지만 북한에서는 옥수수가루로 만든 불고기 모조품과 돼지고기 모조품을 몇 개 올려놓고 귀한 이밥 한 그릇에 배춧국, 정우에 따라서는 고깃국을 차려 놓는 게 고작이며 제사절차

도 여기서처럼 분향을 하고 몇 번 절을 하는 등 복잡하지 않다, 아버님이 밥 한술 떠서 국에 놓은 뒤 온 가족이 머리 숙여 묵상하는 게 전부다.....그래도 제삿날은 명절날 같았다. 제사상에 놓았던 이밥과 고깃국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명절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 국가명절, 민족 고유명절로 설날, 음력설날, 김정일 생일(2.16), 한식, 김일성 생일(4.15), 국제노동자절(5.1), 단오, 해방기념일(8.15), 추석, 정권 창건일(9.9), 노동당 창건일(10.10), 헌법절(12.27)이 있다(통일원 1995, 323). 북한주민에게는 명절은 평소와 다른 꾸밈한 배급 때문에도 즐거운 날이었는데 최근의 식량난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설날 하루분의 백미공급이 중단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잡곡마저 배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나 성묘, 명절 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귀순자들은 “70년대 후반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나 성묘가 봉건 잔재로 치부됐으나 지금은 추석같은 날은 귀성객들로 열차가 미어터진다. 주민 대부분도 추석 이틀간은 아예 여행증 없이 나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낸다. 그러나 고향이나 산소가 거주지에서 먼 곳이면 여행할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민족 대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 178).

한편 직장단위로 마련하는 망년회, 설날 아침에는 동료끼리 서로 초대를해서 음식과 술을 나눠 먹는 풍습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박혜란 1997, 269). 어느 집이나 환갑잔치는 거르지 않으려고 애쓰며 환갑잔치는 동네잔치처럼 치뤄지며 “축하부조금은 5-10원쯤이고 가까운 사이면 50-1백원 정도 낸다. 환갑은 모두 큰 잔치로 여기는 분위기이고 진갑, 팔순잔치를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 고 할 정도로 풍성하게 치뤄진다.

2) 문화 · 여가생활

북한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주민의 모든 생활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시설이 설치되고 모든 사회성원은 집단적 문화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집단생활이 곧 <군중문화>라는 것이고 북한은 당시책의 선전활동과 공산주의 교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바 군중문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혁명을 내세우면서 더욱

이 균중문화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집단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여가도 개인활동이라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며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인 경우 기사와 작업과 사상학습으로 하루 일과가 빠듯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가나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이 없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휴일에는 가능한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가지고 인근 산이나 강가, 바닷가로 ‘들놀이’를 가려고 노력한다(박성희 1995, 142) 대개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여가생활은 독서나 산보, TV 시청이나 라디오청취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쇼팽, 문화생활, 체육생활 등으로 이루어 진다(주강현a 1994, 627). 다만 텔레비전은 일정한 시간(밤 10시)이후에는 방영이 되지 않는다(이온죽 1993, 317).

술집도 없고 특별한 오락시설도 안 보이는 사회에서 퇴근 후(하오 3시 30분 퇴근)의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기자가 물으니 통일선보 논설위원인 안내원의 답변이 “남기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돌봐주고, 책도 읽으면서 지낸다”고 한다. 공원산책과 낚시가 평양시민들의 가장 대중적인 소일거리라는 것이다(황병선 외 1993,267).

취미생활이나 오락수단으로 영화나 연극관람, 교예관람, 음악감상도 주된 활동들인데 휴일에 가족끼리 보기도 하고 직장단위로 조직해서 보기도 하는데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는 월1-2회 의무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며 관람 후에는 토론회를 조직한다고 한다(주강현a 1994, 630). 그러나 북한의 영화는 사상교양이나 선전선동물로 주민 1인당 연간 관람횟수가 평균 11회를 상회할 만큼 영화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주민들은 철도절, 수산절 등 노동자가 해당되는 날에는 직장에서 조직하여 일요일날 하루를 내어 놀러 간다. 놀이에 가면 체육대회도 하고 노래부르기도 하면서 논다(박해란 1997, 272). 그러나 귀순자들은 실제로 영화감상과 같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취미생활 운운했다가는 부르조아 사상을 지닌 자로 낙인찍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딱 알맞다고 한다¹²⁾

김정일은 ‘우리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나라의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고

12) 최봉래 씨 증언, 한성호 외(1994), 44쪽

있다. 새로 건설된 평양보링그관에 대한 소개화보를 보면 한증탕, 안마휴게실, 당구장, 식당, 150석을 가진 회의실, 탈의실, 세면실 등을 갖추고 있다(『천리마』 1994년 5월호). 물론 대외홍보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평양보링그관을 일반 평양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렵겠지만 상류층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산식의 불링장을 통해 상류층의 여가생활을 엿볼 수 있다.

만경대 광복거리에 있는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은 연건평 3천여 평방미터(약 31,200 평, 높이 60m)의 8층 석조건물로서 중앙건물과 함께 과학동, 예능동, 체육관, 수영관, 극장 등을 수용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690여 개의 방에 1만 2천 여명의 학생들이 취미에 따라 과외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이온죽 1993, 320)

또한 북한에는 놀이공원시설도 있다. 최근 『천리마』는 화보로 <만경대 유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배그내’도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천리마』 1996년 4월호). 화보를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만경대 유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시민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반시민의 놀이공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문화생활이 사회주의 전형적인 모습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2차 고위급 회담에 다녀온 기자의 방문기를 보면 목란관에서 저녁만찬이 상당히 자본주의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 였다고 적고 있다. “정작 더욱 자본주의적인 것은 식후 공연이 였다. 양쪽 대리석 벽면이 열리면서 노출된 조명대가 빛을 쏘는 속에 중앙 벽의 무대가 열렸다. 전자기타, 키보드, 색스폰, 드럼 등을 갖춘 15인조 ‘왕재산 경음악단’의 디스코 리듬의 연주가 첫순서, 현란한 조명 속에 10여 명의 무희가 나와 다리를 번쩍 치켜올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신나게 춤을 췄다..... 옆자리에 앉은 노동신문 논평원은 이처럼 전자악기를 갖춘 악단이 왕재산 경음악단 말고도 보천보 전자악단, 만수대 예술단과 인민군 합주단의 여성 기악조 등 4곳이나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딱딱하고 폐쇄적이라지만 이런 공연도 할만큼 달라졌다고 하였다”

비사회주의적인 모습은 외국인접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의주 등 고등학교 고학년인 16-17세에서 20대 후반인 간부 부유층 자녀들 외화벌이로 돈을 번 청소년들이 도박을 즐겨하고 있으며 부유한 간부집 자녀나 장사꾼 자녀들이 망나니패를 조직하여 간머리에 몸에 붙는 바지 등을 즐겨 입고 강도 짓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9월호, 30).

3) 교통시설

북한의 1991년 말의 도로길이는 3만 4천km지만 포장은 고속도로 5백 24 km를 포함해 1천 8백 60km, 포장률이 8.1%, 시내만 벗어나면 곧바로 비포장 상태이다. 도시간 정기버스는 없고 대도시의 경우 버스와 무궤도 전차가 있으나 운행이 불규칙적이며(원래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5분 간격) 시, 군마다 교외에 농촌버스가 있으나 85년 이후 일부 운행이 중단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불규칙적으로 운행되므로 실제론 화물트럭을 많이 이용한다. 자전기도 흔하지 않다고 한다(남북문제연구소b 1997,159).

북한방문기의 내용가운데 북한의 교통시설에 대한 글귀를 모아보면 북한의 교통시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상당히 낙후된 교통시설과 현대식 교통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산허리를 타고 패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북탄 자동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일제시대부터 있었다는 북탄 자동차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몇 십년의 풍상으로 온통 녹슬은 그 자동차는 가쁘게 연기를 뿜으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남북문제연구소a 1996, 9).

최근 3차례 북한방문을 한 중앙일보의 북한답사기를 보면 평양의 도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¹³⁾.

평양비행장에 내려 30여분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왕래하는 차량이 너무 적은 것에 놀라게 된다. 도로 뒀에는 각양 각색의 차림에 크고 작은 배낭을 둘러맨 주민들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 개성 등 지방도시에선 자전거 이용자가 많았다. 북한당국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까지는 일반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있다. 평양-개성, 평양-묘향산 고속도로에는 달리는 차량이 너무 적어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평양시민의 출퇴근 교통수단은 지하철-궤도전차-무궤도전차가 기본이고 자전거를 타는 주민도 많다. 정거장 어디에나 시민들이 남비는 편이지만 가지런히 줄을 잘 서 있어 질서가 느껴졌다. 전차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승객이 꽉 차 있는 데서 평양의 출퇴근 교통난이 여간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13)중앙일보, “북녘은 지금, 3차례 방북답사를 마치고”, 1998년 7월 29일자

이온죽의 북한방문답사기에서도 북한 모습은 한산하다(1993, 309).

평양까지 약 2시간여 이상을 달리는 사이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지나가는 길에 몇 번인가, 길가에서 약간 거리를 둔 곳에 위치한 3,4층 정도 높이의 농촌 아파트를 보았으나 신기하게도 그 아파트 건물근처에는 사람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없음은 물론 천연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없고 창틀이나 유리 창문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거리 여행 수단으로 북한에서는 열차가 일반적이다. 열차는 이미 <피난열차>가 되었고 늘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연착은 다반사이지만 그 사유를 고지하는 일은 없다. 겨울이나 봄의 열차는 더욱 연착이 잦은데 거의 모든 노선이 단선인데다 선로가 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다음은 귀순자들이 전하는 열차풍경이다(남북문제연구소b 1977, 152-157).

열차는 언제나 콩나물시루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 할머니가 놀려 있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한번은 임산부가 났는데 승객들한테 놀린채 움직이지 못해 젊은이 서너사람이 인(人)의 장막을 쳐 구해준 적도 있다. 화장실이든 승강대든 어느 곳이나 사람들로 꽉차 뒤늦게 오르는 사람들은 객차 지붕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유리창이 많이 깨져 겨울에는 무척 춥다.....남포-회령간 열차는 통상 13시간 걸린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이 걸리는 수가 많다. 한번 갈아타야 하는데 도착과 출발시각이 일정치 않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열차안에선 자리다툼을 벌이다 싸움도 많이 벌어진다. 담배를 뺏거나 칼을 꺼내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먼길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지독한 냄새 및 빈대와도 싸워야 한다.....함흥-신상, 함흥-고원간 통근 열차가 있다. 함흥-서호간은 뽕뽕이차(디젤 증류차)인데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 운행한다. 이 지역은 당국에서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늘 만원이다 보니 단속도 할 수 없다.....열차안에는 면도칼로 주머니를 찢고 훔쳐가는 소매치기가 많다....배낭도둑은 대역섯명이 한조인데 한명이 배낭을 잡으면 다른 한명이 배낭끈을 잘라내고 뛰는 식이다.....버스에도 열차처럼 소매치기가 들끓는다....여성들은 빈발하는 성추행에도 시달려야 한다. 다리나 젖가슴을 만지는 정도는 특하면 일어나는 데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분위기가 탓에 사건화되지 않는다.....열차마다 1-2량의 침대차를 달고 다닌다. 침대차 한방은 2층침대가 양쪽에 있으므로 4인용이다. 침대차는 안전원이 지키므로 일반 주민은 들어갈 수 없다. 상좌이상 군관이거나 정치국원, 비서국 비준대상인 군

당 책임비서급 이상, 군 행정위원장, 도 치장급이상이 이용 대상이다.....침대차를 매단 열차에는 객차 1량에 외화매대가 있다. 밀차도 있는데 밀차에는 음료수, 껌(도시락) 등이 있다. 87년부터는 식당열차안에도 양권제를 실시하고 있다.....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기차표를 끊지 않는다....여행중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 안전원들도 단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여행은 당의 허가에 의해 <여행증>을 소지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행객들을 위한 <휴게소>는 있게 마련이다. 이온죽의 북한방문기를 보면 규모면에서 두가지 종류의 휴게소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편인 간이휴게소에는 내부에 진열해 놓은 물품은 과자류와 술, 담배 정도였고 서양에서 수입한 양담배, 양주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다. 과자의 포장에는 우리말 이름과 영어로 동시에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규모가 큰 <통천 휴게소>는 도라지 말린 것이라든지, 약초말린 것, 은단, 전복 새끼 말린 것, 비섯 등이 술, 담배, 과자와 더불어 판매되고 있었다(이온죽 1993, 309-325).

3. 소결 -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의 특징

앞에서는 먼저 북한의 소비환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북한 소비생활 실태를 크게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식·의·주 생활과 婚喪祭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 그리고 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선택적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생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식생활에서는 주식인 쌀의 공급마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기, 식용유, 과일 등의 부식의 양과 질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식생활의 내용이 주로 된장, 고추장 등 장류와 각종 남새(채소)류 특히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을 주로 먹고 있었다. 고기는 상당히 귀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었다.

의생활에서는 남자들은 주로 인면복, 신사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나이든 여성일수록 작업복 차림이나 짙은 색깔로 입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밝은 정장차림으로 옷차림새에 신경을 쓰고 있다. 1990년대에서는 특히 사회전체적으로 남녀모두 옷차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의류산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류층

등 고위간부급 자녀들은 주로 외제만을 소비하는 등 계층간 위화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주생활의 경우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모니카 주택, 고층 아파트 등은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주택부족으로 최악의 주택마저 배정받기조차 힘들고 배정받기 위해서는 수년을 기다리고 뇌물을 먹여야 하는 등 주거수준이 매우 낮다. 또한 여러 가족이 한 집에 동거하는 <동거살이>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주택은 잠자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혼상제 양식은 축의금 등 상부상조의 정신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었고 축의금의 크기 등이 매우 큰 것은 남한의 소비양식과 비슷하였다. 환갑잔치나 제사, 명절, 그리고 장례 절차에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소비양식으로 상당히 간소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에 전통적인 행사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절대적인 물자부족으로 인해 간소화하는 것이지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것을 아닌 듯하다.

문화·여가생활은 개인적이며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주민들 교육용으로 다양한 문화매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선택권이 거의 없다. 의무적으로 단지 그것들을 수용할 뿐이기 때문에 여가나 문화에 대한 특별한 욕구도 없는 듯하다. 특히 문화공간은 잡지 기사나 귀순자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주로 평양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이용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8시간 노동, 8시간 학습 등으로 거의 여가시간이 없지만 여가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TV 시청을 하고(밤 10시까지만 방영), 휴식, 낚시 등을 한다.

교통 및 여행방식은 북한의 여행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이동성이 적은 사회이다.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전차, 택시 등이 있다. 그러나 석유부족으로 인해 택시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농촌에서는 목탄차, 달구지 등이 더 많이 이용된다. 개인적인 승용차의 이용은 특권층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열차는 장거리 여행에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짧은 거리는 출퇴근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 한다. 매우 열악한 시설에다가 연착도 일상적인 일이지만 대체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초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장거리는 불가능하지만 고향방문 등 상당한 이동이 있다고 하며 이럴 때는 여행증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게 다닌다고 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소비생활 양식에서 네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매우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사회전체가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배급제로 인하여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소비욕구가 상당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생활은 억제된 소비양식이다.

둘째, 이러한 열악한 소비생활은 평균적인 북한주민의 모습이다. 소비생활 양식은 계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배급의 양과 질은 계층에 따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소비생활을 통해 계급적 신분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식·의·주생활과 같은 필수적 소비영역에서도 계급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소비양식은 계급적 소비양식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양식은 하나의 지침으로 모든 사람의 이상형이 된다. 이상적인 소비생활 양식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듯하여 잡지 『천리마』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체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재시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분위기였다. 하나의 획일적인 소비문화를 양산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소비생활은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하였다. 특히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평양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쇼윈도우'와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지 평양사람들은 소비생활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교통시설이라든지, 여가생활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V. 남북한의 소비문화 비교

1.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소비생활을 비교하기에 앞서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사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더닝(Durning)은 세계의 소비행태를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자원 소비의 주류계층인 소득이 7천 5백 달러 이상인 세계 11억 명이 소비주도계층(Consumers), 33억 명이 중간층, 11억 명이 1인당 연간소득이 700달러 이하인 빈곤계층으로 구분하였다.

표에서 주목할 점은 남한과 북한은 어느 계층에 속하는 가이다. 더닝의 분류에 의하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소비생활 양식에서 네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매우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사회전체가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배급제로 인하여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소비욕구가 상당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생활은 억제된 소비양식이다.

둘째, 이러한 열악한 소비생활은 평균적인 북한주민의 모습이다. 소비생활 양식은 계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배급의 양과 질은 계층에 따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소비생활을 통해 계급적 신분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식·의·주생활과 같은 필수적 소비영역에서도 계급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소비양식은 계급적 소비양식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양식은 하나의 지침으로 모든 사람의 이상형이 된다. 이상적인 소비생활 양식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듯하여 잡지 『천리마』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체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재시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분위기였다. 하나의 획일적인 소비문화를 양산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소비생활은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하였다. 특히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평양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쇼윈도우'와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지 평양사람들은 소비생활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교통시설이라든지, 여가생활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V. 남북한의 소비문화 비교

1.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소비생활을 비교하기에 앞서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사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더닝(Durning)은 세계의 소비행태를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자원 소비의 주류계층인 소득이 7천 5백 달러 이상인 세계 11억 명이 소비주도계층(Consumers), 33억 명이 중간층, 11억 명이 1인당 연간소득이 700달러 이하인 빈곤계층으로 구분하였다.

표에서 주목할 점은 남한과 북한은 어느 계층에 속하는 가이다. 더닝의 분류에 의하

면 1995년에 이미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남한은 소비주도계층에 속한다. 반면 한국은행 계산에 의하면 1996년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957달러로 빈곤계층과 중간계층의 경계부근에 있다.

<표5> 세계의 소비계층

| 구 분 | 소비주도계층 (11억명) | 중간계층 (33억명) | 빈곤계층 (11억명) |
|--------------------|-------------------|----------------|----------------------|
| 음 식 (diet) | 육류, 포장식품, 청량음료 | 곡물, 위생적인 식수 | 충분치 못한 곡물, 불결한 식수 |
| 교 통 (transport) | 자가용 | 자전거, 버스 | 도보 |
| 구성물질 (material) | 일회용품 | 내구재 | 지역자원재료 |

자료 ; Durning (1992), 월드위치연구소, 송보경 김재옥(1997), 20에서 재인용.

더닝의 소비생활의 특징분류를 보면 남북한 소비생활의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남한의 소비생활은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쌀밥에 나물보다는 육류를 즐기고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청량음료를 찾으며 출퇴근도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싶어하며(없어서가 아니라 교통체증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직장에서 하루에 1잔정도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자판기 커피 때문에).

반면 북한의 소비생활은 어떠한가. 잘 개량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죽 아니면 운 좋게 잠곡밥을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고 만원버스를 타고(지방에서는 자전거나 열차를 이용) 직장으로 향한다. 고기는 명절 때 혹은 잔치 때나 구경할 수 있다. 살림에 대한 주된 관심은 TV수상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오히려 돈벌이를 위해서는 재봉기가 더욱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불결한 식수와 도보로 다닐 수밖에 없는 교통시설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굶어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식량난은 심각하다. 소비생활의 특성으로 보건대 여전히 빈곤계층과 중간계층의 경계이다.

남한의 소비환경은 생산자 주도의 특성을 가진다.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할만한 상품들을 미리 기획하여 소비자 앞에 제시된다. 소비자는 제시된 수많은 상품들 가

운데 자신의 욕구대로 선택하면 된다. 반면 북한주민들은 다양한 상품을 접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선택의 범위 또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2. 남북한의 소비가치관(Value of Consumption) 비교

북한 주민이 선호하는 가치들은 국가의 안전과 같은 집단의 권익과 평등이 상위순위를 차지하며(이수원·신건호,1995) 그 외 평등, 협동, 공유, 집단이익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문용린,1993;1993). 북한소설이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사회의 가치는 주체사상, 인정주의, 열정적 헌신, 집단주의, 이상주의라고 한다(이온죽, 1988).

북한의 윤리관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집단주의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단주의 윤리관은 집단주의적 사회관, 집단주의적 생명관, 수령관으로 집약되며 이는 북한 사회의 획일주의, 전체주의, 일인숭배사회의 특징을 나타낸다. 공산주의 생활윤리의 목적은 “사람의 행동과 생활을 일정한 재급 또는 사회 공동의 요구에 맞추어서 조절, 통제하는데” 있으며 (『공산주의 생활윤리』,1991;21) 혁명적 도덕관은 혁명적 양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입장(금성청년출판사, 1991;18)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

둘째, 동지들 사이에 혁명적 의리를 지키며 가족들 사이에 육친적 사랑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참다운 동지적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셋째,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품성은 겸손성, 소박성, 인간성, 문화성.

이러한 북한의 생활윤리와 도덕관은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수용된다. “혁명적 동지애는 부부사이의 사랑이나 부자사이의 사랑을 비롯하여 가정안의 성원들의 혈연적 관계를 보다 값높고 고상한 관계어로 승화시킨다. 물론 가족들 사이의 육친적 사랑이 가정윤을 이루고 공고히 발전시키 나가기 위한 주요한 도덕적 기초이지만 혁명하는 사람들은 육친적 사랑을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금성청년출판사 1991,202). 즉 가족주의에 대하여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조아 사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의 북한소설에서는 가족주의가 집단주의를 압도하

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며 대학입시, 주택배정 문제로부터 직장배치 그리고 기차표 구입에 이르기까지 가족이라는 연줄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박혜란 1997, 252). 더욱이 북한당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가족정책에서 집단주의적 요소가 퇴조하는 대신 가부장제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들의 재가정화가 더욱 심화되는가 하면 사회부양과 복지의 의무가 국가로부터 점점 내부로 이전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대되고 있다(전상인 1993). 즉 북한사회에서는 사회를 ‘대가정’으로 보고 대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핵심적인 윤리로 파악하며 이것이 가족윤리에서 그대로 관철되기 때문에(이상화 1997, 66) 가부장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소설과 귀순자의 증언을 자료로 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공적 원칙의 준수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더 선호하며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서재진 1994)

북한 사회의 가치의식을 집단주의적 윤리관, 공산주의적 생활관, 혁명적 도덕관으로 축약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가치의식은 공산주의적 새인간, 집단주의, 인정주의와 열정적 헌신 등이고 장려하고자 하는 사회적 태도는 <통일준비>태도, 팔방미인의 자질, 생산돌격적 태도, 생산확대적 태도, 사업열성, 근검절약 태도, 협동지원태도, 자기희생 태도, 순박성과 성실성이고 비공식적 실제적 가치의식과 태도는 체제부조리, 사회적 부조리, 소시민적 성향이나 학력중시와 출세주의,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등 반동적 성향이다.

그러면 북한의 가치의식이 소비양식에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다양한 북한의 가치의식 가운데 비교적 소비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는 물질주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근검절약 태도, 순박성이 있다.

북한에서 돈에 대한 의식은 표면적으로 매우 절제되어 있으며 비물질주의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다. 강반석 어머니에 대한 김일성 회고록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는 원래 어렵게 살면서도 돈에 대한 타산과 욕심이 없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돈이란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한다.....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었다”라고 적혀 있다(『조선녀성』, 1994년 2호).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식주생활은 상당부분 물질주의 성향이 극도로 절제된 양태로 보

인다.

공산주의적 생활관에 젖어 있는 것인자 기본적인 물자마저 결핍된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의생활은 소박성을 나타낸다. 북한음식에 있어서도 고기보다는 채소위주의 식습관이 지배적이고 북한방문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북한음식을 먹으면서 느낀 것은 남한 음식보다 싱겁다는 것이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정갈하고 담백한 맛을 주는 것 같았다” 또는 “음식을 자극적으로 먹지 않는 것과 함께 술도 자극적으로 마시지를 않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것 같았는데 남한사람들처럼 폭음을 하고 2차, 3차를 가는 습관은 없는 것 같았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조광봉 1992, 24). 전반적으로 극도로 낮은 생활고가 문제였지 생활의 질이라든지 자신만의 생활개성을 찾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다.

북한의 한 구역위원장(구청장)이 하는 말에 이러한 북한주민의 소비욕구 상태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을 풀 필요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돈을 많이 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같은 것을 위해서는 미리 저축을 하고 형제들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낮은 임금수준과 물자결핍은 상대적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을 야기 시켰고, 인기있는 배우의 옷차림세를 따라한다든지 하는 유행의 존재, 계층을 초월하여 외제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 외국의 친지들이 보내온 돈으로 과소비를 하는 현상 등은 북한사회의 어느 정도 물질주의 성향이 싹터있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주민들의 근검절약 가치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든지 자원절약 정신은 주된 사회가치중의 하나이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글에서도 이를 강조한다. 북한 중학교 1-2 국어 교과서에서 나온 글이다.

그런 쟁신짜이 꼭 쓸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세끼도 막을 보건 또 구겨서 버린 종이조각을 보건, 빈병 하나를 보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중학교 1-2, 국어;193)

또 하나의 사례는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린 글이다.

영수 : 어머니, ○○농구화 사주세요.

어머니 : 아니 운동화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비싼 운동화를 사
신것다는 거냐?

영수 : 다른 친구들은 다 신었는 걸요.

어머니 : 하지만 그렇게 비싼 것은 사줄 수 없다...(중학교 2, 도덕;26).

위의 내용들은 북한사회의 근검, 절약정신을 읽을 수 있으며 남한의 교과서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전숙자 1997, 179). 김정일은 <지금과 보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고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합니다>라고 지적하였고 저금을 통해 인민생활의 향상과 자금확보의 장점을 피력하고 있다(『천리마』 1996년 2월, 24). 저축의 장려도 남한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검절약정신이 실생활에서 상당히 퇴색된 반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산주의적 생활윤리에 입각하여 더욱 미화, 강요되고 있다. 시간제로 절수를 하고 20층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화장실도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호텔 에스컬레이터도 손님이 없을 때는 꺼놓았다가 손님이 와서야 작동을 하고 가로등도 한 쪽길은 끄고 다른 한쪽 길은 한등 건너 켜는 등 전기, 수도물의 절약이 일상화되어 있다. 즉 근검절약정신과 절제의 미학으로 북한주민의 낮은 생활수준을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적 윤리관은 소비생활에서도 나타난다. 무상치료제라든지, 탁아시설 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인한 제도적 집단주의 소비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영역에서의 집단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생활이나 주생활을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옷차림새나 주거생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는 형편으로 소비생활에서 집단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반면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전통주의적 집단주의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당국이 비판하는 가족주의가 바로 그것인데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면 전통적 가의로 인한 집단주의 성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혼례, 장례, 세례문화는 사회주의적 간소화방침으로 인해 상당히 축소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듯이 남한의 두드러진 소비가치관으로는 물질주의와 체면주의, 집단주의가 있다. 북한의 소비가치와 비교할 때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큰 차이가 있으나 집단주의나 체면주의는 공통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북한의 집단주의와 남한의 집단주의는 성격상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생활관에 그 근거를 두는 반면 남한의 집단주의는 유교 문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소비행동에서 큰 차이를 야기 시킨다. 북한의 경우 계급적 신분에 맞는 소비생활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때 사회제도적인 처벌이 있지만 남한의 경우 자신의 준거집단에 동조하려는 의식은 그 집단이 무엇이 되는가를 개개인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요된 바가 없으며 이를 어겼을 때 사회적인 무시를 감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전통주의적인 소비가치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체면주의가 바로 그것인데 봉건주의적인 유교문화를 배경하는 북한사회에서도 가족관계와 婚喪祭 생활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질주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다양한 소비요구를 절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검약한 생활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생활윤리와 혁명적 도덕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내부에 있다하더라도 표현할 자유와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물론 상류층의 생활모습에는 극도의 자본주의적인 물질주의를 향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반면 남한의 물질주의는 부가 곧 사람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행동원리가 당연시되고 있다.

3. 남북한의 소비행태 비교

소비가치관이 반영된 소비행동은 그 사회의 삶의 방식이다. 남북한의 소비행동 비교에 있어서 체면소비, 동조소비, 과소비 측면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의 체면소비문화는 동질적인 부분이다.

사회경제체제가 극명하게 다르지만 봉건적인 신분이 와해된 오늘날 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면소비이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북한의 소비생활 실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혼상제 양식에서 체면소비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환갑, 혼례식의 형편이상으로 성대하게 치르는 것, 화장을 반대하는 풍습, 축의금을 과도하게 내는 풍습은 유교적 문화가 잔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체면의식은 혼상제와 같은 남에게 드러나는 사회적 소비에서는 가장 주된 소비가치가 되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에서 혼상제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지키는, 즉 도리(예)를 지키기 위하여 과대하게 예식을 치르고 손대접을 잘하려고 한다. 북한에서는 계급상 신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면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북한자료나 귀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계급적 신분에 의한 체면소비보다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이 더 큰 듯하다.

동조소비는 남북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문화이지만 그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누구 혹은 무엇을 따르려 하는 가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지침을 따를 뿐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잡지를 분석한 것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양한 생활 실태나 다양한 개성이 아닌 당의 지침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 주민들은 당의 지침만을 동조하면 된다. 개인의 소비욕구는 당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다. 또한 자신의 계급을 벗어나는 소비행동을 할만한 기본적인 구매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욕구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를 표출시킬 기회가 없다.

반면 남한에서는 동조하고 싶은 집단이 때때로 달라진다. 가족, 인기연예인, 친구, 또래집단, 직장동료 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유행을 한번쯤은 따라해야 그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앞서간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대세를 따라하게 된다. 어떤 이유이든 개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그 누구를 따라한다.

과시소비는 남북한의 소비 행태에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다. 과시소비 행태는 남한에서 두드러진 소비문화인데 타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부의 소비를 표현함으로써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므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물질주의를 지양하는 분위기인 북한사회에서 과시소비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짙고 있듯이 과시소비문화 역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신흥부자들을 갑작부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억제된 소비욕구의 반발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과소비적인 행동이다.

<갑작부지>들은 컬러 TV, 냉장고, 녹음기, 정대, 제방기(5대 과입)를 구입하고 이후에 소파나 피아노, 침대를 장만하기도 한다. 그러나 갑작부지의 뚜렷한 경계선은 자가용 승용차이다. “80년대 이후 등장한 자가용이 한 대씩 늘어나 신의주에 거주하는 북송농포 중 40%정도가 자가용을 갖고 있었다” 또는 “평양의 제일동포 아파트촌에는 휘발유가 없는데도 자가용을 두대씩 굴리는 경우 마저 있다”. 그리고 갑작부지들은 흔히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고 집안치장에 신경을 쓰고 “결혼예물로 볼텍스 시계를 선물”하며 “아이를 낳으면 세 살 정도부터 독선생을 붙여 예능 과외지도를 시킨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한다(남북문제 연구소b 1997, 55).

그리고 북한의 상류층의 외제선호 현상도 일반 북한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외제물건을 바꾸 사용함으로써 특권층임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김남준(전 판문점 정비소대장)씨는“86년초 연형북 당시 제1부총리의 아들 연희준이 김일성종합대학 2학년 재학중 입대해 내가 근무한 정비소대에서 근무했다”며 “그는 팬티, 양말에서부터 옷가지, 생필품 등을 모두 외화상점에서 구한 외제를 쓰고 있어 충격과 함께 북한체제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군수생산업체인 만경대 보석가공공장의 무역지도원으로 지냈던 김명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는 19개 구역(우리의 구매 해당)에 외화상점이 하나씩 있다. 이 외화상점은 바꾼 돈표를 소지한 주민들만이 이용하므로 누구나 바꾼 돈표를 가지려고 애쓴다. 중앙당 간부들이 로스만, 마일드세븐 등 외제남매반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된 김정일이 92년 말 중앙당 간부들의 호주머니 검사를 지시해 노동당 분청사가 호주머니 검사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남북문제연구소 b 1997, 10-11). 이렇듯 북한 상류층의 외제선호 경향은 물품부족 현상이 직접적 원인이 있겠지만 외제를 사용함으로써 간부계급으로의 소속감을 더욱 확고히 느끼고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VI. 북한주민의 통일이후 소비생활 적응문제

1. 개인소비적인 측면

(1) 소득획득의 갈등

통일 이후 소비생활의 적응문제에 가장 큰 문제는 남한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복지상태를 결정하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생활필요수단을 구입할 수 있다면 통일이후의 사회통합문제나 적응문제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체제와 북한체제의 통합은 이질적인 하부구조와 이질적인 상부구조의 통합이기 때문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며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통독이후의 독일의 모습에서도 실업의 문제는 심각하다. 통독이후 1993년 현재 동독지역의 실업율이 18.3%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1/5정도가 자활적으로 소득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b 1996, 43). 이렇듯 동독의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업문제는 동독지역 주민의 물질적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과거의 노동이 무가치한 곳에 투입되었다는 자기비하감마저 주고 있다¹⁴⁾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권력엘리트, 군부, 인텔리겐차들 대다수가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정신노동자 및 전문직 종사들도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다. 육체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배급의 중단이나 감소를 경험해 보았지 실업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북한 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팽창된 소비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제문제를 실감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비가치관 갈등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은 소비욕구의 억압과 물자결핍으로 축약된다. 특히 소비욕구의 억압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 비물질지향적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북한주민을 순응적

14) 서재진(1996), 통일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79쪽, 김수곤외,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미래인력연구센터.

인성으로 길들여 왔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적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 가운데 정신적인 가치관의 혼란은 북한주민을 아노미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통독 이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집단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에 길들여져 있던 동독주민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인 성과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적인 행동양식으로의 대체를 어려워하고 있다. 귀순자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기주의를 극도로 매도하였던 북한의 교육 때문에 선뜻 돈에 집착하기도 어려워하는 이중적 가치관을 보인다. 그리고 귀순자들은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에 따라 가난하지만 상부상조하며 매우 강한 유대의식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비해 남한은 부유하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리적 갈등이 크다(전우택 1997, 100-103).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소득생활이 안정이 된다면 귀순자들은 통일 초기의 심리적 갈등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귀순자들에게 '북한 삶이 남한의 풍부한 물자를 접했을 때 받는 충격과 심리적 태도 변화가 어떤 적응 유형을 낳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¹⁵⁾.

처음에는 평생에 한번도 누리지 못한 풍요 때문에 무분별한 과소비가 있을 것이며 사고 싶은 것은 많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범죄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사람도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감이 생기면서 남한사람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더라도 그동안 남북한의 물질생활 차이로 인해 현격한 소비심리차이가 노출될 것이고 그런 차이를 물질로 극복하려고 할 때 북한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 즉 통일이후의 북한사람들의 모습은 자기가정을 중심으로 절약하고 남과 단절된 폐쇄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15) 성영신 외(1994), "남북한의 의식구조, 청소년 및 경제심리 비교", 이장호, 이춘재 편, 『남북한 장비를 넘어서』, 중앙적성출판사.

집단주의적 소비문화는 자연스럽게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이 더 유교주의적인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남북한 소비문화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가치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지도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어떠한 대상을, 혹은 어떤 집단의 가치에 동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나의 당 지침이 사라진 후 다양한 귀속집단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되는데 일단 통일 초기에는 소비가치관 면에서 북한주민들은 전통적인 집단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남한 소비생활의 비전통적인 부분을 심리적으로 배척하는 심리를 가지는 집단(4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어떠한 형태이든지 집단주의를 청산하고 물질주의적인 소비가치관을 적극 수용하는 집단(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소비행동 갈등

북한사람들의 소비패턴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앞에서 분석하였다. 일정한 형식들 안에서 자발적인 소비선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소득이 생길 경우 어떻게 돈을 써야 할 지에 대하여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 이럴 경우 통일 이후 초반에는 북한사람들은 지극히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하고 그 나머지 돈은 저축하려는 안정욕구를 강하게 보일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귀순자들은 남한에 와서 제일 처음 구입한 것이 먹는 것(라면)이었고 그 다음은 주로 의류였다고 한다. 그들은 의류를 구입하면서 값이 싼 것을 찾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한사람들이 왜 브랜드를 찾는지? 이해가 안된다”, “북한에서는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인 김일성 뺨지로 통하는데 남한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대체로 남한의 브랜드 선호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젊은이 이면서도 실제로는 남한의 50대와 비슷한 시각을 갖는 것같아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남한의 사치풍조, 향락주의, 배금주의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 예로 사랑 중심으로 나태한 감정을 일게 하는 대중가요, 가는 곳마다 밥늦게 여는 술집, 현란한 네온사인, TV 광고를 들었다(성영신의 1994, 267).

이렇듯 통일초반에는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자본주의적인 소비문화에 대하여 강한 거

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가 문제인데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욕구가 비교적 강하다는 점, 둘째는 몸에 밴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이 통일 후 일반적인 대세를 주로 따라하는 동조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한의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는 전통적인 유교문화, 체면주의가 내재되어 있어 북한주민들도 이에 쉽게 동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매급주의나 향락위주의 소비생활에 대한 동화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땅투기에 함께 편승할 경우 새로운 땅값 상승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의 억제되었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될 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크게 좌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락주의나 매급주의적일 사고는 일탈적 소비행동 폐거리행동, 유흥비마련을 위한 강도행위, 마약, 약물 중독 등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4) 소비환경에의 적응-시장환경, 정보환경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소비환경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 광고와 상표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정보들이다. 귀순자들은 광고에 대해 다수가 불필요하거나 귀찮은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광고의 기능을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반면에 광고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귀순자는 광고를 통해 일상생활에 유행하는 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였다(성영신 외 1994, 267).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은 TV 등 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광고의 본래적 기능보다는 비본질적 측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므로 허위, 과장광고 등에 더 쉽게 속아넘어 가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고 사기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잘 걸려들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가능성은 북한주민들의 소비자능력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이다.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체계에 대한 지식 및 이해력 부족과 다양한 상품들간에 선택하는 소비자기능이 부족하여 통일 후 이들이 소비자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인 측면

(1) 전반적인 소비생활의 질 저하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남한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독 후 서독지역 인구증가율은 통일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독주민은 1989년 이후 1993부터 11월까지 약 5년 동안 126만 명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여 서독지역의 인구밀도가 극심하게 되었다(통계청b 1996, 13). 북한주민의 남한이주규모는 약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8%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¹⁶⁾.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물가수준의 상승이 중요하다.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통독이후 물가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통독이전('86-'90) 서독의 약 4배 정도 상승(통계청 1996, 101)하였다. 자연히 생계비지수는 큰 폭으로 올라 서독의 경우는 1985년을 기준으로 하여 100으로 하였을 때 123.5로 23.5%상승하였고 동독의 경우는 135.4로 동기간에 34.4%나 증가하였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일반 주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하고 따라서 경제적 복지상태가 급격히 하락함을 의미한다. 통독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와 더불어 급격한 물가상승은 독일전체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저하시켰다.

통일에 드는 비용은 조세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분담될 것인데 그렇다면 통일이후 조세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일비용은 대략 1990년 불변가격으로 할 때 2500억 달러에서 1조 3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200조원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매년 서독의 GDP의 5-6%가 동독 지역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보다 높은 7-8%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한다(박 진 1996, 41). 통계에 의하면 독일전체의 조세부담율이 42.2% 크게 높아졌고, 동독인에 대한 이전지출은 18.6%(4년간 평균) 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역시 남한주민의 소비생활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 이후 당분간의 생활의 질 저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문제는 생활의 질 저하 현상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가인데 이 문제는 북한주민 보다 남한

16) 박 진, "통일후의 경제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김 수곤 외 지음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1996), 미래인력연구센터.

의 주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생활수준의 하락이 당연한 문제라면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은 정액지출이며 강제적인 지출이므로 개별 소비자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소비지출을 필수적 지출과 선택적 지출로 나누어 볼 때 선택적 지출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적을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듦 것이므로 선택적 소비지출이 줄어듦 것이며 통일이후 사회분위기도 소비절약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수적 소비지출에 대한 물가상승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지출 행동이 필요하다.

(2) 새로운 소비자집단의 등장-새로운 소비자욕구의 수용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의 구매력이 생길 것이므로 소비자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일단 저소득층 집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첫째, 그들의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지만 남한의 임금수준에는 훨씬 못미칠 것이다. 둘째, 그들의 소비행동 또한 구매력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소득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소비환경에 대한 두려움, 소비자선택시에 발생하는 당황, 망설임으로 소비자수요가 초반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은 저소득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행동이 소비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 효과를 예측해보면 첫째, 그 동안 거의 사라졌던 상품들(일등재일 가능성이 높다)이 재등장할 것이다. 낮은 가격의 낮은 질의 상품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는 남한의 주백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심각한 주백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주한 북한 주민들이 대거 도시(특히 수도권)로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임대료 상승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소비자정책도 변화를 요한다. 기존 안전기준의 설정이나 피해구제 등 소량생산 고품질되어 가는 시장환경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흐름이 하향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표준도 변화할 것이며 소비자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도 수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셋째, 소비자피해구제 부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주민의 소비자능력이 매우 낮으므로 다각화된 소비자환경속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경험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구제의 조건에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평균적인 소비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3) 파행적인 소비자행동의 가능성

현재 북한사회의 식량과 물자결핍은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을 낳았다. 국가재산에 대한 줌도둑질 또는 절취행위, 매춘, 절식, 암거래 행위, 중국인의 대리모 현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이 통일이후에 물자결핍이 해소된 이후에 사라질 것인가? 독일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통독 후 범죄발생건수가 연평균 증가율이 통일전보다 10배가 넘었으며 주로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통계청 1996, 119).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동독과 북한은 사상면이나 체제가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의 상황은 독일과 달리 통일이후 사회일탈현상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첫째, 통일이 북한주민의 물자결핍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할 것인 반면에 사회통제는 느슨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주민 전체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응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활로로써 파행적인 소비행동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부적응한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인 향락문화에 쉽게 그리고 무방비적으로 빠져들면서 각종 일탈적 소비문화를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북한의 패거리들이 그 동안 억눌렀던 심리를 표출할 때 일탈적 소비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특히 북한의 젊은이들의 조직폭력, 마약, 약물중독, 청소년의 흡연만연 등 비도덕적인 일탈행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계층적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

통일이후 초반에는 가구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각 계층간의 소득, 소비생활이 극단적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상류층과 극빈층간의 상대적 격차가 더 커지고 하류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면, 북한 사람들은 나는 왜 못사나라는 자기비하감과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허부감이 생길 것이다. 또 남한 사람들은 모든 불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익숙하며 자기들이 잘 산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만심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 남한 사람에 대해 편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할 것이다(성영신 외 1994, 265).

상류층은 개인적이며 과시소비적인 소비문화가 지배적인데 비해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포함될 하류층은 보다 집단주의적이고 빈곤문화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나타낼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소비생활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소비양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소비문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통일이후의 삶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발단에서 부딪히는 소비생활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남한의 소비문화를 물질주의, 집단주의, 체면소비, 동조소비, 과시소비, 과소비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북한 소비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북한의 소비환경, 북한 소비생활 실태(크게 기본육구 충족을 위한 식·의·주생활과 婚喪祭 양식, 문화 및 여가생활, 그리고 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선택적 육구충족을 위한 소비생활로 구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잡지 『천리마』 『조선여성』을 내용분석하고 <북한방문기>외<귀순자의 증언>을 자료조사하여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식생활에서는 주식인 쌀의 공급마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기, 식용유, 과일 등 부식의 양과 질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식생활의 내용이 주로 된장, 고추장 등 정류와 각종 납새(채소)류 특히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을 주로 먹고 있었다. 고기는 상당히 귀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었다.

의생활에서는 남자들은 주로 인민복, 신사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나이든 여성일수록 작업복 차림이나 젊은 색깔로 입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밝은 정장차림으로 옷차림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허부감이 생길 것이다. 또 남한 사람들은 모든 불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익숙하며 자기들이 잘 산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만심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 남한 사람에 대해 편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할 것이다(성영신 외 1994, 265).

상류층은 개인적이며 과시소비적인 소비문화가 지배적인데 비해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포함될 하류층은 보다 집단주의적이고 빈곤문화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나타낼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소비생활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소비양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소비문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통일이후의 삶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발단에서 부딪히는 소비생활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남한의 소비문화를 물질주의, 집단주의, 체면소비, 동조소비, 과시소비, 과소비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북한 소비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북한의 소비환경, 북한 소비생활 실태(크게 기본육구 충족을 위한 식·의·주생활과 婚喪祭 양식, 문화 및 여가생활, 그리고 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선택적 육구충족을 위한 소비생활로 구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잡지 『천리마』 『조선여성』을 내용분석하고 <북한방문기>외<귀순자의 증언>을 자료조사하여 북한의 소비생활 양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식생활에서는 주식인 쌀의 공급마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기, 식용유, 과일 등 부식의 양과 질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식생활의 내용이 주로 된장, 고추장 등 정류와 각종 납새(채소)류 특히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을 주로 먹고 있었다. 고기는 상당히 귀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었다.

의생활에서는 남자들은 주로 인민복, 신사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나이든 여성일수록 작업복 차림이나 젊은 색깔로 입는 반면 젊은 여성들은 밝은 정장차림으로 옷차림

새에 신경을 쓰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사회전체적으로 남녀모두 옷차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의류산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류층 등 고위간부급 자녀들은 주로 외제만을 소비하는 등 계층간 위화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주생활의 경우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모니카 주택, 고층 아파트 등은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주택부족으로 최악 수준의 주택마저 배정받기조차 힘들고 배정받기 위해서는 수년을 기다리고 뇌물을 주어야 하는 등 주거수준이 매우 낮다. 또한 여러 가족이 한 집에 동거하는 <동거살이> 등이 일반적인 것이어서 주택은 잠자는 곳으로 전락하여 주거문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혼상제 양식은 축의금 등 상부상조의 정신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었고 축의금의 크기 등이 매우 큰 것은 남한의 소비양식과 비슷하였다. 환갑잔치나 제사, 명절, 그리고 장례 절차에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소비양식으로 상당히 간소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에 전통적인 행사 규모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절대적인 물자부족으로 인해 간소화하는 것이지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여가생활은 개인적이며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주민들 교육용으로 다양한 문화매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선택권이 거의 없다. 의무적으로 단지 그것들을 수용할 뿐이기 때문에 여가나 문화에 대한 특별한 욕구도 없는 듯하다. 특히 문화공간은 잡지 기사나 귀순자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주로 평양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이용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8시간 노동, 8시간 학습 등으로 거의 여가시간이 없지만 여가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TV 시청을 하고(밤 10시까지만 방영), 휴식, 낚시 등을 한다.

교통 및 여행양식은 북한의 여행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북한은 이동성이 적은 사회이다.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전차, 택시 등이 있다. 그러나 석유부족으로 인해 택시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농촌에서는 목탄차, 달구지 등이 더 많이 이용된다. 개인적인 승용차의 이용은 특권층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열차는 장거리 여행에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짧은 거리는 출퇴근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 한다. 매우 열악한 시설에다가 연착도 일상적인 일이지만 대체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초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장거리는 불가능하지만 고향방문 등 상당한 이동이 있다고 하며 이런 때는 여행중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게 다닌다고 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소비생활 양식에서 네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매우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사회전체가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배급제로 인하여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소비욕구가 상당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생활은 욕구가 억제된 소비양식이다.

둘째, 이러한 열악한 소비생활은 평균적인 북한주민의 모습이다. 소비생활 양식은 계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배급의 양과 질은 계층에 따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소비생활을 통해 계급적 신분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의식주생활과 같은 필수적 소비영역에서도 계급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소비양식은 계급적 폐쇄된 소비양식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양식은 하나의 당지침으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이상형이 된다. 이상적인 소비생활 양식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듯하여 잡지 『천리마』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체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분위기였다. 하나의 획일적인 소비문화를 양산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소비생활은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하였다. 특히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평양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쇼윈도우’와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지 평양사람들은 소비생활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교통시설과 여가생활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북한 소비생활양식을 토대로 남북한 소비문화를 소비환경측면, 소비가치관측면, 소비행동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먼저 소비환경 측면에서는 남한이 1993년을 기점으로 소비주도계층인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북한은 아직 중간계층과 빈곤계층의 경계선상에 있는 수준이었다. 소비자사회인가 아닌가는 그 사회의 삶의 양식에서 중요한데 소비자사회에서는 육류위주의 소비행태, 자동차이용의 보편화, 일회용품의 사용, 그리고 과시적 소비의 일반화 등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비해 북한의 소비환경은 충분치 못한 곡류, 자전거나 도보의 교통시설, 내구제에 대한 소비욕구 등으로 요약된다. 남북한 유통기관의 비교에서도 남한의 다양화되고 최첨단화되

는 유통기관(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장마당>(도시) <농민시장>(농촌)과 암시장 거래, 그리고 그 곳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은 소비환경에서 매우 큰 격차를 느끼게 하였다.

소비가치관의 비교에서 남북한 공통적인 소비가치관으로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인한 체면주의와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지적되었는데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적인 생활관과 윤리관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한과는 상이한 특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남북한의 상이한 소비가치관으로 분석되었는데 최근의 몇몇 북한연구에서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논하였지만 이는 상류층의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북한사회 전반의 소비생활에서는 물질주의가 표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행태면에서 남북한의 비교는 체면소비, 동조소비, 과시소비 측면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남북한 모두 유교문화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체면소비적 행태가 두드러졌는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유교문화의 전통이 더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 이러한 현상이 더 강했다.

동조소비 특성에서도 외형적으로는 남북한이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계급사회인 북한의 경우 소비생활이 그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계급에 맞춰 소비생활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북한사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소위 '당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사회의 '바람직한 소비패턴'이 동조의 기준이 되었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자유주의 국가이므로 동조하고자 하는 집단이 다양하였는데 유행이나 대세를 맹목적으로 따르기와 같은 확실적인 동조소비 현상도 있었다.

과시소비 행태는 남한에서 두드러진 소비문화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상류층과 일부 신흥부자들(북한에서는<갑작부자>라고 함. 북송동포들이나 외화벌이를 하는 무역일꾼 가운데 돈을 번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남한의 경우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과시소비 행태가 일부계층이 아닌 전 사회계층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사회적 과소비를 양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소비문화의 비교를 통해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겪을 수 있는 소비생활문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소비측면에서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소득획득의 기

회가 직어지고 임금수준의 전반적 하락으로 인한 소득획득의 갈등,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관과의 사회주의적 소비가치관간의 갈등, 과소비, 향락적 소비, 배급주의 등 소비행동에서의 갈등,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무지와 부적응에서 오는 심리적 당황, 허무감 등을 진단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북한주민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소비문제들과 소비자 정책적 요구들, 그리고 북한주민의 남한의 소비환경에의 부적응에서 오는 파행적 소비행동이 사회적으로 만연되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극심한 계층적 소비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통일이후 개인적 소비생활이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소비생활 적응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야 된다.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겪게될 개인적인 소비생활문제는 대체로 남한의 소비환경과 소비문화에 대한 불이해에 기인한다. 넓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정서적, 이성적 부지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생활에서의 교류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식료품과 의류품과 같은 생필품의 수출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소비문화는 전파매체를 통해 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잡지, 방송과 같은 문화교류도 남한 소비생활에 대한 이해에 유용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교육 측면이다. 지금까지의 북한연구 가운데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교육의 연구가 상당히 많았다. 그 가운데 소비자교육 영역은 희박하였다.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의식 교육 이외에 통일이후의 생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는 소비자교육은 남한 주민들의 통일이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의 남한 소비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교육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소비자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각종 소비자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이후 북한주민에게 물질주의 등 자본주의적 소비자가치관의 이해를 돕는 소비자태도 영역,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비자지식 영역, 실제 소비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루는 소비자기능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이후 야기될 소비생활문제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정책면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소비자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남한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생필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표준과 상품안전기준 등의 융통성있는 적용이 불가피하며 각종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피해구제업무도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시장 규모의 증가로 불공정거래행위(예를 들면, 소비자 신용거래의 급증, 허위과장광고의 증가) 등이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이다.

넷째, 북한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한주민들의 소비생활의 건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향락주의와 배금주의에 대하여 쉽게 동화되었을 경우 소비욕구불만이 사회 일탈적인 소비자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럴 경우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낭비적인 소비습관은 자제하고 개방적인 상호이해를 위하여 남한주민의 소비생활의 절제가 필요하다. 통일이전에 남한의 소비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민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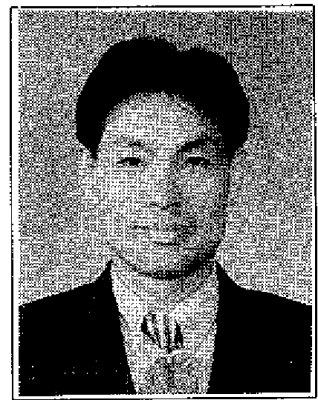
- 강명구(1995),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 『공산주의 생활분리』 (199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국가안전기획부(1998), 『북한의 실상』, 5,6,8월호, 국가안전기획부.
- 국토통일원(1971), 북한의 생활실태, 서울:국토통일원.
- 김성철(1984), 『북한주민의 생활실태-분단이후 생활상 철저분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김수곤 외 6인(1996),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왕배(1995), 일상생활의 철학적 의미와 생활정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편),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서울:대운.
- 김학준 외(1986), 『남북한의 생활상: 그 삶의 현주소』, 서울:박영사.
- 남북문제연구소a(1996), 『북한의 실상』, 남북문제연구소.
- _____b(1997),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 남북문제연구소.
- 내외통신사(1994), 『북한조감:북한상식집』, 서울:내외통신사.
- 도홍렬(1996), “분단 반세기 남북한 사회변화의 비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동아일보』 1994년.
- 『농대』 (1998) 282호.
- 『로동신문』, 1984년 4월 2일자
- 문숙제(1997), “가정생활 속의 남북한 여성의 삶”,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문숙제(1994), 북한의 여성과 가정생활, 『여성학논집』 1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문용린(1883),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형성방안 모색”,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족통일중앙협의회(1991).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박성희(1995), 『북한 청소년의 생활』, 광보치.
- 박영숙(1993),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속담과 이화 방어기제검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박완서(1991), “북한사람, 북한가정, 북한사회”,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 박혜란(1997), “남북한 생활문화와 삶의 질”,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변화순(1992), “남북한 가족의 다른점과 닮은 점”. 『여성연구』, 10(3), 195-204.
- 『북한 최고 인민회의 자료집』 IV.
- 서동익(1995), 『인민이 사는 모습1,2』, 인천:자료원.
- 서재진(1994),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변화: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성영신(1998), “한국인의 가치관과 과소비행동”, 『경제위기를 위한 건전소비전략』,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제3회 심포지엄 자료집.
- 손봉숙 외 3인(1992),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손봉숙(1993),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 송보경·김재옥(1997), 『소비사회학』, 집현전.
- 양호민 외(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전망』, 나남.
- 연합통신(1996), 북한 50년. 연합통신.
- 오기성(1997), “북한문화의 구조분석을 통해 본 남북한 문화통합”,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 월간조선(1991), 『북한-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 윤태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이상화(1997), “북한여성의 윤리”,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이성희·김태현(1993),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 『대한가정학회지』, 31(4)
- 이수원·신건호(1995),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남북한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중앙적성출판사.
- 이은죽(1990), 『여성과 가정생활. 북한여성의 실태』, 정책자료 90-4 연구보고서. 서울:정무장관 (제2)실.

- _____ (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범문사.
- 이우홍(1990), 『가난의 공화국』, 통일일보사.
- 이장호·이춘재(편)(1994), 『남북한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철(1997), “문화적 차이와 소비자행동 연구의 비교문화적 타당성”, 『한국소비문화의 방향』, 한국소비자학회 '97년 학술대회 자료집.
- 장하진(1996), “남북한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역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 전숙자(1997),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북한 여성상의 의미”,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정석홍(1997), 『남북한비교론』, 서울:사람과 사람.
-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1997),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 전우택(1997),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 조광동(1992),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다시 쓰는 북한 방문기』, 지리산.
『조선여성』 1991년 1호에서 1998년 3호까지.
『조선일보』 1987년 2월 13일, 1990년 8월 10일.
- 주강현(1994), 『북한의 민속생활풍습:북한생활풍습 50년사』, 서울:대동.
- 주강현(1994a), 『북한의 민족생활풍습:북한생활풍습 50년사』, 대동.
(1994b), 『북한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중앙일보』 1995년 1월 20일, 1998년 7월 29일.
- 통계청a(1996),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 통계청b(1996), 『통독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 통일원(1995), 『남북한 경제지표』, 통일원.
- 통일원(1995), 『북한개요('95)』, 통일원.
『천리마』 1991년 1월호부터 1998년 6월호까지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1995), 『북한사회의 이해』, 부산:부산대학교 출판부.

- 『혁명적 도덕관이란 무엇인가?(1991), 평양:금성청년출판사.
- 황병선 외 27명(1993), 『기자들이 가본 북한-남북교류행사 취재기자들의 방북기-』, 도서출판 다나.
- Baudrillard, J.(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Diction
- Dencel, 이살롤 역(1991),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Korea Today* 1998년 7월호.
- Lury, Celia(1996), *Consumer Culture*, Polity Press.
- McCracken, Grant(1988), *Culture and Consumption-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Taylor, Edward B.(1891), *Primitive Culture*, London.

北韓社會의 情報化 現況과 情報化 指標開發에 관한 研究



崔 洙 滿(연세대)

목 차

| | |
|-------------------------------|-----|
| <요약문> | 265 |
| I. 서 론 | 269 |
| II. 정보화지표 연구의 기존논의 | 272 |
| III.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지표 | 286 |
| IV. 북한의 산업·경제 지표 | 304 |
| V. 북한 정보화 지표개발의 문제점과 과제 | 313 |
| VI. 통일 대비 대북 정보화정책 대응전략 | 318 |
| VII. 결 론 | 321 |
| ※참고 문헌 | 322 |

【요약문】

세계 각국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초로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력은 국가발전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정보화 추진현황과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정보화 지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정보화 실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정보화 동향과 현황에 대한 연구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화 현황과 실태를 모르고 통일정책이나,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자칫 방향성 없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사회 정보화 지표는 북한사회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정보화 현황을 측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정보화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남북교류사업과 통일후 효과적인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분석적 틀을 산업구조적 접근방법,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 가능한 정보화 지표 항목을 찾아보기 위해 선진국의 정보화 지표개발 사례연구와 한국의 정보화 지표개발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여 북한의 현실에 맞는 정보화 지표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화 현황에 대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남한과 비교분석·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북한체제의 정보화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량분석과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정상적인 질적분석도 추가하여 계량적인 분석의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에 사용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했다.

북한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화 지표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하여 남한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한국전산원에서 1996년부터 [국가정보화 백서]에 정보화지

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보화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개발은 위 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북한의 데이터 항목들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기초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북한사회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귀순자, 북한방문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 정보화 인식에 대한 직접면담조사 또는 설문조사(우편, 전화인터뷰 포함)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문서분석과 방북자, 귀순자들과의 면담과 관련 기사를 통일부와 통계청, 안기부, 내외통신, 연합통신 등 관련 기관들과 언론통신사들의 협조로 부분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으나 자유세계 국가들의 정보들과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은 여전히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정보접근성의 어려움에서 근본적으로 있었으나 현실로 다가온 고도정보화 사회와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연구가 출발하였다.

북한의 정보화 현황에서는 H/W 분야보다는 S/W 분야의 독자적인 발전이 눈에 띄었으며, 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잠재적인 기술인력과 정보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응용 시스템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정보산업과 경제 현황에서는 남한과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뒤져 있지만 앞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대응 전략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첫째, 전략적 우위 정보기술산업의 집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후 완충역함(buffering function)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TV와 라디오는 비상방송체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 행정, 유통 등 주요 대민 서비스 관련 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통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스템 통합계획과 더불어 정보환경 변화와 상황전개를 예측하여 3~4개의 대안적 시스템통합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단계의 상황을 세분화하고, 정착기와 안정기에 따른 상황들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머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정보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TV방송, PC통신, 전화통신 등 기술적으로 상이한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계획과 종합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계획과 실천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세계 각국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초로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력은 국가발전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정보화 추진현황과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정보화 지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정보화 실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정보화 동향과 현황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화 현황과 실태를 모르고 통일 정책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자칫 방향성 없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사회의 정보화지표는 북한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과정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발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설정해 주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 정보화 지표는 북한사회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정보화 현황을 측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정보화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남북교류사업과 통일후 효과적인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분석적 틀을 마흐럽(Machlup, '62)과 포레(Porat, '77), 존셔(Jonscher, '83) 등의 산업구조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수립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평가를 위하여 선진국의 정보화 지표개발 사례연구와 한국의 정보화 지표개발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여 북한의 현실정에 맞는 정보화 지표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체제의 정보화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량분석과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정성적인 질적분석도 추가하여 계량적인 분석의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에 효과

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에 사용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이를 위해서 북한사회의 정보화를 조사하기 위해 우선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정립과 내용분석에서 출발하며, 정보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성격과 특징들과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북한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화 지표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하여 남한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한국전산원에서 1996년부터 [국가정보화 백서]에 정보화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보화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개발은 위 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북한의 데이터 항목들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기초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북한사회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기법들을 이용하며,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귀순자, 북한방문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사회 정보화 인식에 대한 직접면담조사 또는 설문조사(우편, 전화인터뷰 포함)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이용 현황과 정보기기 보급율, 정보화 추진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해 보도록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와 방향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1) 대북한 통일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뿐만 아니라 2)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3)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보화 지표를 개발하고, 4) 북한체제의 정보화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틀 제공과 전략적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1) 대북한 통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화 지표연구가 부족하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이나 현황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통일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일정책도 일관성을 결여되거나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통일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적 준거틀로서 북한사회의 정보화 지표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북한사회의 정보화 지표를 통하여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및 조치하고, 불균형적인 지표와 정보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하여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3)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준거로 활용 :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정부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특수성이나 정보화 수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소기의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사회의 정보화 특성과 변화동향, 특징적 정보이용체계 등을 파악하여 지표로 설정하여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4) 북한체제의 정보화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틀 제공과 전략적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연구의 기본방향

- 거시적인 정보화 지표의 신뢰도 제고
 - 기존 정보화 지표개발 연구에 대한 문제점 보완
 - 경험적 조사연구에 의한 지표 신뢰성, 객관성 제고
 - 북한사회 정보화 수준, 진전도 파악
 - 국가와 국가간의 비교측정 기초 자료 제공
- 북한사회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인 정보화 지표 개발
 - 특수성에 따라 정보화 지수 구성
 - 정보화 수준, 정보사회로의 진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개발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도구 제공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자료
 - 주요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 비교
- 종합적인 정보화 지표활용
 - 북한체제의 정보화 변화추이 파악
 - 중·단기 통일정책 Master Plan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기본적인 연구의 원칙

- 지표의 종합성 :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 가능한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단편적, 일회적 지표를 지양할 것.
- 지표의 연계성 : 각종 정보화 계획과 국가정책들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
- 지표의 혁신성 : 정보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과 측정기준으로서 참신성과 혁신성을 갖출 것
- 지표의 유연성 : 국내외의 정보통신기술 및 다양한 환경과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정보사회 변화의 설명력 : 급격한 정보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설명력을 갖춘 지표개발
- 정보변화의 예측성 :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갖춘 지표 개발

제 2 장 정보화지표 연구의 기존 논의

1. 정보화지표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

정보화의 척도를 정교한 계량적 지표로 나타내는 정보화 지표(Informatization indicator)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아직 학문적으로나 국제적인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지표화하기 위한 데이터의 부족, 항목 선정의 어려움, 항목들 간의 통합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도구 제공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자료
 - 주요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 비교
- 종합적인 정보화 지표활용
 - 북한체제의 정보화 변화추이 파악
 - 중·단기 통일정책 Master Plan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기본적인 연구의 원칙

- 지표의 종합성 :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 가능한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단편적, 일회적 지표를 지양할 것.
- 지표의 연계성 : 각종 정보화 계획과 국가정책들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
- 지표의 혁신성 : 정보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과 측정기준으로서 참신성과 혁신성을 갖출 것
- 지표의 유연성 : 국내외의 정보통신기술 및 다양한 환경과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정보사회 변화의 설명력 : 급격한 정보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설명력을 갖춘 지표개발
- 정보변화의 예측성 :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갖춘 지표 개발

제 2 장 정보화지표 연구의 기존 논의

1. 정보화지표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

정보화의 척도를 정교한 계량적 지표로 나타내는 정보화 지표(Informatization indicator)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아직 학문적으로나 국제적인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지표화하기 위한 데이터의 부족, 항목 선정의 어려움, 항목들 간의 통합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식)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증가율을 계측하였다. (1958년 미국 지식산업 부문의 GNP 비중을 28.1%로 계산함)

포레(Porat, '77)는 정보산업을 제1차 정보부문(마흐럽의 지식산업 분야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정보재 제조산업, 정보재의 판매, 소매, 정보유통의 통신산업, 정보처리와 전달서비스, 조사산업, 리스크관리사업, 정보활동 지원사업 등을 포함함)과 제2차 정보부문(정부 및 민간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계획, 광고 등의 관리부문을 모두 포함함)으로 분류하고 산업연관표에 따른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GNP 대비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1967년 미국의 제1차 정보부문 부가가치의 GNP 비율은 25.1%, 제2차 정보부문은 21.1%로 각각 나타나 전체 정보화는 GNP의 46.2%를 차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존셔(Jonscher, '83)는 정보부문과 생산부문을 나누어 생산성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1950년부터 1970년에 걸쳐 정보부문의 연생산성은 1%미만이었으며, 생산부문의 생산성은 4%대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에서 1980년에 걸쳐서 양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없어짐에 따라 정보 노동의 비율도 완만한 상승을 보였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정보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정보노동자수는 80년대~90년대에 전체 노동자의 50%를 유지하다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에는 46%까지 저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OECD('81)는 포레의 분류에 기초하여 OECD 9개국의 정보화 추세를 비교·측정하여 1차 정보부문이 GNP 차지비중을 미국('58) 19.6%, 일본('70) 18.8%, 영국('72) 22.0%, 프랑스('74) 19.1%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의 KAIST('82)는 포레의 제1차 정보부문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업연관표에서 35개 부문을, KISDI('85)는 45개 부문을 분류하여 정보산업으로 규정하여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1978년도 정보부문의 비중을 조사하여 각각 10.70%, 12.02%로 측정하였으며, 정보부문의 부가가치액이 전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자가 15.8%, 16.7%로 측정하였다.

취업구조적 접근방법은 정보노동자의 숫자가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정보화의 척도로 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정보화의 경향측정이 가능하며, 전체 경제생활에서 정보부문이 갖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노동자의 범주설정이 주요한 관건이다.

OECD('81)는 포레의 연구방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나 정보노동자의 범위를 보다 좁게 정의하여(교육기관, 사무직, 학교관련 종사자, 가사상담원 제외)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대부분 연평균 2.83%의 증가를 보이고, 전체 취업인구의 정보노동자 비중이 미국('70) 41.1%, 프랑스('75) 32.1%, 스웨덴('75) 34.9%, 독일('78) 33.2% 등으로 분석했다. 캣츠(Katz, '88)는 연구대상을 서구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하여 취업구조 분석을 시도하여, 개도국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보부문 취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는 포레의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經濟企劃廳('86)이 FA, OA, SA(Sales Automation)화와 전기통신 정보서비스 등의 산업만을 정보산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보화 지표와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77년 정보생산액이 10조 엔으로 GNP의 5.5%에서 '84년도 30조 엔으로 3배로 성장하였으며, GNP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산업별 정보화율(산업별 정보생산액/산업별 총생산액)은 금융, 보험이 특히 높으며, 1차 산업과 부동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통신개발연구원(KISDI)의 정보화와 경제사회발전('85), '정보화지수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정보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88) 등이 정보화에 따른 고용측면에 변화를 연구한 결과이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의 정보화의 측정과 요인분석; 취업구조를 중심으로'('86) 정보화 지표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지표 접근방법은 주로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산업구조분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즉, 기존의 미국 중심의 산업구조분석이 정보의 생산측면에 치중된 분석으로 정보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사회 정보화의 4가지 측면(정보량, 정보장비율, 통신주체 수준, 정보계수)을 설정하여 각 측면별로 구체적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일본 우정청은 가계의 정보계수, 산업의 정보계수, 네트워크화 지수 등을 개발해 매년 통신백서에 게재하고 있으며, JIPDEC는 정보통신장비율 지표를 1986년부터 개발해 조사해오고 있다.

이 방법은 林雄二郎(1969)에 의해 처음 이루어 졌으며,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일본 전기통신종합연구소(RITE)에서 작성한 정보화 지수를 들 수 있다. RITE는 1) 사회의 정보화 지표와 2) 정보생활 측면의 정보화 지표를 설정하여 구체화된 연구를 시도하였다. 사회정보화 지표는 정보량, 정보장비율, 통신주체수준, 정보계수(개인 소비자출 중 잡비

의 비율)의 4가지 측면을 대상으로 모두 11개의 상세항목을 선정하여 계량화한 후 이들 4가지 측면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적인 정보화 지표를 산출하였다. 정보생활 측면 지표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정보관련 활동비를 계산했는데 엔겔계수의 산출방식을 응용하여 [정보관련 활동비 = (가계지출비용 - 비정보활동비용) / 가계총지출비용] 공식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부문의 개인비용도 많아지게 되며, 정보생활 측면의 구체적 정보화 지표는 7개 분야의 항목을 설정하였다.(기본조직, 일반적 교육수준, 일반적 기술지식수준, 개인미디어 보급률, 전파미디어 보급률, 활자미디어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그러나 RITE의 연구는 설정한 지표항목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RITE의 정보화 지표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新陸人('83)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정보화 사회는 공업화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소득수준과 도시화를 나타내는 인구집중도, 교육지출비, 고학력비율, 전문기술연구자수, 연구개발비 등을 기존의 정보화 지표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하였으며, 8개 분야의 요인별 분석을 7개 국가(유럽은 덴마크, 프랑스, 서독,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영국을 모두 포함)를 비교하여 서열을 측정하였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정보통신 자료 수집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사와 World Times사는 미국의 기존의 방법론과 달리 사회경제지표 접근방법에 의해 1996년 8월 세계 55개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정보 및 정보기술의 적응력과 수용력을 측정하는 지수 I3 (Information imperative Index)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지수들은 크게 사회, 정보, 컴퓨터 등의 3가지 기반을 중심으로 20개의 상세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보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항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 상이한 임의 가중치를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 문제, 국가별 자료별 분류방법의 차이 등의 문제점과 각국별 각 기반의 정보화 지수의 편차가 작기 때문에 국가별 항목 지수 비교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임의 가중치의 설정기준이 없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KISDI('89)의 '국가정보화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와 KIST('92)의

‘주요지표를 통한 한국과 선진국의 정보화수준 비교연구’ 등이 있으며, 이 두 연구는 모두 국가단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해 국제비교를 시도하고 있으나, KISDI 연구는 각 부문별의 정보화 지표만을 국가 단위로 산출하고 있는데 반해, KIST 연구는 부문별의 정보화 지표를 종합한 국가 전체의 정보화 지표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93년부터 한국전산원(NCA)이 발행하고 있는 ‘국가정보화백서’에서는 정보화를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과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활동의 총체’로 정의하였지만, 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산업의 정보화가 정보화 진전의 핵심으로 여겨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일본 JIPDEC의 정보통신 장비율(’86)을 지표로 채택하여 설문조사하여 정보화 상황과 세부상황, 관리현황, 각 산업별 장비율을 구하여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러나 상장법인 693개 가운데 110개 기업만 회답하여 표본수의 유의성이 적고, 금융업 표본이 많아 3차 산업 장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성이 있었다.

KISDI(’89) 연구의 경우는 정보화사회의 구조를 크게 허부구조로서의 정보설비의 보급 및 사회구성원에 의한 정보설비의 이용으로 보고 크게 정보화 측정지표를 정보설비 지표, 정보이용지표, 정보기기 산업지표로 설정하여 전체 7개의 지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구한 후 1980년도의 한국의 통계수치를 100으로 두고 각국의 통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상대화한 각 지표의 수치를 통합한 단일 지수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가정과 공공부문의 정보화 등 사회 각 부문별 정보화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은 관련통계의 제약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보설비지표의 일부와 정보이용지표가 수량이 아닌 금액에 의해 표현됨으로써 지표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였다.

KIST(’92)의 연구는 정보화의 구조를 연구개발활동, 컴퓨터통신산업, 정보서비스산업 등으로 나누어 보고 이에 따라 측정지표를 1) 연구개발지표, 2) 정보통신기기산업지표, 3) 정보서비스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상세 측정항목으로 8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 통계 데이터를 구한 후 1990년도의 한국의 통계 수치를 100으로 두고 각국의 통계수치를 환산한 후, 각 항목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중치로 고려하였다. 즉, 성장률이 높은 항목이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라고 간주하여 각 항목의 성장률을 구한 후 그 합을 1로 해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각 통계데이터에 곱하고 연도별로 더하여 단일 지수화하였다. 그 결과 1984년부터 1990년까지의 주요국가의 정보화지수는 한국이

0.25%, 미국 0.11%, 일본 0.3%, 독일 0.23%, 영국 0.21%, 프랑스 0.18%로 나타났다.

ETRI(96)의 경제분석실 지경용 박사팀은 지역정보화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수작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내부보고용으로 실시한 것이 지역정보화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유통량 측정방법은 정보유통량 즉 정보의 흐름을 직접 비트(bit)나 단어(word) 단위로 측정해 정보화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본 郵政省이 매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정보유통센서스]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미디어를 1) 전기통신계(전기통신, 방송) 2) 수송계(우편, 신문, 출판 등), 3) 공간계(대화, 교육, 영화 등)로 나누어 이들을 통해 보내진 정보(정보공급량)와 그것이 소비 또는 접촉된 양(정보소비량)을 계산하여 양자의 비율에서 정보소비율을 계산한다. 또한 각종 미디어별 유통거리에 유통량을 곱한 수치를 계산해 정보유통거리량을 산정하고,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1km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디어별로 계산되고 있다. 정보유통거리량과 정보유통 단위비용을 비교하여 정보유통 비용효율이 좋은 미디어는 TV와 라디오이며, 효율이 나쁜 것은 전보로 나타났다. 최근의 通信白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한 국제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KISDI가 1986년 개인매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유통센서스를 일회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3. 한국의 정보화지표와 비교항목 선정

한국의 정보화 지표개발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설정을 위해 현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보화 지표들과 대비되는 항목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1) [국가정보화백서]의 정보화 지표 구성

한국전산원(NCA)에서 한국의 정보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매년 발간하는 [국가정보화백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계 정보화를 중심으로 정보화 지표의 측정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전체 정보화 수준은 정보화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설비, 정보 인프라의 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이용,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인력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화 지원의 세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분야별로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정보설비지표의 구성

| | | |
|---------|--------------------------------|---|
| 정보설비지표 | 정보설비지표 I | - 100인당 전화회선수 - 100인당 PSDN - 100인당 ISDN 가입자수 - 1인당 전용선 매출액 |
| | 정보설비지표 II | - 통신기기, 정보기기 및 부품의 1인당 내수액 - 100인당 TV 보급대수 |
| 정보이용지표 | 정보이용지표 I (기본정보통신서비스) | - 100인당 국제전화 이용시간 - 100인당 텔렉스 가입자수 - 100인당 FAX 대수 |
| | 정보이용지표 II (고도정보통신서비스) | -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 수 - 100인당 셀룰러서비스가입자수 - 100인당 radio-paging 가입자수 - 100인당 VideoTex 가입자수 - 1인당 데이터전송서비스 매출액 - 1인당 DB 매출액 |
| 정보화지원지표 | 정보화지원지표 I (정보통신 관련 투자 및 결과) | - 1인당 통신 관련 투자액 - 100인당 논문 발표수 |
| | 정보화지원지표 II (정보통신 관련 인력) | - 100인당 통신서비스관련 종사자수 - 100인당 연구원수 |

정보설비지표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

1) 한국전산원(1998: 641) [1998국가정보화백서]에서는 '97년도의 정보화 지표의 범위와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ISDN, 인터넷, 미디어텍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신상품 항목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전체 지표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중치를 조정하여(조사 대상국가 연평균 증가율 평균치의 역수 재곱치) 지수를 산출하였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네트워크의 보급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설비지표 I과 네트워크 이외의 정보 인프라의 보급수준을 나타내는 정보설비지표 II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보화이용지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통신설비를 통하여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정보화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도의 측정을 통해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보화지표는 물가지수를 고려한 1인당 정보통신관련 투자액과 100인당 논문발표수가 각각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았고, 정보통신 관련 인력을 100인당 통신서비스 관련 종사자수와 연구원수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2) 통신개발연구원(KISDI, 1989) 정보화 지표 구성

통신개발연구원(이하 KISDI)에서는 정보화사회의 구조를 크게 '하부구조로서의 정보설비의 보급 및 사회구성원에 의한 정보설비의 이용'으로 보고 크게 정보화 측정 지표를 정보설비지표, 정보이용지표, 정보기기산업지표로 설정하였다. 상세 측정항목은 다음의 <표2-2>와 같다²⁾.

<표2-2> 정보화지표 측정항목(KISDI)

| 지표분야 | 측정항목 |
|---|--|
| 정보설비지표 I 정보설비지표 II | - 100인당 전화기보급대수 - 100만명당 범용컴퓨터보급대수 - 1000명당 PC 보급대수 - 100만명당 데이터통신회선수 |
| 정보이용지표 I 정보이용지표 II | - 1인당 전화, 전보, 텔렉스 이용액 - 1인당 데이터통신서비스 이용액 - 1인당 정보서비스 이용액 |
| 정보기기산업지표 I 정보기기산업지표 II 정보기기산업지표 III | - 정보산업 국내 총생산액 / GNP - 정보기기 내수액 / GNP - 정보기기 + 통신기기생산액 / GNP |

2) 한국전산원(1994: 30-31) [정보화 지표에 의한 정보화 국제비교] 참조.

KISDI에서는 7개의 지표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구한 후 1980년도의 한국의 통계 수치를 100으로 두고 각국의 통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상대화한 각 지표의 수치를 통합한 단일 지수를 나타내지 않았다.

(3) KIST(1992)의 연구³⁾

KIST 연구에서는 정보화의 구조를 연구개발활동, 컴퓨터통신산업, 정보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측정지표를 연구개발지표, 정보통신기기산업 지표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KISDI 연구가 정보화사회의 구조를 ‘정보설비’ 및 ‘정보설비 이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보화를 측정한 것에 비하여 KIST 연구에서는 여기에 기술혁신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연구개발활동’을 추가하였다.

KIST의 정보화 수준 측정방법은 기술혁신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정보화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화의 사회적 확산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달리 협의의 정보화 수준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KIST에서 설정한 정보화지표 각 분야와 측정항목 및 지표는 다음의 <표2-3>와 같다.

<표2-3> 정보화지표 측정항목(KIST)

| 지 표 분 야 | 측 정 항 목 |
|------------|---|
| 연구개발활동지표 | - 연구개발비 - 인구 1만인당 연구원수 |
| 정보통신기기산업지표 | - 정보통신기기의 내수액 - 정보통신기기부품의 내수액 - 컴퓨터(H/W, S/W) 내수액 |
| 정보서비스지표 | - 정보처리서비스 총 매출액 - 정보통신서비스 총수익 - 100인당 전화가입자수 |

3) 위의 글 31-3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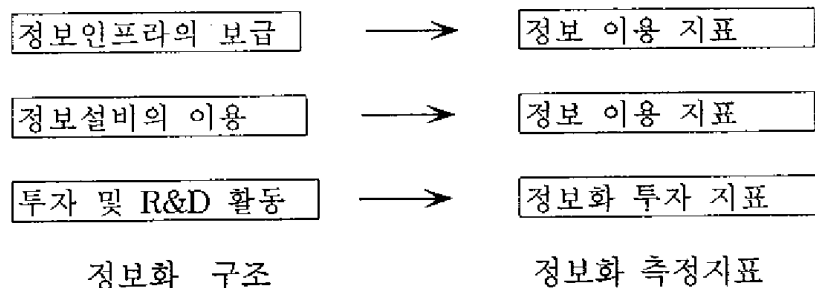
KIST의 연구 중 '연구개발활동지표'에 연구결과 실제 기술혁신 및 개발에 활용된 수치를 나타내는 산출지표가 그 사회의 정보화 수준 및 발전정도를 더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산출지표에는 정보산업관련 학계의 연구발표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보고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KIST에서는 8개의 지표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구한 후 1990년도의 한국의 통계 수치를 100으로 두고 각국의 통계수치를 환산한 후, 각 항목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중치로 고려하였다. 즉 성장률이 높은 항목이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라고 간주하여 각 항목의 성장률을 구한 후 그 합을 1로 해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통계데이터에 곱하고 연도별로 더하여 단일 지수화 하였다. 그 후 한국의 1990년도 수치를 100으로 하여 각국의 수치를 상대화함으로써 국가정보화지수로 사용하였다.

(4)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지표 국제비교연구(1994. 12)

한국전산원(이하 NCA)의 정보화지표 국제비교연구⁴⁾에서는 정보화의 구조 및 측정지표를 아래의 <그림2-1>과 같이 개념화하여 각국의 정보화 지표를 비교하였다.

<그림2-1> 정보화의 구조 및 측정지표



NCA의 연구는 정보화가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전결과가 사회 각 부문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였다. 특히, 정보화 투자지표를 전기통신투자(전기통신투자액/GDP)와 연구개발활동으로 나누고 연구개발활동을 다시 투입과 산출로 나누어 투입지표로는 연구개발비/GNP를 측정하였고, 산출지표로는 인구당 특허건수, 과학논문발표수를 측정하

4) 위의 글.

여 정보화 연구개발 투자측면 뿐만 아니라 그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NCA의 연구는 이상의 정보화 지표들을 이용 각 지표항목을 단순평균하여 6개국의 국가간 정보화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또한 KIST(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각 지표 항목의 전체 성장률을 구하여 그 성장률을 가중치로 하여 국가정보화지표를 산출하여⁵⁾ 그 결과에 따라 6개국의 정보화 지표수준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결과와 NCA의 연구결과에 따른 6개국 정보화 지표 수준 비교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각국의 정보화지표 비교(선행연구결과와 비교)

| 국가 | KIST(가중치) | NCA(단순평균) | | NCA(가중치) | |
|-----|-----------|-----------|-------|----------|-------|
| | 1990년 | 1990년 | 1992년 | 1990년 | 1992년 |
| 한국 | 100 | 100 | 123 | 100 | 124 |
| 미국 | 808 | 661 | 856 | 658 | 853 |
| 일본 | 1022 | 469 | 657 | 475 | 665 |
| 독일 | 695 | 423 | 585 | 417 | 584 |
| 영국 | 541 | 478 | 624 | 468 | 617 |
| 프랑스 | 579 | 437 | 542 | 435 | 541 |

(5) NCA의 정보화지수를 위한 가중치 연구(1996. 12)

NCA의 정보화지수 가중치 연구에서는 정보화를 ‘고도정보화’라고 보고 정보사회란 ‘고도정보화가 많이 진전된 사회’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정보화수준의 측정항목의 범위를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국한하였고, 신문, 책자, 우편 등과 같은 비전자계 미디어에 의한 정보화 현상은 측정항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연구하였다. 한편, 정확한 정보화지수를 만들기 위하여 개별항목들의 중요도를 고려한 새로운 가중치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요국가간 정보화지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지표의 작성을 위한 가중치를 구해냄으로써 지수화된 정보화지표가 나타내는 의미 뿐만 아니라 정보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의 정보화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5)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항목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정보이용지표 II와 정보화투자지표 I은 제외하고 각 항목의 가중치를 구한 후 이용지표II와 투자지표 I에 대해서는 평균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 가능케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NCA의 연구결과에 의한 주요 9개 국가간 정보화지수 연구결과와 '96년도 [국가정보화백서] 방식에 의한 비교 결과가 다음 <표2-5>에 나타나 있다.

<표2-5> 주요국 정보화지수 보고서방식과 '96백서 방식 결과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대만 | 싱가폴 | 홍콩 |
|-------|-------|--------|--------|--------|--------|--------|-------|--------|--------|
| '96백서 | 376.6 | 3124.6 | 1695.4 | 2281.7 | 2229.3 | 1360.6 | 423.4 | 1616.7 | 1590.7 |
| 임의가중 | 326.9 | 1426.9 | 888.5 | 607.6 | 785.9 | 568.3 | 466.3 | 1458.1 | 978.0 |
| 보고서 | 461.2 | 2163.1 | 1280.8 | 1154.4 | 2402.6 | 884.6 | 408.3 | 1555.8 | 1627.2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수준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북한의 정보화지표 개발을 위한 비교항목 선정

북한사회의 경우 폐쇄적인 체제유지 정책으로 정보화 사회로 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특히, 일반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외부세계 정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화된 정보화 사회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도 점차 정보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⁶⁾, 정보통신 기술을 또다른 차원의 정권유지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최근 활발한 투자와 개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앞의 각 연구결과들은 정보화 수준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표항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전체적인 정보화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화지표 항목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6) 북한의 중앙방송 '97. 12. 12일 보도에서 "평양서 컴퓨터 프로그램전시회 개최"내용과 더불어 새롭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의 대중적 개발이 나라의 기술발전과 기술혁명 수행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도 단순한 통계수치보다는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징과 수준에서 정보화 수준을 평가·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각국과의 불량적인 비교도 중요하지만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발전가능성과 열악한 정보화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온 정보화 노력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만 이후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고, 설명력 있는 객관적인 정보화 지표 항목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과 경제 현황 자료를 통해 북한의 산업화 수준을 남한과 비교하여 보고, 지금까지 연구결과로 얻은 한국의 정보화지표 수준을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북한의 정보화 지표설정에서 NCA의 [’98국가정보화백서]에서 사용한 지표항목들 가운데 선정을 하되 북한내의 통계자료 부족과 구체적 자료의 폐쇄성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한다.

III.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지표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크게 S/W와 H/W로 나누어 개발현황과 보급·활용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정보산업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통계가 북한언론과 당국에 의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간행물과 신문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된 분야들을 통해 최대한 정량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컴퓨터 산업의 현황과 수준을 조사하고, 미비한 부분들은 망북자들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7) 예를 들어 100인당 셀룰러서비스 가입자수, 100인당 radio-paging 가입자수, 100인당 Video Tex 가입자수, 1인당 데이터전송서비스 매출액, 1인당 DB매출액,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 수 등 정보이용지표 II(고도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북한사회에서 전혀, 또는 아직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화 지표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정보기술이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할 수 없는 기술력이라고 절정내리기는 어렵다.

도 단순한 통계수치보다는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징과 수준에서 정보화 수준을 평가·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각국과의 불량적인 비교도 중요하지만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발전가능성과 열악한 정보화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온 정보화 노력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만 이후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고, 설명력 있는 객관적인 정보화 지표 항목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과 경제 현황 자료를 통해 북한의 산업화 수준을 남한과 비교하여 보고, 지금까지 연구결과로 얻은 한국의 정보화지표 수준을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북한의 정보화 지표설정에서 NCA의 [’98국가정보화백서]에서 사용한 지표항목들 가운데 선정을 하되 북한내의 통계자료 부족과 구체적 자료의 폐쇄성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한다.

III.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지표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크게 S/W와 H/W로 나누어 개발현황과 보급·활용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정보산업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통계가 북한언론과 당국에 의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간행물과 신문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된 분야들을 통해 최대한 정량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컴퓨터 산업의 현황과 수준을 조사하고, 미비한 부분들은 망북자들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7) 예를 들어 100인당 셀룰러서비스 가입자수, 100인당 radio-paging 가입자수, 100인당 Video Tex 가입자수, 1인당 데이터전송서비스 매출액, 1인당 DB매출액,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 수 등 정보이용지표 II(고도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북한사회에서 전혀, 또는 아직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화 지표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정보기술이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할 수 없는 기술력이라고 절정내리기는 어렵다.

1. S/W관련 산업 현황

(1) S/W 개발 현황

북한의 S/W 개발 연구기관의 특징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윈도우즈용 조선글 처리프로그램(단군)이나 문서편집 프로그램(창덕) 등 30여종의 S/W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⁸⁾

또한 컴퓨터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프로그램 '광명'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프로그램을 기초로 PC통신 자료검색체계와 전자우편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upgrade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DB 구축도 점차 이루어 지고 있다.⁹⁾

북한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C, C++은 물론 지금은 Visual Basic과 Java 등과 같은 언어들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간되는 컴퓨터 관련 문헌들이 일본, 싱가포르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더욱이, 매년 평양에서 3~4일간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들을 비롯하여 각지의 기관, 기업소의 수백명의 프로그램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수많은 S/W들이 소개되고 개발, 이용되고 있다. 문자인식프로그램 '인식펜', '창덕5.0', '종합통보봉사체계', '예보진단기', '광산탐사자료 종합배속체계', '자기마당조사자료,'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MIS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다.

북한정권 특히, 김정일은 S/W프로그램 개발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컴퓨터 산업이 인민들의 능력을 높이고 기술발전과 기술혁명 수행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2) S/W 연구개발 기관

주요한 S/W 연구기관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통일부, 한국전산원, 안기부 자료 종합 검토 내용임.

9) [내외통신], '98.4.1-6.30, 280-281면 참조.

1) 평양프로그램센터(PIC)

정부의 지원으로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20~3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며, PIC는 '1986년에 창립되어 '91년 7월 17일에 평양프로그램센터로 불리우나 1995년 이후에는 평양정보센터로 불리우고 있다.¹⁰⁾

PIC는 평균 1인당 1.5대의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져 컴퓨터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절반 가량은 IBM호환 기종이다. Workstation도 많이 보급되었으며, 주로 SUN의 SPARK/2, SPARK/10 등이며, SONY, NEC 제품이다. 100여명의 연구원 중 4분의 1 가량이 Workstation을 사용하고 있다.¹¹⁾

PIC의 연구분야는 첫째, 북한의 공장, 기업 및 다른 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주는 Database 그룹, 둘째, PC를 위한 W/P인 “창덕”(북한에서 90%이상이 사용) 시리즈와 Apple/Macintosh용 탁상출판 시스템 등 다양한 연구를 하는 Publishing 그룹, 셋째, CAE, CAD, 프로젝트 관리도구 개발 등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응용소프트웨어 그룹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¹²⁾

PIC는 '95년 10월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Window95용 조선어처리프로그램 “단군 95”(4.1 영문판, 일문판)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문서편집과 스프레드쉬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조선어로 처리할 수 있고, 영문발음 입력으로 우리글 변환기능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및 미국 등에 판매계획도 세웠다.¹³⁾

2) 조선컴퓨터 센터 (KCC)

1990년 10월에 연건축 면적 2만3천 평방미터의 조선 컴퓨터기술 중앙기지로 조업을 시작한 “조선컴퓨터센터”는 경제 각 부문의 전산화를 실현하고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발전시키며 컴퓨터 분야의 기술교류 사업을 촉진시킨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었다. KCC

10) 북한의 [조선신보] '95년 3월 9일자에서 평양정보센터가 조선글 문서편집프로그램 “창덕2”와 “단군 2” 개발완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창덕2”는 NEC와 IBM계열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조선글처리 프로그램 “단군2”는 MS-Windows와 Apple Machintosh컴퓨터에서 조선글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보도는 미국 [뉴스위크]의 아시아주제 특파원을 지낸 미국 대사쥬세트대학의 버니트 크리셔의 글을 인용하면서 평양정보센터라고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11) 한국전산원(1996.6),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48면

12) 위의 글, 49면.

13) 북한 [조선신보] '96년 10월 30일자 “윈도즈 95내용 [단군 95]개발” 참조.

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기지이며 동시에 전자계산 산업의 연구, 인력양성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 종합운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산하에 무역업무를 맡은 “신흥회사”를 두어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주문받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컴퓨터기술강습소”, “중간공장” 등을 두고 있다.

KCC는 16개의 연구실로 여러 가지 응용 S/W를 개발하는데 대부분 IBM PC/AT용이며 GUI를 사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멀티미디어, 보안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련 해외프로젝트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연구실을 살펴보면, 생산공정 자동화를 연구하는 ‘전자계산기 조정실’, 전산망을 연구하는 ‘전자계산기 통신실’, 북한 경제부문에서 제기되는 계산을 수행하는 ‘중앙계산기실’, 경영, 사무기기, 전자출판 자동화 개발을 하는 ‘사무계산기화실’, 공업적 설계 자동화를 연구하는 ‘자동설계실,’ 문자, 숫자, 그림, 화상정보처리를 연구하는 ‘화상처리 2실,’ 주변결합장치 및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장치기술실,’ 진단형 전문가체계(ES)와 고급언어에 의한 추론체계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계산기모의실,’ 등이 있다. “또한 기술인재 양성기지 역할로서 강습소에서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1회 수십명 대상의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 여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⁴⁾

3) 조선과학원(Academy of Science of DPRK)

조선과학원은 평양에서 32km쯤 떨어진 평성시에 있으며, 전자자동화 분원에 Electronical/Electronic Materials(EEMRI), Electronics (ERI), Control Machine (CMRI), Computer Science(CSRI), Automation 등의 연구소가 있으며, 부설 pilot 공장으로 반도체 공장, 로봇공장, 전자부품공장 등이 있다.

ERI에서는 반도체, Solar Cell 및 LCD에 관한 연구를, CSRI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160명을 포함한 280명의 연구원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와 실제 산업체에서 활용에 관한 일을 하고 약간의 연구원만이 산업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고객을 상대로 S/W개발 및 보급도 한다.

CMRI는 주로 로봇과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기계에 관한 일을 하며, 380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급 학위 소지자는 적은 편이다.

14) 조선신보 1991년 10월 참조.

전자자동화 분원이 원하는 국제협력에는 대형 집적회로 설계 등과 같이 첨단기술용 CAD/CAE/CAM, 8개 국어 전자사전 구축 같은 S/W 기술 그리고 연속농정 같은 자동화에 관한 것이다. 특히 CSRI의 조석재 박사는 개발한 S/W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⁵⁾

4) 국제통신센터(International Communication Center)

국제통신센터는 1989년에 완공된 14층 건물로 1~2층에는 고객 서비스(전화, Fax, Telex) 시설이, 3~9층에는 통신장비시설이, 10~14층에는 R&D실과 행정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통신장비들은 독일의 SIEMENS사 제품이거나, 일본의 Toyocom, Fujitsu 및 NEC 설비들이다.

1996년까지 북한에는 아직 디지털 교환기가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1997년 평양과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역에 광케이블이 연결되어¹⁶⁾ 통신망 발전에 발판이 되고 있다.

5) 중앙과학기술정보연구소(Central Sci.&Tech.Information Institute)

이곳은 과학기술 정보 뿐 아니라 경제와 무역에 관한 정보도 수집, 보급하며 경제, 무역 및 기술 관련 훈련과정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글, 영어 및 러시아로 탐색할 수 있는 bibliography database(제목, 저자, 초록, 논문지/단행본/proceeding, 페이지, 소장 장소)를 개발했으며, 이곳에 50만개 이상의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Micro VAX II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SUN Workstation을 이용하여 분산정보 base를 전국 각지에 구축하고 멀티미디어를 사용,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중앙도서관과 dial-up선으로(1200 Baud) 연결되어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

15) 한국전산원, 앞의 글 50면에서 재인용.

16) 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유영구 팀장 등 1998년 8월 방북단원들과의 인터뷰 내용, 한국통신 남북 협력기획부의 1998년 9월 15일 인터뷰 내용 참조.

17) 한국전산원, 앞의 책, 53면 재인용.

2. H/W관련 산업 현황

(1) 컴퓨터 개발 상황

북한은 1960년대부터 컴퓨터 생산기술의 자체개발을 시도해왔으나 전문기술 인력 부족과 반도체 등 관련 전자공업의 수준 미달로 시제품 수준의 초보적인 생산정도에 그쳐 실용성 있는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실패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과학원 등 연구기관에서 CPU 및 IC 등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8비트급 컴퓨터를 조립생산하는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¹⁸⁾

1969년 4월 “전진-5500”이라는 숫자형(digital) 만능전자계산기를 완성하였으나, 이 전자계산기는 4,096개의 글자(숫자)를 기억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진공관을 이용한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었으나 기술수준이 낮은 것들이었다. 1974년 폴란드에서 제2세대 컴퓨터 ‘오드라’가 도입되어 김일성종합대학에 설치 가동하게 되고, 그 후 IBM 호환기종인 EC-1040으로 대체되었으며 “오드라”는 기계대학으로 옮겨졌다.

1970년대 말에 “남용산 1호”라는 컴퓨터를 제작하였으나 성능이 너무 낮았으며, 북한의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진 8비트급의 마이크로 컴퓨터 시제품 “봉화4-1”이 1982년에 개발되었다.

1988년에는 북한의 과학전시관에 자체 개발한 16비트 마이크로 컴퓨터가 전시되었으며 32비트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컴퓨터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면서 1990년 “조선 컴퓨터센터”를 설립하여 컴퓨터 기술 부문의 중앙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북한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1984년 김일성이 유럽순방 이후 유럽 각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순방 국가들과 각각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생을 유럽 각국에 파견,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정보기술 및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제1차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88~'91)에는 초대규모 집적 회로, 대출력 고내압 반

18) 통일부, 한국전산원, 안기부 등 발표자료 종합.

도체 생산의 공업화와 경제주요 분야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며, S/W산업과 아울러 H/W와 자동화 요소 등의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91~'94)에는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 자동화와 초대규모 집적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정했으며, 16메가 초대규모 집적회로 개발과 함께 32비트 극소형 컴퓨터의 공업화¹⁹⁾와 64비트 극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은 COCOM의 규제를 받아 대형 컴퓨터의 도입은 매우 어려우나 조선컴퓨터센터나 평양프로그램센터 등 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는 최신의 워크스테이션과 PC가 많이 도입되었고, 특히 DEC의 ALPHA칩을 장착한 기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평양컴퓨터 조립공장에서 연간 3만 여대 정도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현 보급대수는 7만 여대로 추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2) H/W 연구·개발 기관

조선과학원 산하 '전자공학 연구소'에서는 IC 시험공장을 설립하고, 장치산업인 반도체 분야에는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1992년 5월 UNIDO를 통하여 서방의 투자 자원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들 가운데 컴퓨터 생산과제에 대한 제안 개요에서 32bit IBM-XT형 컴퓨터(PC) 연간 생산량을 2만대로 하고, 국내 수요 40%로 해외 수출을 60%로 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북한 참여 기관은 '전자자동화위원회'와 '조선 컴퓨터센터(KCC)'이다. 사업계획은 처음에는 연간 2만대의 PC를 조립하다가 차차 다른 부품들(사판, 주변기기

19) 월간 [말]지 '96년 2월호에서 미주 평화통일연구소 한호석 소장은 1995년 8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결성된 '8·15 50주년 민족공동 통일대축전 미주준비 위원회'의 일원으로 방북하여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소장이며 경제학회 회장인 김원삼 교수(박사)와 이 연구소 정치경제학 연구실장인 한득보 박사와의 대담기록에서 북한이 제2차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91-94) 이후 16 비트 전자계산기(ZXJAVBXJ)를 생산하고, 32비트 컴퓨터를 생산하는 공장이 96년 이후 건설되어 생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89면).

20) 통일부, 한국전산원, 안기부 자료 종합 검토 내용임.

등)을 생산하고, KCC가 S/W, H/W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컴퓨터 생산계획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는 처음 70~100명에서 점차 1,000명으로 증가 계획을 세웠으며, 노무자 1인당 하루 PC생산량은 5대(중국의 1인당 하루 생산량 3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라 함)이며, KCC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보산업, S/W, 응용 및 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16 bit IBM-XT 100대를 조립했으며 2개의 Assembly line을 가지고 100명의 기술자를 확보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32-bit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32-bit PC 생산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생산된 PC는 처음에 주로 교육기관에 공급 후에 11개의 산업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동남아시아와 서방세계에 수출을 희망하며, 중국과 동구권 국가들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남한과의 비교에서는 남한은 1988년에 약 2백만 대의 PC를 생산(이중 2/3를 수출)했으며, 이것은 약 10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3. 통신 산업 현황

북한은 우리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라 하며, 주민들의 통신 및 방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 가지 통신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체신사업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으로 분류되며 정무원의 체신부를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추진된다

북한의 통신산업의 발전과정은 체신사업 개조단계('45~'50), 전후복구 단계('53~'60), 정책단계('60년대),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70~'80년대), 현대화 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21) 한국전산원(1994.12 : 88-89)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참조.

(1) 북한의 통신시설 추진방향

북한이 전화망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로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통신선로의 개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76년 9월에는 통신사업의 확대를 위해 정무원 교통채신위원회에서 채신부를 분리해 독자적인 부서로 개편하였으며 전화회선도 많이 증설하여 '94년 후반에는 130만 회선이 시설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회선이 교환수 교환방식이었는데 최근 모든 전화교환이 자동화되었다는 발표가 있다.²²⁾

'96년도 주요 사업으로 채신부는 전화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최근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전화망을 대거 보수했으며 여러 지역의 통신 선로를 광섬유 케이블화하는 '통신현대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996년에 평양시의 여러 전화 분국들과 평성시, 동해안과 서해안의 여러 지구를 연결하는 700여 km 구간에서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전화망을 구축하여 개통했으며, 북한의 서북부 여러 구간들에서도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전화망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개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²³⁾

이같이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전화망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화의 자동화를 앞당기게 되었으며, 북한정부는 통신망을 국가 차원의 체재유자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채신의 현대화는 곧 통신, 방송설비와 운영수단의 현대화"라고 하였으며, 사회주의 채신을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 때에 알려주고 그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인민 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 최신 과학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채신을 현대화하도록 혁명하게 영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북한의 통신망 현황

북한의 국내전화 회선 수는 총 130여만 회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95년 들어 국

22) 전산원(1997: 116),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참조.

23) 북한공산당 창건 50돌 맞아 "빛섬유 까벨(케이블)에 의한 전화망 공사추진: 채신부문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라는 제하의 보도 참조.

제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UNDP와 합작으로 평양과 함흥 구간에 300km 광케이블 통신망을 최초로 설치하였고, 평양과 남포 등 전국 주요 도시 간에 광케이블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700km 구간이 구축되고 계속해서 확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통신기술, 반도체 기술발전은 아직 저조하여 외국에 의지하고 있다.²⁴⁾ 특히 김책공대에는 체신학부에 광섬유 통신실습실을 두어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다. 평양시²⁵⁾와 함흥(함남도)과 청진(함북도)은 교환기가 디지털 크로스바이며, 그 외의 지역은 크로스바이며, 평양시의 교환시설수는 약 24만 회선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약 13만회선의 청진, 약 12만회선의 함흥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통신시설이 열악한 상태이며 그 격차가 심하게 보이고 있다.²⁶⁾

국제전화망 운용실태는 '86년 프랑스에서 설비를 도입하여 인도양 INTELSAT 위성용 통신 기지국을 최초로 개통하여 현재까지 위성 기지국 2기를 구축하였으며, '88년 INTERSPUTNIK 위성 기지국 1기를 건설하여, 동구권 국가와도 교신을 개시하였다. 현재 러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등 10여개 국가들과 국제통신을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들 10여개 국가를 통한 중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제 통화가 가능한 나라는 150여개 국가들이다.

TELEX의 경우는 국제전화 직통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10여개 국가 중 이란을 제외한 국가와 직통회선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태리, 헝가리 등 70여개 국가들과는 상기 국가들을 경유하는 중계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TELEX 가입자수는 1994년 기준으로 1,862회선으로 밝혀지고 있다(아래 표 3-1 참조).

24) 최근 북한은 태국의 록슬리사(Loxley Group)와 북한의 대외 건설총회사가 합작해서 설립한 동북아 전신전화회사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통신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미 전화 5천 회선과 중국 훈춘과의 광통신을 개통하였으며, 1998년까지 1만 5천 회선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으로 전화통신망을 구축 중이다.

25) 평양의 국제통신센터 내의 디지털 교환기는 프랑스의 ALCATEL사 제품이며, 국제수동교환기는 독일 지멘스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26) 연세대학교 전파통신 연구소 자료에서 재인용(원출처: ITU, 1994. 9, “북한의 지역별 통신시설 현황”).

<표3-1>

<북한의 통신현황>

(1994년 기준)

| 구분 | 단위 | 북한(A) | 남한(B) | 비교(A/B) |
|------------|-----|--------|---------|---------|
| 가입전화시설수 | 전화선 | 1,307 | 20,783 | 0.06 |
| 전화 가입자수 | " | 1,089 | 17,646 | 0.06 |
| 100인당 보급율 | 대 | 4.2 | 39.7 | 0.11 |
| 공중전화 시설수 | 회선 | 2,720 | 305,270 | 0.01 |
| 1000인당 보급율 | 대 | 0.12 | 6.87 | 0.02 |
| 국제전화 회선수 | 회선 | 120 | 12,051 | 0.01 |
| TLX 가입자수 | 회선 | 1,862 | 13,500 | 0.14 |
| 교환기 디지털화율 | % | 4.6 | 61.8 | 0.07 |
| 종사원수 | 명 | 15,000 | 60,100 | 0.25 |

자료: 남한(연차보고서), 북한(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1995 ITU)

그러나, 북한은 전체 사회의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신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전화의 경우, 외국에서 북한에 전화는 할 수 있으나, 북한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외국에 전화를 걸 수 없다. 외국인들은 교환원을 통해 해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한 평양을 벗어난 지역에서 전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평양만 전자교환기 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교환원을 통해 전화(일명 딸딸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북한사람들의 명함을 받으면 많은 경우 외부 번호가 거의 동일한데 이는 교환원을 통해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한편, 최근 북한의 통신기기 이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사람들이 신의주 단둥으로 강건너 들어오면서 개인용 이동통신 단말기인 휴대폰을 들고 들어와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면 중국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휴대폰이 상용화되면 세계 각국과 전화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강력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 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 방북단원들과의 인터뷰 내용 정리.

'97년부터 북한의 경수로건설 지원을 위한 우리측 직원들을 위한 직통전화망이 개설되었다. 이 전화망은 북한 신포 금호지구 통신소에서 평양까지의 광케이블을 통해 연결되고 평양에서 INTELSAT을 통해 일본으로 연결되며, 일본에서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전화통신망이 구축되었다. 한편 관제통신으로 대구에서 평양까지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육상) 판문점과 직접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²⁸⁾

북한의 통신시설과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열악하여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초반을 연상시키지만, 평양·나진·선봉지구, 평양·금호지구 광케이블 시설, 평양내부의 전자교환장치 운용 등 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약체 (APT)에 정보통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들은 연구개발 및 실험에 필요한 계측장비나 전송장비들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3) 북한의 통신 설비 생산 및 인력

북한의 통신설비 생산은 주로 남포 통신기계공장, 평양 통신기계수리공장, 박천 통신기계공장, 선천 영예 군인통신기계공장, 성간 통신기계공장 및 평양 전선공장에서 맡아하고 있다.

통신인력 양성은 체신부 산하 약전 연구소, 평양 체신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순천 체신대학, 함흥 경공업대학, 평양 전기통신 교교 등과 각 도에 있는 전자 자동화 전문학교 및 체신 기능공 양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체신부내 통신인력은 15,000명으로 추산되며, 그 구성비는 고급기술자 10%, 기술자 30%, 기능인력 57%, 행정인력 3%로 구성되어 있다.

28) 한국통신 남북협력기획팀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발췌함.

(4)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현황

1) PC통신 활용 현황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등 몇몇 연구소와 대학에서 근거리통신망(LAN) 형태로 구현되었으나 전국적인 정보통신망은 구현되지 않았고 특히 초고속통신망 설치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인터넷 활용 현황

북한에서 인터넷을 받아들이기 활발히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자들도 인터넷이나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²⁹⁾ 인터넷의 정보 개방성, 해외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등의 특징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를 강제하고 있는 북한정부가 일반인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려면 YAHOO를 이용하여 'DPRK'로 탐색한 결과 814개의 정보가 검색되었다.³⁰⁾ 이들은 대부분, iaea, wfp 등 국제기구의 웹사이트가 많고 kinsoft라 하여 미국에서 보내는 것과 dpr-korea(금강산 국제그룹: www.dpr-korea.com)라는 일본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영문 기사를 내보내는 웹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1997년 1월 27일자 국제판 뉴스위크지에서는 "NORTH KOREA www. commieparadise.com"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국제 웹사이트인 조선중앙통신(KCNA: Korean Central News Agency)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www.kcna.co.jp라는 웹 주소를 소개하며, 남한 정부가 이러한 북한 소식을 보급하는 인터넷 공급자를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활용을 이제 시작하였으나, 북한 내에서는 이용하지 않

29) 북한의 [과학의 세계], 1996년 2월호에서 김명희는 "과학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인터넷"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의 기능과 특징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으며, 한재철은 "정보고속도로"라는 제목으로 광통신에 의한 정보고속도로의 활용과 특징들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김명희는 [과학의 세계 1996년 3월호에서 "물류와 대담: 인터넷에서 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인터넷 기능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30) 한국전산원(1997: 123).

고 일본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현재 한국의 통일부가 만든 북한 관련 웹사이트(www.unikorea.go.kr)에는 kcna 웹페이지 내용이 거의 다 한국말로 나오고 있다. 이외에 북한방문 웹사이트(<http://biz.onramp.net/~hbarker/nkbakker.htm>)는 호주의 컴퓨터과학자이며 심리학자인 Bakker 형제와 친구 Erwin이 1995년 3월 북한을 방문하여 경험한 것을 많은 사진과 함께 찍은 것으로 영어와 한글판으로 내보내고 있다. 미국 산호세 머큐리지 웹사이트(<http://cgi.sjmercury.com/archieves/korea.htm>)와 미국 kimsoft 웹사이트(<http://kimsoft.com/dprk.htm>) 등이 있는데 후자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중앙통신 뿐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신문에 난 북한 관련 뉴스도 제공하고 북한의 정세분석, 국제 경제문제, 사업가를 위한 정보, 북한 방문기 등을 수집하여 띄우거나 이미 개설된 웹사이트에 연결시켜 주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가 1997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 심화에 따른 국제원조기구에 원조 호소의 목적과 북한의 원자로 관련된 IAEA 보고서가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5) 방송시설 현황 및 정책

북한의 방송은 유선라디오와 TV 방송이 있으나 일반 국민이 듣고 볼 수 있는 채널은 1~2개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국제 호텔에는 위성방송이 들어가고 있어, CNN, NHK 등 외국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북한 라디오 방송의 역사는 1945년 10월 14일 “조선중앙방송”이란 명칭으로 개국하면서 시작되었다. 1954년 11월 29일에 공산권 중심의 국제방송기구인 “국제 라디오 및 TV 방송기구”인 OIRT에 가입하고, 1975년 9월 23일에 “국제전기통신연맹”인 ITTU, 그리고 1991년 9월 1일에 “아시아와 태평양 방송연맹”인 ABU에 가입하였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은 크게 중파라디오, 유선방송, FM방송, 단파방송으로 나뉜다.³¹⁾ 중파라디오는 방송특성상 원거리에 도달하며, 방송 총출력은 남한의 2배로 100KW 이상 시설이 남한은 14개과 4,4650KW인 반면에 북한은 25개과 10,800KW이다. 북한의 중

31) 이우승, “북한방송 개발에 관한 정책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1998년 9월) 참조.

파라디오 방송은 서해와 광활한 평야지대인 서북부를 통해 전파의 손실이 거의 없이 남한의 3분의 1의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높은 서반부에서 수신할 수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현재 행정구역인 리의 98%, 전체의 99.4%가 유선방송망에 연결되어 명실상부한 유선방송의 전국화가 이루어져 있다. 유선방송은 지역별, 단체별로 일방적인 메시지를 폐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적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선전, 선동, 교육, 동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FM방송망은 북한의 전국 주요도시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북한 FM방송인 평양 FM방송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으며, 남한의 FM방송 최고출력이 10KW인데 비해 북한은 개성(92.5MHz), 해주(103.7MHz)에서 고출력 시설을 마련해 방송함으로써 남한의 중부 지방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북한의 단파방송은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과 김일성 유일사상 홍보를 위해 해외방송 시설의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재 9개 언어로 28개 주파수(중파 612KHz, 청진 500KW), 일일 150시간 이상의 해외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방송 외에도 북한내 지방중계용과 대남용 단파방송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쿠바의 하바나와 불가리아의 소피아 등 2개소의 해외 중계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단파 라디오 방송의 경우 남한에서 단파 라디오 수신기를 구비할 경우에 전국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청취할 수 있다.

북한의 TV 방송은 1963년 3월 3일에 시험방송을 시작하여, '67년 4월 평양 TV방송국(현재의 조선중앙 TV방송국)이 개국하였다. TV방송시스템은 남한과 달리 동구권 방식인 OTR 방식이고 컬러방송은 PAL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조선중앙 TV 방송은 유일한 대내용 종합편성 방송으로 표준방식으로 D, 컬러방식으로 PAL을 채택하고 있다. 민수대 TV방송국은 문화예술전용채널로 조선중앙 TV방송국과 마찬가지로 표준방식 D, 컬러방식 PAL을 선택하고 있다. 이외에 대남 전용 방송인 개성 TV방송은 남한에서만 시청되는 표준방식 M, 컬러방식 NTSC로 방송하였으나, 1998년 2월 15일에 폐쇄되었고 기존 NTSC 송신시설을 이용해 조선중앙 TV를 남한을 대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한편 개성 TV방송을 폐쇄한 다음날인 2월 16일 평양교육문화 TV가 개국하였다.³²⁾ 이러한 정책전환은 북한이 대남선전보다는 체재유지에 방송활동의

역점을 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컬러 TV 방송은 남한이 1980년 12월 1일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북한은 1974년 4월 15일 PAL-D 컬러방송을 개시하여 한국보다 6년이나 먼저 컬러방송시대를 열었다.

한국의 TV네트워크별 가시청율 및 송신시설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2> 남한의 TV네트워크별 가시청율 및 송신시설수

(1995년 7월 현재)

| 네트워크명 (매체별) | 가시청율 | | 기간국수 | 중계국수 | 계 |
|----------------|-------|-------|------|------|-------|
| | 인구대비 | 면적대비 | | | |
| KBS-1 TV | 97.2% | 87.3% | 32 | 342 | 374 |
| KBS-2 TV | 96.2% | 85.5% | 31 | 254 | 285 |
| EBS TV | 93.8% | 83.1% | 25 | 203 | 228 |
| MBC TV | 94.3% | - | 31 | 158 | 189 |
| SBS+지역민방 | 80 % | - | 6 | 8 | 14 |
| AFKN | - | - | 2 | 15 | 17 |
| 계 | | | 127 | 980 | 1,107 |

※자료: 한국방송개발원('95: 6),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 연구(2단계)

1995년 7월 현재 한국의 TV 송신시설은 간이중계소를 포함하여 1,107개소에 이르며 KBS1은 인구대비 97.2%의 가시청권을 가지고 있다. KBS는 1997년까지 105개소의 간이 TVR 신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시청율을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올릴 계획이다.

북한의 TV 송신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국은 2개, 송신출력 1KW이상인 기간국수(TV송중계소)는 53개소이며, 500W 이하 TVR(중계국)은 477개소이다. 반면 한국은 방송국 44개, TV송중계소 127개소, 중계국 980개소로 전체적으로 한국이 약 2배 이상 더 많다(표 3-3 참조). 또한, 북한은 1개 시설에 평양을 제외하고는 2개 이하의 송신채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KBS와 민영방송을 포함 5개 채널 시설을 갖고 있다.

<표3-3> 북한의 출력별 TV 송신시설수

(1995년 7월 추정)

| 출력 | 100KW | 50KW | 20KW | 10KW | 5KW | 3KW | 2KW | 1KW | 계 |
|------|-------|------|------|------|-----|-----|-----|-----|------|
| 송신소수 | 1개 | 2개 | 1개 | 11개 | 15개 | 7개 | 4개 | 12개 | 53개소 |

※자료: 한국방송개발원,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연구(2단계),1995.12, 7면.

남북한 TV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 전의 방송교류나 통일 후의 방송시스템 통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분단이후 시작된 TV방송도 한국은 미국, 일본이 사용한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을, 북한은 유럽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PAL(Phase Alternation by Line)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표3-4> 남북한 TV방식 비교

| TV 방식 | 주사선수 | 채널대역폭 (MHz) | 영상대역폭 (MHz) | 영상변조 방식 | 음성변조 방식 | 음성변조 편이(KHz) |
|---------|------|-------------|-------------|----------|---------|--------------|
| NTSC(M) | 525 | 6 | 4.2 | Negative | FM | 25 |
| PAL(D) | 625 | 8 | 6 | Negative | FM | 25 |

두 방식은 주사선수와 채널대역폭에 차이가 있어서, 스튜디오 제작장비에서부터 전송장비와 송신장비, 그리고 가정의 수상기에 이르기까지 규격과 성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대방식의 TV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PAL-D 방식을 사용하는 북한의 송신장비는 영상대역이 6MHz이므로 전송장비, 송신장비 및 안테나의 대역폭이 한국방식보다 2MHz 더 넓어야 하며 따라서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유지비가 더 소요되는 반면 기본성능은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중파 라디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5> 남북한 중파 라디오 시설현황 비교

| 운영주체 | 운용국수 | 채널수 | 총규모출력 | 가 청 율 (인구대비) | 수 신 기 보급대수 | 비 고 |
|--------|------|-----|----------|-----------------|---------------|--------------------|
| 한 국 | | | | | | |
| KBS 1R | 66 | 47 | 1,749KW | 97.8% | 4,200만대 | CBS, SBS, 기타 |
| KBS 2R | 8 | 8 | 900KW | 76% | | |
| MBC | 20 | 20 | 270KW | 87% | | |
| 사회교육 | 5 | 5 | 3,250KW | | | |
| 기타민방 | 8 | 8 | 490KW | | | |
| AFKN | 17 | 17 | 23KW | | | |
| 소 계 | 124 | 105 | 6,682KW | | | |
| 북 한 | 68 | 67 | 11,601KW | | 375만대(추정) | |

한국의 라디오 방송시설은 공·민영 및 특수방송을 포함하여 124개로 북한의 68개소에 비해 2배가 많은 반면 총출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ITU에 등록된 100KW 이상 송신소는 한국이 14개소, 북한이 25개소나 된다.³³⁾

남북한 단파방송 시설을 보면 한국은 2개소에 송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3개 단파주파수와 1개 중파주파수로 10개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3개소의 송신소와 31개의 주파수로 9개 언어로 송출하고 있다.

북한은 라디오방송의 주민청취를 통제해오다가 1989년 1월 1일 제13회 평양축전을 기해 14개 지역 25개 FM송신시설로 방송을 개시하였다. 평양에는 104.5MHz, 105.2MHz, 107.5MHz 3개 채널이, 개성, 청진, 강계, 평성, 남포, 해주, 함흥에는 각 2개의 송신채널이 ITU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평양 이외에 1개의 추가매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 FM 송신시설 현황은 아래 <표3-6>와 같다.

33) 1995년 7월 현재, ITU 등록 자료 참조.

<표3-6> 남북한 FM시설 현황 비교

| 방 송 매 체 | 기간국 | 중계국 | 총출력 | 가청율 (인구대비) | 비 고 |
|----------|-----|-----|--------|---------------|-----------------------------------|
| 한 국 | | | | | |
| KBS 1FM | 25 | 1 | 86KW | 94.8% | 클래식 음악 수도권 위주 IR 프로그램 방송 |
| KBS 2FM | 1 | | 10KW | 34.0% | |
| KBS 표준FM | 20 | 35 | 91.8KW | 91.2% | |
| 교육 FM | 20 | 2 | | 97.5% | |
| 군 FM | 4 | 4 | | | |
| MBC음악 | 20 | 3 | | 93.9% | |
| MBC-R FM | 8 | | | 79.8% | |
| 평화방송 | 1 | | | 34.0% | |
| 불교방송 | 1 | | | 34.0% | |
| 교통방송 | 1 | | | 34.0% | |
| 극동방송 | 1 | | | | |
| 기독교방송 | 1 | | | | |
| 소 계 | 103 | 45 | | | |
| 북 한 | 112 | 87 | 184 KW | 1989년 방송개시 | |

※자료: 한국방송개발원'95: 22),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 연구(2단계)

북한의 TV 대수는 11.5명당 1대, 라디오는 9.2명당 1대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북한의 산업 · 경제 지표

1.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은 전체 산업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광공업 30%대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30%를 조금 넘는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군수산업 등 중공업 우선 정책실시로 경공업 부분이 소외되어 왔으며 서비스 부분이 취약한 산업간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전략광물 및 석탄을 중심으로 광업이 발달되어 있다.

<표3-6> 남북한 FM시설 현황 비교

| 방 송 매 체 | 기간국 | 중계국 | 총출력 | 가청율 (인구대비) | 비 고 |
|----------|-----|-----|--------|---------------|-----------------------------------|
| 한 국 | | | | | |
| KBS 1FM | 25 | 1 | 86KW | 94.8% | 클래식 음악 수도권 위주 IR 프로그램 방송 |
| KBS 2FM | 1 | | 10KW | 34.0% | |
| KBS 표준FM | 20 | 35 | 91.8KW | 91.2% | |
| 교육 FM | 20 | 2 | | 97.5% | |
| 군 FM | 4 | 4 | | | |
| MBC음악 | 20 | 3 | | 93.9% | |
| MBC-R FM | 8 | | | 79.8% | |
| 평화방송 | 1 | | | 34.0% | |
| 불교방송 | 1 | | | 34.0% | |
| 교통방송 | 1 | | | 34.0% | |
| 극동방송 | 1 | | | | |
| 기독교방송 | 1 | | | | |
| 소 계 | 103 | 45 | | | |
| 북 한 | 112 | 87 | 184 KW | 1989년 방송개시 | |

※자료: 한국방송개발원'95: 22),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 연구(2단계)

북한의 TV 대수는 11.5명당 1대, 라디오는 9.2명당 1대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북한의 산업 · 경제 지표

1.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은 전체 산업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광공업 30%대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30%를 조금 넘는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군수산업 등 중공업 우선 정책실시로 경공업 부분이 소외되어 왔으며 서비스 부분이 취약한 산업간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전략광물 및 석탄을 중심으로 광업이 발달되어 있다.

(1) 북한의 산업구조의 변화추이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1960년대부터 살펴보면 아래 <표4-1>과 같다. 농림수산업은 '70년대와 '80년대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30%대를 차지해 왔다. 또한 광공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 60%대까지 급증을 하다가 '90년대 이후에는 40%대로 떨어지고, '96년 이르러서는 28%까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분야는 '70~80년대에 20%대를 차지하여 저조하였으나 '90년대에는 30%로 늘어나고, '96년에는 43%까지 증가되었다.³⁴⁾

<표4-1>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단위 : %)

| 구 분 | 1960 | 1970 | 1987 | 1990 | 1996 |
|--------------|------|------|------|------|------|
| 농림수산업 | 28.9 | 21.5 | 20.0 | 26.8 | 29.0 |
| 광 공 업 | 41.3 | 57.3 | 60.0 | 42.8 | 28.0 |
|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 29.8 | 21.2 | 20.0 | 30.4 | 43.0 |

※ 자료 :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1995년 이후 '97년까지 북한의 산업구조를 한국과 비교하면 다음 <표4-2>와 같다.

한국의 경우는 농림수산업이 6%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광공업이 26%대로 다음으로 높으며, 특히 광공업 가운데도 광업 비율이 0.3%로 매우 낮으며, 중공업이 20%대를 차지한다. 사회간접자본으로 건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17%대를 차지하여 북한의 10%대 보다 상회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51%대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특징은 한국의 경우 정부부문이 8%대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나, 북한의 경우는 전체 30여%에서 정부부문이 평균 약 23%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부문의 정부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34) KOTRA 종합무역정보통신 서비스(KOTRA-NET)의 세계각국경제정보(국가명: 북한) 참조.

<표4-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단위:%, 명목 GDP=100)

| | 북한 | | 한국 | | |
|----------|--------|--------|--------|--------|--------|
| | '95 | '96 | '97 | '96 | '97 |
| 농림수산업 | 27.6 | 29.0 | 28.9 | 6.3 | 5.7 |
| 광공업 | 30.5 | 28.0 | 25.5 | 26.1 | 25.9 |
| - 광업 | 8.0 | 7.1 | 6.7 | 0.3 | 0.3 |
| - 제조업 | 22.5 | 20.9 | 18.8 | 25.8 | 25.7 |
| (경공업) | (6.8) | (6.9) | (6.6) | (6.1) | (5.9) |
| (중공업) | (15.7) | (14.0) | (12.3) | (19.7) | (19.8) |
| 전기 가스 수도 | 4.8 | 4.3 | 4.3 | 2.2 | 2.3 |
| 건설 | 6.7 | 6.4 | 6.3 | 14.5 | 14.6 |
| 서비스 | 30.3 | 32.3 | 35.0 | 50.9 | 51.3 |
| (정부) | (20.7) | (22.5) | (25.1) | (8.1) | (8.3) |
| (기타) | (9.6) | (9.7) | (9.9) | (42.8) | (43.0) |
| 국내총생산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료 : 한국은행

(2)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1)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변화추이

1965년 북한의 GNP는 19억 달러, 한국은 30억 달러로 북한 보다 1.6배 많았으나, 1990년에는 10.9배, 1995년에는 20.3배, 1996년에는 22.4배를 기록하여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1997년 말 IMF체제 이후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져 앞으로 계속적인 격차확대는 넓혀지지는 않더라도 현 수준하에서 현격한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4-3> 남북한 GNP 비교

(단위: 억달러)

| 년 도 | 한 국 | 북 한 | 남/북(배) |
|------|-------|-----|--------|
| 1965 | 30 | 19 | 1.6 |
| 1990 | 2,518 | 231 | 10.9 |
| 1995 | 4,526 | 223 | 20.3 |
| 1996 | 4,804 | 214 | 22.4 |

한국의 GNP는 1965년의 30억달러에서 1996년에는 4,804억달러 로 1965년에 비해 160.1배 시장되었고, 북한의 GNP는 1965년의 19억달러에서 1996년에는 215억달러로 1965년에 비해 11.3배 신장에 그쳤다.

1인당 GNP 수준으로 보면 '96년에 910달러에 불과하여 한국의 10,548달러에 비해 한국의 1/10에도 못미치고 있다[표 4-4]. '97년은 북한이 약 741달러로 한국의 약 1/13 수준으로 양측 모두 1인당 GNP 액수는 줄었으나 상대적 격차는 넓혀졌다.

<표4-4> 남북한 1인당 GNP 비교

(단위:US\$)

| 년 도 | 북한 (A) | 한국 (B) | 배율(B/A) |
|------|--------|--------|---------|
| 1994 | 923 | 8,483 | 9.2 |
| 1995 | 957 | 10,037 | 10.5 |
| 1996 | 910 | 10,548 | 11.6 |
| 1997 | 741 | 9,511 | 12.8 |

※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의 극심한 침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식량난, 에너지난 및 생필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인당 GNP 수준 격차도 한국이 IMF체제 이후 계속적인 큰 폭의 격차가 증가되기보다는 현재의 차이가 지속되거나 약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의 직책별 임금 현황

남북한의 경제구조와 사회체제가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식량배급제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월급사용의 대상면에서 한국과는 다르다. 북한의 임금은 직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낮고,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녀차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표4-5> 남북한 직책별 월임금 비교

(1990년 현재/단위: 한국 천원)

| 북한 ¹⁾ | | | 한국 | |
|------------------|-------------------|------------------|-------|-------|
| 구분 | 직책별 | 임금 ²⁾ | 직종별 | 임금 |
| 당·정기관 | 당·정무원부장 | 101-117 | 행정관리직 | 1,035 |
| | 정무원부부장·도인민위원장 | 84-101 | 전문기술직 | 695 |
| | 도인민 부위원장·군인민 위원장 | 57- 67 | 사무직 | 519 |
| 공장·기업소 | 특급기업소 지배인 | 84-101 | 생산직 | 430 |
| | 1.2급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 | 50-67 | 판매직 | 413 |
| 노동자·사무원 | 광부,제철·제련공 | 30-34 | 서비스 직 | 370 |
| |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 25-27 | | |
| | 일반노동자 | 23-27 | | |
| | 사무원 | 20-23 | | |
| 빈의시설관련종사자 | 여관,식당,이발소,상점 | 17-27 | | |

※ 자료 : 통일원,노동부

주) 1) 북한은 1992년 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 인상한다고 하였으나 직책별 보수액은 발표하지 않았음. 상기표는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은 것임.

2) 북한화 1원=한국화 335원

(3) 남북한 일반사무원 1인당 공산품 구매력 비교

북한의 공산품 구매력 가운데 정보통신과 관계가 많은 칼라TV와 카세트, 라디오 등 3가지의 구매력을 살펴보면 칼라TV 구매력이 한국이 2.9이며, 북한이 0.05로 58배의 차이를 보이며, 라디오의 경우 한국 46.0대와 북한 0.70대로 65.7배로 그 차이가 큰 형태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정소매가격 구입시 가격이며, 암거래가격 구입 경우 칼라TV는 725.0배, 라디오는 511.1배의 큰 차이를 보인다.³⁵⁾

<표4-6> 남북한 일반사무원 1인당 구매력 비교

(단위 : 대)

| 품 명 | 규 격 1) | 남한) | 북 한 ²⁾ | | 남/북(배) | |
|-------|----------|------|-------------------|--------------|---------------|--------------|
| | | | 국정소매가격 구입시 | 암거래가격 구입시 | 국정소매가 격구입시 | 암거래가격 구입시 |
| 칼라 TV | 금성 16" | 2.9 | 0.05 | 0.004 | 58.0 | 725.0 |
| 카 세 트 | 금성TS-205 | 13.0 | 0.27 | 0.09 | 48.1 | 144.4 |
| 라디오 | 아남RFA3 | 46.0 | 0.70 | 0.07 | 65.7 | 511.1 |

※ 자료 : 통계청

주: 1) 규격은 한국 기준 2) 한국은 1992년 사무직 월임금 한국화 681,000원 기준

3) 북한은 1992년 일반사무원 월임금 북한화 70원으로 한 것임

2. 북한경제의 특징 및 구조

(1) 북한의 경제현황

북한경제는 90년부터 7년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고, 이같이 계속되는 경제의 침체는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생산이 크게 감소한 데다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투자재원 부족과 에너지 및 원자재난 등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하였다.

대외무역의 지속적 감소, 만성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외화부족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시설 가동율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무역감소, 외환사정 악화를 유발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는 외국자본의 도입은 북한의 관련법령 정비,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외 신용도와 국가위험도, 인프라 미비 등의 부정적 요소들 때문에 부진한 실정이다.

1990년 47.2억불을 기록한 이래 6년간 19.7억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7년 20억불 대를 회복하며 90년대 들어 첫 증가를 보였다.

35) 통계청(1997.12 : 156),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56쪽의 일반사무원 1인당 구매력 비교표에서 발췌 재정리함.

이러한 북한경제의 부진요인으로는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비효율성, 둘째, '90년대 초 소련 등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구소련, 중국 등과의 경제적 특수관계가 단절되고, 정화결제요구가 늘어나 에너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감소, 셋째, 구사회주의권과의 무역 급감으로 외환사정 악화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외국자본유치 미비로 인한 생산설비 및 기술수준 낙후 등을 들 수 있다.

(2)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간 중공업 우선의 '대내 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이들 국가와의 장·단기 무역협정 중단으로 인한 경제협조 및 교역의 부진,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고조로 경제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중공업 우선주의에서 경공업 제일주의체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정비등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92.12. 8)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2-3년간을 변화된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기초한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의 실천과제로서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채택하여 종래 중공업 우선정책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이는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체제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불균형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공업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 수준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해 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자유치 및 무역확대를 통해 극심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나) 외국인투자 관련법 정비, (다) 신무역시스템³⁶⁾ 도입 등이다.

36) 신무역시스템의 내용은 첫째, 대외무역 정책창구의 일원화: 무역, 대외경제사업부, 대외경제위원회 등 복수의 대외경제부서를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 둘째, 대외무역 활동의 다원화: 정무원 각위원회, 부 및 지방 도행정경제위원회의 독자적 대외무역 취급허용, 중앙무역과 지방·민경무역, 민간무역과

3. 북한의 금융, 통화정책과 담당기관 현황

북한은 금융을 "화폐자원의 동원, 분배 및 이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이고 축적과 배분의 기능을 재정부문이 전담하고 있어 금융의 기능은 그만큼 축소되어 있고, 자본이 중앙에서 분배되고 투자자금은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북한의 금융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계소득-저축-투자'를 연결할 수 있는 금융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기업소와 단체가 국가자금이나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금융의 기능은 기업소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유동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대부를 해주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은행은 정무원산하의 조선중앙은행을 정점으로 3개의 무역외환은행과 2개의 저축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일은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밖의 금융기관으로는 3개의 합영은행과 대외보험거래를 수행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있다.

- 무역외환은행: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은행
- 저축기관: 우편저금, 협동농장신용부
- 합영은행: 조선합영은행, 조선낙원금융회사, 조선통일발전은행
- ING동북아은행: 95.12.5개점. 네덜란드 ING은행과 조선국제보험회사간의 합영은행. 북한주재 외국기업의 송금업무 취급.
-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 : 홍콩 페레그린과 대성은행간의 합영은행(96. 2.6)
- 국내보험은 조선중앙은행, 국제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 담당(조선국제보험회사는 세계 각국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수출입보험, 선박보험, 재보험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북한방문객들을 위하여 여행 불상사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산업정책과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은 북한 사회의 정보통신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이 주로 기계,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

협동무역을 동시 장려, 셋째, 무역형태의 다양화: 무역방식중 가공무역, 중계무역, 되거리(계수출)무역 장려 등이다.

에 차우친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 부문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집적회로 등 첨단산업 공장설립, 대규모 통신센터 설립, 통신위성을 포함한 통신망 확충시도, 광섬유에 의한 행정단위간 광통신 계획, 반도체, 통신기기, 방송기기의 수입 등 정보통신과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 및 생산력 증대에 큰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정보산업가운데 자본투자가 많이 필요한 H/W 분야의 연구, 개발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S/W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고도정보산업과 첨단산업의 미발전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제품생산이 자체 기술력보다는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내외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생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통신인프라서비스의 경우는 나진-선봉지역에 태국의 록슬리사와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으며, TV방송의 경우 방송방식이 중국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PAL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통일전의 방송교류나 통일후의 방송시스템 통합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³⁷⁾.

이상과 같은 북한의 산업정책과 구조, 경제정책과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보화 지표체계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유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기술력과 정보화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화 지표항목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심도있는 연구노력과 더불어 우리정부 관계부처들이 북한정보의 일반인 개방과 상호교환이 필요하다.

37) 독일의 경우는 통일과정에서 방송의 기어가 컸던 이유는 양측의 TV 방식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동독국민들이 서독의 TV방송을 쉽게 시청할 수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통일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체제와 이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동질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동서독 방송시스템 통합이 비교적 쉬웠다(한국방송개발원, 1995: 10-11).

V. 북한 정보화 지표개발의 문제점과 과제

1. 정보화 설비지표

(1) 정보설비지표 I

정보화 지표로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지표는 정보설비지표이다. 북한의 경우 정보설비지표 가운데 100인당 전화회선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U의 '세계 통신개발 보고서'(1995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은 100인당 전화보급율이 4.2대 이며, 한국은 100인당 39.7대로 북한은 한국의 0.11%에 불과하다. 전화 가입자수도 북한은 약 1백9만 회선인 반면에 한국은 1천7백65만 회선으로 16배이상 많다(한국의 0.06%). 공중전화 시설수도 북한은 2,720 회선인데 비해 한국은 30만5천여 회선을 상회하고 있다(한국의 0.01%). 100인당 보급율은 북한이 0.12대 이며, 한국은 6.87대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한국의 0.02%)

한편, 패킷교환데이터망(PSDN: Packet Switced Data Network)은 보통 터미널과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통신망으로 북한에서도 PSDN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³⁸⁾ 정확한 데이터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선컴퓨터센터(KCC)와 평양정보센터(PIC) 등 컴퓨터 S/W, H/W 개발기관과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등 제한된 교육, 연구, 개발기관에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대외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⁹⁾ 따라서 정보화 설비지표로 당장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100인당 ISDN 가입자수도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원정-나진, 청진-나진간 '95년말 완공)과 함북도, 강원도, 평남도 주요 도시와 평양사이의 통신선로 광케이블이 구축되고('90.8~'95.9)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⁴⁰⁾ 점차 ISDN 가입자수가 증가될 것

38) '98년 6월 16일 북한 중앙방송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사장 이상설)에서 과학기술 자료 검색체계 '광명'(운영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선전했다. 이 보도는 위 통보사에서 '광명'에 기초한 자료검색 컴퓨터망을 형성, 과학기술통보사업과 전자우편(E-mail)봉사를 활발히 벌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 하고 있다고 했으며, 주로 각급 과학기술연구소들과 학교,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내외통신] '98. 4.1-6.30, 280면)

39) 한국전산원(1997: 19),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내용과, 내외통신의 최근 기사들을 종합 참조.

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가입자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정보화 지표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교환기 디지털화율이 ITU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4.6%를 보이고 한국이 61.8%의 교환기 디지털화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0.07%에 불과한 실정을 참조할 수 있다.

(2) 정보설비지표 II

정보설비지표 가운데 정보설비지표 II 가운데 100인당 TV 보급대수는 기존 자료를 통해 산출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정보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TV 대수는 11.5명당 1대, 라디오는 9.2명당 1대 정도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100인당 TV대수는 약 9대이며⁴⁰⁾, 100인당 라디오 대수는 11대로 평가할 수 있다.

통신기기, 정보기기 및 부품의 1인당 내수액은 북한의 공급체계가 자유시장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정보화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통신기기, 정보기기 및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조선컴퓨터센터(KCC) 내의 장치기술실 등에서 PC와 주변결합장치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수리를 담당하며, 관련 부품들의 생산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통계자료가 마련되면 지표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2. 정보화 이용지표

(1) 정보설비지표 I

기본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준을 알아보는 정보이용지표 I의 지표항목 가운데 100인당

40) 북한의 중앙방송은 '97년 4월 8일 보도에서 체신절(4.8)을 기념해 체신부(부장 김학섭) 노유익 국장의 회견내용에서 최근 국내통신분야에서 중앙과 도시의 빛섬유(광섬유) 통신과 숫자시(디지털) 통신망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통신분야에서 위성통신 회선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태국 북술리회사와 나진-선봉지역 통신서비스센터 설치합의(96.9) 등을 통해 통신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내외통신] '97.4.1 -6.30, 337면).

41) 북한의 일반 노동자, 사무원의 한달 임금은 70원~1백원 정도이고, 농민시장(장마당)에서 흑백 TV값은 북한화로 1만 4천천원, 컬러 TV가 3만 5천원으로 임금 10년치를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북한경제가 어려워 시면서 배급제가 점차 붕괴되면서 농민시장과 같은 거래장소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내외통신, 1998. 1.11-3.31, 229면).

국제전화 이용시간은 국제전화 회선수로 바꾸어 비교한다.

북한의 경우 일반인들의 국제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도 주요 호텔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에 중국과 미국 등 제3국에서는 북한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나 교환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의 국제전화 회선수는 120회선이며, 한국의 경우는 12,051회선으로 한국이 북한의 100배 회선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100인당 텔렉스 가입자수는 북한이 전체 텔렉스 가입자수가 1,862회선이고, 한국이 12,500회선으로 북한은 한국의 0.14%에 불과하다.

100인당 FAX 대수는 관련된 통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정보설비지표 II

고도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나타내는 정보설비 지표 II는 북한의 경우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00인당 셀룰러서비스 가입자수, 100인당 radio-paging 가입자수, 100인당 Video Tex 가입자수 등은 북한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데이터 전송서비스 매출액, 1인당 DB 매출액 등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항목에 대한 일률적인 지표화는 한계가 있다.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북한에서도 점차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수집될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 추가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북한사회의 특성상 고도정보통신 서비스의 수준은 아직 일반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화관련 통일정책을 수립할 경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통일전 대비책과 더불어 통일후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고도정보 통신 서비스 통합 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및 문화예술, 관광분야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의 정보통신 교

환정책과 시스템 통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3. 정보화지원 지표

(1) 정보화지원지표 I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결과를 측정하는 정보화지원 지표I에는 1인당 통신관련 투자액과 100인당 논문 발표수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북한의 경우는 1인당 통신관련 투자액 산정이 어렵지만 북한정부 전체 재정 가운데 통신분야에 대한 예산액을 평가지표로 이용한다면 정보화 지표항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관련 기관, 각종 대학과 정보통신 기술교육기관들에 투입한 예산들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100인당 논문 발표수도 정보화관련 논문들이 잘 보도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여 지표항목으로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북한의 논문 발표는 연구기재의 부족으로 첨단분야의 연구개발보다는 이론이나 응용분야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논문발표자의 학위, 학식 등 인적사항을 거의 기재치 않아 논문형식 요건을 못 갖춘 경우도 많다. 논문은 주로 이학분야가 가장 많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상급3%, 동등 61%, 하급 36%, 세계수준으로 동등 11%, 하급 89% 등 수준 낮은 연구를 보이며,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에 연구가 집중되어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 같은 첨단분야의 논문발표는 매우 적은 상황이며 더욱이 외부 발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전자, 정보, 통신 학술대회(ICEIC)' 등 국제학술 교류에 북한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금씩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관련 연구, 개발 동향을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컴퓨터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했으며, 1세대 컴퓨터도 제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고급 장비와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H/W 분야의 연구, 개발이 어려워졌고, 통신분야도 장비 부족 등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은 두뇌만 있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S/W 부문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고, 이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W/P, O/S 등을 비롯하여

각종 응용 S/W들과 산업체에 적용되는 MIS 시스템들을⁴²⁾ 개발하여 내수 뿐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컴퓨터 기술관련 행사인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등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⁴³⁾ 이러한 프로그램들 수와 종류 및 기술 난이도와 실용화율 등을 정보화지표 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적실성이 높을 수 있다.

(2) 정보화지원 지표 II

정보통신 관련 인력을 측정하는 정보화지원 지표II에는 100인당 통신서비스 관련 종사자수와 100인당 연구원수가 지표항목에 포함된다.

1994년 기준으로 북한의 통신관련 종사자수는 15,00명, 한국의 경우는 60,100명으로 한국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총 11년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93년 10월까지 총 290개의 대학에 30여만 명의 대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290여개의 대학들 가운데 13개의 인문사회계열 대학과 28개의 사범, 교원대학, 16개 예체능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이공, 자연대학 및 농림수산대학, 공장대학, 의학대학 등이다.⁴⁴⁾

따라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과학기술 또는 실용기술을 배우고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학교육을 받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술인력 자원과 연구인력 자원이 풍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V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의 시설이나 기술

42) 조선컴퓨터센터가 개발한 "모호-37"은 중국에 수출되고, 세금 계산용 S/W도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한다. '91년에 개발된 전자지문감식기(PEFIS: Photo-Electron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는 이집트 경찰청의 국제입찰에서 탈락하자 이 기술을 '체질분류 및 진단체계', '은행예금 확인기' 등 실생활 S/W쪽으로 돌려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또한, '항공교통지위 시스템'은 유사한 러시아 제품보다 우수하고 독일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입 가동 중이고, 상점판매용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평양의 많은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1997.6, 162면).

43) [내외통신] '97.10.1-12.31, 257면 참조.

44) 북한연구소, [북한 총람- 1983~1993], 1993. 참조.

면에서는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비슷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수적인 비교, 양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수준이나 잠재적인 정보통신 개발능력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보통신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공개와 일반 열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외통신사와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의 관련 부처들의 북한 정보에 대한 폐쇄성으로 적극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많으며, 정보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연구의욕도 저하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관련 부처에서 비공개 또는 기밀정보라고 하는 자료와 통계자료들도 많은 경우 각종 백서와 신문, 시사잡지 및 단행본으로 발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남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들의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한 개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과거에 규정한 여러 가지 규제를 세계화에 걸맞게 해제하는 것이 남북 정보화교류의 촉진제가 되리라 본다.

VI. 통일 대비 대북 정보화 정책과제

1. 정보산업의 분야별 전략적 대응

정보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북한은 정부주도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편의성 보다는 선전, 선동, 홍보 또는 사상적 무장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의 개념으로서 이용측면이 강하며, 반면에 한국은 정보통신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서의 경제성과 경쟁성을 강조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북한은 고급 장비와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H/W 분야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S/W 분야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은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S/W 산업이 열악한 상태이다.

면에서는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비슷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수적인 비교, 양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수준이나 잠재적인 정보통신 개발능력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보통신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공개와 일반 열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외통신사와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의 관련 부처들의 북한 정보에 대한 폐쇄성으로 적극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많으며, 정보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연구의욕도 저하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관련 부처에서 비공개 또는 기밀정보라고 하는 자료와 통계자료들도 많은 경우 각종 백서와 신문, 시사잡지 및 단행본으로 발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남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들의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한 개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과거에 규정한 여러 가지 규제를 세계화에 걸맞게 해제하는 것이 남북 정보화교류의 촉진제가 되리라 본다.

VI. 통일 대비 대북 정보화 정책과제

1. 정보산업의 분야별 전략적 대응

정보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북한은 정부주도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편의성 보다는 선전, 선동, 홍보 또는 사상적 무장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의 개념으로서 이용측면이 강하며, 반면에 한국은 정보통신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서의 경제성과 경쟁성을 강조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북한은 고급 장비와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H/W 분야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S/W 분야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은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S/W 산업이 열악한 상태이다.

인력 양성면에서는 남북한이 모두 강조하고 있으나 수적으로는 단연 한국이 우세하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의 몰락 이후 새로운 첨단 기술정보에 접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국제연합기구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제한된 정보 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국제학술대회에 북한 정보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부분적으로 북한의 정보화 수준과 발전상황이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객체지향 언어인 C++을 사용할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최신 워크스테이션도 많이 도입되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비하면 아직도 그 수나 기종에 있어서 매우 열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잠재적인 연구인력과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해 이러한 인력의 학술교류와 기술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 우위 정보기술산업의 접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W분야에서 남북공동세미나 개최 및 정례적인 포럼 구성, 공동연구 사업추진, 정보과학자, 기술자들의 인적 교류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S/W 분야에서 외국 브랜드 의존도가 높고 외화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으로 독자적인 기초 S/W산업 개발에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단계적인 기술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한다. 초기에는 비군사적 부문에서 상업적 분야에서 점차 확대하고,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정보기술까지 정보교환하여, 통일 후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정보 인프라 분야의 체계적 협력 구축

남북통일이 언제 되더라도 일단 남북이 통일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와 수많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전화, FAX, 우편 등의 기본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라디오, TV 방송, 인터넷과 PC 통신, ISDN, 멀티 미디어 등을 비롯한 고도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과 부작용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후 완충역할 (buffering function)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TV와 라디오는 비상 방송체계 시스템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갈려TV 방송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급격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완충기능을 TV방송이 즉각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신체개들도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과 통신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추가적으로 현격하게 많이 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한 주민간의 경제수준의 격차, 심리적인 동요, 정보문화 생활의 혼란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TV, 라디오, PC, 방송설비, 통신설비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여 이들에 대한 공급부족 문제와 이들 장비, 시설의 보급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예비적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3. 단계적 통일정보화 추진 시나리오 구축 필요

정보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사전 예비적인 시나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부실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금융전산망을 사전에 통합운영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더욱이 시스템 통합까지 이르기까지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시스템 운영의 파행을 보였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 행정, 유통 등 주요 내민 서비스 관련 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통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스템 통합계획과 더불어 정보환경 변화와 상황전개를 예측하여 3~4개의 대안적 시스템통합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단계의 상황을 세분화하고, 정착기와 안정기에 따른 상황들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통일을 대비한 정보화 전략 과제를 위하여 북한의 정보화 관련 지표연구와 현황분석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분산적으로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노력과 더불어 각 분야의 공동연구와 남북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의 정보화 추진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화 지표개발과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남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북한사회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따랐다. 많은 문서분석과 방북자, 귀순자들과의 면담과 관련 기사들 통일부와 통계청, 안기부, 내외통신, 연합통신 등 관련 기관들과 언론통신사들의 협조로 부분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으나 자유세계 국가들의 정보들과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은 여전히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정보접근성의 어려움에서 근본적으로 있었으나 현실로 다가온 고도정보화 사회와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에서 연구가 출발하였다.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지표개발을 위해 기존의 정보화 지표연구와 논의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 현재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의 정보화 지표 조사방법을 북한에 적용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북한의 정보화 현황에서는 H/W 분야보다는 S/W 분야의 독자적인 발전이 눈에 띄었으며, 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잠재적인 기술인력과 정보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응용 시스템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정보산업과 경제 현황에서는 한국과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뒤져 있지만 앞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머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정보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TV방송, PC통신, 전화통신 등 기술적으로 상이한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계획과 종합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계획과 실천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1) 국어정보학회, “'96년 우리말 컴퓨터 국제학술대회,” 특집자료, '96.
- 2) 국토통일원, 「1988년도기준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연구보고서, '89.12.
- 3) 김광수, 박만수, 「북한경제」 송실대 출판부, '94. 9.
- 4) 김치용, 정근하, “주요지표를 통한 한국과 선진국의 정보화수준 비교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2. 12.
- 5)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1997. 7 - 1998, 9.
- 6) 내외통신사, 「북학실상자료집(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본 북한사회)」, 1995. 12.
- 7) 대한무역진흥공사,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무공자료 95-23, 95. 7.
- 8)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무공자료 95-23, 1995. 6.
- 9)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무공자료 95-23, 1995. 6.
-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95-48, 1995.
- 11) 대한전자공학회, 「남북한 통신 연구」, 1992. 3.
- 12) 대한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무공자료」 95-48, '95. 11.
- 13)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교류 방안,” 학술발표자료, '96.11.
- 14) 북한연구소, 「북한총림('83-'93)」 1993.
- 15) _____ . 「북한총림('83)」 1983.
- 16) 송재주, 「남북한 통신연구」 대한전자공학회, 연구보고서, 1992. 3.
- 17) 신일순, 정부연, 「정보화정책지표 개발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소, 97-09, '97.12.
- 18) 이상덕 외, “정보화 지수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통신개발연구원, '88.8
- 19) 이우승,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정책 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98. 9.
- 20) 이우승, “북한방송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98. 9.
- 21) 이형교, “남북한간 전기통신의 교류방안,” 「통신정책동향」, KISDI, 1990.
- 22) 정선양, 김병복, 임덕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 STEPI, 96-03, 1996.
- 23) 진용욱, “북한지역의 통신교류에 관한 기본구상,” 「월간채신」, 1991년 1월호

- 24) 최종원 외, “국가정보화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89.12.
- 25) _____, “국가정보화지표의 설정과 국제비교,”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93.
- 2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12.
- 27) 통신정책연구소, “정보유통센서스 : 개인매체를 중심으로,” '86.
- 2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한 산업기술 비교조사 연구”, '92. 12
- 29)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85호, 통일부 교류협력국, 98. 7.1-31.
- 3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 주요통계요람」, '91. 9.
- 31)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경제개발과 산업개황”, 해외투자연구소, 1991. 11.
- 32)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NCA VII-REP- 95121, 1996. 6.
- 33)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NCA V-AE-9435, '94. 12.
- 34)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1997. 6
- 35) 한국전산원, “정보화 지표에 의한 정보화 국제비교”, NCA V-REP-9483, '94. 12.
- 36)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93-'97.
- 37) _____, “정보화 지표에 의한 정보화 국제비교,” '94.
- 38) _____,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96.
- 39)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민간백서」, '92-'97.
- 40)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화 실태 및 정보사회 수용도 조사보고서,” '94.
- 41)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 정보산업 민간백서」, '90-'96.
- 4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의 동향분석 및 시장전망」, '93.12.
- 43) _____,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93-'97
- 44)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화 실태 및 정보사회 수용도 조사보고서,” '94.
- 45) 한국통신, “세계통신개발보고서”, (남한 북한 연차보고서), '95 ITU.
- 46) 한호석, “32비트 PC공장 세우고 있다,” 월간 「달」 96. 2월호.
- 47) 홍승원, “북한의 체신사업(상, 하),” 「월간체신」, 1990.

〈 기 타 〉

민주조선, '96. 11. 12일자

조선신보, '91. 7. 22일자 9. 1일자, 95. 10. 30일자

로동청년, '91. 10. 6일자 4면

로동신문, '95. 10. 8일자 4면

'95. 12. 10일자 4면

'95. 3. 9일자.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자료

세계일보, 98. 3. 5 22면 “ 북 컴퓨터 산업초보단계/ '85부터 기초인력 양성발구”.

세계일보, 98. 6. 30 22면 “S/W개발 평양프로그램센터 독보적”

문화일보, 98. 9. 20. 국토통일원, 1988년도 기준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9. 12

[외국문헌]

- 1) Allen, R.G.D., *Index Numbers in Theory and Practice*, Aldine Pub. Co., '75.
- 2) Fisher, Irving, *The Making of Index Numbers: A Story of Their Varieties, Tests, and Reliability*, Augustus M, Kelly Publishers, '67.
- 3) Jonscher, C., "Information Resource and Economic Productivity,"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 1.
- 3) Katz, R. *The Information Society: Measurement and Cross-national Comparison*, Nerw York: Greenwood.
- 5) Machlup, 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62.
- 6) OECD, *Information Activiti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Vol.I. II, Paris: OECD.
- 7) Porat, M, *The Information Economy: Definition and Measurement*, U.S. Department of Commerce, '77.
- 8) UN, UN 통계월보, '94-'97.

- 9) Elsevier Advanced Technology,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93-'96.
- 10) IDC, *S/W and Services Industry Review and Forecast*.
- 11) ITU, *Yearbook of Common Carrier Telecommunication Statistics*, '93-'97.
6. ITU, *IFRB Circular Letter*, 1990.

〈부록1〉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 권별 | 논 문 제 목 | 연 구 자 |
|----|---|---|
| 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니아 사태 해결의 동아시아적 함의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모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CGE 모델을 중심으로 ○ 남북한 전력유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연구 | <p>權載烈(관동대 조교수)</p> <p>徐淳福(광주대 전임강사)</p> <p>崔晉宇(이화여대 전임강사)</p> <p>張錫仁(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p> <p>朴宗培(안양대 전임강사)</p> |
| 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적 통일방식을 중심으로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p>沈宰用(상명대 부교수)</p> <p>李尙峻(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p> <p>林栽亨(단국대 강사)</p> <p>李容範(한국토지공사 해외사업실 과장)</p> |

| 권별 | 논 문 제 목 | 연구자 |
|-----|---|--|
| I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전환 국가의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응문제 연구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p>金哉翰(한림대 부교수)</p> <p>申東昊(보험개발원 팀장)</p> <p>李採文(경북대 강사)</p> <p>金聖淑(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원연구원)</p> <p>崔洙滿(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p> |
| 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 방안에 관한 연구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쉽 연구 ○ 대만·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경분리정책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 도서관 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연구 | <p>金景錫(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p> <p>李基永(성결대 전임강사)</p> <p>高正植(베체대 전임강사)</p> <p>宋啓儀(동서대 전임강사)</p> <p>金美賢(미국 연수중)</p> <p>安昌滿(강남대 전임강사)</p> |
| 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 통일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에 관한 일 연구 ○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 | <p>金鴻秀(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p> <p>金國鉉(교원대 강사)</p> <p>金景模(경상대 조교수)</p> <p>韓美靜(성결대 전임강사)</p> <p>林明姬(동남보건전문대 전임강사)</p> |

〈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98년)

'96년

〈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이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통일정책 · 통일환경 분야>

-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 남북한 전력융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응문제 연구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통일교육 · 홍보분야>

-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 새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

北 韓 實 態 (Ⅲ)

인 쇄 : 1998. 12. 5

발 행 : 1998. 12. 10

발행처 : 정보분석실 분석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02)720-2425~6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 02)274-5916
